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 4.

국 토 교 통 부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4

국토교통부

2021년도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203, 32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5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25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2
III. 세부 추진계획	39
전략목표 I	41
전략목표 II	123
전략목표 III	181
전략목표 IV	239
전략목표 V	311

IV. 환류 등 관련 계획	37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8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82
3. 변화관리 계획	384
4. 현장의건의 정책반영 계획	386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87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413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3
-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

- (항공) 중요한 노선에 특별출국절차* 선제적 도입하여 운항제한조치 사전 차단('20.3), 특별항공편 운항하여 교민 귀국·기업인 출국 지원('20.1~)
 - * 항공기 탑승 전 발열체크, 좌석 이격 배치, 탑승 후 특별입국절차 적용 안내 등
- 코로나19 초기 항공산업 고용유지 지원('20.3),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용·경영 안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20.8) 마련
-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1,100억 원), 맞춤형 특별수송대책 (KTX 전용칸, 전용버스 운행, '20.3~), 추석연휴 철도 특별방역대책* 시행('20.9)
 - * 비대면 예매 100%, 창가측 좌석판매 등
- 버스 통행료 면제(332억원), 휴게소 입정대장 수수료 인하(106억원), 휴게소 운영업체 임대료(850억 원) 및 임대보증금(1,908억 원) 반환
- (주택) 영구임대 등 입주자에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2년간 동결('21.1~'22.12, 약 309억 원) 결정
 -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 (건설) 건설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저리(1.5% 내외) 융자(총 6,500억 원 규모) 및 해외진출기업 분쟁 대비 법률 지원('20.9~12, 22개사 30개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기술) 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용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20.3)하여, 역학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24시간→10분)

② 미래 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SP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세종 '20.10, 부산 '20.12), 부산 스마트 빌리지 착공('20.7), G2G 협력 사업 선정(11개국 12개 사업, '20.4)

- (스마트물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20.4),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20.9), 디지털 물류도시 마스터플랜 착수('20.10)
- (드론) K-UAM 로드맵 발표 및 UAM팀코리아 발족('20.6), 드론법 시행 및 하위법령 공포('20.5), K드론 시스템 실증('20.6), 드론택시 비행 시연('20.11)
- (미래차)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관련 자동차 손배법 개정('20.4), 자율주행 트럭 군집주행 시범 운행('20.11)

3 생애주기 주거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25년까지 중장기적 공공임대 확충 및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 리뉴얼 발표('20.3)
-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 통합 및 청년·신혼·고령자·저소득 일반 가구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계층별 특화된 공적임대주택 21.0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평균지급액: '19. 13.5만 → '20. 15.4만원)

4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

- (플랫폼)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 등 여객법 개정('20.3),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20.5), MaaS 통합결제 시스템 기술 개발('20.6)
- (대중교통)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확대('19. 3,457대 → '20. 3,716대), 알뜰카드 이용자 수 증가*('19년 대비 약 7배, 약 16만명)
* 월 평균 교통비 절감효과: 일반 이용자 12,756원, 저소득층 청년 13,026원
- (교통개선대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20.5, 1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2곳(수원호매실, 화성동탄) 지정 완료('20.12)
- (통행료) 민자 고속도로(대수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20.12) 및 설 기간 통행료 면제(578억원 혜택), 추석 기간 통행료 수입(186억원) 공익기부
- (철도) 400km/h 급 종합계획 수립('20.12), 중앙선 EMU-260 투입('20.12), 원주-제천, 익산-대야, 수인선 3단계 등 9개 간선·광역철도 개통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1.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①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21.3)

« 3080⁺대책 주요 후속조치 »

- √ (공공주도 사업) 정비사업 Fast Track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목표로 적극 사업제안 및 홍보 추진
- √ (도시재생)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중점 선정,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홍보 추진(온라인 설명회, 2월)
- √ (소규모정비사업) 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개최, 공기업 직접 제안가능 후보지 발굴
- √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본격 매입 및 실적 점검, 추가 제도개선(비주택 리모델링의 주택도시시기금 민간 용자조건 개선, 공공매입 단가 인상('21.3) 등)
- ⇒ (추진체계) 공공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공공기관 내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및 참여주체별 컨설팅 개최 등 국민소통·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 (기존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공공택지)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연내 확정
 - (정비사업)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천호 선정, 사업 공모 범위 확대('21.12),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21.6)
 - (사전청약)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 시행('21~'22, 6.2만호)
 -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②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서비스 연계)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하여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
 -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 (미래사회 선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대폭 확대('20년, 1만호 → '21년 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형 주택 공급
 - (코로나19 대응)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③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 (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新이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
- (맞춤형 공급)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21.上)하여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

④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 강화

- (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장애인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조사도 실시
- (국민소통)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정책 대상들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 월 1회 운영

2.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①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

공급유형	합계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	'21년	'22년
합계	107.6	19.0(21.2)	20.5(21.7)	21(22.1)	24.4	22.6
공적임대	92.6	17.2(19.4)	17.6(18.6)	18.1(19.1)	20.9	18.7
청년	22.5	3.6(3.8)	4.1(4.8)	4.3(5.2)	5.4	5.1
신혼부부	25.2	3.3(3.0)	4.6(4.4)	5.2(4.7)	6.0	5.9
고령자	5.1	0.9(1.4)	0.9(0.9)	1.0(1.0)	1.2	1.1
일반 저소득	39.8	9.4(11.2)	8.0(8.5)	7.6(8.2)	8.3	6.6
공공분양	15	1.8(1.8)	2.9(3.1)	2.9(3.1)	3.5	3.9

- **(청년)** 일자리 연계형(8.6천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천호) 등 공적 임대 5.4만호 이상 공급,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3곳)
 - *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21.1~)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 임대 6.0만호이상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21.下)
 -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
-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 2천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돌봄 등),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 폐지
- **(저소득층)**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6천호), 취약아동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
 -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수급자 증가 추이 반영

②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추진

- **(살기좋은 임대주택)**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3천호, 사업승인), 거주기간(최대 30년)·소득요건(중위소득 150%)을 개선
 -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 부과
 -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 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
 -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 확대(2개 단지, 1천호 → 6개단지, 4천호), “분양+임대” 단지 공급(2개 단지) 등

- (지방 분권형 주거 복지)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 부여
-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

3.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①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現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上)
-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 거래는 실거래 조사 실시('21.1~),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 선제 대응('21.4~)
- 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21.7),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 * 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운영('21.3~),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 허위호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 금지, 자유업종(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의 제도화(법률 제정) 등 추진
-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②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 간 정합성 제고
- (청약제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21.12), 거주 의무('21.2 시행) 요건 신설
-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 도입(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60㎡이하)
- (정비사업 3진아웃제)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21.12)

③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1.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1.6) 등을 통해 관리비리 선제 대응
- (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1.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1.12) 등 품질확보 노력
- (미래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 → 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21.7)
 -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1.6)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천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산업부 협업, ~'23)

4.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①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 * 일부지역 대상 사전 시범운영('21.4) 실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21.11)
-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곳),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 도모

②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 (임차인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그간 보증금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화(주임법 시행령, '21.3)
 -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 부담)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 연장('20.12 → '21.12)
 -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 간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담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 환급 등)
 - 코로나19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 동결(공공임대·행복주택리츠) 및 상가임대료 한시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 (임대인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사업자 의무 이행 확보

(2)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추구

1.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지원

①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

- (광역권 형성 방향)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구조 구축
- (광역권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21.下)
 - * 도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닌, 행정구역을 넘어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분야의 협력사항을 담은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 제도화
 - * (예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 검토

② 지역 주도 혁신성장 거점 조성

- (도심융합특구) 광역권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지방 광역시(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 조성
 - 기 선정지(대구, 광주)에 대해 지역별 특성(산업·주거·문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21.4~), 추가 사업지(3곳)를 순차적으로 선정
 - * 특별법 제정('21.11), 규제특례, 연계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등 마련
- (캠퍼스 혁신파크*) 기 선정 3곳에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 착공('21.12), 신규 2곳 선정('21.3)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1.12)
 - * 대학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학협력, 기업입주, 창업, 주거·문화 등 집중('19.8월,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등 선도사업지 3곳 선정)
- (노후산단 대개조) 기반시설 정비(국토), 에너지 고효율(산업), 스마트공장(중기) 등 부처협업을 거쳐 사업계획 확정(기존5곳) 및 추가선정(5곳, '21.3)

- **(산업기반 정비)** 휴·폐업공장 복합개발로 첨단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산단 상상허브**(기선정 3곳) 사업 착수, **인센티브**(절차간소화 등) 강화('21.11)
 - 노후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21.11)하여 산업시설 등 **복합개발 지원***
 - *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소, 기업 등 유치계획도 확정하여 정비계획에 포함

③ 기존 지역혁신 거점의 광역권과 연계 발전

-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용한 **혁신도시 비즈파크**(도시첨단산단, '21.5) 조성,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21, 485억원) 등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 * (경북-도로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전북-국민연금)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
 - 입주기업 지원 확대로 **앵커기업 유치**, 창업·문화·복지가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및 **가족형 생활SOC*** 등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 * 복합혁신센터 착공(11개소, '21.9), 어린이·가족특화시설 설계(9개소, ~'21.12)
- **(행복도시)**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21.上) 하여 **행복도시 3단계** ('21~'30)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21~)
 - * 특화방안(예시) : 디자인특화, 공동체회복,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청년창의 등
 -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21.2), **기업·국제기구 유치** 본격 착수, **국가기관 추가이전 준비*** 등을 통해 **균형발전 거점도시** 기능 완성
 - * 국회 이전은 국회법 개정,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22 발전개시) **사업자 선정** 및 **순차적 착공***('21.上), **창업클러스터 사업착수**('21.上, 사업협약) 등 **기업투자 가속화**
 - * 육상태양광(새만금공사 등), 수상태양광(한수원, 지자체, 민간기업) 사업 등
 - 새만금을 **그린뉴딜 거점**으로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 **공공 역할 강화** 및 **기반시설 조기화** 등 추가 이행방안 마련(기본계획 재정비, '21.2)
 - 새만금의 **RE100** 선도를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변도시 탄소중립 계획** 및 **스마트그린산단 계획** 수립('21.11)

2.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1]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1.下)
 - 생활권·운영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 개선 및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 발굴
- 균형발전,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및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수립('21.上)
 - * 지방권역 철도망 확충, 단절구간 연결, 병목구간 용량 확대 등 투자방향 정립
 - ** 권역별 광역철도, 비수도권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

2]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

- **260km/h급 차량 운행 확대**(중앙선·중부내륙선 등), **400km/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21.12) 등 주요 **철도망 단계적 고속화**
 -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계속공사, 동해선(부산~포항)·중부내륙(이천~충주) 개통 등 주요사업 차질없이 추진
- 지역간 이동수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수립('21.上)
 - 제천~영월, 호남선(김제~삼례)·남해선(칠원~창원) 확장 등 주요사업 신속 추진
-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사업**(‘21년 예산 4천억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 기본계획 고시(7개, 1.2천억원), 설계기간 단축(3개, 0.1억원), 착공(3개, 0.9천억원), 사업 관리(2개, 1.3천억원)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
- **노후화 및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철도역사(99개)의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21.10) 및 8개 역사의 시설개선 착수('21.上)
 - 고속도로 휴게소·유�휴부지(24개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교통-생활 편의시설 복합 인프라 조성** 착수

3. 지역 삶의 질 제고

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 혁신

-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주택+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여 지방 정주여건 개선
 - * (사업유형 예시) 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은퇴자타운형 등
- 국토부-농림부 협업(MOU) 등 범부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21.3~)
 - * (관계부처 예시) 국토부(주택, 산단, 생활SOC) / 농림부(6차산업) / 복지·문체부(생활SOC) 등

«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 »

- ▶ (사업개요) 폐교 위기의 서하초(전교생 10명, 3학급)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수가 27명으로 증가(6학급), 지역활력 제고
- ▶ (특징) 서하초 살리기와 연계하여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사업 추진
 - * 전학가정에 매입임대 12호, 마을정비형 100호 등 주거지원 / 학부모에 지역기업(에디슨모터스 등) 일자리 알선 / 지역수요맞춤지원, 새뜰마을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 ▶ (추진체계) 민(학생모심위원회), 官(경남, 함양, 서하초, 교육지원청), 公(LH, 농촌경제연구원)

② 도시재생뉴딜사업 체감성과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연내 40여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천호 공급 등 **성과 창출 본격화**
 - * '20년말 기준 누적 성과: 준공 4곳, 생활 SOC 170개소, 공공임대주택 1.1천호
- 공공 주도에서 탈피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 추진 (2개 내외, '21.8), 공간리츠, 모태펀드 출범('21.下) 등 **투자활성화 지원**
- 기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3곳 연내 착공), 사업 참여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21.6)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 노후주거지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21.3), 정비사업 연계 주거재생 특화 뉴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한 사업 중 120곳 내외 신규선정('21)
 - *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위험건축물·빈집·쪽방 등 대상의 도시문제해결형 재생사업은 특별공모 등을 통해 수시 선정(15곳 내외)

3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 제고

-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제고
 - * '21년 준공 : 순창, 영동, 울주, 홍성 / '21년 착공 : 진도, 함평, 원주, 청주, 영천 / '21년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 괴산, 김제, 광주, 나주, 춘천, 보령, 경남 고성 등
 - (범부처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19.6 체결) 성과를 가시화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21.하)
 - * '21년 착공: 세종 / '21년 준공: 제주, 광주, 강릉 / 기착공: ('19년) 부산, ('20년) 청주·증평, 거창·합천, 의성, 완도, 군산, 홍성
 - (지역맞춤형 서비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적용('21.12)
 - (지역간 연계) 「해안내륙발전법」 연장('20년→'30년)에 따라 5개 권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중·장기 지역사업 토대마련('21.6)
 - * 동해안권,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협력권, 남해안권(기수립)
- 초광역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

4. 지방 - 수도권 상생발전 기반 마련

- (상생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 발생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개발이익 교차보전) 등 추진('21.下)

« (유사사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LH) »



- (제도개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검토 추진(관계부처 협의사항)

(3)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① 국토·도시의 탄소 제로화

- **(수소도시)**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의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 설치 본격화('21.4), 수소도시법 제정('21.6)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 폐자원활용 친환경 수소플랜트, 수소기반 에너지자립, 대용량 수소 충전소 등 실증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예타, '21.6)
- **(제로에너지건축)** '25년 민간 의무화 대비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6),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북정1, '21.3 설계착수) 등을 통해 확산 지원
-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1천여동)·공공임대(8.3만호) 리모델링 착수, '22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3)
 - 민간 건축물부터의 이차지원 사업 확대('21.12),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21.6)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 **(스마트 그린산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성방안* 발표('21.3),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기준·지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고시, '21.6)
 - * 기반시설 스마트화,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 **(제도 개편)**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도시제도(국토계획법 등) 전면개편 추진('21.12)

② 그린 모빌리티 확대

- **(차량 전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시범사업('21.下), 수소 화물차 연료 보조금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차량 확산 유도
 - '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해 국내용 10톤 수소화물차 개발(5대) 및 시범운행('21~'22), 전기철도 차량 확대('20. 93% → '21. 95%)
- **(인프라 확충)**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21.11), '22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20. 33기, '21. 14기, '22. 13기)

-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2기 사업지 선정, '21.上), 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충전기(100~200kW) 200기 구축, 20분내 8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전기충전기(350kW)도 병행 구축(72기)

③ 그린 인프라 확충

- (태양광 발전)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60개소)·연료전지(3개소) 설치 착수, 철도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8개소) 추진
- (미집행 공원) 공원조성 촉진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221→328억원)
- (용산공원) 국민권고안('21.6)을 반영하여 조성계획 확정('21.12), 장교 숙소 개방(20.7)에 이어 부분반환부지 추가 개방('21.下)도 조속 추진
-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범위 확대('21.9) 및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갱신('21.11)

2. 디지털 기술 혁신 기반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① 전국 도시의 스마트시티化

- (국가지범도시) 부산 미래형 주거단지 입주(56세대, '21.12), 세종 서비스 실증·체험공간 조성완료('21.12) 등 혁신 서비스 구축·운영 본격 착수
 - *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테스트베드 제공 및 실증비용(40억) 지원 추진
- (지역거점도시)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사업지 선정, '21.下)
 - * 지역 주도로 공공·민간이 공동 사업시행, ICT 대기업 참여 등 특례 부여, 정부 지원 추진
- (스마트서비스)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전국 확산('20. 18곳 → '21. 44곳)
 -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시범도시外 지역으로 확대
- (도시운영) CCTV·센서 등이 결합된 도시관제망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요 도시에 보급
 - * 대구·시흥에서 도시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 시연 및 클라우드 기반의 보급방안 마련('21.下)

② 디지털 서비스 확산

- (디지털 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 3D지도, 정밀도로지도 구축(11,670km)
 -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온라인 제공('21.12),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21년 35억) 추진
- (C-ITS*)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자율협력주행인프라 전국 구축(3만km, '21~'25), C-ITS센터 구축방안 및 ITS서비스 로드맵 마련('21.11)
 - *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6곳)에서 셔틀·택시·배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확대, 자율차 제작·인프라 구축 비용지원 등 민간의 사업화 촉진

③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철도) IoT센서 결합 차량(차상 검측시스템, 3대) 및 시설(선로변 전기설비, 교량 등)을 활용하여 철도시설 점검 및 관리체계 고도화('21.12)
 -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 7개 구간) 및 스마트 건널목(10개소) 확대, 노후 변전설비 디지털화(32개소)
- (도로) 터널 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형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 차단·환류시설 작동 등 원격제어체계 구축(859개소, ~'22)
 - IoT 센서와 가속도·GPS·음향센서를 결합하여 노후 교량(1,966개소)·비탈면(500개소)의 위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25)
- (공항)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확대(김포 등 4개공항, '21.12), 보안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 보안검색기술 개발 착수('21.4)

④ 혁신기업 성장 지원

- (공공수요) 산하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공공발주가 많은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지원
- (금융 지원) 민간투자 확정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20억원),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펀드 규모 확대(170 → 510억원)
- (연구개발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기술 검증·개량 및 사업 모델 수립 지원(과제당 3년간 최대 4억원)

(4)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1. 국토교통 산업을 미래혁신 산업으로 전환

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

- (고부가가치化) 시공 중심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 **활성화***
 -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도입, LH·철도공단의 사업에 PM 시범적용 추진('21.上)
- 기술형 입찰 확대('19, 6.8%→'21, 10%), 첨단기술별 설계기준 제시('21.12) 등 기술 중심 산업기반 마련, 빅데이터 개방과 판로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
- (스마트 기술)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확대, **BIM 로드맵 수립** ('21.6)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본격 도입*하여 미래혁신산업으로 육성
 - *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추진방향 마련('21.4), 통합 시범사업 추진('21.下~)
- 중고층 모듈러 주택 확대*, 조립식 교량, 자동화 장비 등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 **확산** 및 **해외 진출** 추진
 - * (기술실증) 용인 모듈러 행복주택('21.8 착공) / (발주확대) '20. 709호 → '21. 2,254호
- (생산구조 혁신) 공공부문 **업역 폐지** 성과 분석('21.6)을 토대로 민간 시행('22), 전문업 **대업종화** 시행을 위한 주력분야 공시제 방안 마련('21.9)
 -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공사 신설('21.上), 유지보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종합·전문·시설물업의 참여 허용, 실적관리 일원화

② 통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 지원

- 패키지형 수주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21.3), 핵심 프로젝트 선별, 수주지원단 파견, 글로벌 컨퍼런스(GICC, '21.9) 등 **지원 강화**
 - * (현재) 플랜트, 산단 등 분야별 수주 → (향후) 신도시 등 선단형(船團形) 수주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모델 마련('21.下), 「K-City 네트워크」 국제 공모('21.2) 및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21.9) 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PM** 분야 공공-민간 동반 진출, 사업발굴부터 금융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PIS 정책펀드**(1.5조원)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영역 수주** 확대

3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모빌리티 혁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도입('21.上), 전담조직(센터) 설립('21.下)
 - * (예) 개인형이동수단 공유, e바이크 물류서비스, 모바일앱 미터기, 주차로봇, 드론택시 등
- **(운송 플랫폼)** 맞춤형 요금제(사전확정요금, 탄력요금 등)와 부가서비스(펫 전용 등)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운영 본격 시행('21.4)
 - * 법인택시 사업자가 다수의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허용, 합승 허용 등 규제 개선
- **(택시산업)** 업종 개편(차량크기·배기량→서비스 중심, '21.下), 택시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21.下), 서비스평가 의무화('21.12) 등 택시 서비스 제고
- **(물류산업 첨단화)** 유통·제조기능 복합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화성·구리 등, 사업계획 수립, '21.12), 융복합 물류혁신 R&D(1,461억) 착수
 -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2개도시, '21.9), 물류서비스 실증지원(2개소) 등 **K-스마트 물류모델 구현**
 - 도시철도 차량기지·천안 물류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11개소, ~'25), 철도·고속도로 등 유희부지 활용 생활물류시설 조성 착수('21.上)
- **(철도산업)**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시범도입('21.6) 등 철도차량·부품·신호산업 경쟁력 강화,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 R&D 추진('21.上)
-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제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튜닝시장 조성, 인증대체부품 공동 생산지원시설 구축(군산, '21.下)

4 항공산업 재도약 지원

-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조기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트래블 버블*('21.下)·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등 항공사 자구노력 지원
 - *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
-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21.下)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공항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사업 모델 다각화
- 기술로드맵('21.3) 등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개발,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21.12) 등 **K-드론 브랜드기업** 육성, **MRO(유지·보수·운영) 산업** 지원*
 - * 저비용항공사(LCC) 국내 정비 유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한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2. 일자리의 질 개선

1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

- **(근로환경)** 전자카드제 안착, 철도공단 시스템의 점진적 확산('21.6~), 민간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임금직불제 안착** 지원
 -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접지급제 2.0 마련('21.11)
- **적정임금제** 시행방안 마련('21.上), 시범사업 추가 실시(LH, 도공 등 20건)
- **기능인등급제**('21.5 시행) 안착을 위해 업체의 고용지원방안* 마련('21.4), 경력·교육·이력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 * 특·고급 기능인을 소규모 현장배치 기준으로 인정, 시공능력평가 기준 반영 등
- **(시장질서)** 업역 폐지에 따른 하도급 허용기준 정비, 3진 아웃제 확대 (무등록 하도급 포함),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 등 **하도급 관리 강화**
 - 불공정행위 통합신고센터 구축('21.上) 및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방안 마련*('21.上) 등을 통해 **발주자 갑질 근절**
 - * 사업자가 공공발주자 서비스 수준을 평가토록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도급 간접비 등 반영('21.6) 및 시장단가 조사체계 개선, **적정공기 산정의무** 도입 및 세부 산정기준 고시('21.6)

2 교통·물류산업 근로여건 개선

- **(버스)**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21.6) 등 **불법 지입관행 개선**, 인력양성 사업(2천명)을 통해 **노선버스 주52시간 확대**('21.7) 준비
- **(택시)** 택시 월급제 실시(서울부터, '21.1~)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다른 지역으로 **실시지역 확대 검토**
- **(물류)** 표준계약서 마련, 사회보험 가입 확대, 단가·수수료 개선을 위한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구축**
 - **택배분류 자동화설비 도입** 촉진('21~), 배달 라이더 공제조합 신설, 근로실태 조사 실시(매년) 등 **물류 종사자 보호기반 조성**

(5)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1.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현장, 생활환경 조성

①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 제고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OECD평균 5.6명): ('17) 8.1 → ('18) 7.3 → ('19) 6.5 → ('20) 6.0 → ('21) 4.8명(목표)

- **(보행자)**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비신호 교차로·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경찰청 협업)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 보도 설치(37개소) 등 보행안전 시설 확충
- **(도로)**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206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 안전시설 지속 확충
-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확대(20t → 3.5t 초과, '21.7), 운행 제한단속원 권한 확대('21.11),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단속 강화
 - * 적재불량 단속 시장비 시범도입, 국토부-지자체 간 위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1.11)
-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강화, 이륜차 정비업 신설, 대형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등 생애주기(사용신고-정비-검사-폐차)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21.6)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제정('21.上), 표준 대여약관 마련('21.下)

②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 등 산업안전 확보

*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명(잠정)

- **(현장 관리)** 국토관리원의 전문인력 확충(133명 ↑) 및 현장점검 대폭 확대(2,600개 → 15,500개) 등을 통해 사고다발 현장 밀착 관리
 -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제공(발주자),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등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안전관리 역량 우수 사업자에 인센티브 추진('21.上)
- **(기계 관리)** 건설기계 임대인, 조종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화하여 관리감독 강화('21.上)
 -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검사기관 장비·인력 확충 및 검사매뉴얼 정비('21.上) 등 검사제도 강화로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진입 차단

- **(철도 현장)** 선로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역 구내에서 원격운전제어 시스템 시범도입('21.上)
 - 스크린도어(12개), 선로변 방호울타리(211km)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전차선 단선 등 예방을 위해 전국 전차선 일제점검(~'21.6)
- **(도로 현장)** 차량 충격흡수장치 등 작업장 안전시설 확대, 근무복 시인성 개선, 안전관리자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21.3)
 - 유지보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해 라바콘 자동설치·수거 장치 및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등 전용장비 시범운영('21.5)

③ 안심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안전 강화

- **(시설 안전)**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소규모·노후시설의 점검기준 재정비,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초의 파임 등 심화점검 실시
 - 지자체별 기반시설 관리 강화(실행계획 도입, '21.12), 도심지 터널 등 위험지역의 지하굴착 시 계측관리 자동화, 불량자재 실시간 관리
- **(건축물 안전)** 샌드위치패널 성능평가 개선('21.4),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계획 마련('21.10), 품질인정제도 실시('21.12) 등 **건축자재 안전성능 제고**
 - 빌딩풍, 화재안전성 등 평가토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기준 강화('21.7),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21.10) 등 **건축물 재난대응력 제고**
 - * (가칭)‘국가건축 안전센터’ 신설('21.9)을 통해 안전 기준 모니터링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지원

④ 공공주택의 주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자살예방 지원

- **(특화설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간구조 특화설계 도입('21.下 지침개정 및 설계공모)
 - * 예) 중저층 주동계획, 상시교류 가능한 옥외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 **(관리사무소 역할강화)**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추진

⑤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 지속

- **(공항)** 항공기 방역수칙 강화 및 인천공항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21.上), 감염병 확산 단계별 검역체계를 구축(T2, ~'22)하여 방역체계 효율화
- **(철도·고속도로)** 비접촉 스마트게이트 시범설치 등으로 역사 내 방역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확대(27→150개소)

2.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1] 출퇴근 편의 제고

- **(철도)** GTX A노선('23년말 개통), B노선(제안요청서 고시, '21.12), C노선(실시협약 체결, '21.12)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
 - 서울5호선 하남선 개통('21.上), 7호선 석남 개통('21.5) 및 청라 연장 착공('21.下), 위례선(트램), 9호선 4단계 연장설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
- **(버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일 44회→103회), 1회 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도입(20대) 등을 통해 차내 혼잡 완화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영 확대(260 → 300대), 프리미엄 M버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자율요금제·예약제 등, '21.9)
- **(도로)** 수도권 횡단축(계양·강화 타당성조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신청), 제2순환망(파주~포천 등 7개구간) 구축('21.11) 등 대도시권 간선도로 확충
 -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신속 추진,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및 설계기준 정비('21.12)를 통해 확장곤란 도로의 지하화 착수
 - * 시흥-송파, 성남-하남-남양주, 제2용인-서울, 서울-양주 등 적격성 조사(~'21.12)
 - ** 서창-김포(18.3km), 오산-용인(172km): 실시협약('21.下) / 판교-퇴계원(31.5km): 추진 검토
 - 동부간선도로(준공, '21.10),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준공, '21.9), 광주 용두-담양(준공, '21.12) 등 광역도로 혼잡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 **(新교통수단)**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수석IC~강변북로~강변역) 착수(기본·실시설계, '21.下), 말단부인 강변역에 회차·환승시설 연계
 -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 시범사업 착수*('21.下), BRT 친환경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세부기준 마련('21.3)
 - * 인천·성남 개발계획 수립('21.下), 창원 기본·실시설계(~'22.6), 세종 우선신호 도입('21.下)
 - 트램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21.12), 교통사고시 보호제도 정비(경찰청 협조), 보험 개발('21.下) 등 트램 활성화 기반 마련

② 신속한 환승체계 구축

- 서울역(세부 추진방안 마련, '21.7), 청량리역(기본구상안 구체화) 등 **거점 철도역 환승센터 사업 본격 추진**
 - GTX 거점역(운정, 양재 등) 사업 추진('21.3), 공공·민간 등 투자확대 및 총괄계획단 운영('21.4~)을 통해 **환승센터 사업 활성화**
 -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회차·환승시설 사업**(총 17곳*)도 기본설계 등 **본격 사업 착수**(합정역 등 4곳 준공)
 - * 서울: 사당역 등 12곳 / 경기: 판교역 등 3곳 / 충북: 오송역 / 경남: 창원중앙역
- 교통수단간 환승(버스↔지하철↔승용차)이 편리하도록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21.12)
 - 고속버스·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가능한 하남드림휴게소 입체개발 착수, 철도역에 공공형택시(45→50개 지역) 및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확대

③ 교통 공공성 강화

- (**교통비**)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바일페이 지역 확대(~'21.11),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확대***
 - * ('20년) 128개 시군구, 16만명 → ('21년) 136개 시군구, 30만명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상주영천(1.31배) 및 광주원주(1.24배)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21.6), 신규사업시 재정으로 수준 통행료 설정('21.12)
- (**준공영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9개→27개), 표준운송원가·회계처리 일원화 등 지자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21.6)
- (**사각지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휠체어 탑승버스 시범사업 확대('21.11,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
 - * 저상버스 보급 저조 지자체 지원 확대('21.上),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1.下)
- **출퇴근 시간대 탄력운영** 등에도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여객법 개정, '21.6)
 - * (現) 농어촌 기종점, 대중교통 부족지역 → (改) 출퇴근시간 교통수요 편차 보완시 등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2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기구	기준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2차관, 5실, 3국, 19관, 87과 · 6팀 ○ 소속: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운영기관 2개(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2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021명(한시정원 14명 포함) - 소속: 3,199명

(1) 조직

□ 본부



※ 한시조직(1개): 신공항기획과(~'21.6.30.)

※ 총액인건비제팀(6개): 디지털소통팀(~'21.9.30.), 스마트도시팀(~'23.1.31), 공정건설추진팀(~'23.5.31),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23.5.31.), 디지털도로팀(~'23.5.31.), 기업성장지원팀(~'23.9.30)

※ 벤처형 조직(1개): 미래드론교통담당관(~'21.7.31)

※ 별도조직(8개): 공공주택본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용산공원원조성추진기획단, 지적재조사기획단,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 긴급대응반(2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21.2.14~'21.8.13),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20.11.13~'21.5.12)

□ **소속기관** (87개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3차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2) 인 원

□ 기준정원

(단위 : 명, 기준정원 * 한시정원 포함)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 4급	4·5~ 5급	6~ 9급	연구직		경력관
									연구관	연구사	
계	4,220	4	35	7	5	136	642	3,364	4	21	2
본 부	1,021	3	26	7	1	87	434	460	-	1	2
소속기관	2,744	1	9	-	2	41	168	2,514	-	9	
책임운영기관	455	-	-	-	2	8	40	390	4	11	

* 본부 한시정원 20명 포함 【 신공항기획과 6명 : 4급1, 4.5급1, 5급2, 6급2(21.6.30) / 주거복지정책과_협업정원 1명 : 5급1(23.2.28) / 도시경제과_스마트도시국가시범도시 4명 : 5급2, 6급2(22.2.28) / 디지털도로팀 3명 : 5급1, 6급2(22.12.31일까지) / 모빌리티정책과(택시) 1명 : 6급1(22.2.28) / 산업입지정책과 1명 : 5급1(23.2.28일까지) / 공정건설추진팀 2명 : 5급2(23.2.28일까지) / 건설안전과 1명 : 5급1(23.2.28일까지) / 시설안전과 1명 : 5급1(23.2.28일까지) 】

** 긴급대응반 14명 미포함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분석총괄과) : 4급1, 4.5급1, 5급2, 6급3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상황총괄대응과) : 4급1, 4.5급1, 5급2, 6급3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 4급	4·5~ 5급	6~ 9급	연구직		경력관
									연구관	연구사	
계	4,451	4	42	7	5	134	896	3,341	-	20	2
본 부	1,487	3	35	7	1	85	670	683	-	1	2
소속기관	2,577	1	7	-	2	41	196	2321	-	9	
책임운영기관	388	-	-	-	2	8	30	337	1	10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93,215	570,575	659,713	658,229	698,098
(전년대비증가율, %)	(5.0)	(5.7)	(5.6)	(0.2)	(6.1)
○ 총계	1,394,532	1,290,281	1,291,090	1,368,355	1,461,491
(전년대비증가율, %)	(25.7)	(△7.5)	(0.1)	(6.0)	(6.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928	3,119	3,347	3,574	3,824
(전년대비증가율, %)	(4.4)	(6.5)	(7.3)	(6.8)	(7.0)
○ 기본경비	485	473	494	508	522
(전년대비증가율, %)	(0.4)	(△2.5)	(4.4)	(2.8)	(2.8)
○ 주요사업비	489,838	566,983	655,873	654,148	693,752
(전년대비증가율, %)	(5.0)	(15.7)	(15.7)	(△0.3)	(6.1)
□ 예산					
○ (총)지출	204,437	235,984	274,434	303,151	325,096
(전년대비증가율, %)	(12.4)	(15.4)	(16.3)	(10.5)	(7.2)
○ 총계	396,232	462,812	437,010	525,298	587,006
(전년대비증가율, %)	(6.6)	(16.8)	(△5.6)	(20.2)	(11.7)
【일반회계】					
- (총)지출	73,439	75,037	85,936	92,109	95,705
(전년대비증가율, %)	(38.8)	(2.2)	(14.5)	(7.2)	(3.9)
- 총계	221,541	229,673	231,421	290,993	338,938
(전년대비증가율, %)	(12.4)	(3.7)	(0.8)	(25.7)	(16.5)
【교통시설특별회계】					
- (총)지출	102,487	127,105	139,920	159,177	184,801
(전년대비증가율, %)	(4.3)	(24.0)	(10.1)	(13.8)	(16.1)
- 총계	142,982	196,389	156,831	182,260	201,818
(전년대비증가율, %)	(1.0)	(37.4)	(△20.1)	(16.2)	(10.7)

구 분	'20	'21	'22	'23	'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158	185	328	347	367
(전년대비증가율, %)	(△12.7)	(17.1)	(77.3)	(5.8)	(5.8)
- 총계	158	185	328	347	367
(전년대비증가율, %)	(△12.7)	(17.1)	(77.3)	(5.8)	(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총)지출	479	805	883	943	800
(전년대비증가율, %)	(556.2)	(68.1)	(9.7)	(6.8)	(△15.2)
- 총계	3,677	3,712	1,063	1,123	2,460
(전년대비증가율, %)	(58.1)	(1.0)	(△71.4)	(5.6)	(119.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27,874	32,852	47,367	50,575	43,423
(전년대비증가율, %)	(△8.3)	(17.9)	(44.2)	(6.8)	(△14.1)
- 총계	27,874	32,852	47,367	50,575	43,423
(전년대비증가율, %)	(△8.3)	(17.9)	(44.2)	(6.8)	(△14.1)
□ 기금					
○ (총)지출	288,814	334,591	385,279	355,077	373,003
(전년대비증가율, %)	(0.3)	(15.8)	(15.1)	(△7.8)	(5.0)
○ 총계	998,300	827,469	854,079	843,057	874,485
(전년대비증가율, %)	(35.4)	(△17.1)	(3.2)	(△1.3)	(3.7)
【주택도시기금】					
- (총)지출	288,289	334,074	384,510	354,315	372,179
(전년대비증가율, %)	(1.2)	(15.9)	(15.1)	(△7.9)	(5.0)
- 총계	995,734	824,862	851,469	840,685	872,334
(전년대비증가율, %)	(35.4)	(△17.2)	(3.2)	(△1.3)	(3.8)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총)지출	526	517	770	763	824
(전년대비증가율, %)	(1.2)	(△1.7)	(48.9)	(△0.9)	(8.0)
- 총계	2,566	2,607	2,611	2,372	2,151
(전년대비증가율, %)	(△1.2)	(1.6)	(0.2)	(△9.2)	(△9.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우리 부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21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선정한 5대 전략목표에 '21년 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14개 성과목표 제시
 - 더불어 잘사는 국토 조성 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9개 관리과제 마련
- 코로나19,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정부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서 경기회복 견인 및 비대면 시대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지속
 - 「포용·상생·혁신성장·민생」을 핵심으로 포용적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등 중점 추진

《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및 도심 인근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속도감 있게 공급
-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반 강화

《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추구 》

- 지역 광역권 형성을 지원하여 수도권 일극구조 극복
 -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거점육성 사업과 함께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상호 연계·추진하여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지역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권역별 광역철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

- UN SDGs, 파리기후협정 등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 달성 및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을 힘있게 추진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모빌리티 등 본격 추진, 도시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스마트시티 등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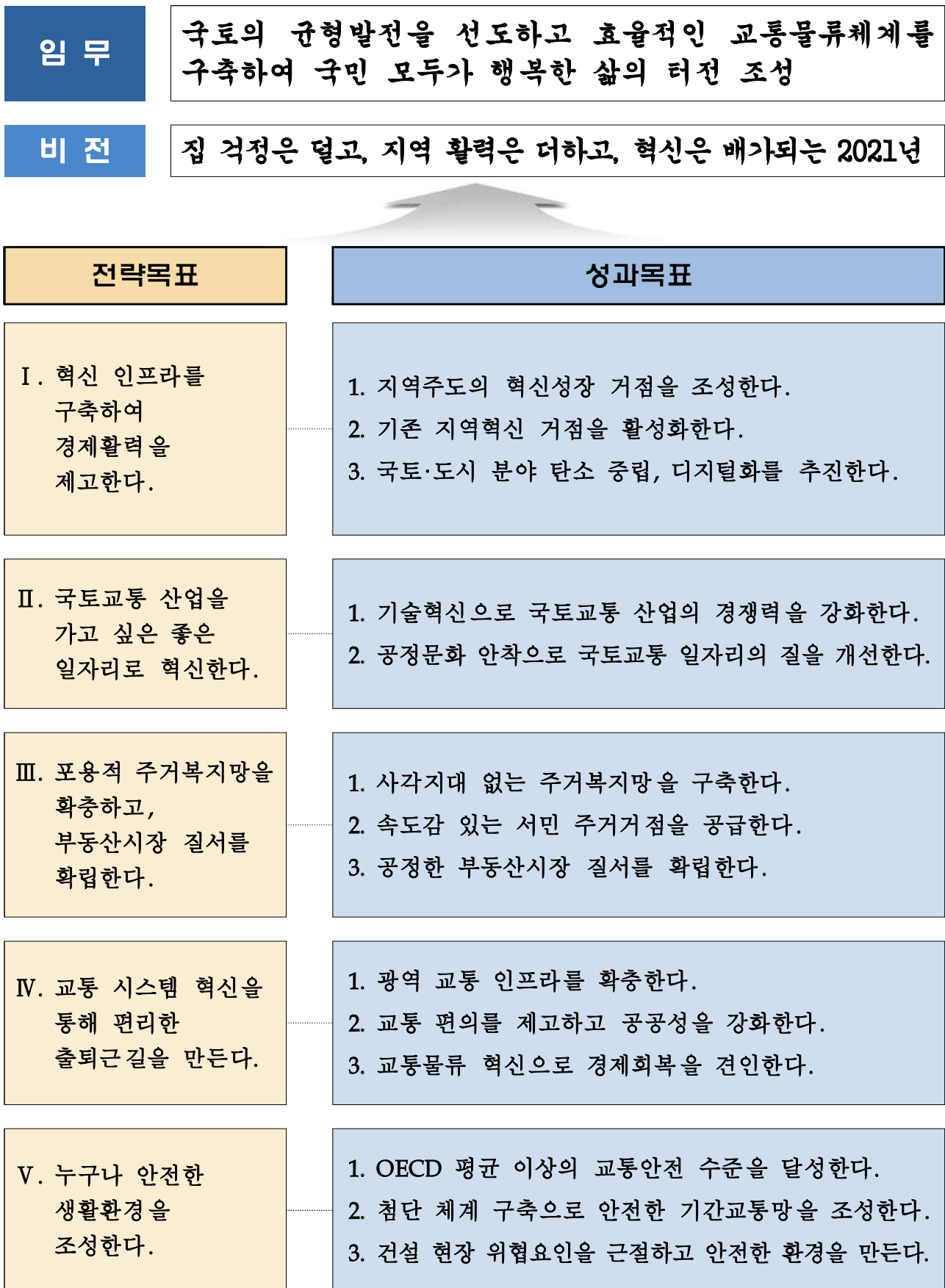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 전반을 혁신
 -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교통·물류·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상생을 통한 포용적 성장 주도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

-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안전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재해·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 확보
 - 모든 국민들이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8	14	45	39	20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업무 2-1, 2-3, 2-4, 3-1 / 탄소(건물) 3-1 / 뉴딜 4-10, 5-13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	국정 79-1, 79-2, 79-4 / 업무 1-1, 2-3 / 탄소(건물) 2-1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정 32-7 / 업무 2-1, 3-1, 3-2 / 탄소(총괄) / 뉴딜 1-3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	업무 2-2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국정 78-3 / 업무 2-1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국정 78-2, 78-4 / 업무 2-1, 3-1 / 탄소(건물) 2-1 / 뉴딜 7-19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①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	국정 37-6, 79-3 / 업무 3-1, 5-1 / 탄소(건물) 1-2, 2-1 / 뉴딜 1-3, 5-13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국정 37-6 / 업무 3-1 / 탄소(건물) 2-2, 3-1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	국정 33-5, 37-7 / 업무 3-1, 3-2, 4-2 / 탄소(수송) 1-2, (건물) 1-1, 2-1 / 뉴딜 4-11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국정 34-8 / 업무 3-2 / 뉴딜 1-3, 4-10, 6-1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 Eng.과 스마트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	국정 32-2, 32-12 / 업무 4-1 / 뉴딜 1-2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	국정 32-5, 34-4 / 업무 3-2 / 탄소(수송) 3-1 / 뉴딜 1-2, 4-10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업무 3-2, 4-1, 5-1 / 뉴딜 1-4, 4-10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	국정 34-5 / 업무 4-1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국정 32-1 / 업무 4-2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국정 32-3 / 업무 4-2 / 탄소(수송) 1-1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	업무 4-1 / 탄소(수송) 5-1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국정 46-1, 46-2, 46-3, 47-1, 47-3 / 업무 1-2 / 탄소(수송) 1-2 / 뉴딜 5-13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국정 46-4 / 업무 1-1, 5-1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국정 46-4, 47-2 / 업무 1-1, 1-2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국정 46-1 / 업무 1-1, 1-2, 1-4 / 탄소(수송) 1-2, (건물) 1-1 / 뉴딜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업무 1-3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업무 1-3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국정 31-3 / 업무 2-2, 5-2 / 탄소(수송) 2-1, 3-1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 31-4, 32-6 / 업무 2-2, 5-1, 5-2 / 탄소(수송) 2-1 / 뉴딜 4-10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국정 31-1, 31-3 / 업무 4-2, 5-2 / 탄소(수송) 3-1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	국정 32-5 / 업무 2-2, 3-1, 5-1, 5-2 / 탄소(수송) 1-2 / 뉴딜 4-10, 6-18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	국정 32-8, 32-9, 32-10, 34-1 / 업무 3-1, 4-1, 4-2 / 탄소(수송) 1-1, 3-1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	국정 32-6 / 업무 3-1, 4-1 / 탄소(수송) 2-1 / 뉴딜 4-10, 6-18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국정 32-8 / 업무 4-1, 5-1 / 뉴딜 1-3, 6-18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	국정 32-4, 32-11 / 업무 3-1, 4-1 / 탄소(수송) 1-1, 1-2, 4-1 / 뉴딜 4-12, 6-1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국정 55-2 / 업무 5-1 / 탄소(수송) 3-1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국정 32-5, 32-7, 55-2 / 업무 3-2, 5-1 / 탄소(수송) 3-1 / 뉴딜 4-10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	국정 32-6 / 업무 3-2, 5-1 / 뉴딜 4-10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	국정 55-2 / 업무 5-1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	업무 4-1 / 뉴딜 4-10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업무 5-1
3. 건설 현장 위험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	국정 55-3 / 업무 5-2 / 뉴딜 1-3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국정 32-12 / 업무 5-1 / 뉴딜 1-3



Ⅲ. 세부 추진계획

1.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41
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23
3.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81
4.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239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311

전략목표 |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기본 방향

□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농산어촌 지역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 (교차보전)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 지역별 수요 특성에 대응하여 적기에 지역사업(주택, 생활SOC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도시재생) 既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본격적이고 체감적인 성과 확산 추진
- (SOC) 코로나19는 국내 경제 쏠분야에서의 위축을 야기함에 따라 SOC 등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부양 필요
- (지역공항 개발) 공항은 지역경제·사회의 플랫폼으로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 적극 추진

□ 기존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성장기반 혁신
- (도심융합특구)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행복도시) 세계 최대(3GW) 재생에너지 사업은 순차적 착공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 특화 방안을 마련과 혁신생태계 조성

기 본 방 향

-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고, 선도사업은 '산학연 혁신허브' 조성기반 마련 등 사업 본격화
- (산단대개조) 신규 사업지로 5곳을 추가선정하고, 기존 사업지('20년, 5곳)는 노후거점산단법상 '경쟁력강화지구'로 지정

□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중립도시·마을 조성·확산, 저탄소 건축물 의무화 확대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토·도시 로드맵 수립 추진
- (녹지공간)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수정) 확정·고시, 대국민 개방 확대,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방안 마련
- 장기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계획수립 시 조성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 확대 추진
- (스마트시티) 성과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미래형 주거단지(부산 스마트 빌리지) 조성 완료, 혁신서비스 실증·체험관(세종 퍼스트타운) 조성 착수
- (수소도시)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수소시범도시(안산 울산 전주 완주) 본격 조성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디지털 트윈)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 안착을 위한 기본골격을 구축하고 서비스모델 등을 정립하여 성과를 가시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11	10	52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인구집중도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균형발전정책사업 추진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상 추진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 투자선도지구 신규지정 ㉣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세부개선안 마련 및 지침개정 ㉤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국토도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하천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SOC 등 세부사업 공급 ㉡ 어울림센터 준공 ㉢ 도시재생법 및 소규모정비법 개정 ㉣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민관협력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6조원 달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정상 추진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혁신조달 패스트 트랙 I 대상 ‘혁신제품 인증서발급 실적 20건 달성 ㉤ 주요 국제회의 참석(ASEAN·UNESCAP·ASEM 등)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 ㉢ 공항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율 ㉡ 혁신도시 성장 기반 혁신 ㉢ 일자리거점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 혁신도시 특구지정 확대 ㉢ 지역인재 채용률 ㉣ 정주인프라 개선율 ㉤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융합특구 조성기반 마련 ㉡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율 ㉢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추진율 ㉣ 산업기반 강화 프로젝트 추진율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관리 내실화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 대응 건물부문 추진 전략 마련 ㉡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골격 구축
	①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공사중단 방지건축물 정비 활성화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공원 대국민 성과체감 및 국민 소통 ㉡ 도심 내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향후 관리 방안 마련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범도시 체감성과 창출 ㉡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및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 스마트도시운영 체계 구축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 및 산업기반 강화 ㉤ 수소도시 본격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개선 ㉡ 디지털 트윈국토 교육 프로그램 시행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확산 ㉣ 공간정보 아카데미 취업자과정 취업률 ㉤ 표준 사전검토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 실적

(1) 주요내용

□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주택에 일자리·생활SOC를 연계하되, 지자체 주도로 지역 여건·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지역맞춤형 주거플랫폼 조성
- (교차보전) 개발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의 사업을 통합 운용하여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하는 '수도권-지방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旣 선정 사업지 40여곳의 연내 준공을 추진 하고, 생활 SOC 세부사업 200곳, '어울림 센터' 10곳 등의 공급 완료
- (SOC)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메가트랜드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기업 육성 지원
- (지역공항 개발)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개별공항 개발계획으로 확정하여 수립
 - (공항주변개발) 공항주변 삶의 변화를 위하여 도시개발(재생, 스마트)과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한 공항 주변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공항 선정

□ 기존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 (혁신도시) 1차이전('05.6) 이후 신설공공기관의 입지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우선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에 따라 이전기관의 역량을 활용, 지자체와 협력하여 10대 협업과제를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추진
- (도심융합특구) 신속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세제·절차 등 특례가 포함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마련('21.4 발의)
- (새만금)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세계 최대(3GW) 재생에너지 사업은 순차적 착공 개시('21.6~)

-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 특화 방안을 마련('21.3) 하고, 공동캠퍼스 및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 (캠퍼스혁신파크) 본격적인 기업입주 시기('23~)에 대비, '산학연 허브' 운영 및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21.12)
- (산단대개조) 거점산단과 연계지역 지원을 위한 '노후거점산단법' 개정

□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 추진

-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시 탄소중립 요소가 반영되도록 관련 지침 등 개편,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녹지공간)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고의적 환경훼손 차단을 위한 '해제불가 등급' 신설, 환경평가등급 산정기준 보완 등 체계적 관리 강화
- (스마트시티)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를 전국 도시에 확대 보급 ('21. 44곳),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 (디지털 트윈) 지상·지하가 3차원 디지털지도 기반으로 연결된 통합 체계 구축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자율주행, AR/VR 등 新산업계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유통방식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① 수도권 인구집중도 (%)	49.50	49.60	49.78	50.00	50.20	50.5	수도권 인구집중 통계청 추계치* ('19.6)를 감안해 목표치 설정 * '20년 50.1 → '25년 50.7	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제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혁신성장 거점) 인구·자본·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 불균형 심화, 지방 중소도시 등의 경우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서비스 부족 등 문제
 -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광역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SOC 투자) 재정당국은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복지, 한국판뉴딜 등 재정투입을 우선하고 있어 전통적 SOC 예산 축소 우려
 -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SOC 안전예산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
 - 혁신성장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 및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노력 전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자체간 기관 유치 경쟁, 공공기관 노조 반발,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 지원 및 종전부동산 처리문제 등 갈등 우려
 - 시도지사연석회의 등 지자체 의견수렴, 공공기관 4대 노조 협의, 이전기관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갈등관리
- (탄소중립) 파리기후협약 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토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방안 조속히 도출 필요
-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계획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서울시·용산구·시민단체·이익집단 등)들로 인해 일부 갈등 발생요인 상존
 - 용산기지 체험을 위해 美측과 지속협의를 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성계획 수립 추진
- (녹지조성)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탄소저감 등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추진중이나,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도 안착에 어려움 존재
 -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80곳 이상 참여)를 개최 하여, 최소 10곳 이상에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독려

-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확대에 따른 일부 갈등발생 요인 상존
 - 2020년에 선정된 민관 SPC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민관 합작법인 체계 성공적 구축을 목표로 추진
-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를 본격 조성(22년 완성)하는 시기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수소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 등 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자문,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 하고, 세미나 등 참여형 행사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은 추진 초창기로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 체감이 다소 어려움
 - 디지털 트윈국토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사업 추진
 - 특히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분야 특화 홍보 전략 수립, 콘텐츠 제작,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외부환경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

(1) 주요 내용

- 新 균형발전정책 발굴을 통한 성과체감 확산 및 미래 대응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주거플랫폼 모델을 우리부 및 타부처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동시 추진, 연내 조기성과 창출 추진
 - (교차보전) 수도권 공공택지와 지방 사업지구(공모선정)를 발굴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법인(리츠 등)을 설립하여 시범사업 추진(2개 이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감성과 창출
 - (도시재생) 2.4대책에서 발표된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정비 관리 지역'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 민관협력형 리츠 시범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출범, 기업의 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 도모
- SOC 등 대규모 재정투입 및 혁신성장
 - (SOC) 대규모 예타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역사업 신속 추진 및 혁신·벤처기업 스케일업을 통한 미래 유망주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지역공항 투자로 경제위기 극복
 - (지역공항 개발) 가덕도·제주·새만금·대구·울릉·흑산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 갈등관리를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
 - 기존공항(인천, 대구, 무안, 제주공항 등) 시설개설과 무안·광주공항 통합 추진
 - (해외공항수주) 페루 친체로 PMO('19), 폴란드 신공항 자문자 선정('20) 등의 경험과 Team-Korea 구성 등 정부지원으로 신사업 수주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新 균형발전정책 사업 추진율 (30%)	신규			100%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대한 핵심정책의 추진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	①주거플랫폼사업 부처간 협업MOU 체결(20%) 및 시범사업선정(20%) + ②교차보전사업 공모(30%) + ③국토도시 탄소중립 로드맵마련(30%)	관련문서, 보도자료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지원 확대 (20%)	95%	95%	99%	99%	'20년 재정집행률을 감안하되, 배정된 국비의 확대(7,777억원 →8,680억원) 규모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집행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정 집행률(%)	내부자료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상 추진 (30%)	신규			6건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의곡순환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1년 상반기 착수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국도위험 구간 2개소를 '21년 하반기에 착수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설계착수 3건 공사착수 3건	계약서류 및 착수계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20%)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중주 및 거점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인천, 제주, 청주, 대구공항 등 6개 공항에 대해 실시한 최근 서비스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 * (평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인천·김포 등 6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교통의 편리성, 시설청결성, 주차시설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항공교통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 산정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도시재생)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집행 여건의 악화, 부지 확보의 무산, 행정절차나 연계사업의 지연 등의 비예측적 악재 수시 발생
 -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先 제시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
- (신공항) 김해, 제주2, 흑산 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 지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 등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충분히 설명하여 이견을 해소 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기존공항)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나, 소음·고도제한 등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갈등 지속
 - 지자체, 지역주민, 공항운영자 등과 지속 소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전환, 체감형 사업 발굴 및 주거복지 중심의 사업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I-1-①)

□ 추진배경(목적)

- 인구·자본·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 불균형 심화*, 지방 중소도시 등의 경우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서비스 부족 등 문제**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이 인구소멸위험지역, 그 중 97곳(92.4%)이 비수도권

** (고령화율) 읍지역 15.5%, 면지역 28.6% / 동지역 12.5% ('17, 전국 14.2%)
(사회서비스)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만족도 농촌 55.8점, 도시 61.3점('18년 농진청)

- 특히, 인구감소가 지역의 생활·행정 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 이에 반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 국토부(공공주택) 등 관련 부처는 개별사업 추진으로 시너지·성과 창출에 한계
- 한편, 최근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인프라 및 균형발전 전략·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

* 귀농귀촌귀어인(만명, 통계청) : ('13) 42.4 → ('15) 48.8 → ('17) 51.8 → ('19) 46.2

⇒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지역맞춤 사업을 발굴하여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체감성과 확대 필요

- 나아가, 기후변화, 혁신기술 고도화 등 국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공간 계획·조성 필요

-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미래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전망·분석하여 국토 계획·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토모니터링 체계 이행필요
-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VIP, '20.12) 실현을 위해 국토·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국가하천 관리강화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맞춤형 혁신 국토정책 추진》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농산어촌 지역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 * ‘살고 싶은 농촌’ 선호도 조사 결과 ①쾌적한 주거환경 ②일자리 ③교육·의료 순('19, 경사연)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유형(예시) >

구분		개념
지역 주민	고령자 돌봄형	■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제공
외부 수요	교육 연계형	■ 지역 내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전입가구에 주거, 일자리알선 등 지원
	일자리 연계형	■ 지역 전략산업, 산업단지과 연계하여 근로자 지원 주택, 생활SOC 확충 등 재생사업 추진
	은퇴자 타운형	■ 정주시설과 돌봄시설 등을 연계하여 은퇴자 맞춤형 의료 복합단지 조성

- 주거플랫폼 모델을 우리부 및 타부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연내 조기성과 창출 도모

* 공공임대주택에 일자리·생활SOC를 연계하되, 지자체 주도로 지역 여건·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거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1:1 컨설팅 실시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방안 >

- ▶ (국토부사업 연계) 지역수요맞춤지원,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연내 10곳 선정
- ▶ (타부처사업 연계) 농식품부 농촌협약, 해수부 어촌뉴딜 등 타부처 협업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공동 추진 → MOU 체결 및 연내 5곳 내외 선정

- (교차보전)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 지역별 수요 특성에 대응하여 적기에 지역사업(주택, 생활SOC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개발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의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하는 ‘수도권-지방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 * 수도권-지방 사업지구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 등을 위해 우리부내 협업TF 구축 필요

- 수도권 공공택지와 지방 사업지구(공모선정)를 발굴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법인(리츠 등)을 설립하여 시범사업 추진(2개 이상)
- * 수도권-지방 사업후보지 발굴 후, 교차보전 패키지사업 추진방안 수립계획(21.9)
- (광역권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주도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국토기본법 등)
 - * 도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닌, 행정구역을 넘어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분야의 협력사항을 담은 계획 수립
- 또한, 지자체가 계획수립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 검토
- * (예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 검토
-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지역발전 기반 공고화
 -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창출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2곳이상)하여 규제특례 등 지원
 -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사업의 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 제고 및 사업 내실화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해 초광역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등을 포함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 * 동해안권,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협력권 등 5개 권역

《미래 국토여건 변화 대응 강화》

-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마을 조성·확산, 저탄소 건축물 의무화 확대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토·도시 로드맵 수립 추진(21.12)
 - △탄소저감형 녹색 건축물 확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체계적 공급, △수소도시 조성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정착 방안 마련
 - *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ZEB) 설계,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활용 등

- 수도권 집중에 벗어나 다핵·압축적 국토로 개편,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등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포함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 반영

-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 등 저탄소형 지역사업도 검토

○ (모니터링)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국토모니터링 5개년 실행계획 수립('21.12)

* '50년까지의 인구변화 전망과 국토공간 정보(격자 단위)를 결합하여 인구감소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

- ①국토변화상 전망, ②국토계획 달성도 평가, ③국민 체감도 모니터링 등을 위한 다면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추진

○ (스마트하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대한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 고도화(자동 수위 감지 및 알림서비스 등) 기술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2022년 종합상황실 구축 시 적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함양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입주기념행사	2월	5%	보도자료
	국가 균형발전 논의 공공기관·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3월	5%	공문, 메모보고(장관)
	개발이익 교차보전 TF팀 구성 및 Kick-off 회의 개최	3월	5%	메모보고(차관)
2/4분기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추진계획 마련	4월	5%	방침결정(국장)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협업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	5월	5%	협약체결문서
	광역권 계획 관련 국토기본법 개정안 발의	6월	5%	국회입법정보시스템
3/4분기	투자선도지구 신규지정(2곳 이상)	8월	10%	방침결정(장관)
	국토부 사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선정	9월	10%	보도자료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9월	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관계부처 협업방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장관)
	타부처사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선정	12월	10%	보도자료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12월	5%	보도자료
	국토·도시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장관)
	국토모니터링 5개년 실행계획 수립	12월	5%	방침결정(실장)
	하천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착공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농산어촌,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지역, 낙후지역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지역주민 등 모든 국민이 수혜자
- (이해관계자) 해당 지역주민, 지자체 및 국회의원 등이 이해관계에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사업지 발굴 등 관계기관 협조가 절대적인 정책이고, 지자체 간 이해갈등 가능성도 높음
 - 또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의 경우, 수도권-지방 간 참여한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으로, 지자체·기재부·행안부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대효과

- (주거플랫폼 등)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등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낙후지역·비도시지역 등 수요부족으로 서비스 자체공급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 (미래대응) 탄소중립, 미래 인구변화, 스마트하천관리 등을 통해 중장기 국토발전 및 국민생활 환경·안전 제고 등 포괄적 효과 기대
 - 또한, 신속한 상황인지, 판단, 대응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재해예방 프로세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국가하천정비지원(Ⅲ-2-일반재정①)				
①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2,724	4,129
①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균형발전	2,091 (공모는 약44)	2,127 (공모는 약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20%)	-	-	-	100%	관계부처 관심 유도과 협업사업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규모별, 유형별(교육, 일자리 등), 수요자계층별(고령자, 청장년층, 귀농귀촌인 등)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주거플랫폼 모델을 개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도전적 목표 설정	주거플랫폼 협업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 (1개이상)	협약체결 문서, 메모보고(장관)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30%)	-	-	-	100%	주거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및 농산어촌이라는 특수지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며,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와 협업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①국도부 공모사업(지역수요맞 춤지원,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10개 선정(1개 사업당 5%) + ②타부처 사업(농촌협약 등)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협업사업 5개 선정(1개 사업당 10%)	보도자료
㉢ 투자선도지구 신규지정(10%)	3	-	1	100%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 도지구 지정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하였으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실현가능성 검증, 국토 정책위원회(지역분과위원장:장관님)를 거쳐 최종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최종 단계인 장관님 방침을 목표 측정방법으로 선정	투자선도지구 신규 2개 지정 (1개 사업당 50%)	방침문서
㉣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세부개선안 마련 및 지침개정 (10%)	-	-	-	100%	국비 투입 사업에 대한 중앙주도의 예산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지자체 자율의 예산·계획이행 여부 및 성과 평가로 개선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로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목표로 설정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세부개선안 마련 및 지침개정 (100%)	개정지침
㉤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10%)	-	-	-	100%	교차보전 사업에 연계 가능한 수익성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전적으로 사업 추진목표 설정	시범사업 2개 이상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1개 50%, 2개이상 100%)	보도자료
㉦ 국토도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10%)	-	-	-	100%	관계부처 협업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장기 비전과 실천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로, 연내 로드맵 수립을 추진목표로 설정	로드맵 수립 시 목표 달성 (100%)	메모보고(장관)
㉧ 하천관리 실시간모니터링 체계 구축 (10%)	-	-	-	100%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 공사까지 추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로, '21년 예산(공사비 240억원) 집행 수준을 목표로 설정	2021년 예산 집행율 (공사비 240억 기준) * 집행액(억원) ÷ 240 × 100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공문(지방청 이월명세서), 메모보고(장관)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I-1-②)

□ 추진배경(목적)

- 지역공동체 주도로 ‘도시공간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쇠퇴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중
 - ‘20년까지 총 401곳의 사업지가 선정되어 186개 지자체에서 활발히 사업추진 중이나, 체감효과 부족 등 다양한 외부 지적 지속
 - 도시재생 뉴딜 5년차를 맞아, 既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본격적이고 체감적인 성과 확산 필요
- 그간 노후 주거지 개선효과가 미흡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실질적 주거여건 개선과 체감효과 확대를 위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수단 도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감성과 창출

- 철저한 사업관리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적기·조기 착·준공을 도모, 도시재생뉴딜의 체감성과 확산 추진
 - 사업별 관리카드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집행상황을 매달 합동점검, 밀착 사업관리를 통해 既선정 사업지 40여곳* 연내 준공 추진
 - * ‘16~’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등
 - 주민 체감효과가 큰 생활 SOC 등 세부사업*도 연내 200곳 이상 공급을 완료하여 쇠퇴지역 주민 삶의 질 실질적 향상 도모
 - * 도서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문화예술시설 등

- 공공서비스·창업·문화 등 복합기능 앵커시설인 '어울림 센터' 연내 10곳 이상 공급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진하고 지역 활력도 도모
-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의 혁신지구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사업 본격화(3곳 착공)
-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한 사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120곳 내외), 구도심 활력제고와 시급한 도시문제 해결 추진
 - 위험건축물·쪽방·빈집(장기방치건축물 포함)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도시문제해결형 재생사업도 특별공모 등을 통해 수시 선정(15곳 내외)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인프라 취약지역의 지역문제(안전, 소방, 교통, 환경 등) 해결 도모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 2.4대책에서 발표된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제도 등을 차질 없이 도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 기존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 주거 취약지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신설, 관리지역 내 소규모정비 추진 시, 건축규제 및 정비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부여
 -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주민 설명회도 병행 실시
- 또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적극 발굴·추진
 -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지원 규모를 사업유형별로 50~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교육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리츠에서 탈피, 민간·지자체·기금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형 리츠 시범사업 추진
 - 민간 사업자 공모 후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도시재생 모태펀드 3호를 출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등의 발굴과 투자를 지원
-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 기반을 조성하고,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2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수시) 등
 - 도시재생사업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표준교재' 개발·배포도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	자료출처
1/4분기	도시재생 분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월	10%	보도자료
	'21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신규사업 선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2월	5%	해당 홈페이지, 공문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지자체 대상 사전의향조사	3월	5%	메모보고 (장관)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지자체 설명회	3월	5%	시행공문
2/4분기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4월	5%	보도자료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5월	5%	보도자료
	위험건출물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4월	5%	보도자료
3/4분기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선정	7월	5%	보도자료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8월	5%	해당 홈페이지, 공문
	'21년 도시재생뉴딜 중앙 선정사업(1차)	9월	10%	보도자료
4/4분기	'21년 도시재생뉴딜 시도선정	11월	10%	보도자료
	'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12월	5%	보도자료
	'21년 도시재생뉴딜 중앙 선정(2차)	12월	10%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사업지 준공	12월	10%	메모보고 (장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착공(시공사 선정기준)	12월	5%	관련 공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국 쇠퇴지역의 지역 주민, 상인,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 지역쇠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에 도시재생 및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전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에 공적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이해관계집단) 관계부처,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거점연계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관계부처) 도시재생지역 內 다양한 부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성과 제고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협업 필수
 - * 문체부, 중기부, 문화재청 등 17개 부·청과 71개 중점연계사업 추진
 - (지자체) 동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로서, 뉴딜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자원조달방안, 주민참여 유도 등 도시재생 역량이 확보될 필요
 - (공공기관) 혁신지구·총괄관리사업자 등 거점연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주체로서, 지역 개발을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

□ 기대효과

-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재생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뉴딜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이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도시재생(I-2-일반재정⑥)				
① 도시재생(5641)		균특회계	6,825	7,724
▪ 도시재생사업(301)		균특회계	6,825	7,724
도시재생(I-2-일반재정⑦)				
① 도시재생(5641)		균특회계	132	139
▪ 도시재생사업(세종)(301)		균특회계	132	139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I-2-일반재정⑩)				
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균특회계	760	760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760	76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I-2-일반재정⑪)				
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5641)		균특회계	60	57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301)			60	57
도시재생지원(II-7-일반재정①)				
① 도시재생지원(1510)		주택도시기금	3,196	3,992
▪ 도시재생지원(출자)(998)			1,280	1,580
▪ 도시재생지원(융자)(997)			1,710	2,235
▪ 도시재생사업지원(992)			206	177
도시기능증진지원(II-7-일반재정②)				
① 도시기능증진지원(1520)		주택도시기금	6,181	5,540
▪ 도시재생씨앗(융자)(994)			2,306	1,965
▪ 가로주택정비(융자)(995)			2,675	2,675
▪ 자율주택정비(융자)(996)			700	500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992)			5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생활 SOC 등 세부사업 공급 (15%)	-	51	169	200	상위계획(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목표 물량	'21년 내 준공되는 생활 SOC 등 세부사업 개수	메모보고 (장관)
㉡ 어울림센터 준공 (15%)	-	-	7	10	'20년 목표치(5건) 대비 200%의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	'21년 내 준공되는 어울림센터 개수	메모보고 (장관)
㉢ 도시재생법 및 소규모정비법 개정 (20%)	신규			개정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관리 지역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법 개정여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	신규			8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거재생 혁신지구 및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8개소 선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개수	보도자료
㉤ 민관협력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5%)	신규			선정	지자체 참여 사전의향조사 결과를 바탕 우선협상대상자 1곳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	보도자료
㉦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15%)	신규			125 (억원)	상위계획(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목표(3호 모태펀드 출범)	제3호 펀드 결성 승인금액(억원)	보도자료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I-1-③)

□ 추진배경

- (현황)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정확대 지속 필요
 - 한편, 코로나 위기에 따른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인 혁신기업 지원활동 필요
 - (SOC) '70~'80년대 집중 건설된 노후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투자는 대부분 단기 사업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신속대응 가능
 -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의 성장발판 마련
 - (경제혁신) 최근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투자의 감소세도 지속되는 상황
 - 이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혁신 필요
 - 아울러, 디지털 뉴딜 본격화로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신산업 육성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데이터 기업 지원활동 필요
 - (국제협력) 주요 국제회의 및 무역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국제공조 및 다자협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 필요
- ⇒ SOC 안전 및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스케일업·데이터경제 등 혁신성장 노력 전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SOC 투자 확대)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그간 4조 내외에서 정체되었다가, '21년 예산 편성시 **관련기관(재정 당국, 국회) 설득을 통해 5.8조원 규모로 확대**
 - * 국토교통 안전예산(조원) : '18년 3.2, '19년 3.3, '20년 4.8, '21년 5.8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본격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추진, 사업 착공 등 신속 추진
 - * 국토부 소관 15개 사업(내역사업 24개) '21년 예산 4,007억
- (혁신성장) 코로나 19 및 메가트랜드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육성 지원
 -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로드맵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문에 대한 중장기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전략 마련
 - 혁신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미래 유망주 기업을 발굴하고 고속성장 기업 육성
 -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개방과 선도사업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또한, 사이버공격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해킹 취약점 사전 제거 조치하는 등 주요 SOC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
- (국제협력) 전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판 뉴딜」 분야중심으로 相生협력 추진
 - OECD 등 주요 국제회의에 주도적 참여, 공동연구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협력 강화에 기여
 - 한-중 FTA 후속협상 진전, CPTPP 등 메가 FTA 논의 가속화 과정에서 국토교통 분야 협상의 조기 타결 및 성과 창출에 기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	자료출처
1/4분기	▪ '21~25'년 중기사업계획 마련	1월	5%	방침결정
	▪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계획 수립	1월	5%	메모보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월	5%	공문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참석	3월	5%	메모보고
2/4분기	▪ '21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4월	5%	방침결정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회의	5월	5%	메모보고
	▪ '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마련	5월	5%	방침결정
	▪ 국토교통 혁신계정 운용사 선정	6월	5%	메모보고
	▪ 제2차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6월	5%	메모보고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관련 추진 실적	6월	5%	공문(착수계)
3/4분기	▪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	8월	5%	메모보고
	▪ 정부안 편성 대응 및 정부안 국회 제출	9월	5%	메모보고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개최	9월	5%	메모보고
4/4분기	▪ 제12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11월	5%	메모보고
	▪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자체점검 결과 보고	10월	5%	방침결정
	▪ 제3차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12월	5%	메모보고
	▪ 예산안 국회(국토위, 예결위) 심의 대응	12월	5%	메모보고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관련 추진 실적	12월	5%	공문(착수계)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12월	10%	메모보고 또는 방침결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안전·한국판뉴딜·생활SOC 등은 국토교통 SOC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지자체 등이 수혜자
 - 혁신성장의 경우 취업자 및 기업, 연구자 등 직접 수혜자 외에도 기술 개발에 따라 편익을 누리는 일반국민도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국제협력의 경우 해외진출 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자 등이 수혜자
- 이해관계자
 - (안전·뉴딜·생활SOC) 국회, 재정당국, 지자체, 사업관계자 등
 - (혁신성장) 공공기관, 사업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
 - (정보개방 및 보안) 공공기관, 사업관계자, 민간기업(데이터활용)
 - (국제협력)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 안전분야 투자확대(6조원)를 통해 SOC의 구조 및 기능개선 촉진, 예방적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기대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으로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유도
- 탄소중립 산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확대 및 환경과 공존하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국토교통 혁신기업 등장의 기틀마련 및 국토교통 분야의 자금확보 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국제협력 역량강화로 OECD 등 국제회의 의제를 선도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
 - 한-중, 한-러 FTA 등 통상 협상 적극 참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국제 서비스무역시장 창출 및 우리기업 경쟁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분야	회계구분	'20	'21
※ 안전분야 예산	예산	48,355	58,933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15개 세부사업)	예산	792	4,007
※ 국토교통 혁신펀드	예산	100	200
※ 국제협력 예산	예산	22	21
※ 정보화(디지털 전환), 데이터 활용 예산	예산	926	1,0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6조원 달성 (30%)	3.3 조원	4.8 조원	5.8 조원	6 조원	'22년 예산맞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에서 제시된 핵심투자 예산편성방향 중 안전인프라 확대·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 재정당국 등 외부기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효과적 설명 등을 통해 관련 안전예산최초 6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대 추진	'22년 예산 반영 금액	메모보고, 공문 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정상 추진 (10%)	신규			6건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1년 상반기 착수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국도위험 구간 2개소를 '21년 하반기에 착수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설계착수 3건 공사착수 3건	계약서류 및 착수계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0%)	신규			로드 맵 도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전략(LEDs) 선언('20.12)을 계기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소관 부문(건물·수송) 탄소중립 로드맵 연내 마련 필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메모보고 또는 공문, 보도자료 등
㉣ 혁신조달 패스트 트랙 I 대상 '혁신 제품 인증서발급 실적 20건 달성 (20%)	-	-	3건	20건	'20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I의 '21년 지정 공고 횟수가 3회로 확대됨(↔'20년 2회)에 따라 전년에 대비하여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20건 추진(전년대비 약 600% 증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내용(기재부 소관 공공수요발굴위 등)에 근거하여 설정	메모보고, 공문 등
㉤ 주요 국제회의 참석(ASEAN·UNESCAP·ASEM 등) (10%)	신규			1건	ASEAN·UNESCAP·ASEM 교통 장관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 공조 및 다자협력 강화에 기여	외국정부·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국제회의 참석건수	메모보고 등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10%)	23 건	91 건	563 건	575 건	법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과 '20년 디지털뉴딜의 본격화에 따른 조기 개방, 추가 발굴 활동 등 양적개방 중심으로 상당수가 개방이 완료 되어(중장기 계획 기준 78%완료), 추가 개방의 난이도(개인정보, 시스템구축, 융합)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산업적 활용도 높은 비정형데이터 등 핵심 데이터 위주로 수요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공격적으로 조기개방을 추진한 지난해 실적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	21년 개방건수	메모보고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I-1-④)

□ 추진배경(목적)

- 글로벌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필요
 - K-방역을 기반으로 한 노선회복, 공항 수익 다변화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신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시설개선 등 개발사업에 만전 필요
- 기존 공항의 역할 변화 및 운영 효율화 요구
 - 기존의 항공교통 수단에서 지역상생의 거점, 경제성장 플랫폼 등 공항의 역할 및 가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일부 공항은 용량부족, 혼잡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과 이용 불편이 초래되나 적기 시설 공급이 어려워 대안모색 요구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신남방 국가 등 공항개발 수요가 많은 해외 시장에 대한 추진전략이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집중 필요

<참고 : 관련 주요 국가정책 및 계획>

※ 지역공약 사업

- 새만금 공항 지역공약(전북)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제주제2공항 지역공약(제주) : ‘제주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지원’
- 무안공항 지역공약(전남) :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활주로 연장)’
- 광주공항 지역공약(광주)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9.1)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타 면제(23개, 24조)

※ ‘21년 국토부 업무계획(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공항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사업 모델 다각화

※ ‘21년 국토부 장관 15대 핵심관리과제(11-41)에 포함

(항공산업 구조 개편 안정화, 트래블 버블 등 지원방안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이전 추진 》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을 물류·여객 중심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조속 추진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기존 김해 신공항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운용규정 마련
 - 법 시행('21.9)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신속 정비
- (제주 제2공항) 주민간·지역간 갈등으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거쳐 사업 추진방향을 최종 결정
- (울릉공항) 본격적인 공사 착공('20.11~)에 따라 '25년 준공 목표로 건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 (새만금 공항) '21년 공항건설 기본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사항을 과제에 반영
-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20.10~'21.10)을 거쳐 항공 수요 예측을 토대로 민간공항 터미널 규모, 배치계획 등 확정
 - 지자체(대구)가 추진 중인 군공항 이전 계획 수립과 정합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공항 경쟁력 강화》

- (인천공항) 수요회복에 대비하여, 年1억명 수용이 가능한 글로벌 TOP3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4단계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 4단계('17.11~'24.12, 4조 8,405억) : 4활주로('18.11~'21.12), 2터미널 확장('19.11~'24.5) 등
- 충분한 시험운영을 위해, 제4활주로 조기 운영개시를 추진('21.12 →6월) 하는 등 글로벌 허브공항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관리 만전

□ (대구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완화를 위하여 대구공항 이전을 감안하여 필수시설 위주의 시설개선 추진('21. 下)

□ (제주공항) 제주공항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관제업무 효율화 및 항공 안전을 위해 관제탑 신축사업 본격 추진('21. 下 공사착공)

□ (무안공항) 대형항공기 취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활주로 연장* 설계를 연내 마무리

* (사업규모) 활주로 400m 연장, (사업비) 331억원, (사업기간) '19~'23

□ (백령·서산공항)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항 건설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타 신청 등 후속 절차 추진

* (백령) 활주로 1,200m급(울릉·흑산과 동일), (사업비) 1,740억원, (B/C) 2.19

** (서산) 여객터미널 등(활주로는 군시설 사용), (사업비) 509억원, (B/C) 1.32

《공항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중장기 비전) 코로나19 회복 상황, 공항개발계획 요구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제6차('21~'25)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고시

* 장래 항공수요의 예측, 공항의 권역·위계 개편, 중장기 공항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 지자체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공항주변개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공항-주변지역간 유기적 연계개발 방안 마련

○ 시범공항 선정('21.上) 및 지원, 지속가능체계 구축('22~) 등 추진

□ (항공수요예측 연구) 보다 신뢰성있는 항공수요 예측을 위해, 수요 분석기법 고도화 및 방법론 개선 등 연구에 착수

○ 추후 종합계획·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추진

□ (해외진출 촉진) 페루(친체로 공항, '19), 폴란드(바르샤바신공항, '20) 등
수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공항 수주지원 강화 및 사업 다각화 추진*

* ('21년 주요사업) 인니 바탐 향나딤공항(PPP), 쿠웨이트 T2(위탁운영), 에콰도르
만타공항(운영권), 베트남 롱탄 신공항 건설, 라오스 루아프라방 개발·운영(FS) 등

□ (신기술 대응) 사전 승인없이 드론을 공항에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21.3)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한-폴 공항협력 MOU 체결	2월	10%	보도자료
	폴란드 신공항 수주지원 활동(협력회의 및 대사면담 등)	3월	5%	메모보고(장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3월	5%	메모보고(장관)
	공항시설법 하위법령(시행령) 법제처 심사	3월	5%	정부입법지원 센터자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조치계획 마련	3월	5%	보고자료(장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3월	5%	관련공문
	김해 신공항 후속조치 관련 국무회의 안건 상정	3월	10%	국무회의 안건상정 공문
2/4분기	공항 주변개발 연계 시범공항 선정 발표	6월	5%	보도자료
	인천공항 제4활주로 운영 개시	6월	5%	메모보고(장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6월	10%	메모보고(장관)
3/4분기	항공수요예측 및 조사방법 개선 연구 용역 발주	8월	5%	발주자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9월	5%	정부입법지원 센터자료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관련 훈령 제정 관련 법제처 심사	9월	5%	정부입법지원 센터자료
4/4분기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10월	5%	메모보고(장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활주로 연장 실시설계 준공	10월	5%	준공서류
	제주공항 관제탑 공사 착공	11월	5%	메모보고(장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관계기관(미군 등) 협의	12월	5%	관련 공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지역사회 및 항공·건설업계 등
- (이해관계 집단) 국회, 유관 지자체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예상 쟁점 사례>

- ① (가덕도신공항) 신공항 기능과 역할(국내선·국제선 여부, 대구통합 신공항과의 관계 등), 시설규모 등에 대해 부울경·대구·경북지역 지자체, 국회,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학계 등 지속적인 갈등 예상
- ② (제주제2공항) 제주 여론조사('21.2월) 이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청·도의회·환경단체·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의견 표출
- ③ (흑산공항) 지자체(신안군)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 제시와 관련, 관계기관(지자체·환경부·해수부 등)에서 이견
- ④ (광주-무안 통합이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두고 광주-전남간 갈등

□ 기대효과

- 신공항 건설, 공항주변개발 등 공항개발 사업을 통해 항공교통편의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산업 발전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V-13-일반재정)			
① 일반공항 관리(3532)	교특	17	83
▪ 제주공항 시설개선(301)		12	72
▪ 공항개발조사(309)		5	11
② 신공항건설(3538)	교특	1,374	1,744
▪ 울릉도소형공항 건설(301)		389	800
▪ 흑산도소형공항 건설(302)		50	69
▪ 김해신공항 건설(303)		539	282
▪ 제주제2공항 건설(304)		356	473
▪ 새만금공항 건설(305)		40	120
③ 일반공항 건설(3533)	교특	20	40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311)		20	40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정책R&D 용역비 20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88	'19	'20				
① 신공항 건설 사업추진 (50%)			신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와 사업반대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부여 -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각종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도신공항, 30%) 사타용역착수(60%), 정규추진단 구성관련 훈령제정(40%) · (제주2공항, 30%)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울릉공항, 20%) 육상공정 핵심인 터널공사 착수 · (새만금공항, 20%) 기본계획(안) 마련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②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 (30%)	-	-	1.0	1.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쌓아온 공항건설 및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해외진출 본격 추진. 해외사업 수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발굴, 수주지원, 수주 등 단계별 가중치를 고려한 추진 성과지수를 목표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건×0.2+ 수주지원 활동건수×0.3+ 수주성공건×0.5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③ 공항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20%)			신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신공항법) 특별법 공포이후 시행전(공포 후 6개월)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해야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목표 부여 - (공항시설법) 드론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동수단에 의해 공항 안전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목표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 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60%) ·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40%) 	고시자료

(1) 주요 내용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

- (혁신도시 기관 이전)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전도심 공동화 해소 및 기존청사 활용을 위한 기상청 등 대전이전으로 국토균형발전 추진
- (부설기관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부설기관을 혁신도시 등 본사 인근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업무 비효율 해소
- (혁신도시비즈파크 조성) 클러스터 미분양 등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도첨산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업무공간·공공지원시설 등 복합 개발 추진
- (지역인재 양성·채용) 이전기관과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과정(오픈 캠퍼스)을 확대하고, 학생과 기관의 수요를 고려한 채용범위 광역화
- (정주환경 개선) 기추진중인 복합혁신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타부처 및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육아시설, 종합병원 등 정주시설 확충

□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 (도심융합특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혁신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21.9)
- (새만금) 탄소중립 및 RE100 선도를 위해 수변도시 에너지자립 기본 구상안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 수립('21.11)
- (행복도시) 국회 등 국가기관 추가이전* 및 UNESCO 세계유산 해석국제센터 설립 협정체결('21.12) 등 지원
- (캠퍼스혁신파크·산단대개조)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단 규제개선 적극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율 (30%)		신규		100%	국토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지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을 성과지표로 설정	①신설기관 입지 타당성 심사제 규정 개정(30%) + ②기상청 등 대전 이전 계획 수립(40%) + ③부설기관 지방 이전 전략 수립(30%)	관련문서, 보도자료 등
㉡ 혁신도시 성장 기반 혁신 (30%)		신규		100%	혁신도시 성장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운영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 지역인재 양성·채용 등 핵심 정책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로 설정	①거버넌스 정비 방안 마련(20%) + ②지역균형 뉴딜 사업 범정부 TF 운영(20%) + ③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을 위한 도침산단 지정(20%) + ④오픈캠퍼스 운영 확대 및 지역인재 광역화 계획 수립(20%) + ⑤복합혁신센터 착공(20%)	관련문서, 보고자료 등
㉢ 일자리거점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40%)		신규		100%	지역혁신성장거점마련과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핵심정책을 성과지표로 설정	①도심융합특구 지원법 마련(25%) + ②캠퍼스혁신파크(2곳)(25%) + ③산단대개조(2곳) 추가선정(25%) + ④행복도시특화 방안마련(25%)	관련문서, 보고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채용범위 광역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수요와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대학의 입장, 지자체간 여건이 다른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 어려움
 - (채용범위 광역화)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대학별 채용현황·기관 수요 등을 분석, 각 지자체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 추진
- (산업기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산단대개조 등은 기재·교육·중기·산업부 등 多부처 협업과제이며, 대학·지자체 등의 협력도 필수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갈등발생 소지 및 부처협조 필요과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I-2-①)

□ 추진배경(목적)

- 혁신도시를 건설('18. 준공)하고, 공공기관 이전(총 153개 기관, '19.12 완료) 및 시즌2('18.2~)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는 지속 성장중
 -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14년 대비, 정주민구는 3.8배, 입주 기업수 16.8배 증가 등 외형적으로 성장

* (정주민구, 만명) 5.9('14년) → 15.0('16년) → 19.3('18년) → 22.4('20년)

** (입주기업수, 개사) 99('14년) → 271('16년) → 693('18년) → 1,663('20년)

- 다만,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앵커기업 부족*, 성장의 구심점이 되는 운영조직 부재** 등 발전동력이 부족한 상황

* 전체 입주기업 1663개 중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1,559, 93.7%) 차지

** 지역인재협의체, 상생발전협의체, 운영협의체 등 목적에 따라 별도 소규모 위원회가 난립하며 각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 중

- 앵커기업 유치, 거버넌스 운영체계 확립, 지역인재 양성 등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정주환경 개선도 지속
- 기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전방위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 》

- (신설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균특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시 균형위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

* 1차 이전 결정('05.6) 이후 신설기관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신설 기관 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한 상황

- 신설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를 위한 **균특법** 개정 및 심의절차·수도권 잔류기준 등 시행령 개정
 - * 대상기관의 산업기능군을 토대로 既 이전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지역별 특화 산업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조성효과 극대화
- (기상청 등 대전이전)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전도심 공동화 해소 및 기존청사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직원 이주 등 지원
 - * 기상청 유관 기관과 산림청(대전정부청사 소재)의 산하기관도 대전 이전 추진
-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균형위 등 관계기관 협의(이전 기관 선정 등)
- (既이전기관의 부설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에 소재한 既이전기관의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 추진
 - 이전기관의 업무비효율 해소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既이전 기관의 부설기관 지방이전 여부를 재검토하고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
 - * 이전공공기관의 연구원·교육원 등을 본사가 소재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②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기 위한 성장기반 혁신 》

- (거버넌스 구축) 혁신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협의체를 연계하고 관련 업무와 재원을 집중
 - 발전지원센터(발전재단)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를 지원하고, 혁신도시별 재단설립 및 기금조성의 기반 마련
 - * 현재 설립된 강원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원혁신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수모델화하여 타 혁신도시에 확산 추진
- (지역균형 뉴딜사업 착수)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
 - * (대구-가스공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도로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경남-LH)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전북-국민연금)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
 -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인·허가, 제도개선 등 사업추진 지원
 - * 국토부(간사), 기재부, 균형위, 공공기관, 지자체 등 참여('20. 9~)

- 이전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지역발전사업 중 우수사업 16개*('20.7 선정)를 쏠 이전공공기관으로 확산(기관별 지역발전계획 반영, ~'21.2)
 - * (세라믹기술원)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가스안전공사) 오픈캠퍼스 설립·운영 (수력원자력) 공공기관 보유 유망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보건산업진흥원) 지역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
- (혁신도시비즈파크 조성) 클러스터 미분양이 많은 충북(시범) 등을 대상으로 도첨산단을 지정하여 업무공간·공공지원시설 등 복합 개발
 -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업종제한 등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양도가격 제한 완화도 필요시 검토
 - * (클러스터)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 → (도첨) 첨단산업·복합·지원시설 가능
- (특구 확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혁신 지원
 - * (혁신도시 특구 현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10개소 / 규제자유특구 : 5개소 / 연구개발특구 : 4개소 / 산학융합지구 : 1개소(충북)
 -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기부 등 부처협의를 통해 경북-모빌리티, 충북-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등 지정 추진
- (클러스터 분양 활성화) 기업수요에 맞추어 클러스터 용지 분할·합병 등 탄력적 조정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입주업종 제한완화 추진
 - 제주: 업종제한 완화 통한 행복주택 공급 등 추진
 - * (입주업종 제한완화 추진사례) 전북혁신도시 숙박시설 허용('19.3.), 충북 혁신도시 공동주택(일자리연계형주택 허용('20.5.), 전북 어린이집 허용('20.12.)
- (기업 유치 지원)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매입 이자 등을 지원하고 토지 장기저리 임대 도입
 - * 9개 혁신도시 36억원(국비 18, 지방비 18),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혁신도시비즈파크 시범사업지인 충북혁신도시에 토지장기저리 임대 시범사업(3필지) 추진(도첨산단 지정과 병행)
 - * (임대기간) 5년(5년단위 재갱신), (임대료) 조성원가 3%(임대산단지침 준용)

- (지역물품 우선구매) 입주기업의 시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전기관을 활용한 지역물품우선구매 자율목표제 운용('21년~)
- (지역인재 채용·양성) 이전기관 주도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확대하고, 채용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온라인) 개최
 - 지역 학생의 직장선택 기회 및 이전공공기관의 채용풀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추진(인센티브 방안 마련)
 - * (광역화 기 합의) 강원권 / 제주권 / 대구·경북권 / 대전·충청권 (비합의 상태) 광주·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 (정주환경 개선) 타부처(복지부, 문체부 등) 및 이전기관과 협력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도서관 등의 정주시설을 확충하고,
 - * 도서관(충북, 강원), 종합병원(강원), 국공립 어린이집(충북), 유치원(전북) 등
 - 특히, 혁신도시에 부족한 문화·보육·창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
 - * 10개 혁신도시별로 교육·문화·창업지원 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혁신센터(11개) 건립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기상청 대전 이전 관련 범부처 TF 구성·운영	2월	5%	메모보고(1차관)
	혁신도시의 혁신성장 거점화 방안 마련	2월	10%	보고자료(장관님)
	'20년 주요 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홍보	2월	5%	보도자료
2/4분기	상반기 지역인재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	4월	5%	보도자료
	거버넌스 구축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담회	4월	5%	메모보고(1차관)
	혁신도시 비즈파크 확산 관련 지자체 간담회	5월	5%	메모보고(1차관)
	특구 지정을 위한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	6월	5%	메모보고(1차관)
	지역균형 뉴딜사업 범정부 T/F 회의	6월	5%	메모보고(장관님)
3/4분기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8월	5%	메모보고(1차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추진현황 보고 및 홍보	8월	5%	보도자료
	신설기관 입지타당성 제도 도입을 위한 균특법 개정	9월	10%	관보고시
4/4분기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수립	11월	10%	메모보고(1차관)
	복합혁신센터 2개소 착공(부산, 대구)	12월	10%	메모보고(1차관)
	혁신도시 연계 특구 지정	12월	5%	메모보고(1차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제한 완화	12월	5%	메모보고(1차관)
	충북 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을 위한 도점산단 지정	12월	5%	보도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자체, 지역주민,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역대학 등
- (이해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비즈파크 조성 등 성장기반 혁신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여건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혁특회계	'20	'21
혁신도시(I-1-일반재정⑨)			
① 혁신도시(5538)		157 (187)	772 (8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누적 개社) (20%)	688	1,425	1663	1977	'18~'19년은 지식산업센터 14개소 준공에 따라 입주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로 입주기업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최근 5년간('16~'20년) 입주기업 평균 증가수(314개)를 적용하여 목표 설정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연구소 포함) 수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연구소 포함) 현황자료 메모보고(부단장)
㉡ 혁신도시 특구 지정 확대(개) (20%)	3	4	2	1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특구지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혁신도시와 연계한 특구지정 건수	혁신도시 연계 특구지정 현황자료 메모보고(부단장)
㉢ 지역인재 채용률(%) (20%)	23.4	25.9	28.6	31.5	'21년 지역인재 채용 법정 목표비율은 기존 공공기관 27%, 신규 공공기관 21%이나, 그간의 실적 증가치('18→'19 : 2.5%p, '19→'20 : 2.7%p)를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목표비율(2.9%p 증가)을 설정, 전체 기관 평균 31.5% 달성을 목표비율로 설정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	보도자료 또는 메모보고(부단장)
㉣ 정주인프라 개선율(%) (20%)	83	87	90	94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정주 인프라인 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공급계획 대비 94% 공급 도모	(당해연도 누적 공급실적)/(핵심 정주시설 공급계획) * 100	메모보고(차관) 또는 보도자료
㉤ 지역물품 우선 구매 비율 (20%)	-	-	14.65	15	시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우선구매 유관기관 협의회(지자체, 이전기관 등 참여)에 과거 실적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시도별협의회가 설정한 비율 평균치(14.7%)보다 도전적으로 설정	(연간 지역물품 우선구매액 ÷ 연간 이전기관 총 구매액) × 100	이전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시도 공문)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I-2-②)

□ 추진배경(목적)

-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년 과반(50%)에 도달하였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수도권인구 전망 : '00(46.3%) → '20(50.1%) → '30(51.0%) → '50(51.7%) → '70(52.4%)

* 수도권 집중도 : GRDP 51.8%('18), 신용카드 사용 72.1%('19), 1천대 기업 본75.3%('18)

-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발전생태계가 부족한 지역경제를 보다 위협

* 인구절벽 현실화로 일부 시군구는 소멸 위기하는 직면 등 위기요소 증가

- ⇒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광역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기존 산단(대개조) 등을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중으로,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19.8), 산단대개조 1차사업 선정('20.5)

- ⇒ 기존 사업지는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그 성과 확산을 위해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새만금 및 행복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거점도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거점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

▶(새만금) '20년까지 72.7% 개발목표였으나 계획면적(291km²) 중 매립완료는 18.4%(53.4km²)에 불과

▶(행복도시) 도시건설 3단계(완성, '21~'30) 진입, 외형적 성장에서 자족기능 강화로 전환

-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관리수단의 내실화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

- (도심융합특구)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기 선정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생활·교통·연구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추가 사업지구 선정(1곳 이상)
 - 신속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세제·절차 등 특례가 포함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마련('21.5 발의)
 - 도심융합특구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혁신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21.9)

《기존 지역균형발전 거점의 전략적 기능 강화》

- (새만금) 그린뉴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세계 최대(3GW) 재생에너지 사업은 순차적 착공 개시('21.6~)
 - * (배경) 기존 기본계획('11) 상 1단계 사업 '20년 종료, '21년부터 2단계 사업 착수 (내용) 청사진→실행계획 전환('50년 완), 2단계(~'30) 핵심사업 발굴(스마트그린산단 등) 내부간선도로 민자→재정전환, 공공주도 개발(항만특구·수소도시 등) 추가 추진 등
 - 기업 투자유치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창업클러스터 사업 착수 등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새만금청-SK, '21.6)
 - 탄소중립 및 RE100 선도를 위해 수변도시 에너지자립 기본구상안*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 수립('21.11)
 - * 매립 진행 중('20.12 착공)으로, 에너지자립 구상안을 반영하여 '23년 용지조성 착수
 - ** 조성공사 진행 중('20.12 착공)으로, '21년 종합계획 수립 후 '22년 기반시설 설치 착수
-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 특화* 방안을 마련('21.3) 하고, 공동캠퍼스 및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 * 특화항목 : 청년창의, 공동체회복, 디자인특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등
 - ** 공캠 입주대학 승인('21.2)·착공('21.12) 및 세종테크밸리 산업·연구용지 분양 추진

- 또한, 국회 등 국가기관 추가이전* 및 UNESCO 세계유산해석 국제센터 설립 협정체결('21.12) 등 지원

* 국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전기획용역,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절차 추진

- 국가 주요기능 입지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法개정, '21.3)하고 구역 지정('21.8) 및 관리계획 수립('21.12)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2개 대학을 추가선정하고('21.4), 선도사업*은 '산학연 혁신허브'** 조성기반 마련 등 사업 본격화

* 선도사업('19.8선정) : (한양대, 한남대) 지정('20.9), 착공('20.12), (강원대) 지정('20.12)

** 창업기업 및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에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 본격적인 기업입주 시기('23~)에 대비, '산학연 허브' 운영 및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21.12)

- (산단 대개조) 신규 사업지로 5곳을 추가선정하고, 기존 사업지* ('20년, 5곳)는 노후거점산단법상 '경쟁력강화지구'로 지정('21.4)

* 既선정지역(5곳) :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 거점산단과 연계지역 지원을 위한 '노후거점산단법' 개정 추진

- (규제혁신)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단 규제개선* 적극 추진(시행령·지침 개정)

* (예)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에 스마트양식장 포함, 임대전용산단 기업부담 완화 등

《수도권 관리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성과 확대》

- (수도권)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에서 제시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리수단 내실화 추진

- 공장의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 억제를 위해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개발을 산업단지로 유도토록 개편방안 마련('21.3)

- 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내용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추진계획 수립('21.6)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위원회 의결	2월	5%	메모보고(장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승인	2월	5%	공문
	산단대개조 관련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안 발의(국회제출)	2월	5%	의안정보시스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추가 선정(1곳)	3월	5%	보도자료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행복도시법 개정)	3월	5%	법 시행문
	행복도시 분야별 특화 방안 마련	3월	5%	보고증빙시스템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	3월	5%	고시문
2/4분기	산단대개조 신규사업 공모·선정(5곳)	4월	5%	보도자료
	캠퍼스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선정(2곳)	4월	5%	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발의	5월	5%	의안정보시스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6월	5%	보도자료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통보	6월	5%	공문
3/4분기	산단 규제개선을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8월	5%	관보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	8월	5%	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 관계부처 지원방안(인센티브 등) 마련	9월	5%	메모보고(장관)
	산단 규제개선을 위한 임대전용산단 운용지침 개정	9월	5%	관보
4/4분기	새만금 수변도시 에너지자립 기본구상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장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	11월	5%	보도자료
	행복도시 UNESCO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협정체결	12월	5%	공문
	캠퍼스혁신파크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12월	5%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도심융합특구·산업기반) 창업·벤처 기업 및 취·창업 준비생, 입주기업 및 근로자 등이 직접 수혜대상이며, 주변 여건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인근 지역주민 등도 간접적 수혜 대상
 -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산단대개조 등은 기재·교육·중기·산업부 등 **多부처 협업과제**이며, 대학·지자체 등의 협력도 필수
 - 특히,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대학, 기업 등) 등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의원 및 지자체 간 **이해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적지**를 선정하여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임

- (새만금)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 등 수혜
 - 새만금은 **多부처 연계사업**으로, 관계부처(기재·농식품·해수·환경부 등) 협조와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역의 적극적 **협력** 필요
 - 특히 **인근 지자체 간 이해관계**(행정구역 결정 등)가 상이*하고, **환경·지역참여**** 등 다양한 이슈가 상존하여 빠른 사업추진이 곤란

*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불복한 김제·부안·군산이 각각 대법원 소송 등 제기('13~)
☞ 행정구역 분쟁 등을 이유로 군산시가 방조제 인근 수변도시 사업 추진 반대('20)

** (환경)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단체 등이 해수유통을 강하게 주장 (지역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절차마다 민관협의회(새만금청·지자체·민간 등)에서 지역업체 참여 및 개별 지자체의 사업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

- (행복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전국민 수혜, 특히, 자족기능 강화에 따라 세종시 및 행복도시 투자기업 및 입주희망 대학 등 수혜
 - 행복도시 건설은 여러 기관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국가기관 추가이전은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및 국회의원 등의 **이해관계가** 참여하고,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정세 등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이 난해

-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주거·교통·환경 등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집중·난개발 억제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에 따라 전국민이 직·간접적 수혜
 - 다만, 국가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수도권의 지자체·산업계·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이해갈등이 상존하는 정책 사안으로,
 - 관련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설명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임

□ 기대효과

- (도심융합특구) 우수한 정주환경과 미래 성장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혁신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성장거점 다원화
- (산업기반) 대학·노후산단의 효율적 이용 촉진, 지역투자 활성화, 혁신거점 조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만금) 재생에너지, 탄소중립도시 및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연구기관 등 유치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복도시)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 추가 이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균형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
 - * 1단계(초기활력, '07~'15), 2단계(자족적 성숙, '16~'20), 3단계(완성, '21~'30)
- (수도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질서 있게 정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상생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산업단지 지원(I-3-일반재정①)				
① 산업단지 지원(6031)	▪ 도심융합특구(319)	일반회계	-	15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6031-315)	일반회계	22.2	314
새만금개발사업지원(I -1-일반재정④)				
① 새만금개발사업지원(5557)		일반	1,000	1,000
	▪ 새만금개발공사설립(303)		1,000	1,0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도심융합특구 조성기반 마련 (30%)	-	-	-	100%	사업지구 선정 관련, 지자체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정 후보지 제안을 이끌어 내고, 이해갈등 및 정치권의 관심 등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도전적 목표 부여 특별법 발의 관련, 조세감면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목표치 설정 범정부 인센티브 마련 관련, 타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목표 설정	①신규 사업지구 1곳이상 선정(20%) + ②특별법 발의(40%) + ③관계부처 지원방안(인센티브) 20개 이상 발굴(40%)	균형위 안전 보도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보도자료
㉡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율 (15%)	-	-	-	100%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재생에너지 사업 착공 추진, RE100 선도 및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수변도시 에너지자립 기본구상안 및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 수립 등 신규과제 적극적 추진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①기본계획 변경(20%) + ②재생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착공(20%) + ③새만금 창업클러스터 추진 사업협약 체결(20%) + ④수변도시 에너지 자립 기본구상안 마련(20%) + ⑤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20%)	보도자료, 메모보고

<p>㉔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추진율 (15%)</p>	<p>- - -</p>	<p>100%</p>	<p>도시건설 3단계('21~'30)에 진입하는 시기로, 행복도시의 거점 기능 완성을 위해서 행복도시 분야별 특화 방안 마련, 대학·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적극적인 목표치 제시</p>	<p>①행복도시 분야별 특화 방안 마련(30%) + ②특별관리구역제 도입(법 개정) 및 구역 지정(50%) + ③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승인(20%)</p>	<p>보도자료, 메모보고, 관련문서</p>
<p>㉕ 산업기반 강화 프로젝트 추진율 (30%)</p>	<p>- - -</p>	<p>100%</p>	<p>캠퍼스 혁신파크·산단대개조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본격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기업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함께 연내 법령 및 지침 개정·시행이라는 과감한 목표 설정</p>	<p>①캠퍼스 혁신파크 추가선정(2곳, 1곳당 10%) 및 지원방안 마련(20%) + ②산단대개조 추가 선정(5곳, 1곳당 8%) (40%) + ③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지침 개정(20%)</p>	<p>보도자료, 메모보고, 관련문서</p>
<p>㉖ 제4차 수도권정 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관리 내실화 (10%)</p>	<p>- - -</p>	<p>100%</p>	<p>새로운 수도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장기계획에 그치지 않고 계획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관리수단을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목표 설정</p>	<p>①소관별 추진계획 마련(50%) + ②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50%)</p>	<p>메모보고, 관련문서</p>

(1) 주요 내용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반 마련)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에 대응한 건물부문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추진
- (녹지공간 관리) 항공사진·드론 등 GIS 활용, 지자체별 불법행위 관리 대장 통합 및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미래도시 조성 체감성과 창출

- (스마트시티) 데이터 기반의 통합운영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보급하고, 분산 운영중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도시운영·관리 효율화
 - K-City Network 국제사업 지속 추진, P4G 정상회의 도시세션 및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해외도시 실증(3건) 지원 등
 - 민간의 혁신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도시의 스마트 수준을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 본격 시행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활용개선

-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기반 지자체 행정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 서비스 성공사례 가시화
 - 공간정보 산업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창업·도약기업 지원 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로드쇼 등 개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2050 탄소중립 대응 건물부문 추진전략 마련 (25%)		신규		이행 전략 마련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여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세부 이행전략 마련	이행전략 마련	메모보고(장관) 또는 보도자료
㉡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25%)	8.3	46.4	99.7	120만㎡	최근 3년간 훼손지 복구 면적 평균 51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20만㎡를 과감하게 설정	훼손지 복구면적 / 120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㉔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25%)	- - 18곳	44곳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전년 보다 2배 이상 확대한 4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된 목표를 설정	① 22개 이상 지자체 챌린지 사업 선정 + ② 22개 이상 지자체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	보도자료
㉕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골격 구축 (25%)	신규	100%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골격 구축 및 성공사례 가시화를 위하여 관련 핵심정책 추진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	2개 이상 지자체 대상 디지털 트윈 신규지원(50%) + 국가 추진원칙 수립(50%)	관련문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그린리모델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대표 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1년 종료됨에 따라 '22년 이후로 연장 필요
 - 건축·도시·국토 분야가 연계하는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연내 마련하고, 사업대상 추가발굴, 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연장 추진
- (GB) 불법 건축물 단속·철거 등 GB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록, 오히려 GB내 거주민 재산권 침해 및 반발 등 갈등 요인이 증가
 - 구역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확대
-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주는 신속한 부지 매입 보상을 원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시 지연되어 갈등발생 요인 상존
 - 실시계획 인가된 공원의 신속한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한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도시) 지역주도로 공공·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협업 필요
 -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 적극 활용
- (디지털 트윈) 타부처·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실제 수요와 부합되는 공간 정보 분석모델 및 지적데이터를 적시에 제공·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통합플랫폼(K-Geo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분석모델 활용 고도화 도모하여 어려움을 해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I-3-①)

□ 추진배경(목적)

- (녹색건축) 파리기후협약('15)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 절실

* 부문별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물 32.7%, 수송 29.3%, 산업 20.5%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20.7)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2개년('20년 추경~'21년)간 총 2천여동의 그린리모델링에 국비 4,552억원 지원

< 대통령 말씀사항 ('20.12.) >

2050 탄소중립 연설을 통해 “그린뉴딜과 함께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 하겠다.” 강조하심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에 따른 '25년 건물 부문 BAU 대비 25% 절감 목표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필요

- (건축안전) 화재* 등 건축물 안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건축안전 전담부서 설치 확대 및 관련 기준 강화 필요

* 이천 물류센터 화재('20.4), 용인 물류센터 화재('20.7),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 노후 건축물이 지속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방안 필요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05년) 29% → ('10년) 34% → ('20년) 39%

** 세계 경제성장률: '19년 2.7%, '20년 -4.2%, '21년 전망 4.2%, '22년 전망 3.7%

- 건축물 다양화·고층화에 따른 신종 재난(빌딩풍 등), 불량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건축안전 대책 필요

- 민간 건축공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축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필요

* '20년 민간 건축공사에서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의 58.7%(152명)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건축 부문 탄소중립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로드맵)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국토부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부문 이행전략 마련(‘21.12)
 - * 건물부문과 함께 국토·도시 및 교통을 포괄하는 국토부 차원의 종합 계획
- (제로에너지건축) ZEB 활성화 및 ‘25년 민간부문 의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중장기 추진 전략 등 마련(‘21.6)
 -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대상 확대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21.7)하여 인증 건수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 실증을 통한 민간 보급 확산을 위해 도시 차원의 시범사업(수원당수2, 성남북정1)과 함께 단독주택 단위 시범사업 추진*
 - * 동탄, 세종, 부산 등 단독주택 단지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착공(3월)
- (공공부문 선도)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21년 물량을 연내 모두 추진하고 홍보 강화
 - ‘21년까지 예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22년 이후에도 지속 되도록 대상 확대 등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5, 국정현안점검회의 상정)
 -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비를 위한 제반여건 구축 등 녹색건축조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1.12)
- (민간 저변 확대) 권역별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21.1~)
 - * (대표기관) 중앙대, 성균관대, 강원대, 공주대, 국제기후환경센터, 경북대 등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물량이 증가(1만건→2만건) 됨에 따라 공사범위 및 대상요건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21.2)
 - * 창호교체 등 건축물 에너지절감 공사비에 대한 이차비용(1~3%) 지원
 - 대학(원)생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육성하는 인턴십 시행(‘21.6)

② 건축물 안전 성능 강화

- (스마트 자재관리 구축) 건축자재 품질인정에 대한 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등 이력관리체계 운영방안 마련(‘21.9)
 - 불법자재 근절 및 불량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시행에 맞춰 건축법 하위기준 마련(‘21.12)
- (화재안전 강화)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의 심재 화재성능을 준불연 이상으로 화재시험기준 강화*(‘21.4)
 - * 비용증가, 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어 설득 필요
 - 샌드위치패널 등 외벽마감재에 대한 붕괴·화재확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실제 화재상황과 유사한 실험대형 성능시험 도입(‘21.4)
 - 초고층·집합건축물 착공 전에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고, 30층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
 - 건축물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 제도화 방안 마련(‘21.12)
 - * 내화, 피난안전, 연기제어 등에 관한 최악의 조건에서 화재안전 설계 실시
- (내풍안전 강화) 태풍, 빌딩풍 등 강풍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빌딩풍 저감방안 및 풍동실험 표준 매뉴얼 마련(‘21.11)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높이 4m이상 침탑 등) 내풍설계 의무화 방안마련(‘21.7)

③ 건축물 관리 기반 내실화

- (전담부서 확대) 지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건축안전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폭 확대(‘20년 35개→ ‘21년 70개)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 개선, 우수센터 포상, 지자체 합동평가 등 실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 건축안전 기준 모니터링 등을 현장 중심 건축안전 업무수행 기관으로 ‘국가건축안전센터’(가칭) 신설
-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정기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실태조사(200동 이상)
 - *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조례로 규모 위임),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 (수요자 중심 점검기반 구축) 노후건축물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 구조, 에너지 등 건축물 성능을 손쉽게 확인가능한 서비스 개발('21.12)
 - * 1천㎡ 미만 주거·업무용 소규모 건축물 성능점검 시범사업 추진
- 개별법령 및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관련 정보를 수집·연계하도록 생애이력정보체계 통합 허브 기능 구축('21.12)
 - * 소방, 시설물(1종,2종,3종),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점검 정보, 업종 인허가 등
- (점검기준 개선) 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건축물·점검 유형에 맞게 건축물 점검 매뉴얼 및 대가기준 개선안 마련('21.9)

④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감리제도 개선) 건축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대상 확대(5층, 바닥면적 3천㎡→2층, 바닥면적 2천㎡)
 - 민간 건축주 대신 공공이 우수한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공사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 영리 목적 건축물*로 확대하여 현장관리 강화
 - * 상주감리 대상공사(2층 & 2,000㎡ 이상 등) 중 참고 건설공사 등
 -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와 별도로 배치되는 안전감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 업무기준 마련
- (해체공사 안전강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폭파공사 등 위험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감리기준 마련('21.4)
 - 해체공사 내실화를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도입 개정안 발의('21.2), 해체공사 계획서 사례집 발간·배포 및 관련 교육 실시('21.3)
- (주택성능보강)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저리용자지원(이율 1.2%, 5년거치, 10년 상환)중이며 '19~20년 예산집행 無
- (방치건축물)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철거비 지원, 정비특례 확대 등 법 개정('21.3) 및 하위법령안 마련('21.12)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정비모델 수립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	1월	5%	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개정 관련 국회 발의	2월	10%	국회발의
	해체공사 검토 사례집 마련 및 관련 교육 실시	3월	5%	공문(지자체 등)
2/4분기	샌드위치패널 성능평가 개선 등 화재시험기준 강화	4월	10%	방침결정(장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5월	10%	방침결정(장관)
	제로에너지건축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6월	10%	메모보고(장관)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시행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공작물 내풍설계 의무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7월	5%	방침결정(장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7월	5%	관보
	건축물 관리점검 매뉴얼·대가기준(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차관)
	화재안전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운영방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 및 풍동실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11월	5%	공문(지자체 등)
	공공지정 감리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월	10%	의안정보
	방치건축물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12월	10%	방침결정(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으로 쾌적한 건축 공간에 머물게 되는 모든 국민
 - 건축물 안전 확보를 통해 안심하고 건축물에 머무는 모든 국민을 비롯하여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건축업체 및 관계자
- (이해관계자) ① 건축자재 개발·생산·유통자, ② 건축물 관리자, ③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점검자(건축사 등), ④ 중앙부처·지자체 등

□ 기대효과

-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 일자리 약 5천개 창출**과 동시에 국민 공간복지 실현 도모
 - * 약 6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42만 그루 식재효과)
 - ** 건축보수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1.11(명/억원) ※ 건설업 평균: 0.82 / 제조업 평균: 0.87
- 건축물 안전 전담부서 확대, 화재·내풍 안전기준 강화, 건축자재 이력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일상 확보 및 국민 복리 증진
- 건축물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 장수명화에 기여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관 약 2천개까지 확대 등 관련 산업 육성
- 안전감리 세부기준 마련, 상주감리 대상 확대(평균 2,200곳→4,700곳)를 통해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I -1-일반재정④)				
①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5641)	일반회계	2,317.72	2,337.82
			(2,317.72)	(2,337.82)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303)	일반회계	17.22	15.68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312)	일반회계	24.50	46.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313)	일반회계	2,276.00	2,276.00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지원(I -2-일반재정⑧)				
①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564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7.96	110.31
			(97.96)	(110.31)
	▪그린리모델링 활성화(3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7.96	110.31
건축서비스산업 지원(I -2-일반재정⑤) ¹				
①	건축서비스산업지원(5634)		80.4	108.02
	▪건축안전(308)	일반회계	80.4	108.02
주거환경개선지원(Ⅱ-3-재정①)				
①	주거환경개선지원(1131)		245.0	125.0
	▪주택성능보강(308)	일반회계	150.0	3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30%)	신규			이행 전략 마련 (10%)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세부 이행전략 마련	이행전략 마련	메모보고(장관) 또는 보도자료
	298	-	-	400 (10%)	제로에너지건축을 선도하기 위해 '25년 민간부문 의무화 대비 4년 앞당겨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추진실적보다 약 30% 높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제로에너지건축 단독주택(시범단지) 착공호수	메모보고(차관) 또는 보도자료
	30	41	508	520 (10%)	최근 제로에너지인증건수 추세(3년 평균 193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약 170%)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제로에너지 건축을 인증받은 건수	공문 (운영기관 보고)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0%)	-	-	1	1,000 (10%)	공공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등 대상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에 대한 연내 준공 성과 도출 추진 *20년 선정(834건) + '21년 선정(1,000건)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준공개소수	메모보고(장관) 또는 보도자료
	9,278	11,428	12,005	13,000 (10%)	주거, 상업시설 등 주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이차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건수(10,903건) 보다 약 20% 높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이자지원사업 추진 건수	메모보고(장관) 또는 보도자료
㉢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35%)	신규			법령 개정 (20%)	'건축자재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자격기준 조정**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고시)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고시문 등
	2	27	35	70 (15%)	지방분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년 기준보다 2배 많은 센터 설치·운영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약 3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개수	공문 (지자체 보고)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15%)	신규			법 개정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철거비 지원, 정비 특례 부여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추진	방치건축물 정비법 개정	고시문 등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I-3-②)

□ 추진배경(목적)

- (용산공원) 116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기지를 생태·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발표('03)
 - 한·미 합의('19.12)를 통해 용산기지 반환 SOFA 절차를 개시하였고, 용산기지 최초 부분반환('20.12)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 사업 본격 추진
- ⇒ 그간 오랜 기간이 소요된 만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조성계획 수립
- (탄소중립도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수송 등 배출원별 개별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 중
 - 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
- ⇒ 건물·수송·에너지·흡수원 등 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녹지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은 50년간 대도시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법 벌목, 불법 건축 등 GB내 불법행위*는 지속
 - * 불법행위 적발건수 : ('18년) 4,325건, ('19년) 6,455건, ('20년) 6,506건
- 공원일몰제('20.7월)가 도래됨에 따라 3차례('18.4월, '19.5월, '20.6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효대상 공원(368km²)의 84%인 310km²을 지켜냈으나 여전히 '40년까지 매년 약 10km²의 공원이 실효 예상
- ⇒ 도심내·주변의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GB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집행공원이 녹지공간으로 유지·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과 함께하는 용산공원 》

- (조성계획 확정) '18년 마련된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에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확정·고시
 - * 인근 국공유지 편입으로 공원조성지구 경계확장(243만㎡→300만㎡) 등
-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국민권고안 및 시설물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한 조성계획 수립
- (대국민 개방 확대) 장교숙소 5단지* 미개방 잔여동(18동 중 13동)을 여가·체험·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대국민 전면 개방
 - * 총 18개동 중 현재 5개동만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카페 등으로 개방·운영 중
- '20.12월 반환부지(5.3만㎡)에 미군기지와 구분하는 보안펜스 설치, 국방·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시활용 추진
- (관리센터) 부지반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반환부지를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방안 마련
 -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5장에 용산공원 관리센터 설립근거, 조직, 업무 등 규정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국토도시제도 개편) 국토계획법 운영 20년 계기,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토계획법 개편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시 탄소중립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침 개편 등 추진
 - * 압축형 공간구조,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그린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
 -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변화 수요를 예측, 용지 등을 적기·적소 배분하는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위한 R&D 추진
- (난개발 방지)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 전면 개정

-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초기, 개발계획에 탄소중립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기준 개선
- (입지구제 개선) 도시공원·녹지 등에 탄소흡수원 및 탄소중립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 (예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설치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등
- (친환경 조경 조성) 도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조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2~'26) 수립('21.12)

《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를 통한 녹지공간 확대 》

- (GIS 활용 관리)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 감지, 드론 통한 상세촬영, 지자체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한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통합하여 전국통합 DB에 구축*, 주기적 갱신 등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21.9)
 - * 표준화DB 구축 → 지자체(90개) 자료 수집·분석 및 시스템 탑재 → 불법행위 GB 관리시스템 지도화면 표출·관리 → 지자체 불법행위 시스템 등록 의무화
- (관리유인 제공) 지자체 관리강화 유도를 위해 불법건물 현황 및 철거실적 등 구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21.12)
 - * (유사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평가, 항공서비스 평가 등
 - ** 우수 지자체 보도자료 배포, 장관상 등 유공자 표창, 주민지원 예산배분에 결과 반영 등
- (해제불가등급 신설) 고의적 환경훼손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 발생시 10년간 해제가 금지되는 '해제불가 등급'을 신설('21.3)
 - * (현행) 불법행위 일어나도 현황 인정(예 : 1등급지 벌목하여 훼손시 5등급 인정)
- (훼손지 복구) GB 내 훼손된 지역을 다양한 녹색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21.12)
 - * 광역도시계획 내 '녹지축' 연계, 복구사업 절차 개선, 복구사업지 시민 활용성 제고 등
- (환경평가 강화) 환경부,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21.上)를 통해 환경평가등급 산정기준을 보완한 후 등급 전면갱신 추진('21.9)

《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후속조치 》

- (근본적 해소) 장기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계획수립 시 조성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의무화('21.4)

* 기초조사 강화, 미집행공원 현황, 필지별 소유자 및 이용현황, 연차별 집행계획 등

- (지자체 지원) 지방채 이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LH 토지은행**을 통하여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토지비축 승인 지원

* '19년 22억원, '20년 221억원, '21년 329억원

** LH가 미집행 공원부지를 3년간 先 매입한 후, 지자체는 5년간 부지대금 상환

- (토지주 재산권 보호) 기존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토지주 재산권 제한이 지속되어,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 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의 매수청구 요건 완화, 행위허가 완화 등 제도개선(공원녹지법 시행령, '21.12)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발대식 및 공모전 시상식 개최	1월	5%	메모보고(실장)
	용산공원 명칭 선정	1월	5%	메모보고(실장)
	용산공원 다큐멘터리(KBS) 제작 및 방영	1월	3%	메모보고(실장)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월	5%	발의 원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성장관리계획 의무화)	2월	3%	관보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해제불가 등급 신설)	3월	5%	행정규칙 개정문
2/4분기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을 위한 백(反)테러 보안펜스 공사 추진	3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원녹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장기미집행공원 방지)	4월	3%	관보
	용산공원 3D 체험 공간 마련	4월	3%	보도자료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도보투어 및 용산기지 들레길 투어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 미개방 잔여동 활용계획 확정	6월	3%	방침결정(정책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안 마련	6월	3%	방침결정(정책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7월	3%	메모보고(실장)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워크숍 개최(4차례)	7월	5%	메모보고(실장)
	성장관리계획 지자체 설명회	8월	5%	메모보고(실장)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안 마련	9월	5%	방침결정(정책관)
4/4분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갱신 및 DB 구축	9월	3%	메모보고(실장)
	용산공원 조성계획 국민권고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실장)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훼손지 복구 등)	12월	5%	행정규칙 개정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	12월	3%	법률 공포문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용산공원조성특별위원회 의결	12월	4%	메모보고(실장)
	국토계획법 등 개편방향 마련	12월	5%	메모보고(장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고시	12월	3%	고시문
제2차 조정진흥기본계획 수립	12월	3%	방침결정(정책관)	
도시개발법 지침 개정	12월	3%	행정규칙 개정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친환경적인 공원, 녹지 등 도시에 다양한 탄소흡수원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기업 종사자 등 전체 국민에게 파급효과 전달
- (이해관계집단) 용산공원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용산구,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 GB·장기미집행시설 토지소유자 및 공원·녹지·조경 관련 관계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 기대효과

- (용산공원) '03년 공원 조성계획 발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성과 체감도 제고
 - 긴 시간이 소요되는 용산기지 전체반환 전에 일부부지를 개방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녹지·문화공간 조기 제공 및 반환성과 홍보
- (녹지공간 조성) GB 내 훼손된 지역을 적극 복구, 항공영상·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환경평가 1·2등급지 증가 기대
 - 실효될 공원을 공원으로 조성 또는 기능을 유지하여 휴식공간 및 탄소흡수원으로 조성
- (탄소중립도시) 도시·녹지 내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중립시설 입지 규제 완화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 용산공원 조성사업			
▪ 용산공원 조성사업(5635)	일반회계	14.31	90.78
○ 장기미집행공원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차지원(5632)	균특회계	221	328
○ 개발제한구역관리(I -1-재정(4))			
▪ 개발제한구역지원(5551)	균특회계	1,507	1,6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㉑ 용산공원 대국민 성과체감 및 국민 소통 (40%)	신규			종합 기본계획 변경, 조성계획 확정	공원면적 확장(57만㎡), 조성계획 국민권고안, 용산기지 시설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안 수립	① 용산공원 종합기본 계획 변경고시 x 20% ② 용산공원조성계획안 위원회 의결 x 20%	고시문	
	신규			대국민 참여 행사 개최	국민 참여형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용산공원 관련 행사 개최	③ 조성계획 수립 용산공원 분업을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 대국민 참여 행사5차례 개최 x 10%	메모보고 및 관련 문서	
	신규			리모 텔링 13개동	지난해 최초로 개방된 장교숙소 5단지 부지의 미개방된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한 후 리모텔링 및 추가 개방	④ 리모텔링 13개동 x 10%	보도자료 및 관련 문서	
	신규			부분변환 부지 사용권 획득, 펜스공사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SOFA절차 개시 후 최초 반환받은 부지의 개방추진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반환부지 일시사용승인 취득 및 미군 구역과의 분리를 위한 반(反)테러 보안펜스 공사 실시	⑤ 일시사용승인 취득 x 15% ⑥ 반(反)테러 보안 펜스 공사 준공 x 15%	메모보고 및 관련 공문	
	신규			방안 마련	전문적·효율적인 용산공원 운영 및 개방된 용산공원의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센터 설립방안 수립	⑦ 용산공원 관리센터 설립방안 수립 x 10%	내부방침	
	㉒ 도심 내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20%)	신규			법령 개정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 서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지침 마련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개정 x 20%	정부입법시스템
신규			10 80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시행한 후 지자체에서 수립을 적극 홍보 설명하여 최소 10곳 이상을 수립 유도	②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착수 또는 수립중인 지자체수 / 10 x 30% ③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참여 지자체 / 80 x 20%	메모보고 및 관련 문서	
신규				법령 개정	탄소흡수원 등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태양광설비 허용, 도시숲 설치 절차 간소화 등)	④ 도시공원법 관련 법령 개정 x 30%	정부입법시스템	
㉓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30%)		3,046	3,009	3,050km ²	'19년 대비 '20년 환경평가 1·2 등급지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km ² 이상 증가한 도전적 목표 설정	①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 3,050km ² x 25%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8.3	46.4	99.7	120만m ²	최근 3년간 훼손지 복구 면적 평균 51만m ²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20만m ² 를 과감하게 설정	② 훼손지 복구면적 / 120만m ² x 2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신규			DB 구축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전국통합 DB에 구축하고, 주기적 갱신 등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③ 불법행위 관리대장 표준 시스템 개발 x 25%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신규			법령 개정	GB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해제불가 등급 신설, 훼손지 복구 등)	④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법령 개정 x 25%	정부입법시스템 등	

④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10%)	- - 6km ²	7.2km ²	코로나 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실적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과감한 목표 설정	① 공원부지 매입면적 / 7.2km ² x 30%	관련 공문
	신규	법령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소유주 재산권 보호 강화(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②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x 30%	정부입법시스템
	신규	법령 개정	장기미집행공원 발생 최소화를 제도개선(기초조사 강화, 연차별 집행계획 포함 의무화 등)	③ 도시공원법 하위법령 개정 x 40%	정부입법시스템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I-3-③)

□ 추진배경(목적)

○ (스마트시티) 첨단기술(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미래 도시모델이자 성장동력으로 추진

- 백지상태 부지에 혁신기술을 집약한 시범도시의 조성을 본격화*하고, 기존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인 스마트첼린지 등을 중점 추진

* 시범도시 시행계획 마련('18.12) →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마련('19.12) → 부지조성 착수('2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2)

- 작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전국 확산 기반 조성

* 스마트시티 예산 현황 : ('20) 1,675억원 → ('21) 2,277억원(24.0% ↑)

- 아울러,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K-City Network) 신규 착수,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기반 구축

⇒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 국민체감 제고, 산업진흥 등 성과 가시화에 집중

○ (수소도시) 수소경제 확산을 위하여 도시내 수소 생태계*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시민체감형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추진

* 도시 에너지를 상당부분 수소화하여 주택, 교통 등 전 분야에서 활용

- 수소 시범도시 3곳 선정('19.12)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그린뉴딜을 통해 예산 확대 등 성과 확산 기반 마련

* 수소 시범도시 :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3곳

⇒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도시를 조속히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가시범도시 체감성과 창출

- 국가시범도시는 올해부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핵심서비스 구성에 조기 착수하여, 우선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본격 개시
 - 세종은 모빌리티 혁신도시 구성을 목표로 스마트교통 서비스를 우선사업으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착수
 - * PM공유, 차량 공유, 자율주행 셔틀, 통합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스마트주차 등 스마트교통분야 7개 핵심 서비스 구축
- 성과 조기창출을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미래형 주거단지(부산 스마트빌리지) 구성을 완료하고 혁신서비스 실증·체험관(세종 퍼스트타운) 조성 착수
 - 세종은 시범도시에 적용 예정인 혁신기술 체험, 국가 R&D실증, 홍보공간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퍼스트타운 공사에 착수, 본격 추진
 - * 자율주행, 에너지관리, 로봇, 드론 등 스마트기술 실증, 에너지통합 플랫폼, VR/AR 에너지 R&D 실증 및 스마트도서관, 리빙랩 등 체험·홍보 공간 구성
 - 부산은 시민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다양한 혁신기술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질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빌리지에 입주
 - * 거주민은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스마트정수장, 수열/지열에너지, 수요응답형셔틀, 실시간 건강관리, 무인택배로봇, 스마트팜 등 혁신기술 체험
- 스마트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민·관 합작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 지속
 - *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0.12)하였고, 협약체결을 위한 세부협의 진행중
 - 「스마트도시법」에 지자체의 SPC 출자 근거 마련하고, 지자체의 SPC 참여를 통하여 공공성 담보 및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추진

②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및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를 확대, 우수한 서비스를 전국 확산 ('20. 18곳 → '21. 44곳 선정)
 - 특히, 그간 효과가 검증된 우수서비스를 전국 도시에 보급하고,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 발굴·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
 - * 시티챌린지 7곳, 타운챌린지 7곳, 솔루션확산 22곳, 캠퍼스챌린지 8개 대학 선정
 - 아울러, 금년에 15곳 내외 사업을 준공하여, 교통·생활편의 제고, 도시안전 향상(화재·범죄예방), 에너지절감 등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
-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중인 지구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로 조성(특화단지 지정)
 - 지역 주도로 공공·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ICT 대기업 참여 등 특례 부여 및 정부 지원* 추진('21.下 사업지 선정)
 - * ①ICT 대기업 참여 허용, 민관SPC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 사업시행 특례
 - ②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특화 서비스 장애요인을 포괄적 해소

③ 스마트 도시운영체계 구축

- CCTV, 센서 등이 결합된 도시관제망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통합운영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요 도시에 보급 추진
 - * 대구·시흥에서 도시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 시연 및 클라우드 기반의 보급방안 마련('21.下)
 - 또한, 지난해 108개 지자체에 既보급한 통합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방범·안전에서 복지·시설관리** 등으로 서비스 확대
 - * CCTV 영상 분석기능(얼굴인식, 이동패턴 분석 등) 개발, 센서 등 정보연계 확대
 - ** (예시) 노인케어, 아동돌봄 서비스, 경사지 및 교량 등 실시간 모니터링
-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 등 그간 분산·운영 중이던 여러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21년 49개 지자체)
 -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 ** 지자체 통합계획 : ('20년, 시범사업) 4개 → ('21년) 49개 → ('22년) 151개

④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

-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간(G2G) 협력사업인 「K-City Network」 추진(10건 선정)
 - * 국제공모(2.18~4.20) → 협력사업 선정(6월) → 착수(7·8월) → 성과발표('22.上)
- 특히, 올해부터 R&D, 챌린지 등을 통해 개발한 우리기업의 우수 솔루션을 해외도시에서의 실증을 지원(3건)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 P4G* 정상회의(5월) 도시 세션 및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9월) 개최를 통해 비즈니스 미팅, 국내기업 홍보 등 해외수출 적극 지원
 - * 녹색성장과 UN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정상회의(12개국, 국제기구, 기업 등 참여)
- 우리기업 대상 해외 진출 가이드북 발간 및 수출설명회도 개최
- ①패키지형 도시개발(통합 도시개발체계+법·제도+솔루션), ②솔루션형(교통·플랫폼 등)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모델 마련('21.下)
-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아세안 10개국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정책·기술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⑤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 민간의 혁신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고, 실증·사업화**까지 지원
 - * ('20) 1회 공모·접수, 시범도시 중심 적용 → ('21) 온라인 상시 접수, 시범도시 외 지역 확대
 - ** 혁신성·필요성 높은 서비스를 선정하여 건별 5억원 이내의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 지자체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의 스마트 수준을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 본격 시행('21.8)
- 동탄2에 기업공간(129실)·지원공간·행복주택(280호)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혁신기업 육성 추진
 - * 조성·운영방안 구체화('21.6), 입주기업 모집('21.8), 행복주택 모집('21.10), 입주('22.3)
-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6개 대학, 年 360명)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창업·마케팅·판로개척* 등 지원
 - * 창업지원(중기부 협업, 年30~40곳), 시범도시 및 인근지역 실증·마케팅 지원(공모, 年10건)

⑥ 수소도시 본격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계획체계, 비용보조, 입지규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특례, 지원체계 등
- 수소배관망, 연료전지, 통합관리센터 등 수소시범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에 본격 착수('22년말 설치 완료)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자문,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에너지·안전·기계 등 분야 전문가,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 동시에 수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세미나 등 참여형 행사개최와 전문가 기고 등 홍보 추진
- 도심 주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폐율을 완화*하고, 입지규제 개선사항** 발굴
 - * 자연녹지지역 내 운영중인 LPG 충전소·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복합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20% → 30%) 적용
 - **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종류 추가 확대(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21.2)도시공원 내 충전소 입지 허용(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21.3) /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입지 개선 및 사업자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1.6)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지자체 SPC 출자근거 마련 등 「스마트도시법」 개정	3월	5%	관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3월	5%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	3월	5%	메모보고(실장)
	수소도시 안전관리 등 컨설팅	3월	5%	메모보고(실장)
2/4분기	'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	4월	5%	메모보고(장관)
	시범도시 우선사업협약 체결	4월	5%	메모보고(장관)
	제2차 P4G 정상회의 참석(도시세션 개최)	5월	5%	메모보고(장관)
	규제샌드박스 적용확대 등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	6월	5%	방침결정(실장)
	수소도시법 제정	6월	5%	보도자료
3/4분기	'21년 K-City Network 사업 선정	7월	5%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8월	5%	메모보고(장관)
	스마트도시 인증제 최초 시행	8월	5%	보도자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9월	5%	보도자료
4/4분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수소충전소 건폐율 완화)	10월	5%	고시문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 보급방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실장)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기업 선정·지원	12월	5%	메모보고(실장)
	스마트챌린지 사업 준공	12월	5%	메모보고(장관)
	국토이용정보체계 대상 지자체 DB 통합	12월	5%	메모보고(실장)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추진방안 마련 및 사업지 선정	12월	5%	메모보고(장관)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	12월	5%	보도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스마트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과 서비스 제공자인 민간기업, 도시관리자인 지자체 등
 -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참여 활성화와 산업육성(창업지원 등),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관련 민간기업, 예비창업자 등 혜택
 - 수소기술 활용 확산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기업 종사자 등 수혜
- (이해관계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유관분야 전문가·연구기관, 각 소관 분야의 스마트화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도시관리자인 지자체(시·도 등), 해외정부
 - 수소 관련 산업체, 지자체, 산업부, 전문기관 등이며, 특히 수소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가진 주민들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판단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관합작법인(SPC) 설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세종 13개, 부산 25개) 및 지자체(세종, 부산)와 출자비율·역할 등 세밀한 협의를 통해 협약체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해관계 차이가 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핵심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혁신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들의 효과적 해결, 공공·행정 효율성 증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가능
 -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창출, K-City 해외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및 우리기업 해외 진출
- (수소도시)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수소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사용 확산 및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I -2-일반재정(1)) 스마트시티 지원				
①	스마트시티 지원(5637)	일반회계	1,522	1,957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일반회계	383	27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일반회계	981	1,856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8)	일반회계	158	74
(VI-1-R&D(9)) 국토교통융복합기술개발				
①	국토교통융복합기술개발(4160)	일반회계	153	109.5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R&D(301)	일반회계	128	69.5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R&D(302)	일반회계	25	40
(I -1-일반재정(2)) 수소도시 지원				
①	수소도시 기반구축(5642)	일반회계	125	245
	▪ 수소도시지원(301)	일반회계	125	245
(VII-1-정보화(9)) 국토이용정보화				
①	국토이용정보화(4254)	일반회계	44.08	60.14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526)	일반회계	44.08	60.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㉑ 국가시범도시 체감성과 창출 (30%)	-	-	SPC 민간 사업자 공모	우선 사업 협약 체결	사업참여자(민간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간 출자비율 등 의견조율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 협약체결로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견대립을 감안 연내 협약체결이라는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세종 스마트교통 사업협약 체결 x 3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	-	신규	세종, 부산, 선도 사업 구축	세계최초로 백지상태의 부지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첫 입주(부산 스마트빌리지), 실증체험관(세종 퍼스트타운) 착공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성과창출 목표 설정	② 세종 퍼스트타운 착공 x 35% ③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식 개최 x 35%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등
㉒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및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30%)	-	-	18곳	44곳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전년 보다 2배 이상 확대한 4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된 목표를 설정	① 22개 이상 지자체·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x 35% ② 22개 이상 지자체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 x 35%	보도자료
	-	-	신규	지역 거점 스마트 도시 사업 시행	국가주도의 시범도시와 솔루션 중심의 챌린지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주도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구성을 통해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③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조성방안 마련 x 15% ④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2곳 이상 선정 x 15%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㉓ 스마트도시운영 체계 구축 (5%)	-	-	신규	2건	다부처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히 부처간 협력 성과를 목표로 설정	① 통합플랫폼 서비스 발굴 (2건 이상) x 4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	-	4곳	49곳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 등 그간 분산·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배 이상 상향된 49곳에 구축하는 것으로 과감한 목표 설정	②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49곳) x 6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 및 산업기반 강화 (15%)	-	-	신규	3건	코로나 등 수출환경 악화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해외도시에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을 3건 실증하는 등 도전적 목표 설정	①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착수 (3건) x 4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	-	신규	2건	도시의 스마트 수준을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의 최초 시행(2개 지자체 인증)을 목표로 설정	② 스마트도시인증 (2건) x 6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㉕ 수소도시 본격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20%)	-	-	-	사업 추진	'20년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범도시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 컨설팅 등으로 도전적 목표부여 또한 입지규제개선으로 인해 추진이 가능해진 수소충전소 개수를 목표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 도전	① 컨설팅횟수 10회, 시범도시 전시회 및 세미나 1회 x 30% ② 수소도시법 제정 x 40% ③ 추가 구축을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개수 (5기) x 30%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I-3-④)

□ 추진배경(목적)

-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및 ‘융·복합 기술’의 발달로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 부각되며, 新 산업의 엔진 역할로 대두
 - 동시에 3차원 공간정보,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 ①3차원 공간정보 위에 ②민간·행정 등 각종 데이터를 연결·융합하여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고 모델링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 특히 3차원 공간정보에 각종 데이터를 결합하여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은 도시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전방위적 확산되는 추세
 - * '25년까지 전 세계 500개 이상 도시에 디지털 트윈 도입 전망(ABI Research, '21)
 - 세계 각국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국토, 스마트도시 건설과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 *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영국(National Digital Twin)은 국가차원에서 가상국토,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을 접목하여 활용 중
 - 우리 정부도 비대면 수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전환, 안전한 국토 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①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과 ②산업계 활용 활성화, ③공간정보 산업 진흥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필요
 - 혁신기술 기반 新산업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디지털 트윈 등 산업 진흥을 적극 추진할 적기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반데이터 구축, 표준 및 기술개발 등 추진
 - 이와 함께 지하정보 등 데이터의 고도화, 산업계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교육, 공간정보 산업 육성·지원도 필요한 시점

※ 국정과제 34-8 선정(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고정밀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기반 마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 안착을 위한 기본골격을 구축하고 서비스모델 등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

- 지상·지하가 3차원 디지털지도 기반으로 연결된 통합체계 구축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1.10)

*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 전략 마련 및 지자체 활용모델 정립 등

- 디지털 트윈국토 '정의, 구축, 활용' 등에 관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마련 및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로드맵」 보완('21.12)

-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위하여 공간정보 수집·가공의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기술 등에 대한 **R&D 연구 상세계획** 수립

- 디지털 트윈기반 지자체 행정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서비스 성공사례를 가시화('21.7 공모)

- 디지털 트윈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표준을 추가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표준 적합성 사전검토 강화

* 고유표준 개발(5종) 및 국가표준 고시(제·개정 16종), 사용자 중심의 표준 교육 콘텐츠(5종)·활용도구(3종) 및 데이터 구축 활용가이드(1종) 제작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고도화를 위한 예산 추가반영을 통해 디지털 트윈기반 통합체계 구축·확산, 기술 연구·개발 등 진행 예정('21 연내)

○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 드론, AR 등 위치기반 신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고정밀 3D 지형지도** 구축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등 지원을 위해 일반국도(11,570km)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 등 6개 지자체, 100km)에 대해 **정밀도로지도** 구축

- (지하공간정보 고도화)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 구축 확대 및 지하정보 관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한 정확도 개선 추진
 - 전국 162개 市(85개)·郡(77개)지역* 상·하수도 전산화를 완료('21년 24개 郡)하고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확대('21년 33개 市)
 - * (사업현황) ①상·하수도 전산화 : '98~'20년 85개 市, 53개 郡 완료 / '21년 24개 郡 계획
 - ②지하공간 통합지도 : '15~'20년까지 52개 市 완료, '22년까지 33개 市, 77개 郡 계획
 - ** 상하수도·전력·가스·지반 등 15종 정보 통합지도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활용
 - 데이터 부재 등으로 오류확인이 어려운 상·하수도 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정보화전략(ISP)*” 수립(~'21.11)
 - * ①상·하수도 DB 수정·갱신 방안, ②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정확도 개선 지원 방안, ③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
 -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오류 정비 및 정확도 개선을 지원*('21.1~)하여 지하정보 오류율 감소('20년 10% → '21년 5% 이하) 추진
 - * 전담기구(LX 공사) 등의 협조를 통하여 관리기관 대상으로 지하정보 오류 검토·수정 교육과 오류 개선계획 수립을 컨설팅 지원
- (국토위성 활용확산) 첫 국토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및 국토·자원 관리 등이 가능한 국토위성 활용체계 구축
 - 과기부·항우연 등과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위성 1호기의 발사·운영 관리 및 2호기 개발상황 관리('22.1 발사) 시행
 - 한반도 전역의 효율적 국토 모니터링 및 남북통합 공간정보 구축 지원을 위한 위성기반 한반도 영상지도 시범구축('21.12, 1호기 활용)
 - ※ 발사 일정상 6월 이후 국토위성으로부터 첫 영상 수신에 가능하나, 4차 산업혁명 등 대응을 위해 국토위성 활용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연내 시범구축 추진

②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산업계 접근성 확대) 산업계,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新산업의 고정밀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산업계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新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활용 목적의 공간정보 제공 제도 도입(공간정보기본법 개정)
 - 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위해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 실행방안 및 심사기관 운영방안 등 마련(하위규정 개정)
 -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유통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암호화 등 관련 기술을 구현
 -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既구축된 타기관 공간정보 데이터의 연계·활용 고도화
 -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 등으로 개편·통합(K-Geo플랫폼)하여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앙·지자체의 공간정보 분석수요 지원을 위해 표준 분석모델을 도출하고, 공무원들의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경진대회 시행
 - 他기관 데이터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MOU 체결* 등)
- * 기재부, 교육부, 농림부 등 7개 기관과의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 관련 MOU 체결 예정

③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산업 육성·지원

- (진흥정책 수립) 환경·기술변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산업 도약을 모색하는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1~’25)」 수립
- 공간정보 산업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등 특색있는 전략 제시

- ※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산업을 혁신기술 기반으로 시장창출이 가능한 전략지원 新산업으로 지정 추진
- (기업 지원) 창업투자펀드 신규 조성(~'25년까지 50억 확대) 등을 통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발굴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전담(1:1 매칭) 교육을 실시하고(연중) 모의 IR 발표 행사 등 개최('21.9)
 - 창업기업 추가 발굴·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1.9)
 - * 선정 기업에 3천만원 이내의 자금 및 서울 공간드림센터 내 창업공간 지원
- (인력 양성)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인재 및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도모
 - 관계 부처(과기부, 교육부 등)와 협의하여 융합전공·교과목 및 학과 신설, 전문대학원 설치 등 융·복합 인재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 *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 범위를 4년제 대학 도시·조경·ICT 전공 등으로 확대, 공간정보와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 접목 교육이 강화된 커리큘럼 신설 등
 - 청년 취업준비생을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양성하고 고용연계를 통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공간정보 아카데미 취업자과정 진행)
 - 공간정보 특성화 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학교지원금 등 지원(총 14억)
 - * '21년 공간정보 특성화 고교 2개, 전문대 1개, 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여 특성화 고교 5개(4.5억), 전문대 4개(7.1억), 대학원 10개 석·박사(2.4억)를 지원
- (저변 확대) 디지털 트윈분야의 생태계·저변 확장을 위하여 민간,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공간정보 분야 학회 강연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판로개척 지원) 해외진출 로드쇼, 스마트국토엑스포 등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산·학·연 소통 및 국내외 비즈니스 활성화
-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연계, 해외진출 디지털 로드쇼('21.3), 스마트국토엑스포('21.7) 등을 개최하여 해외진출 성과 도출
- 온라인 전시관 운영과 타겟국가 방문 병행을 통해 국내기업 기술 홍보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사업 수주 지원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간정보 활용 관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3월	5%	보도자료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개선 추진현황 보고	3월	5%	메모보고(국장)
	국토위성 1호 발사 및 관련 언론홍보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4월	10%	방침결정(국장)
	공간정보 해외진출 온라인 로드쇼 결과보고	4월	5%	메모보고(장관)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계획 수립	6월	5%	방침결정(국장)
	국토위성 1호 첫 영상 수신 및 관련 언론홍보	6월	5%	보도자료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기관 MOU 체결	7월	5%	메모보고(장관)
3/4분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7월	5%	방침결정(장관)
	디지털 트윈 생태계 민간 확장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8월	5%	메모보고(실장)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결과보고	8월	5%	메모보고(실장)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마련	8월	5%	메모보고(장관)
	국가표준 제·개정(안) 예고고시 및 기술심의회 상정	9월	5%	고시문, 메모보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9월	5%	방침결정(국장)
4/4분기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로드맵 수립	12월	5%	방침결정(실장)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기술 개발사업 상세기획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디지털 트윈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2월	5%	결과보고서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2월	5%	결과보고서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실적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공 / 학교 / 기업 / 국민

- (공공)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학교) 공간정보 특성화 학교 (고교, 전문대, 대학원)
- (기업) 공간정보 활용하는 제4차 산업 업체 / 새싹기업·중소 도약 기업을 포함한 공간정보 분야 기업 전체
- (국민)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 전체, 공간정보 특성화고 학생, 공간정보 기업 취업희망자

○ (이해관계집단) 공간정보 공공 / 기업

- (공공) 지하개발 인허가 및 지하시설물 설치·관리 지자체/공공 기관, 특성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 (기업) 전문인력 채용 공간정보 기업, 지하개발사업자, 굴착·응급 복구 시행 업체(건설업체 등) 등

□ 기대효과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디지털 트윈국토의 성공적 구축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완비 등 정책적 기반 조성

- (국민 생활안전) 보다 정확한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지하안전 사고 예방, 시설 관리·공사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 (재난·재해 신속대응) 국토위성을 통하여 취득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공간정보 제공 가능

- (4차 산업 지원) 고정밀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新산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IoT, AR/VR 등) 성장 지원
 - (국민 체감) 민간에서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지자체 행정모델, K-Geo플랫폼 등 서비스의 민간 확산 장려
- (산업 진흥) 공간정보 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산업 환경 발전·개선
 - (창업 활성화) 창업·도약 기업에 대한 국가의 맞춤형·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생존을 제고 및 공간정보 분야 창업 활성화
 - (해외진출 확대) 해외 로드쇼, 스마트 국토엑스포 등 대외 홍보·컨설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가능성 확대
 - (우수인재 양성)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원(장학금, 교육 운영비)으로 전문 기술·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의 공간정보 산업 유입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Ⅱ-8-일반재정②)				
①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5734)	일반회계	27.94	30.47
	▪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302)	일반회계	27.94	30.47
②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5734)	일반회계	13.44	16.54
	▪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301)	일반회계	13.44	16.54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Ⅶ-1-정보화⑫)				
③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4270)	일반회계		
	▪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501)	일반회계	28.78	67.92
	▪ 지하시설물 전산화(504)	일반회계	100.59	335.28
	▪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505)	일반회계	-	5.58
	▪ 공간정보기반디지털트윈시범사업(512)	일반회계	-	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개선(30%)	신규			5%	지하정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오류개선 지원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신규지표인 점과 전년도 오류율(10%)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2 수준인 도전적 목표를 설정	지하정보 통합DB 오류율(%) (전체 공간정보 수 / 오류 정보 수)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오류율) 개선실적 결과보고
㉡ 디지털 트윈국토 교육 프로그램 시행 (20%)	신규			5회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민간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의 교육을 신규 시행하는 혁신적 목표 신설	교육 진행횟수	교육 결과 보고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확산 (10%)	신규			2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신규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을 목표로 설정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수	시범사업 선정 공고, 구축 결과보고
㉣ 공간정보 아카데미 취업자과정 취업률 (10%)	신규			80%	공간정보 및 디지털 트윈 분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치인 취업률 80%를 목표로 설정	취업생/ 교육수료생 * 100	공간정보 아카데미 수료생 취업현황 관련 문서
㉤ 표준 사전검토(10%)	-	-	94	100	공간정보 분야 표준 적용 강화·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비해 10% 상향한 목표로 설정	표준 적용 검토 건수	표준 적합성 사전검토 결과서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10%)	15개	10개	27개	33개	작년에 비해 약 20% 상향한 수치를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목표로 설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자체 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결과보고
㉦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 실적(10%)	신규			6개교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원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특성화 고교 2개, 전문대 1개, 대학원 3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특성화 고교, 전문대, 대학원 등 지정 실적	특성화교 추가 지정 관련 자료

기 본 방 향

□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건설) 통합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터키 발주 확대 및 현장 시연 경연대회 등을 통해 현장적용을 확산하고 붐-업 유도
- (건설Eng)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PM 도입과 업무범위 대가 등 관련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건진법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 (기술 개발) 상용화된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화를 통해 현장적용 활성화하고, BIM 정착을 위한 건설기준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
- (자율차) '27년 레벨4 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 기반 조성
- (항공산업 지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장기간 소요, '21년 항공사 추가지원 필요
- (K-드론 육성) 기성 산업을 대체할 혁신 선도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드론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 필요

□ 국토교통 일자리 질 개선

- (건설 일자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근로자 지원을 통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하방압력 저지
 - 취약계층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활력 제고 필요
- (물류시장 공정) 화물운송시장의 선순환적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한 저(低)운임에 따른 과로·과적·과속 관행 개선
 - 업계와 협업하여 물류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생활물류산업 종사자 안전 및 보고 강화
- (항공전문인력 양성)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정부의 항공안전전문인력 적기 양성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8	7	4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 국가별 자율차 경쟁력(자율차 도입 준비수준) ㉢ 항공여객수요 회복(항공여객 운송실적) ㉣ 공공분야 드론활용 제고(드론기체 보유 규모)
	① 건설 Eng과 스마트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	㉠ 기술형입찰 발주 금액 ㉡ 스마트턴키 선정 건수 ㉢ 스마트건설기술 시장 규모 ㉣ 스마트건설 입주기업 역량강화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수 ㉥ PM 시범사업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수 ㉡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허가 수 ㉢ 자율주행차 신규 임시운행허가대수 ㉣ 정밀도로지도도 국토 확대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 항공산업 지원방안지원방안 발표 ㉡ 통합항공사 고용유지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 무착륙관광비행 실시 ㉤ 국제항공 네트워크 정상화를 위한 국제항공운항 복원 실적(개수) ㉥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 UAM 기술 로드맵 발표 ㉢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업체 수 ㉣ 실증 참여 드론업체 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역량 강화 (건수) ㉢ 물류기업 취업자수 ㉣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 발주 세부기준정비 ㉢ 유지보수 고도화 기반 마련 ㉣ 직접시공 확대 ㉤ 공제조합 혁신 ㉥ 임금직불제 노무비 지급률 개선 ㉦ 적정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 적정임금제 적용공사 확대 ㉨ 기능인 등급제적용 규모 ㉩ 골재 생산량 확대 ㉪ 건설기계 검사제도 내실화 ㉫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 퇴출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 화물안전확보 제도 개선 ㉢ 택배 가격·거래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 택배 표준계약서 마련 ㉤ 소화물배송대행인증제 시행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KAA) 설립 ㉡ 헬기부품 국산화촉진을 위한 인증 건수 ㉢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 국제 항공안전정책수립 기여도

(1) 주요내용

□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 건설) 스마트건설R&D(2천억원, '20.4~) 및 스마트유지관리R&D(3천5백억, 예타대상선정, '20.9) 등 초대형R&D를 연속 추진하여 미래 핵심기술 조기확보
- (건설Eng) 기술형입찰 대상공사에 스마트기술 중점 반영 공사, 성능 개량 등 포함, 입찰서류 간소화로 우수 기술보유 중견업체의 참여 유도
- (자율차) '24년까지 레벨4 자율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완비하고, '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 추진
- (항공산업 지원)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각종 시설사용료 감면, 금융 지원, 사업권 보장, 고용유지 등 지원방안 마련·시행
- (트래블 버블) 방역안전국가(싱가포르·대만·이스라엘·괌 등)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 노선복원 및 교류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 이후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新사업을 육성하는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중장기)
- (드론 상용화) 도심 내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자유화구역 등 규제완화·재정지원 제도를 결합한 지원을 추진
 - (안전관리 강화) 도심 내 드론활용 촉진 시 우려되는 테러·사고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자격 개편 등 안전관리 강화 병행

□ 국토교통 일자리 질 개선

- (건설 일자리) 45년만에 업역 칸막이를 폐지하고, 업종을 개편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혁신을 추진
- (화물운송) 일부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화주·운수사·화물차주 간 상생협약 추진·상생협력 로드맵 제시

- (항공인력 양성)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항공회복 전망, 인력수요 등을 예측·분석하여 5개년 중장기 항공인력양성방안 수립('21.11)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④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3,733	4,019	4,025	4,075	4,034	4,075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고용감소 요인을 극복하여 5개년('21~'25) 동안 '19년 취업자수(4,075천명) 수준 유지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中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운송업 등 22개 업종)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매년 4월 발표) 발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설 기술) 이미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적용 확대 등 지속 노력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 발주제도 개선 등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등 미래 기술에 정책역량과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 (자율차) 자율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차 안전기준(제작기준 등) 등의 법·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미·EU·일·중 등 주요국의 국제동향도 감안한 추진 필요
- (항공수요 회복 불확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이동 제약 등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국내외 항공수요를 모두 잠식하며, 국가 간 방역상황에 따라 큰 편차 발생
 - '20년 국제항공 이용객 최대 13억명 감소가 예측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요 회복시까지 2~4년 소요가 예상
 - * 국제항공여객 수 : '16년 15억4천만명 / '17년 16억5천만명 / '18년도 17억6천명

- (드론 기술혁신 제약)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도심 항공교통(UAM) 시대 개척을 위한 美·中·유럽 등 각국의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
 - 보안 등 이유로 軍에서 도심 내 드론비행을 대부분 제한하고 테러·사고 등 우려도 있어 드론산업 육성에 제약요소로 작용 중
- (건설산업 위기) 수요 리스크(신규발주 감소, 대금지연 등)와 공급사 신용 경색(자금조달 곤란, 금융비용 증가 등)이 중첩되어 급속한 경기위축 우려
 -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면서 단계별 정책 패키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사전 수립, 차질없이 추진

(1) 주요 내용

- 스마트건설 확산 가속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안전성 제고
 - (스마트 건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 건립(착공, '21.5~) 등 통해 스마트건설 스타트업·창업 확대 육성
 - (BIM) BIM을 시공, 유지관리,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BIM 턴키 시범사업을 지정 추진
- '27년 레벨4 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목표
 - (자율차)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를 개발·실증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 (운항 지원) 특별 출입국절차 시행 등을 통해 국제노선·공항 방역을 강화하고 무착륙 관광비행 등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 (포스트 코로나19) 항공조합 설립을 통해 산업 호황시 재원을 적립하여 위기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MRO산업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 드론산업 육성 및 UAM 기반 마련
 - (드론 기술개발) 기체, 인프라, 서비스 등 전방위적 기술에 대한 국가R&D 지원전략으로 관계부처 합동 UAM 기술로드맵 발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25%)	-	65.68 %	71.68 %	73.68%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25년경에는 기술 선도국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기술수준을 2%p* 이상 향상 * '20년에는 '19년 대비 6% 성장 되었으나 기술이 발전 할수록 건설기술 수준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3개 분야를 분석하여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한국의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의 평균 추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산업 기술수준 평가(전문가 설문)" 결과

② 국가별 자율차 경쟁력(자율차 도입 준비수준) (25%)	10위 13위 7위	6위	자율차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20년 실적보다 향상된 목표를 설정	“국가별 자율차 도입 준비지수”(국제리서치기관 KPMG에서 매년 발표) * 정책입법, 기술혁신 인프라, 소비자 수용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국가별 평가	“국가별 자율차 도입 준비지수”(국제리서치기관 KPMG에서 매년 발표)
③ 항공여객수요 회복(항공여객 운송 실적) (25%)	1억 17백 만명 1억 23백 만명 39백 만명	74백 만명	항공여객수요의 빠른회복 모델(U자형)을 가정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 코로나 이전 국제여객 대비 '21년은 최대 60%(최저 30%) 회복 전망(ICAO)	'21년 항공여객 실적	메모보고 (연간 항공통계)
④ 공공분야 드론활용 제고(드론기체 보유 규모) (25%)	- 2,951 대 3,560 대	4,200대	공공분야 드론기체 보유 규모는 국내 드론산업 수요 증가와 드론 활용범위 확대를 함께 나타내는 종합 지표로서, 당초 계획한 '21년 4,000대 달성 목표(VIP 지시사항)를 초과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드론기체 보유현황 전수조사	메모보고 (연말 기준 드론기체 보유현황 보고)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PM) PM/감리 분리로 인한 의무발주(건설사업관리→감리) 감소 등 eng.사 업역 및 대가 축소로 업계·협회 반발 우려
 - PM 시범사업 발굴 등 eng.업계의 PM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스마트턴키) 스마트턴키 확대과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 반발 가능성
 - 엄격한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선도적 사업 중심으로 스마트턴키 사업을 선정해 무분별한 턴키 확대 방지
- (자율차) C-ITS 전국구축(~'25)을 추진중이나, 향후 상용화되는 신기술 (5G-V2X 등) 현황, 국제표준,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종합고려한 추진 필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설 Eng.과 스마트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Ⅱ-1-①)

□ 추진배경

○ (국내 현황)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건설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Eng.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추진중

* (1인당 생산성) '17년 4.5만\$, 주요국 평균 5.4만\$의 83% (생산성본부, '19)
(사후평가 결과) 계획 대비 공기는 40-50%, 공사비는 15-25% 증가 (국토연, '20)

- (건설Eng. 활성화) 공공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계약특례를 활용해 건설Eng.가 중심이 되는 선진 건설제도를 시험중인 상황

* (스마트턴키)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턴키 발주를 허용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공책임형 CM) 종합건설사가 설계단계에 참여해 설계오류 등 최소화

·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공' 중심의 경직된 건설 프로세스는 지속 유지되어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

-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 수립('18.6) 이후, R&D 및 산업육성 등 정책추진에 따라, 국내 대기업은 일정 수준 기술력 확보

*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력) 미국 대비 79%, 기술격차 3.1년으로 추격그룹에 해당

· 하지만, 기존 건설기준이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관심이 적어 스마트 기술 현장 확산은 미흡한 실정

* 발주청·건설사 등은 책임소재 등을 우려해 現 기준에 없는 기술 적용곤란

○ (해외 현황) 반면, 해외는 고도화된 건설Eng. 기법과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생산성 극대화 추진중

- PM 조직이 첨단기술(BIM, 자동화시공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 해법을 도출하는 등 프로세스를 탄력 적용

* 미국, 영국 등은 PM 활용 활발, 스마트 기술력도 우리나라의 1.3배 수준

◆ 국내도 PM 등 선진 eng.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상용화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건설 생산성 향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건설Eng. 산업 활성화

< PM 도입 및 활성화 >

- (법령) 입체적 공정, 스마트 기술 도입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Eng. 전문가 조직인 PM* 도입(건진법 개정, 의원입법)

* (PM) 발주자의 권한을 전부, 일부 위임받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관리
→ 공정 입체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 공기·공사비 단축

- 아울러, PM 도입을 고려해 Eng. 업종, 실적인정 기준 등 건진법령 후속 개정* 추진('21~)

* (업종) PM 등 전체Eng. 업무를 수행 가능한 종합업 신설 등('21.下, 시행령)
(실적) 분야별(계획, 시공관리, 감리 등) 업무 구분 관리('21.下, 시행령)

- (시범사업) 공기업 계약 특례(용역비용, 구매 조달업무) 기재부 협의('21.4), 발주('21.9~) 등을 통해 공공기관 PM 시범사업* 최초 도입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도입, LH·철도공단 사업에 PM 시범적용 추진('21.上)하고, 장기적으로 타 부처 건설공사 및 비건설 공기업 사업 등에 단계적 PM 확산

- 시범사업 연계 PM 세부 업무범위, 대가 등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21.3)

< 기술형 입찰 확대 >

- (발주확대) 실력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형입찰 비중을 확대('19년 6.8%→'21년 10%→'30년 20%)하고 발주청·업계와 협의 강화

* 업체는 입찰비용이 높은 데 비해 수주확률이 낮고 영업경쟁도 과도해 기술형입찰 참여를 어려워하고 발주청은 설계평가의 공정성 논란 우려로 발주 기피

- (제도개선) 교량 등 대형시설 중심의 정량적 기준 외에 대형일반공사, 성능개량 등도 턴키발주 가능하도록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21.6)

- (스마트턴키) 스마트 턴키* 적용기준을 완화해 BIM, 자동시공 등 스마트기술이 일부 공정에 중점 적용된 공사까지 턴키 발주 허용

* (기존) 스마트기술 쏠 공정 도입시에만 허용 → (개선) 일부 공정 중점 적용시 턴키 허용

- (업계편의 제고) 기술형입찰 설계평가 검토 시 기본설계보고서·기본도면 등만 제출토록 서류를 간소화*해 중견업체 참여 확대 유도('21.12)
- * 심의에 불필요한 구조계산서, 상세도면 등 제외로 검토비용 3-5억원 절감

< 건설Eng. 업무 환경 개선 >

- (적정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신뢰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관리 공종 집중 관리('21.3~)체계* 구축
 - * '21년 제·개정공종: 모니터링 15개, 주요관리 85개, 일반 219개
 - 잦은 이동 등 소규모 유지관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항목을 확대(21개 항목)하고, 근로자 안전비용도 추가(3개 항목)
 - * 유지관리(조경, 건축기계설비 해체·철거 등 21항목), 안전시설(간이 방호시설 등 3항목)
- (적정공기) 쉐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건진법 개정, '21.3)를 부여하고 공사기간 산정 운영기준(고시) 마련('21.9)

②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확산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 >

- (통합시범사업) 공공발주 신규사업*에 그간의 기술·제도 성과를 종합 시행·검증하는 통합 시범사업 추진('21.12)
 - * (LH)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중 후순위 개발 단계 지역 중 검토 (도공) 스마트건설기술 R&D의 실증 테스트베드(고속도로) 선정
 - 공기·공사비 절감 등 사업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발주 방식과 입체적 공정 및 스마트기술을 종합 적용해 생산성 향상*
 - * (발주) 스마트턴키(설계+시공 일괄), CMR(시공사가 설계까지 관리) 등 활용 (공정) PM 조직을 활용해 설계 중 대지조성 병행 등 기존 공정 입체화·효율화 (기술) BIM, 자동화장비, 모듈러 시공 등 상용화된 스마트 기술 즉시 적용 (서비스) VR 모델하우스, 공공시설 공모, 공사영상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 스마트건설기술 기준·제도 마련 >

- (기준·제도 마련)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지침을 제정(‘21.12)하고, 드론, 모듈러 시공 등 상용화된 기술에 대한 기준 정비 추진
 - (현장적용 지침)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및 효과 분석을 거쳐 지침화(‘21.12)
 - (스마트건설 기준) 기술 상용화 단계별 기준화 계획*을 수립(‘21.8), 측량, 계측, 건설자동화 등 도입가능 기술은 즉시 기준에 반영(‘21.12)
 - * 기존 건설 공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동화장비, BIM, 모듈러 시공 등은 기술별 표준 공정과 소요 자재/부재 정립 후 공사대가 등 세부기준 마련
 - (기존 기준 디지털화) 도면기반 전통 건설을 컴퓨터 기반 디지털 건설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기준 디지털화 로드맵*을 수립(‘21.6)
 - * 프로세스 별 단가, 공사비, 단위 등을 디지털 표준 코드로 구축

< BIM 본격 상용화 >

- (BIM 로드맵) 통일된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BIM 시행지침*과 BIM 적용확산 로드맵** 수립(‘21.6)
 - * (시행지침) BIM 발주·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의 주체별 실무 수행 기준 등
 - ** (로드맵) BIM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기술·인력양성 등 Action Plan
- (BIM 시범사업) BIM 로드맵 수립에 따른 시공, 유지관리,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BIM+턴키 시범사업을 지정(‘21.6, 4건) 추진
 - * LH, 도공, 수공 등 신규 사업에 BIM 전면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21.下)
- (국가BIM센터 법제화) BIM 관련 정책발굴, 제도개선, 현장적용 등 디지털 건설 전환의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 부여 (‘21.下, 건진법)
- (업계 지원강화)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별도의 BIM 설계 대가를 마련하고, BIM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해 업계 편의 제공(‘21.12)

< 스마트건설 산업 활성화 >

- (산업육성)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대기업 기술력 홍보 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건설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센터건립, '21.5~'22.1)하고, 미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 * 입주·개발지원 기업 확대(21→40개, '21.上), 스마트건설지원2센터 준공('22.1)
 - (투자·판로 지원)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등 대상 투자설명회, 공기업 등 주요발주처 대상 홍보 한마당 개최('21.6)
 - (전문인력 양성) 도공 등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 BIM, 자동화 시공 등 핵심 분야 별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21.3~)
 - * 도로공사가 인력양성 사업 신청중, 고용부 협의를 거쳐 정식사업 반영 추진('21.5)
- (경연/홍보) 스마트 건설기술 발굴과 건설분야에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술소개와 경연을 통해 스마트 기술 Boom-Up 유도
 - 기업들이 현장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을 시연·경쟁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3~4월 공모, ~8월 경연계획 수립, 9월 분야별 경연, 11월 시상)
 - 건설기술과 안전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성과 공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국제 엑스포 개최 등 체감도 있는 행사 개최(21.11)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요 제출	3월	5%	공문
	스마트건설 챌린지 기획 그룹 구성	3월	5%	메모보고(국장)
	PM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3월	5%	방침(국장)
2/4분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공모	4월	5%	보도자료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착공	5월	5%	공문(건설연)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6월	5%	방침(차관님)
	BIM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6월	5%	방침(차관님)
	PM 도입을 위한 건진법 개정	6월	10%	의원발의

3/4분기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7월	5%	보도자료(건설연)
	스마트건설 챌린지 분야별 경연	9월	5%	메모보고(차관님)
	BIM 설계 대가 마련	9월	5%	방침(국장)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9월	5%	행정예고
4/4분기	스마트건설·기술안전 국제 EXPO 2021 개최	11월	10%	보도자료
	스마트건설기술(측량,계측,건설자동화) 건설기준 고시	12월	10%	관보
	국가 BIM센터 법제화를 위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	12월	5%	방침(장관님)
	스마트건설기준 현장적용 지침 제정	12월	10%	방침(국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Eng. 업계, 첨단기술 사용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성과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발주청 등 다수
- (이해관계자) 새로운 기술 개발·활용을 요구받는 건설·Eng. 업계, 스마트건설산업 확산 시 업무가 축소될 전통 건설산업 분야 및 입찰제도 개선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별 건설기술기업 등
 - *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시 발주비용 증가(발주청), 기존 건설공정의 변화·혁신 노력(건설업계) 및 기술개발 투자(전문기업)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영향관계

□ 기대효과

- (건설 Eng.) PM 도입을 통해 통합사업관리 역량 확보 및 실적 확보로 업계 경쟁력 향상과 해외 PM시장 진출 기반 마련
 - * UAE의 Burj Khalifa 건설사업에서 삼성물산은 4.6억달러(1만여명 투입, 1인당 생산성 4.6만 달러), PM사인 터너사는 2억 달러(100여명 투입, 1인당 생산성 200만 달러)
 - 융복합 기술 적용, 공기단축, 비용절감, 투자효율성 확보, 사업관리 역량 강화 등 발주청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업관리 수행 가능
 - * 역량 있는 PM은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 사업 Risk 감소의 결정적 역할 수행
 - 기술중심 발주제도 확대를 통해,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능력있는 업체가 우대받는 건설문화' 구현, 업계 기술 개발 촉진

- '제 값 받고 일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 근로자 임금 상승과 휴식 보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사고 방지

○ (스마트건설)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검증 및 제도개선 연계, 업계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 유도

- 발주처 연계, 투자유치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강화, 스마트건설기술의 현장보급을 가속화

* ('20.12기준) 31개 창업·스타트업 기업 입주, 217명 일자리 창출, 기업당 4억원 매출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일반재정)				
①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4325)		49	64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4325-301)	일반회계	49	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③ 기술형입찰 발주 금액 (25%)	-	-	7.5%	10%	'20년 발주비중 7.5% 대비 33%나 증가된 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기술형입찰 발주금액 / 전체공공건설발주금액 * 예산 기준	국내 발주청 공사발주 관련자료
④ 스마트턴키 선정 건수 (20%)	-	-	6건	8건	업체는 기술 개발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소규모 스마트턴키 참여를 기피하고, 발주청도 적용실적 없는 스마트 기술반영에 소극적 전년도 6건 대비 8건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스마트턴키 발주건수 * (스마트턴키)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시 300억 이하 일반공사도 턴키발주 허용	입찰방법 심의 공고문
⑤ 스마트건설 기술 시장 규모 (20%)	-	-	206 억원 (BIM 50억원)	250 억원 (BIM 70억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속·산하기관 기술형입찰 사업 등에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 금액 대폭 확대(46억원, 20% 이상) 특히 디지털 설계·사업관리 플랫폼인 BIM 설계 확대(20%↑)도 동시에 달성해야하므로 매우 도전적 과제임	'21년 기술형입찰 사업중 토공자동화,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 내역 금액 (BIM 기반 설계금액)	소속·산하기관에서 토목사업 발주된 기술형입찰 사업의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금액 및 BIM 설계용역 발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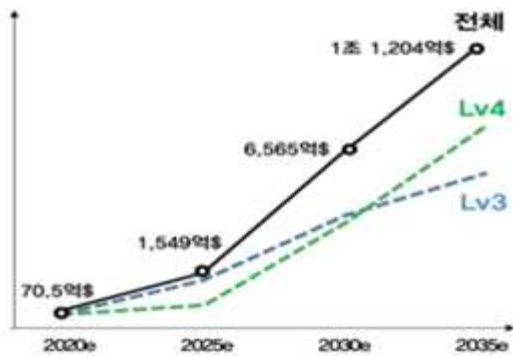
④ 스마트건설 입주기업 역량강화(15%)	신규	100 (지수)	'19년부터 스마트건설(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예산지원을 수행하여, '20년부터 가시적 매출과 고용 실적 창출 입주기업 매출, 고용 성장률을 각각 15%를 목표로 지수화하여, 목표치 100으로 산정 * '21년 경제성장률 3.1% 전망(IMF)과 비교시, 매출·고용 증가율 15%는 매우 도전적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스타 트업·창업으로 꾸준한 매출·고용이 어려워 2개년 평균값을 사용	$(① + ②) \div 30\% * 100$ $① = [(A+B)-1] \times 100(\%)$ $② = [(A' \div B') - 1] \times 100(\%)$ A: '20-'21년 매출 평균 B: '19-'20년 매출 평균 A': '20-'21년 고용 평균 B': '19-'20년 고용 평균 * 2개년도 평균값을 기준지표로 적용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공문 및 입주기업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등
⑤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수 (10%)	- 21 31	40	기존 입주기업의 생존율도 고려 하고, 우수하고 시장성, 활용가능 성이 있는 스마트건설 아이디어 를 보유한 스타트업·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추가 9개 스타 트업·창업 발굴은 도전적 과제임 * 국내 스타트업·창업의 3년차 생존률은 39.1%(중기부, 이코노미스트-1543('20.7))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수 (21.12월 기준 입주한 기업 수)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계약서
① PM 시범사업 (10%)	신규	2건	시범사업의 세부절차·심사방법·평가 기준·계약절차·대가 등 추진방향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1.3)하여 시범사업 (2건) 추진('21.9. 발주)	PM 시범사업 발주건수	발주 공고문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Ⅱ-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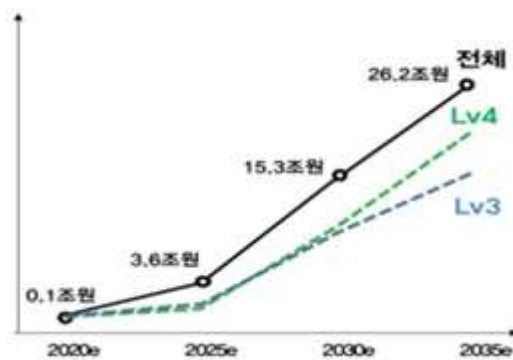
□ 추진배경(목적)

-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특히 '25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라이다·레이다 등) 가격 하락으로 본격 상용화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



<국내 시장 전망>

* Navigant Research 전망자료

- 테슬라 등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차량은 레벨2 수준(운전보조기능)이나, 올해부터 레벨3 자율차가 본격 출시*될 전망
 - * 혼다('21.3.5 출시), 벤츠('21.末), BMW('21~'22), 현대차('22) 등 출시계획 발표
 - 우리나라는 '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 수립('19.10월, 미래차 산업발전전략)하고, 세부과제 추진 중
 - '24년까지 레벨4 자율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완비하고, '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 추진
 -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를 개발·실증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레벨4 자율차를 대비한 선제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 (시범운영지구 본격 운영) 서울·세종 등 6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다양한 유상서비스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공('21~)
 - *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가,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이 도심 등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유상으로 실증 가능한 특례지구
 - ** (지구별 실증계획) ① 세종(순환셔틀): '20.12 ② 광주(노면청소차): '21.2, ③ 서울(마을버스): '21.5, ④ 제주(공항픽업): '21.5, ⑤ 대구(로봇택시): '21.6, ⑥ 충북(BRT): '21.7
- 시범운영지구에 자율주행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를 우선 구축하여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21.4)

< 시범운영지구 지정에 따른 변화상 >



- (민간보조 시범사업) 공모방식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물류배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 촉진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①자율차 제작(약 7대) 비용, ②인프라 구축 비용, ③인건비·유지관리비 등 지원
 - 국내에 전례가 없던 규모(70억원)·기간(2년)의 자율차 시범사업으로 관제·서비스·인프라 등 관련이슈 발굴 및 정책개발도 추진
 - * '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1개 사업 지원(심야셔틀서비스, '20~'21, 70억원)

②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구축 본격 착수

- (C-ITS) 자율차 센서의 감지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율협력주행 시스템(C-ITS)을 전국 주요도로(3만km)에 조속히 구축(~'25)
 -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하여 교통위험정보 등의 실시간공유 및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
 - 올해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국도 등 약 1,200km에 확충 완료
 - * ('21)1,900 → ('22)8,000 → ('23)14,000 → ('24)20,000 → ('25)30,000km (누적)
 - C-ITS 기반의 V2X(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안전정보 통신) 통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21~, 세종)
 - * 통합센터 ↔ 지자체별 로컬센터간 교통정보를 연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21)·구축('22~)하여 C-ITS 서비스 운영현황 실시간 관리 추진
- (정밀도로지도) 자율차 정밀위치 파악, 원거리 도로상황 예측 등 자율차 운행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 전국 주요도로 구축(~'25)
 - * 쉐 고속도로 구축 완료('19) → 쉐 국도 구축('22) → 4차로 이상 주요 지방도 구축('25)
 -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는 관련 기업 등에 무상배포하고, 정확도 제고·민간활용 확대를 위한 신속갱신체계도 마련('21.6)

③ 법·제도기반 완비

- (안전기준) 既마련된 Lv.4 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20.12.15)을 바탕으로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21~'24)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
- (보험) Lv.4 자율차 보험체계 연구 착수('21~, 「자동차손배법」)
- (사고조사) Lv.3 이상 자율차 사고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20.10 구성)를 통해, 금년부터 시범조사(Lv.2 기능 위주) 실시
- (보안) 사이버보안 규정('21.12, 「자동차관리법」 개정), V2X 통신 보안 인증관리체계('21.12, 「자율차법」 개정) 등 수립

4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 (기술개발)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R&D(1.1조, '21~'27), 자율주행 화물차 군집주행(~'21),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스템(~'21) 등
- (시험환경 고도화) K-City에 악천후 재현시설 등 구축,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기준 명확화 등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21.3)
 - * 상용화(양산)를 앞둔 레벨3 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기준 완화도 병행 추진
- (산업생태계) 중소·벤처기업·대학 등의 연구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센터 구축(~'22) 및 테스트베드(K-City) 무상개방('19.3~)
 - 대·중소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협의회 및 데이터공유센터를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프로그램 제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부처합동 자율주행 상용화 집중지원 방안 수립·발표	1월	10%	보도자료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2차년도 실증 착수	2월	5%	홍보자료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R&D 사업단 설립	3월	5%	보도자료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마련 및 행정예고	3월	5%	내부방침(실장)
2/4분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정	4월	5%	관련자료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지원 대상 선정	4월	5%	메모보고(장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4월	5%	보도자료
	주행데이터공유센터 공간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4월	5%	메모보고(차관)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6월	5%	보도자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6월	5%	메모보고(장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시행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자율주행차 규제혁파로드맵 리뉴얼 완료	8월	5%	보도자료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전국구축 착수	8월	5%	관련문서
4/4분기	대학생 자율주행차 제작 경진대회 개최	10월	5%	보도자료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R&D 성과 실도로(화성시) 시연	11월	5%	메모보고(차관)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스템 운영 시연	12월	5%	보도자료
	자율주행 트럭 군집주행 운영 시연	12월	5%	보도자료
	자율주행산업발전협의회 성과발표회 개최	12월	5%	메모보고(장관)
	K-City 레벨4 시험환경 인프라(가혹환경재현시설) 준공	12월	5%	보도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레벨3, 레벨4 자율차 관련 제도 마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차 양산 및 관련 산학연의 기술개발 등이 용이
 - 다만 자동차 관련 제도는 국제기준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 국제 회의체(WP.29)를 통해 미·EU·일·중 등 주요국과 의견조율 필요
- (이해관계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의 서비스가 실증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버스, 택시 등)의 반발 우려
 -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자율차법」 제8조)를 구성하여 갈등 관리 및 실증 지원 추진

□ 기대효과

- (규제 불확실성 해소) 자율차 기준·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국내의 경우, '22년에 레벨3 자율차가 차질없이 출시되고, '27년에 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 될 수 있는 단계적 토대 완성
-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비)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C-ITS, 정밀도로 지도)의 전국 주요도로 구축에 따른 자율차 상용화 가속화
 -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가속화 및 향후 자율주행차가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안전사고 감축)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졸음운전·운전자 피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기대
-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심야셔틀서비스,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실증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장기적으로 교통수요 전환(자가용→대중교통)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자동차안전도강화(IV-1-일반재정②)			
① 자동차안전도강화(4634) ³⁾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상용화(319)		247	296
첨단도로교통체계(V-5-일반재정④)			
① 첨단도로교통체계(1736) ³⁾	교통시설 특별회계		
▪ 첨단도로교통체계(304)		2,111	5,179
교통물류연구(VI-1-R&D⑤)			
① 교통물류연구(4158) ³⁾	일반회계		
▪ 교통물류연구(R&D, 301)		456	213
▪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R&D, 303)		113	104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308)		-	273
도로기술연구(VI-1-R&D⑩)			
① 도로기술연구(4162) ³⁾	교통시설 특별회계		
▪ 도로기술연구(R&D, 301)		139	197
국토지형관리(II-9-일반재정①)			
① 국토지형관리(5831) ³⁾	일반회계		
▪ 국가기본도제작(301)		670	9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수 (25%)	-	-	1	6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배송 등 다양한 유상서비스를 실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 서비스 실증 건수	보도자료, 메모보고(차관) 등
㉡ 자율주행차 관련 특례 허가 수 (25%)	-	-	2	5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등 특례를 적극적으로 허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 특례 허가건수	특례허가 공문
㉢ 자율주행차 신규 임시운행 허가대수 (25%)	30	24	43	62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신규 임시운행허가를 지난 3년간 추세전상 예측값(45.3대) 대비 약 40% 높게 목표 설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수	메모보고(실장)
㉣ 정밀도로지도 국도 확대 (25%)	412	138	7,500	11,000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연구·시범운행 확대를 위해 일반국도상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물량을 작년대비 50% 이상 확대 구축	일반국도 등 정밀 도로지도 구축 물량(km)	용역완성검사원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Ⅱ-1-③)

□ 추진배경(목적)

- (산업붕괴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객 98% 감소 · 운항규모 97% 쪼그라들, 업계 붕괴·네트워크 유실 우려
- 기업 경영불안*(전년比 '20년 매출 LCC △74%, FSC △40%)은 결국 항공업계 종사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30년 이상 구축한 산업 생태계 동반 위기

* '20년 국적항공사 약 11조원 규모 매출 피해('19년 실적 대비, 잠정공시)

구분	종류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국적사 전체 (단위 : 억 원)	매출액	227,312	121,321	△105,991	△46.6
	영업이익	△4,180	△7,470	△3,290	△78.7

현장의 목소리

- (항공사 재무담당)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5억씩 적자" "정부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
 - (항공업 종사자) "장기 휴직으로 우울증 심해" "생활고가 코로나보다 무서워"
- * 항공사 직원 23,874명(현원 65%)가 휴직 중이며, 지상조업 인력 17%('19 대비, 2,833명) 실직

- (핵심 기간산업)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두 번째이며, 항공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운송을 담당
- 제작·정비, 공항 운영, 물류, 관광 등 타 산업 영향력 多大
-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8만 명('18)이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
- (국제경쟁 심화)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실행 →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내용(언론 보도내용 등) 】

	금융지원 등 항공사 지원 내용	수혜 항공사
미국	보조금·대출 등 75조원 지원('20.3)	델타 6.7조원, 아메리칸 7.1조원, 사우스웨스트 3.9조원 등
EU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허용('20.3)	영국항공 5천억원, 이지젯 9천억원, KLM-에어프랑스 12조원, 루프트한자 12조원 등
중국	항공인프라 투자 및 항공사 금융지원('20)	국제선 운항사 대상 좌석킬로미터 비례 보조금 지급
일본	전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제대책 발표('20.4)	JAL 3.5조원 대출 및 ANA 10조원 대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

① **항공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화**

- (**고용지원**) 항공수요 회복 지연 상황을 감안, 올해 3월말 종료되는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추진(‘21.3)
-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종료(‘19.9~‘20.8)에 따라 現사업자 영업 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협력사 판매사원 고용 승계** 추진
 - * 입찰 공고(‘20.1) 후 신규사업자가 선정(‘20.9)된 2개 사업권(DF7·DF12)외 6개 사업권 유찰

②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자구노력 유도**

- (**사용료**) 항공산업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21.1~)**,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시행
 - * (인천공항)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100% 감면
(인천공항外) 신규취항 및 증편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 최대 100% 감면
-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국제운송시장 내에서 외국항공사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취득·보유시 부과되는 세제 감면 추진**
 - * (현행) 취득세 60%, 재산세 50%(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운수권 등 회수유예**) 국적항공사 국제선 전체 노선의 **’21년 운수권·슬롯 미사용 시 회수유예(시즌별 허가)**, 팬데믹 이후 **즉각적 운항재개 지원**
 - *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 중인 제주 등 지방공항의 외항사 슬롯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국적사 영업기회도 확대

③ **항공사 맞춤형 정책지원 모듈화**

- (**항공사 합병**)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사 조기 안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 운항시각(슬롯, slot) 전략적 활용, 해외 기업결합심사 진행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항공사 간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점검
 - ** 중복노선 운항시간대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확대, 핵심노선 관리 등을 통한 운임 안정화

- (LCC 지원) 제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가 필요한 1분기 이후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 마련 추진

* 항공사는 금년도 약 2,000억원 정도의 자금 부족을 예측

- (신생 항공사 지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감안, 면허 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 하여 항공사의 안정적인 취항을 유도

* (기존) '21.3.5일까지 정기편 노선 취항 → (변경) '21.12.31일까지 취항

④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재개 추진

- (관광비행 다변화) 현재 운항 중인 '아웃바운드 국제관광비행(국내 출발)'은 지역민편의·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으로 확대*

*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인바운드(해외→한국) 국제관광비행 병행 추진
- (1단계) 한국상공 비행, (2단계) 공항 환승구역 관광, (3단계) 공항주변 한정 관광

- (여행안전협약 추진)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 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 추진

* 항공수요·방역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선복원노선 선정, “先 협약체결 → 後 방역상황을 고려한 트래블버블 개시” 전략 시행

- (수요응답형 항공협상)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전략에 따른 운항확대 필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협상 추진

- (방역안전 여행편의 제고)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트래블패스(App 기반)* 등 도입 검토, 입국자 2차 감염차단을 위한 검역활동지원** 및 방역·홍보활동 점검

* PCR 음성확인서 등 각종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입국時 제시하는 플랫폼(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개발中인 트래블패스가 대표적)

** (특별입국절차)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진단·자가격리앱 설치 및 선별진료 등을 위한 여객대기·격리공간 마련 등

- (백신수송 규제개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물품으로 지정하여 사전 승인 절차 완전 면제('21.3,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행정절차 완화로 연평균 약 30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스마트방역) 항공기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공항내 코로나검사 확대, 신속검사* 및 방역앱·로봇 도입 등 인천공항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21.上)
- * 현행 위탁검사(7시간 소요)를 신속PCR/직접검사로 전환(2~4시간 소요)

《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항공금융도입) 항공산업의 발전과 산업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해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21.下)하고, 보증·펀드 등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 항공조합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여 항공보증·발전펀드를 조성하고, 연관기업 투자확대 등 지원방안 검토
 - * 항공금융 관련 연구용역 수행 중 ('20.12~'21.11, 교통연)
- (MRO 경쟁력강화)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 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 * (절충교역)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
 - (조세감면)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항공정비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 (FTA) 항공기 부품 원산지 증명 곤란, FTA조문 미비 등으로 활용률 저조('19년 16%)
 - ** (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관세철폐)
- (정비물량 유치) LCC가 해외 외주 중인 엔진·기체정비 물량('19년 1.34조원 규모)을 국내로 전환 유도하여 국내 MRO 역량 강화('21.4~)
- (Zero-컨택트 수속)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편리성도 도모
 - * (현행) 김포 등 국내선 출발장 입구 → (확대) 김포·김해 등 주요 4개 공항 국내·국제선에 체크인~탑승구('21.12)
 - ** (One-ID) 항공기 탑승권·신분증·지문·얼굴 등을 하나로 결합
- (디지털뉴딜 추진) 보안검색 정확성·속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검색기술·장비를 개발·상용화하여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향상
 - * 스마트 보안검색기술개발('21.4~'25.12)을 위한 연구착수, 보안검색장비 개발·상용화 등 병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1월	4%	관련문서
	신생항공사 면허 조건 변경 발표	2월	4%	보도자료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3월	4%	관련문서
	바이오 의약품 항공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3월	4%	보도자료
	인천공항 내 코로나 신속검사 도입	3월	4%	보도자료
	인천공항 등 검역활동 지원 및 방역·홍보활동 점검	3월	4%	메모보고(실장)
2/4분기	미사용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조치	4월	4%	방침(실장)
	MRO물량 국내전환을 위한 협의체 회의	4월	4%	메모보고(실장)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관련 관계기관 회의	5월	4%	메모보고(실장)
	‘트래블 버블’ 협정안 마련 및 상대국 협의 개시	5월	6%	메모보고(실장)
	공항시설사용료 추가 감면	6월	6%	메모보고(장관)
	인천공항 등 검역활동 지원 및 방역·홍보활동 점검	6월	4%	메모보고(실장)
3/4분기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추진	7월	6%	메모보고(장관)
	인천-에틀란타 도착 환적수하물 검색면제(시범운영)	7월	5%	메모보고(장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실적 점검	7월	3%	메모보고(장관)
	MRO물량 국내전환을 위한 협의체 회의	8월	4%	메모보고(실장)
	항공산업발전 조합 설립·운영 방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추진방안 마련	10월	4%	메모보고(실장)
	MRO물량 국내전환을 위한 협의체 회의	11월	4%	메모보고(실장)
	R&D 연구개발기술 수요처 홍보	11월	4%	메모보고(실장)
	중장기 항공금융 발전방안 마련	12월	6%	메모보고(차관)
	R&D 현장실증 결과 보고	12월	4%	메모보고(실장)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결과 실적 점검	12월	3%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으로는 항공산업을 운영하는 항공사·종사자 및 공항운영자, 항공산업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교통 이용자
- (이해관계집단) 항공사(국적사·외항사), 공항운영자, 항공교통 이용자, 물류기업 등 항공정책의 수혜·규제를 받는 모든 주체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요 회복 시점까지 경쟁력을 유지하여 향후 세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업들도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극 대비
- 트래블 버블 등 인바운드 확대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항공금융 체계 구축 추진 등 항공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 생체정보인식 및 트래블패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항 등 구현으로 이용객의 편의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⑤)				
①	항공산업지원(3637)			
	■ 항공산업발전지원(314)	교특회계	29	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항공산업 지원방안 지원방안 발표(25%)	-	-	3건	2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발표건수를 목표로 설정 * 긴급유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고용유지 등 	경장,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대외회의 안전보고·발표 대책	보도자료
㉡ 통합항공사 고용유지(20%)		신규		9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항공사의 '20년말 현원에서 '21년 자연감소 인력을 제외한 '21년 현원으로 고용유지 목표 설정 * '19년말 대비 '20년말 전체 항공사 고용유지는 약 95% 수준 	('21년말 현원-'20년말 현원) / '20년말 현원 * 100	한국항공협회 통계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15%)		신규		법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산업 위기 대응 및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법적근거 마련을 목표로 설정 	항공사업법·공항공사법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 무착륙관광비행 실시(15%)		신규		100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관광·면세 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 관광비행의 건수를 7개 항공사의 월 1회 이상 지속 운항 등 초과 달성 목표 설정 * 백신접종 등의 상황에 따른 국제선 활성화 등으로 국제관광비행 불필요 시점 전까지 산정 	항공사 운항 건수 (7개 항공사 X 월 1회 X 12개월) = 84회 * 100회 이상 초과 목표 설정	허가공문
㉤ 국제항공 네트워크 정상화를 위한 국제항공운항 복원 실적(개수) (15%)		신규		2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로 인하여 급감한 국제선 운항편의 정상화를 위하여 트래블 버블 등 국가간 협의를 통해, 팬데믹 선언 이후 '20.4~'20년말까지 평균 주당 운항 횟수(258편) 대비 '21년 연평균 주당 횟수 25% 이상(322편) 복원목표 설정 (3,000편 이상 증가) * 국제선 정기 여객편 기준 	'20년 국제선 주당 평균 운항 실적('20.4월1주차~12월5주차) 대비 21년 국제선 주당 평균 운항 복원 실적	한국항공협회 통계자료 및 기타 입증자료 등
㉦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10%)	14개	-	7%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4개 공항(인천T1·김포·김해·제주)에 우선적으로 구축(국내·국제)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 '18년 14개 공항 시범(정맥 활용) 구축 '20년 One-ID 김포 국내선 시범 구축 	(One-ID 적용공항 수 / 전국공항 수) * 100	인천·한국공항공사 추진실적 공문 등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Ⅱ-1-④)

□ 추진배경(목적)

- 드론법 시행('20.5) 및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 협의체 발족('20.11)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본격 마련
 - 그간 국내 드론시장은 4년여 만에 약 7배 성장함과 동시에, 기체(7배), 기업수(3배), 조종자격 취득자(30배) 등 주요 지표도 급성장
 - * (국내 드론시장 규모) 704억 원('16.12월) → 4,917억 원('20.11월)
- 다만, 다양한 드론 활용모델의 도심 등 실증이 어려워 상용화에 장애물로 작용 중이며, 중국산 드론 선호·강제도 여전히 지속 중
 - 국내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전한 드론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질적 성장 도모 및 드론 활용사업 활성화 필요
-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결수단으로 부상 중인 UAM* 도입 기반 마련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기체·운항·서비스를 총칭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도심 내 드론비행 개시 및 新기술·제품 상용화 지원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도심 내 드론활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비행·전파 관련 사전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규제특구 지정·운영
 - * 특별감항증명·안전성 인증·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적합성평가(전파법) 등
- (실증도시) 산업·입지·환경 등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확대 운영
 - * 지자체 대상 공모를 거쳐 선정('19년 2개소 → '20년 4개소 → '21년 7개소)

- (규제 샌드박스) '규제완화+재정지원'으로 민간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 산·학·연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망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상용화 유도
 - * 연내 드론활용 물품배송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배송사업 모델 확장(가시→비가시, 해상→지상 등)을 위한 K-드론시스템 적용 지원 추진

② 우수기업 육성·지원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 (조달제도 개선) HW 중심 국산인증 기준에 핵심부품인 FC 등 SW 기준을 추가하여 국산기술 개발·활용업체 지원(중기부 협업)
 - 아울러, 대기업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수소, 중·대형 드론 등)하여,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혁신기술 육성 및 국산 경쟁력 강화 추진
- (발주·평가 지원) 드론분야 전문평가단 및 표준평가기준을 발주 기관에 제공·활용토록 하여 발주기관의 드론분야 전문성 제고
- (국산드론 구매) 우리드론 알림-e 운영, 드론정보포털 구축 등을 통해 국산드론 활용 강화 및 국내 드론산업 질적 성장 촉진
 - * 공공분야 국산드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 드론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제안요청서 사전 컨설팅 제공 등 국내 우수기술 맞춤형 발주(항공안전기술원)

③ 안전한 드론활용 환경 조성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안전관리 강화)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등 불법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하여 국민 생명 보호 및 실효성 확보
- (테러대응)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20.2)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 부근 드론비행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개정
- (드론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분리, 드론 안전·운용에 대한 기본법령을 마련하여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사용사업체 관리)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사업의 급증에 따라 사용사업체 등록·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 * (기존) 지방항공청 → (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 (홍보) 드론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 시행('21.3)에 맞춰 제도 연착륙 유도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추진
 - *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1종~4종)

④ 시험·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인프라 구축) 드론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공역 확보 및 시설·장비 도입 등 수도권 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추가 구축
 - * 3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영월·보은·고성)이 준공되어 정상운영 중이며, 2개 전용비행시험장(인천·화성)을 금년 말까지 추가 구축
- (조종인력 양성) 공공분야 드론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치안·안전 등 분야에 대한 조종인력 양성 추진(임무특화 교육)

⑤ UAM 도입기반 마련 및 기술개발

- (기술개발) UAM 기체, 인프라, 서비스 등 전방위적 기술에 대한 국가 R&D(신규) 지원전략으로 UAM 기술로드맵 발표(관계부처 합동)
 - * 국토부(주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및 기상청 등 5개 부처 협력 중
- (실증지원) K-드론시스템 상용화 촉진을 위해 R&D와 연계하는 실증사업 공모* 및 K-UAM 그랜드챌린지 Master-Plan 수립 추진
 - *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 드론의 공항 및 도심주변 비행, 장거리 배송 활용 등 드론교통관리 기능 제공이 필요한 분야 발굴·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국가중요시설 부근 드론비행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월	10%	관보
	드론활용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2월	10%	보도자료
	드론정보포털 정식운영 개시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드론 실증도시 선정 및 운영 개시	5월	5%	보도자료
	화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건축공사 준공	6월	5%	메모보고(실장)
	드론 신사업 상용화 서비스 실증 개시	6월	10%	메모보고(실장)
3/4분기	드론분야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평가단 구성	8월	5%	메모보고(국장)
	K-UAM 그랜드챌린지 Master Plan 발표	9월	10%	보도자료
	미디어를 통한 드론 홍보계획 마련	9월	10%	메모보고(차관)
4/4분기	인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건축공사 준공	10월	5%	메모보고(실장)
	공공분야 드론 임무 경진대회 개최	12월	5%	보도자료
	드론안전법 제정안 마련	12월	10%	방침결정(장관)
	사용사업체 위탁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도심 내 드론활용 모델 및 관련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는 드론 제작·활용업체 및 연관 산업 종사자 등
- (이해관계집단) 드론업계·협회, 관계부처, 지자체 및 드론 동호회 등 취미·레저용 관련 일반 국민
 - 특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軍은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 중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필요
 - 아울러, 국민의 드론테러·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존재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 및 드론 활용 강화에 기여
- UAM(도심항공교통)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제도·기술·인프라·인력·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통해 선도국 도약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④)				
① 항공인력양성(3635)		일반회계	(43)	(43)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303)			43	43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⑤)				
① 항공산업지원(3637)		교특회계	(419)	(471)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323)			171	61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324)			100	164
■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326)			28	28
■ 드론 인증센터 구축(328)			100	70
■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 지원(332)			10	30
■ 드론교통산업활성화(333)			10	1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운영 (20%)			신규	최초 지정	드론법 시행('20.5.1) 후 최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지정 이전 軍,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의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도심 등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매우 도전적 목표 부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발표	보도자료
㉡ UAM 기술 로드맵 발표 (30%)			신규	로드맵 발표	관계부처(국토부 등 5개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UAM 단계별 운용시나리오를 전제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부문 및 기술에 대한 R&D 추진방향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설정	로드맵 발표 (대국민 공개)	보도자료
㉢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업체 수 (20%)	-	-	45개 업체	50개 업체	드론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험·실증지원을 통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0% 상향된 도전적 목표 설정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업체 수 (예약시스템 내 시험장 이용 현황 측정)	메모보고
㉣ 실증 참여 드론업체 수 (30%)	16개 업체	34개 업체	43개 업체	60개 업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드론 활용모델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 상향된 과감한 목표 설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실증에 참여하는 드론업체 수	메모보고

(1) 주요 내용

□ 양질의 건설 일자리 제공

- (건설현장 혁신) 업역·업종 개편 등 생산체계 혁신의 현장안착, 유지보수산업 고도화 등 새로운 성장영역 육성
- (근로여건 개선) 임금체불 방지, 고용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소비자 보호 강화

□ 공정한 물류시장 확립

-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 및 연구를 토대로 택배 가격·거래 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하고 단가 후려치기 및 백마진 근절 캠페인 개최
-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질 좋고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사업자 인증 시행하고 소화물배송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방안 마련

□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 운영

- 조종사 취업준비생의 훈련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기량유지 과정 등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신설('21.4)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25%)	신규			50%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최초로 시행된 점을 감안 도전적으로 설정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사 건수 중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수	메모보고
㉡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역량 강화 (건수) (25%)	13	16	14	15건 이상	해외투자개발사업(PPP) 진출 지원을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입 지원 * 3개년 평균(14건) 대비 상향 설정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건수	메모보고, 보도자료 등

㉓ 물류기업 취업자수 (25%)	453	466	473	480	보건안전(코로나19)으로 인해 취업자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 되나,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3.4%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지원학교 졸업생의 물류기업 취업자수 및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자수	물류전문인력양성 학교·물류기업 등 취업자 명단
㉔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25%)	308명	318명	190명	190명	조종사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문 인력 양성 소요기간(3년 이상) 감안하여 작년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1년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자격증명 취득 관련 공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설업계 이해충돌) 업역·업종 등 생산체계 개편은 건설기업의
업무 범위, 공사수주 가능성 등 기업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업계간 첨예한 이해 충돌
 - 업계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한 단계적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갈등발생을 최소화
 -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
하되, 업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추진
- (택배업계) 코로나19 등으로 택배물동량이 급증 하며 택배종사자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체계 개선 필요
 - 택배종사자·사업주, 소비자단체, 국회, 전문가, 공익위원,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논의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Ⅱ-2-①)

□ 추진배경(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 극복에 건설업의 기여 필요

-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약 200만명(고용의 7%)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하방압력 완화 가능
- 특히,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관리가 용이하고, 비숙련 취약계층의 취업이 용이해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 가능

* 고용유발계수('15년) : 건설업 9.2명/10억원 ↔ 전산업 8.0명/10억원

○ 그간의 건설산업 혁신을 현장에 정착시켜 본격적인 성과 창출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건설 혁신 로드맵('18.11)을 통해 45년만에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 등 생산구조 개편의 기반 마련

* 업역 폐지 : 공공공사 '21.1월 시행, 민간공사 '22.1월 시행,
업종 개편 : '22.1월부터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28개→'14개 업종)

- 업역·업종 개편을 현장에 정착 시켜 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
- 아울러,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신규 건설 수요 감소 및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여 유지보수산업을 육성·고도화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정 경제 구축에 기여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처우 개선 및 고용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인력·자재 등 수급을 안정화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등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공정한 산업질서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건설산업 혁신 현장 안착 및 지속적인 규제 개혁

◇ 건설 산업구조 혁신을 현장에 견고히 안착시켜 기업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

- (업역개편) 업계 의견수렴, 공공기관 발주 행태 및 지역·업종별 입·낙찰 현황모니터링 등을 거쳐 혁신정책 성과 분석·평가('21.6)
 - 업역개편 제도 안착을 위해 대업종화·주력분야 등 연계정책 및 영세업체 보호방안을 보완하여 '발주 세부기준' 정비 ('21.12)
- (업종개편) 공공공사 20개소 내외 대상 대업종화 시범사업* 실시
 - * 폐지된 시설물업을 제외한 28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22년 시행)
 - 경쟁력 있는 기업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방안 마련('21.9)
- (유지보수산업 육성)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고도화 차원에서 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 공사 도입 ('21.6, 건산법 개정)
 - * 30년 이상 SOC 비중 : ('18) 11.6% → ('28) 28.4% → ('38) 63.2%
 -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키스콘이 111개 세부공종으로 통합관리 ('21.下)
 - * 현재 업종별 협회에서 실적 분산관리 → 공공 중심으로 실적 통합관리
 - 종전 시설물업체가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 원활하게 업종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실적가산·영세업체 보호 등 세부기준 고시 ('21.10)
- (규제개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규제혁신방안('20년)*'을 시행하고,
 -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의무 유예,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확대, 가스3종 업무내용 현실화,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등 → '21.8월 법령 개정 완료
 - 건설현장의 비대면 문화 확산, 사업비용 절감,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발표('21.9)

② 건설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공정질서 확립

◇ 고용과 임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 (기능인등급제)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경력·교육·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인등급제(경력관리제) 신설(‘21.5)
 - 기능인 교육체계를 정비(‘21.5)하고, 기초교육*(등급부여 시)과 승급교육(중·고급: 현장실습, 특급: 관리능력) 등 맞춤형 의무교육 실시
 - * 기능인 의무교육 지원 예산(연간 70억원 규모) 확보를 위해 기재부 협의 지속 추진
 - 등급제 안착을 위한 업체의 고용지원 및 이해관계자(건설업계·기술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능인 권익강화방안 마련*(‘21.4)
 - * 특·고급 기능인을 소규모 현장배치 기준으로 인정, 시공능력평가 기준 반영 등
 - 일자리 플랫폼과 연계한 기능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21.10)
 - (적정임금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 마련(‘21.6) 및 건산법상 근거 마련, 적용사업 확대(LH, 도공 시범사업) 추진
 - (임금직불제) 노무비 지급률 확대를 위해 현황판* 운영, 민간 확산을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 강화(‘21.2) 및 인센티브 부여**(‘21.11)
 - * 지방청 대형공사(ex. 100억 ↑) 대상으로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한 노무비 지급률을 관리
 - ** 임금직불제 적용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3→5점) 등
- (공정질서 확립) 업역 폐지에 따른 하도급 허용기준 정비, 3진 아웃제 확대*,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 등 하도급 관리 강화(‘21.8)
 - *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 범위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포함
 - ** 시공능력평가지 직접시공 실적 가산비율을 10→20%로 확대(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불공정행위 통합신고센터 구축(‘21.6) 및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방안 마련*(‘21.6) 등을 통해 발주자 갑질 근절
 - * 사업자가 공공발주자 서비스 수준을 평가토록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공제조합 부실화를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및 경영 효율 강화 추진(‘21.5)

③ 건설산업 생산기반 정비

◇ 건설 자재·장비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추진

- (골재수급 안정)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 및 품질 개선
 - * 3기 신도시(127만호) 및 2.4대책(83만호)로 인해 수도권 골재수요가 '21년부터 '28년까지 10% 수준(연 900만 m³) 증가할 전망
 - 해수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연골재(바다·산림) 공급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 선별·파쇄골재 생산량 증가에 대한 신고규정을 완화('21.11)하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품질개선도 추진
 -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공급자 대상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법 개정안 마련
 - * 골재 공급자에 품질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반발 예상
- (기계 관리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제도 내실화 및 안전관리 총괄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 조절 시행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기계의 검사주기를 단축('21.6)*하고, 타워크레인 운영단계별 안전기준 도입 등 안전강화방안 마련('21.6)
 - * 향타·향발기 3→1년, 도로주행 건설기계(20년 경과 시) 1년→6개월
 - 부실 장비를 지속 퇴출*하고,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21.3~5) 등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결함 장비는 운행 중지, 시정조치(리콜) 및 등록말소 조치
 -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기계관리 전담 법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역량도 강화** 추진('21.6)
 - * 형식승인·장비검사 외에 사고조사 기능 및 민간 검사기관 감독 기능 부여
 - ** 검사 매뉴얼 정비 및 10여년간 동결된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추진
 - 건전한 건설기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수급조절계획('21~'23)」 수립·시행('21.8)
 - * '09년 이후 건설업계·레미콘업계 ↔ 대여업자·운송노조 간 극심한 갈등 지속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적정임금제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건산법 발의	3월	5%	의안정보시스템
	골재품질 개선방안 마련	3월	10%	메모보고(장관)
2/4분기	공제조합 혁신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4월	10%	관보
	건설기능인 등급부여(기능인등급제) 시행	5월	10%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공공기관 신설을 위한 건기법 개정안 발의	6월	5%	보도자료
	상습채불업체 공표 강화를 위한 건산법 개정	6월	5%	관보
	계약제도 개선 관련 기재부 협의	6월	5%	공문 등
3/4분기	'21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 결정	8월	5%	메모보고(장관)
	직접시공 확대 등 건설규제 혁신 2.0 시행 (건산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8월	5%	정부입법시스템, 관보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방안 마련	9월	10%	메모보고(장관)
	골재품질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	9월	5%	의안정보시스템
4/4분기	시설물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 마련(고시)	10월	10%	보도자료, 관보
	임금직접지급제 확산방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장관)
	선별·파쇄골재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시행	11월	5%	관보
	건설규제 혁신 3.0과제 추가 발굴	12월	5%	보도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건설업계, 건설 근로자, 소비자(발주자), 일반국민)

- (건설업계) 업역 칸막이 제거, 대업종화 등 규제 혁신에 따른 경영 여건 개선과 숙련 기능인력 증가로 경쟁력 강화
- (건설 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 체불 근절, 기능인 고용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건설기계 사고 예방으로 근로환경 개선
- (소비자) 업역·업종 개편에 따른 소비자(발주자) 선택권 강화 및 주력분야 도입 등 기술경쟁 촉진에 따른 공사 품질 개선
- (일반국민) 생산적인 건설산업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행복 추구

○ 이해관계집단(건설업계, 유관기관, 국회)

- (건설업계) 업역·업종 개편 시행에 대해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대화를 통한 세밀한 갈등 조정 필요
- (자재/장비업계) 골재 품질관리제 도입 등에 따라 골재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대해 집단 갈등* 우려
- * '09년 이후 건설업계·레미콘업계 ↔ 대여업자·운송노조 간 극심한 갈등 지속
- (건설업계-근로자) 기능인 등급 부여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 및 기능인 고용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 우려
- (건설업계-공제조합) 공제조합 경영 혁신 추진과정에서 건설업계와 공제조합의 반발 및 업계와 조합간 갈등 발생 우려
- (정부)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직접지급제 확산, 기능인교육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기재부, 고용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은 반대입장
- 또한 건설자재 공급 확대과정에서 환경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우려

□ 기대효과

- (경제활력 제고) 생산체계 개편과 기술경쟁 촉진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설역량 강화)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산업 생산성 확대 및 시공역량 강화 등 건설 경쟁력 제고
- (근로환경 개선) 임금보장 강화, 기능인 경력관리를 통해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신규진입 확대 기반을 마련
- (건설산업 기반 강화) 골재 공급 확대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로 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건설기계 안전 확보) 검사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철저한 장비관리와 현장 안전관리를 병행하여 전방위적 건설기계 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① 건설산업 혁신 (40%)	대책 발표	업계 논의	법령 개정	시행		100%= ①*20%+②*20%+③*20% +④*20%+⑤*20%	
- ㉔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신규		50%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최초로 시행된 점을 감안 도전적으로 설정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사건수 중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수	메모보고
- ㉕ 발주 세부기준 정비	-	-	제정	개정	업역개편 성과평가에 따라 대업종화· 주력분야 및 영세업체 보호방안 등 제도보완 필요	발주 세부기준 개정	보도자료
- ㉖ 유지보수 고도화 기반 마련		신규		시스템 마련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업체 육성을 위해 실적관리 시스템 마련·운영 필요	시범사업 추진	메모보고
- ㉗ 직접시공 확대	53%	53%	53%	56%	최근 3년간 비율·추세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 설정	70억 이상 종합공사 중 직접시공 시행 비율	메모보고
- ㉘ 공제조합 혁신		신규		운영위 재편	협회/공제조합 간 갈등이 첨예한 운영위원회 개편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행(50%) 및 신규 운영위원 선임(50%)	관보, 방침
② 일자리 개선 (35%)						100%= ①*25%+②*25% +③*25%+④*25%	
- ㉙ 임금직불제 노무비 지급률 개선	-	-	10%	15%	임금직접지급제 안착을 통해 임금 채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지급률(노무비/전체 공사비)을 50% 확대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20년 약 10% → 15%)	소속·산하기관의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지급률	메모보고
- ㉚ 적정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신규		법률 개정	기재부 등 관계부처 이견이 많은 과제로 법률 개정은 도전적 과제	법률 개정	보도자료 등
- ㉛ 적정임금제 적용공사 확대	-	-	20개	30개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 적용 공사를 50% 이상 확대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20년 20개 → 30개 이상)	적정임금제를 적용한 건설공사 수	메모보고
- ㉜ 기능인 등급제 적용 규모		신규		25개 직종	최초로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직종(49개)의 50%이상에서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제 확산에 기여 등급제 시행에 적절한 규모(1만명)가 형성된 직종(22개)보다 10%높은 수준	기능인 등급 부여 직종 수	메모보고
③ 생산기반 정비 (25%)						100%= ①*30%+②*30% +③*40%	
- ㉝ 골재 생산량 확대		신규		시행령 개정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별·과쇄골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신고규정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관보
- ㉞ 건설기계 검사 제도 내실화		신규		시행 규칙 개정	고위험·노후 건설기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고, 내실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수수료 50% 인상	시행규칙 개정	관보
- ㉟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 퇴출	-	-	200대	600대	부실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달 장비를 조사 하여 시정조치·등록말소하는 업계 반발이 큰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서 전년 대비 300%인 도전적 목표 설정	부실 타워크레인 시정조치·등록말소 건수	보도자료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Ⅱ-2-②)

□ 추진배경(목적)

- (불합리한 관행) 화물운송시장 기득권 보호 위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활력을 떨어뜨리고 업종내 과당경쟁, 이해관계자 갈등 유발
 - * 화물운송사업 위·수탁제(일명 지입제)와 관련하여 시장질서 유지 및 위·수탁 차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여러 규제 시행 중
 - 생활물류분야 신산업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여 화물업계 지원 필요
 - 또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
- (화물차 안전강화) 화물 운송시장의 과적, 과속 운행 방지를 위해 최저운임 성격의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 중('20.1~, '22년 일몰)이나, 장기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
 - 또한, 화물차 사고는 특히 치사율(2.8명)이 높고 사업용 차량 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 '20년 사업용 차량사고 사망자 633명 중 화물차 비중이 가장 높고(177명, 28%) 택시(152명, 24%), 버스(96명, 15%), 렌터카(82명, 13%) 순
- (종사자 안전·보호) 택배 물량 급증에 따라 근로자 과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발표
 - 적정 작업조건 규정,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질 개선 등 택배 종사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지원 지속필요
 -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그간 자유업으로 존재하던 배달대행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기존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여 상생·협력하는 물류산업으로 혁신하고, 종사자 등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물류시장의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혁파

- (화물업계 상생협력) 운수업계, 차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TF 운영을 통해 화물시장 내 과도한 규제 개선
 - TF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화물운수업 지원방안' 마련('21.6)
 - 위수탁제 개선 등 갈등이 첨예한 과제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시장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거래환경 개선) 간담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물류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21.6, 공정위 협업)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격 확인 강화, 유형별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추진(6월)
- (신고센터 활성화) 물류거래로 인한 분쟁 예방, 업계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해 매뉴얼 제작·보급('21.9),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② 화물차 안전운임제 공표 등 화물운송종사자 보호

- (안전운임 공표) 화주·운수사업자·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21.7~10)하여 안전운임 공표('21.10)
 - 강제성(위반 시 과태료)이 없는 안전운송원가도 함께 공표('21.6)
 - * 업계 간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20년 안전운임은 6개월간 81회의 회의를 거쳐 '19.12월 의결하였으며, '21년 안전운임은 7개월간 96회의 회의를 거쳐 '21.1월 의결
- (제도 성과평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들이 체감하는 운임 인상효과, 만족도 조사 등 제도 성과 평가 추진
 - '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영방향 결정 위해 제도 성과에 분석('21.12) 및 법 개정 필요성 검토

○ (안전운임제 실효성 강화)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추가 운임 지급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 이행

- 합동 단속반*을 구성, 안전운임 위반업체에 대한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자발적인 제도 준수 분위기 조성

* (구성)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시장 관계자 등

③ 생활물류산업 종사자 안전 및 보호 강화

○ (가격·거래구조 개선 로드맵)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 및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택배 가격·거래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 공정위, 택배사업자 등과 협업을 통해 주요 택배사업자-화주 간 택배거래 (입찰)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착수, '21.3)

- 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단가 후려치기 및 백마진 근절 등을 위한 상생 캠페인 개최('21.5)

○ (택배 표준계약서) 분류작업 주체, 적정 작업조건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기준에 반영, 보급('21.8)

○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사업자 인증 시행('21.12)

- 소화물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 마련('21.12)

④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 (적재물 안전) 화물차 적재·고정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고정 장치 관련 '카드뉴스' 제작·배포

- 대형 인명사고 유발 등 개연성 높은 노후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13년 이상 화물차 관리 강화(자동차검사 미통과 시 운행제한)

○ (단속 강화) 화물차 안전조치 위반 단속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법령에 근거한 도로·자동차 부문 단속원*에게 단속권한 부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화물운송시장 상생협력 TF 개최	3월	10	메모보고(실장)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2월	10	합의문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방안 마련 연구 발주	2월	5	방침결정(정책관)
2/4분기	안전운임 현장단속반 운영	4월	10	보도자료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캠페인 개최	6월	5	메모보고(차관)
	화물운수업 지원방안 마련	6월	10	메모보고(실장)
3/4분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7월	10	방침결정(정책관)
	화물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동영상 공모전 개최	9월	5	메모보고(실장)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9월	10	메모보고(차관)
4/4분기	'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	12월	5	보도자료
	교통물류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 실태조사 실시	12월	10	메모보고(실장)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방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차적으로 운송사업자, 차주, 종사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류시장의 건전성 강화 통한 효율성 제고, 교통안전 확보로 국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안전운임제) 직접 수혜자는 최소 운임 보장과 화물운송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사회·경제적 보호를 받는 **화물운송종사자**이며,
 - 간접 수혜자는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 개선 및 사고 감소를 통한 교통안전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전 국민**이 해당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화물자동차의 직접 수혜자는 직영은 운송사업자, 위·수탁 차량은 차주이며,
 - 간접 수혜자는 화물차 유류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의 혜택을 받는 **전 국민**이 해당

<이해관계자>

- 안전운임제 관련 이해관계자는 화물차주·운수사업자와 화물 운송 서비스를 요구하는 화주기업이 해당되며, 안전운임 수준에 따라 수익의 범위가 좌우되는만큼, 참여한 이해관계의 효율적 조율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령 내 규제수준, 종사자 보호조치 등에 따라 사업자와 노동계 간 갈등요소 존재
 - 택배 가격·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 시 택배비 인상에 대한 우려로 화주 단체 및 일반 소비자의 반대 여론 가능성
 - 택배 표준계약서 마련 시, 계약주체가 되는 택배사-영업점-택배 기사 간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예상

□ 기대효과

- (불합리한 관행 개선) 규제 완화,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장기화된 과제 해결을 통해 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수급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 및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
- (화물차 안전) 화물운송시장 내 적정 운송운임 정착으로 불공정 운송계약·다단계 거래 개선 등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 아울러,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한 화물차주 집단운송거부* 등 화물 운송시장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감소로 사회적 비용 감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발생 시 피해액 : '03년 5·8월(1.3조원), '08년 6월(8.5조원), '12년 6월(0.2조원), '16년 10월(35억원)

- 화물차의 안전관련 규정 위반행위 감소, 적재물 안전 확보로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감소

-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부여,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택배 - 유통업 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택배요금 현실화를 통해, 택배산업의 채산성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투자
 -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위탁계약을 통하여 영업점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안정성을 보장
 - 아울러,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일반대중 포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품질이 제고되며,
 -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자 지위를 강화, 업무환경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화물자동차지원(IV-3-일반재정③)				
① 화물자동차지원(일반)(4032)			10.0 (10.0)	10.9 (10.9)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302)			10.0	1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개선 (25%)		신규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업자·차주 등 이해관계자의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3년 일몰제·일부 품목 대상으로 도입('18.4) 일몰제 이후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법령을 개정하기까지 도입 때보다 어려운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난이도의 목표로 설정 ('21년 안전운임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 대립으로 95여 회 회의 개최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정보시스템
㉡ 화물안전확보 제도 개선 (10%)	법령 개정	법령 개정	법령 개정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사업용 화물차 차량관리, 화물차 위반행위 단속강화 등을 위한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보
㉢ 택배 가격·거래 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30%)		신규		사회적 협약구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노, 사,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하는 사안으로 이견조율을 통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의의 접점을 최대한 도출하여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합의기구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합의기구 상정안
㉣ 택배 표준계약서 마련(20%)		신규		계약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 반영에 따라 분류작업 명확화, 적정 작업조건 등 산업의 근본적 재설계를 해야하나,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힘든 합의과정이 예상됨. 18년도에도 표준계약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중단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및 관련 공문
㉤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 시행 (15%)		신규		시행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되는 제도로써, 인증절차, 인증기관 선정, 인증대상, 인증 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제도의 운용방안을 설계하는 난이도 높은 목표로 설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문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Ⅱ-2-③)

□ 추진배경

① 항공수요 회복 시 전문인력수급 불균형 우려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해 항공사의 신규채용 보류, 선선발 후교육 계획 전무 등 항공인력 채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
 - * 항공사 조종사 총 6,337명중 2,112명(33.3%), 정비사 총 5,570명 중 2,088명(37.5%) 휴직 중(‘21.3월 기준)
- 또한 항공사 M&A, 신생항공사 운항개시, 백시케이션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 인력수급정책 마련 필요

② 선진국형 항공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제작산업 지원강화 요구 증가

- 우리 항공사에서는 보잉·에어버스社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고, 민수 완제기 개발경험이 전무하여 소부장 산업생태계 기반이 취약한 상황
 - *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부품의 구매·수리 등은 거의 전량 수입 의존으로 ‘18년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기 부품·수리비용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외화 지출
- 경쟁력을 갖춘 국내 항공 소·부·장 기업이 항공부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인증 지원 및 항공선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필요

③ 우리 항공권의 신장을 위해 항공규모에 걸맞은 국제영향력 확대 시급

- 세계 7위 항공운송대국(여객 1.2억 명/화물 430만톤, ‘19년 기준), ICAO 이사국(‘01~)으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시급
- 향후 ICAO 이사국 파트상향(Ⅲ→Ⅰ/Ⅱ)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정·기술적 기여방안 발굴·지원 필요
 - * (파트Ⅰ) 항공운송 중요국, (파트Ⅱ) 국제항공 기여국, (파트Ⅲ) 지역 대표 국가

☞ **항공산업의 조화로운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과 협업을 통해 전략적 인력양성 및 인증지원을 추진하고, ICAO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해 국제 항공안전 리더 국가로 도약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항공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운영

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항공전문인력양성 재정사업 추진

- 급변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종사 취업준비생의 훈련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기량유지 과정 등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신설(‘21.4)
- * 제3차 인력양성사업계획(‘19~’23, 총 140억원)에 따라 조종사 등 전문인력 양성 중

② 중장기 항공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 정부·민간 역할 정립

-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 회복단계에서 항공전문인력 수요예측 및 수급계획 수립·시행에 한계
-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항공회복 전망, 인력수요 등을 예측·분석하여 5개년 중장기 항공인력양성방안 수립(‘21.11)하고,
-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정부의 항공안전전문인력 적기 양성 지원

③ 조종훈련 모의비행장치 운영제도 개선으로 조종훈련 품질 제고

- 성능별 등급화, 비행시간 인정범위 차등화 및 성능검사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산 비행장치 활용촉진 및 훈련품질 제고(‘21.6, 항공안전법 개정)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검사업무 전문기관 위탁 추진

② 균형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소·부·장 사업 지원

- 기술력을 가진 국내 부품기업이 인증문제 등으로 항공 소부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 추진
-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인 민수헬기(에어버스 EC155B1 모델) 부품의 설계·제작 과정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부장 사업의 역량확대 지원
- EC155B1 헬기 인증은 구성품(53종)을 기계, 착륙장치, 전기계통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증(부가형식증명)을 추진(‘16~) 중이며,

- 이중 1개 그룹(소화계통 2종)의 부품 국산화 개발·인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그룹(기계·전기계통 등 51종) 부품도 금년 내 인증완료 예정
- * 헬기 인증은 설계도면 등 승인, 지상시험, 비행시험, 형식증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수행, 관련기준(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닐 경우 인증 완료 불가

⑧ 항공강국 도약, 글로벌 항공영향력 확대 추진

① 세계적 수준의 한국항공아카데미(Korea Aviation Academy) 설립

- 우리부,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에 산재된 항공종사자와 항공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하고,
- 항공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설립계획을 수립('21.2)하고, 사무국 개소('21.5) 등 설립준비 착수
- * 항공안전공무원 4천여명, 항공종사자 5천여명 등 연1만명 교육혜택('19실적 기준)

② 항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항공기여활동 확대

- 우리나라 항공운송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 지위 확보를 위해 항공회복 지원을 위한 국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영향력 강화
- * ICAO 항공회복 TF, ICAO 아태지역 항공회복그룹,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에 정규멤버로 참여하여 K-방역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항공회복 정책 제안
- ** ICAO 코로나19 고위급 항공회의(10월 몬트리올, 온·오프라인 병행예정)에 우리 대표단 파견을 통해 안전한 항공회복과 관련한 의제 발표
- 항공회복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ICAO를 통해 기술지원·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항공안전IT 시스템 보급·최신화 등을 통해 세계 항공안전 증진 및 표준화에 기여
- * 개도국(14개국)에 코로나19 회복프로그램(IPACK) 제공, 항공안전·비행절차·보안분야 분담금 지원(약 4억원), 항공안전IT시스템 보급(86개국, '21.3월 기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설립계획 보고	2월	15%	방침결정(장관)
	항공인력양성 훈련생 모집(취업준비과정, 조종사, 정비기초)	3월	5%	메모보고(실장)
2/4분기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인력양성사업 개선방안 마련	4월	10%	방침결정(장관)
	'21년 아시아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 개최	6월	10%	보도자료
	모의비행장치 제도개선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공포	6월	5%	법령정보센터
3/4분기	항공인력양성사업 진행 현황 중간 점검	9월	5%	메모보고(실장)
	수입헬기 핵심부품 국산화에 따른 형식증명위원회 개최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ICAO 코로나19 고위급 회의 참석 및 의제 발표	10월	10%	메모보고(장관)
	수입헬기 핵심부품 국산화에 따른 안전성 인증서 발급	11월	10%	발급된 인증서
	중장기(5개년) 항공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	11월	10%	방침결정(장관)
	KAA 중장기 운영로드맵 수립	12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인력양성사업 연차 실적 점검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항공사, 항공종사자, 조종사·정비사 교육 지원자, 항공 부품 제작기업 등 직접적 관계자 및 항공제작 산업체
- (이해관계집단) 항공사, 공항공사, 항공전문인력 양성 기관, 항공부품 제작 산업체, 제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등

□ 기대효과

- 중장기 항공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으로 항공산업계에는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수급하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항공전문인력양성 소요기간(2~3년)을 감안하여, 중장기 항공안전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인력양성 추진
- 차질 없는 KAA 설립 추진을 통해 동북아지역 항공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고, 항공안전·교육강국으로서의 국제위상 제고

- 우리부 주관 고위급 초청연수, 양 공사의 KOICA 수탁과정, ICAO 인증 과정 통합운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육성
- 민간에서 개발·인증하는 구성품(53종) 중 83%에 해당하는 44종 부품을 군용 헬기에도 사용함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 13개 국내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헬기 구성품 국산화 개발(53개 중 39개, 74%)에 참여하여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 기대
- 국제 항공기여 활동 증대를 통해 국제 항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ICAO 이사국 파트상향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다.(V-13-일반재정(4))				
①	항공인력양성(3635)	일반	28.1	28.1
	▪ 항공전문인력양성(300)	일반	28.1	28.1
②	국제항공협력(3633)	일반	23.6	24.9
	▪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304)	일반	23.6	2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항공종사자전문 교육기관(KAA) 설립(20%)	신규	신규	신규	사무국 개소	· '22년 내 KAA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연내 사무국을 개소· 운영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사무국 개소	방침문서 또는 메모보고
㉡ 헬기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인증 건수(30%)	-	1건	-	5건	· 국내 개발 헬기부품에 대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안전성 인증서 발급건수를 목표로 설정	안전성 인증서 발급 건수	안전성 인증서
㉢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20%)	308명	318명	190명	190명	· 조종사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문인력 양성 소요기간(3년 이상)을 감안하여 작년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1년도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자격증명 취득 관련 공문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제 항공안전정책 수립 기여도(30%)	-	-	3건	5건	· ICAO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안전한 국제항공 회복을 위한 정책결정과정 및 신규추진 아이템 발굴 등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60% 이상 참여도를 상향한 목표치 설정	국제회의 정책발표 횟수	회의결과 또는 발표자료

기 본 방 향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

- (질 좋은 평생주택) 전용 60~85㎡를 신규도입(3천호)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계층 확대(중위 130→150%)
- (노후공공임대 관리)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20년 1만호 → '21년 8만호)
- (공적 주택 공급) 투기 수요 차단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신규택지 25만호 확보

□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정비구역 등 도심 가용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新사업모델 마련(2월)
- (대책 후속조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후보지 발굴 및 지구지정 등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민간 주택공급 지원)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건설업자 애로요인 해소 등 민간 주택공급 지원으로 분양물량 확대(3월~)
- (통계 개선) 국민 신뢰·체감도 개선 등을 위해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 가액을 반영하여 재설계(2월)
- (주택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등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 및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 (관리체계 개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 입찰 및 선거 제도를 강화하고, K-APT 시스템 고도화 추진

기 본 방 향

- (서민 주거지원) 청년→신혼 전용 버팀목대출 대환 허용(9월) 및 신혼희망 전용모기지 도입(8월) 등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6월)
-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임차인 간 분쟁의 합리적 조정 및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및 사례집 발간(12월)

□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시장질서 확립) 공공부문(LH)의 투기 사태,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 등으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 질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
- (공시가격 개선)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일관되게 제고하면서, 공시가격의 객관성·형평성 개선
- (산업 혁신)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 선진화를 견인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3	9	6	39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 1인당 주거면적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지정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 신규 공공택지 확보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가주택 제도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 통합임대 도입 및 임대주택 질적 개선 ㉣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이주지원(호) ㉤ 주거급여 지원확대(가구) ㉥ 코로나 위기 가구 긴급지원주택 지원 ㉦ 최저주거기준 개선 ㉧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 사전청약 공급물량 ㉢ 신규 공공택지 확보 ㉣ 쪽방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택 분양물량 확대 ㉢ 주택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개선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종합계획 수립 ㉡ 공급대책 관련 제도 기반 마련 ㉢ 공급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발굴 ㉣ 주택 분양물량 확대 ㉤ 주택 통계 신뢰도 개선을 위한 통계 개선 ㉥ 주택정책 관련 정례 브리핑 실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 버팀목전세대출상품 생애주기 연계 지원 제도 도입 ㉢ 보증금보호 보증상품 가입실적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출시 ㉤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수(누계) ㉥ 임대차신고제 하위법령 마련 실적 ㉦ 모듈러주택 공공발주(설계·착공) 실적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관련 법률 개정 ㉨ 외부회계감사 강화 관련 법률 개정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질서 확립 ㉡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방안 마련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방지 및 재발방지제도 개선 추진율 ㉡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 추진율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형평성 계수 COD 개선)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TF 구성·운영 ㉡ 중개보수 개편 등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 부동산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 부동산 신산업 업체수 증가 ㉥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경진 대회 참여캠프 실시팀 수 ㉧ 공모리츠 총자산규모(조원)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개정

(1) 주요내용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

- (품질혁신) 민간참여 공동사업 등을 확대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 자재품질·하자관리 시스템(하자 빈발 업체 제외) 개선
- (주거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 (실수요자 공급) 대규모 택지와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을 병행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을 통한 청약 수요 흡수

□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 (대책 후속조치)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개정 및 하위 법령 마련으로 新 사업모델의 제도적 근거 마련(6월)
- (통계 개선) 통계 관련기관 및 학계 등 전문가와 민간통계 기관(KB, R114)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2월)
- (주택품질 향상)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토대로 한 감리자 평가제 도입 기반 마련,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관리체계 개선)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경비원의 경비 외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임대차신고제) 신고 절차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을 마련(5월)하고, 시스템 검증 등을 위한 시범운영(4~5월)을 거쳐 도입, 신고정보 시범공개(11월)
- (시장질서 확립) 공공부문은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 부동산 등록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 무관용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 척결 및 특단의 쇄신 추진

- (공시가격 개선) 시장 불공정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설립
 - 전문조사자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산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고,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 간 정합성 제고
- (산업 혁신) 프롭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리츠 인가절차 간소화·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 추진
 - 중개업, 평가업, 개발업 등 전통적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업으로 위상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6.3	6.7	7.1	7.4	8% 예상 (21下 발표 예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주택수 증가) 매년 준공예상 주택 - 매년 멸실 주택 * '18년 42.7만호, '19년 36.5만호, 20년 33.9만호, '21~25년은 연 28만호 증가 가정 • (장기 공공임대 증가) '18~'25년까지 연평균 12.9만호 공급(재고순증)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 총주택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또는 임대주택통계) 총 주택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 1인당 주거면적(m ²)	33.2	31.2	31.7	32.9	33.1 예상 (21.4 발표 예정)	33.7	1인당 주거면적의 '17년도 계량 수치부터 신뢰성을 가지므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연평균 약 0.2m ²)하는 것으로 산정 * '17년도 이전 수치는 객관화된 통계 자료가 아니므로(행정자료 미활용), '17년도 이후 통계부터 비교 시 1인당 주거면적의 점진적 향상을 기대	전국단위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연구) <1인당 주거면적 산정방식> 개별가구의 주택사용 면적(Si)를 개별 가구 원수(ni)로 나눈 값의 평균 $\text{주거면적} = \frac{S_1 + S_2 + \dots + S_N}{N}$ ('19년 기준 표본은 61,000여개 가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내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맞춤형 주거복지)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및 취업과 결혼 등 생애 단계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수요 증가
 - 주택과 돌봄·육아 등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안전망 강화 요구
 -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언론·국회 및 사회단체의 관심 증대

- (도심 주택공급) 도심 내 가용부지는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부지확보 과정에서 갈등 발생 우려
 - 도심 내 토지주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지속 홍보하고, 세입자·영세상인은 철저한 보호대책 마련
- (주택통계)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수치가 국민 체감도와 괴리된다는 지적 지속
 - 민간 통계생산기관을 포함한 외부통계위원회를 신설하여 표본 설계, 작성,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등 신뢰도 제고
-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층간소음 사후확인,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감리자 평가 등에 대해 주택건설 및 감리업계의 강한 반발 우려
 - 입주민의 권익 강화 측면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주택건설 및 감리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반발 최소화
- (부동산 투기) LH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훼손, 그간 강조해 온 공정성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
 - 新고가 신고-해제, 집값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까지도 희석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 증가 등에 대한 우려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정적 정책여건으로 작용
- (부동산 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12) 이후 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으며, 프롭테크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
 -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신산업 육성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중개업 등 기존 산업계의 반발 초래 가능

(1)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및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 (입주계층 확대)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일부 중산층까지 어울려 사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품질향상)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
- (그린리모델링 추진) ‘20년 신규 추진한 그린리모델링사업 본격 확산(‘20, 1만호 → ‘21, 8만호)

□ 공적주택 지속 공급

- (사전청약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제’를 3기 신도시 등에 시행하여 청약 대기수요 해소(‘21~‘22년 6.2만호)
- (실수요자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하기 위해 지구 계획 승인後 본청약 1~2년前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 도입(‘21.7~)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지정 (40%)	-	-	2개소	5개소	각종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선도단지를 전년 대비 2.5배 확대된 규모로 시행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선도단지 지정 실적	메모보고
②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40%)		신규		5곳 지구계획 수립, 사전청약 3만호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조기 공급	지구계획 수립건수 (5곳) +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수 (3만호)	고시문 보도자료

◎ 신규 공공택지 확보 (20%)	신규	25만호	수도권 및 지방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수도권·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 물량	보도자료
--------------------	----	------	---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 및 집단행동 등은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주민대책위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지자체·주민 의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Ⅲ-1-①)

□ 추진배경

① (양적 성과의 한계) 그간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수립, 공공임대 양적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 '18~'20년 각각 공급계획을 초과 달성(+4.5만호), 공공임대주택은 '20년 기준 약 170호로 OECD 평균 재고율(8%) 수준 달성 전망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좁은 면적, 획일적 디자인, 자재 품질저하 등에 따른 부정적 인식 여전

- '80~'90년대 준공된 기존 재고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응도 필요

② (인구·주거 트렌드 변화) 청년·신혼·고령자·취약계층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나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심화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세밀화 요구

- 주택을 단순히 개인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결합된 공간으로 기능 혁신 필요

③ (주거취약계층 지원 시급)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필요

-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지원, 주거급여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20년 신규 도입한 긴급지원주택* 등은 개선 필요

* LH 공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주택관리 추진

④ (국민들의 새로운 수요 발생) 공공임대와 자가주택의 이분법적 체제*를 벗어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수요 발생

* 분양주택의 높은 분양가, 공공임대의 자격제한으로 인해 중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평균적인 주거여건 향상, 재택근무 등 코로나로 인한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검토

* ('00) 20.2㎡ → ('10) 28.5㎡ → ('14) 33.5㎡ → ('18) 31.7㎡ → ('19) 32.9㎡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공공임대주택 품질 혁신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효율적 관리 본격 착수

①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

- (입주계층 확대)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일부 중산층까지 어울려 사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은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
 - * 기준 중위소득 100%(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중형평형 공급) 3~4인 가구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을 신규 도입하고 공급물량을 지속 확대*
 - * ('21) 0.3만호 → ('22) 0.8만호 → ('23) 1.3만호 → ('24) 1.7만호 → ('25) 2.2만호
- (소득연계 임대료)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각자의 소득에 맞춰 적정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연계 임대료 체계 도입
 - *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료율을 35%~90%까지 차등 적용

② 노후공공임대주택 관리 본격 추진

- '20년 신규 추진한 그린리모델링사업 본격 확산('20, 1만호 → '21, 8만호)

< 그린리모델링 사업유형 >

구분	단일세대 리모델링	세대통합 리모델링	매입임대
대상주택	준공 15년 이상 영구임대		준공 15년 이상 매입임대
시공내역	고성능 창호, LED 전등설치, 절수형 수전(양변기 등) 설치,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친환경 자재시공 등 일반공사	비내력벽 철거, 친환경 자재시공 등 일반공사	OCTV 성능개선 등 생활안전시설 보강 등 일반공사

2

생애단계별 주거서비스 강화 추진

① (청년) 일자리 연계형,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공적 임대 4.5 만호 공급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칭)' 신설, 청년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 적극 수용하고, 선도모델 제시(연간 10개소*)

*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여 차년도 주택 공급을 위한 모델 확보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



- 입주자 및 주변 청년들이 창작·창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입주 청년이 공유 주방·식당에서 함께 요리·식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평균 15.4만원)

②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 임대 5.8만호 공급

- 중산층 혼인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Ⅱ 매입임대(5천호) 4순위*를 신설·공급하고, 공공 전세주택**(9천호)을 신규 공급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120%(맞벌이 140%), 자산요건 3.03억원

**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모두 입주가능, 경쟁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③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 1.5천호 이상 선정('20, 1천호) 및 서비스 강화 (건강·돌봄 등), 전세임대는 고령자(65세 이상) 최대 거주기간(既20년) 폐지

- 고령자복지주택과 타 기관 시설을 복합*하여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어르신 낙상 두려움 해소를 위한 인지건강디자인 반영 등 설계 강화

* (예시) 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서비스 등),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서비스 등) 등

④ (저소득층) 취약아동가구(4천호), 보호종료아동(2천호, 주거+자립 동시 지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전세임대 연간 2천호를 우선공급하고 보증금 부담도 완화**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억원, 중소도시 1.18억원 이하

**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2%를 납부

- (긴급지원주택* 확대) 지자체의 주택 운영 지원을 위해 주거위기가구 기준 제시* 및 주택관리 지원 추진('20년 74호 → '21년, 500호)

* 불안정직업군 & 순수 월세 가구 &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 체납 가구 등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공공임대 이주 지원

- 지자체와 협업하여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요를 발굴하고 이주과정 지원을 확대

-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이사비·무보증금 및 생활집기 등 이주패키지 지원 ('20년 5.5천가구 → '21년 6천가구)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후 수급가구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수준도 실제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

* ('15.7) 74.2만 가구, 월평균 10.2만원 → ('20.12) 약 119만명, 월평균 15.4만원

** 민간주택 임차인의 납부하는 실제 임차료 대비 월 급여액은 약 70% 수준

-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단계적 상향을 통하여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 수준 강화 추진

* ('18)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194만원) → ('19) 44%(203만원) → ('20) 45%(213.7만원) → ('21) 45%(219.4만원)

** ('19년) 평균시장임대료 81% → ('20년) 90% → ('21년) 95% → ('22년) 100%(목표)

4

국민수요 맞춤형 혁신

① 부담가능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공급

- (공공자가주택 도입) 무주택자가 자신의 소득·자산 등 상황에 맞춰 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설계·도입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초기부담(입주시 부담) 등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무주택자의 '부담가능한 자가 마련'을 적극 지원하되,
 - 주택 처분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공유토록 하여 '공공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공급'도 함께 달성
- (공공자가주택 공급)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가 마련이 어려웠던 서울 등 수도권 공급을 시작으로 점진적 공급 확대
 - 2.4대책에 따른 개발지구 및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내 공공자가주택 공급(부지확보) 추진

② 최저주거기준 개선

- (최소 면적기준 상향) 침실, 거실(신규), 부엌, 화장실·욕실 등을 필수 공간으로 하고, 필수가구 조합 및 배치 시뮬레이션 실시*
 - * (예) 2인 가구 침실의 경우, '부부(침대1), 1인실(침대)*2, 1인실(침구)*2, 1인실(침대)+1인실(침구)'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산출한 뒤 최종값 도출
- (필수시설기준 보완) 개인위생, 생활편의 등 거주민 삶의 질이 제고 되도록 온수, 창문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규정 개정

5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 (지자체 권한확대)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마련

-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일반공급 비율은 유지하되, 지자체에 공급대상, 입주자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예) 예술인, 바이오 업계 종사자 등 지역특화 직업군에게 입주자격 부여

- **우선공급(60%)의 소득·자산기준은 유지하되 지자체가 공급대상을 결정, 일반공급(40%)은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격까지 완화가능**

- **일반공급 물량 내 계층별 비율***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

* (당초)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80%, 고령자 20% → (통합공임) 지역별 여건 반영

- **(지자체 평가 등)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전달체계 강화 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등 주요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거복지한마당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포상 시 활용**

* (예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등 정량평가, 주거복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주거상향사업 추진 선도지자체 공모·선정	1월	10%	메모보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2월	10%	보도자료
	통합공공임대 공급기준 마련을 위한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3월	5%	관보
2/4분기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5월	5%	개정 법률안
	주거상향사업 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설팅(1차)	5월	5%	메모보고
	지방정부 평가지표(주거복지) 마련	5월	5%	메모보고
3/4분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기준 고시	8월	10%	보도자료
	통합공공임대 소득연계 임대료체계 고시	9월	10%	관보
	주거복지 지방분권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등 제도개선 추진	9월	10%	방침결정
	주거상향사업 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설팅(2차)	9월	5%	메모보고
4/4분기	코로나19 위기가구 등 긴급지원주택 500호 공급	12월	5%	LH 보고자료
	고령자복지주택 설계 강화 추진	12월	5%	메모보고
	최저주거기준 개정	12월	10%	훈령 개정
	공공자가주택 공급부지 확보	12월	5%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으로 공적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 등
- (이해관계집단)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사업 시행자, 지역반대·주거복지 업무 과중 예상되는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주거뉴딜) 공공주택과 사회서비스 결합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사회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공공자가주택)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으로 중·소자본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취약계층 주거복지 투자 확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최저주거기준 개선) 평균 주거여건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 수준 상승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
-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주거복지 참여 예산 인센티브 및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강화, 전달체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	일반회계	16,305	19,879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Ⅱ-4-일반재정①)			
① 국민임대지원(용자)(1332)	주택기금	8,154	8,272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Ⅱ-4-일반재정②)			
① 공공임대지원(용자)(1333)	주택기금	8,972	4,084
행복주택지원(용자)(Ⅱ-4-일반재정③)			
① 행복주택지원(용자)(1335)	주택기금	16,713	21,131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1337)			
①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1337)	주택기금	38,733	43,663
다가구매입임대(용자)(Ⅰ-1-일반재정②)			
①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	주택기금	20,870	32,810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Ⅰ-1-일반재정②)			
① 통합공공임대용자(1338)	주택기금	-	929
임대주택지원(Ⅰ-1-일반재정②)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402)		17,103	31,279
▪ 전세임대경상보조(403)		1,269	1,027
▪ 국민임대출자(404)		5,681	3,452
▪ 영구임대출자(407)		3,635	4,052
▪ 행복주택출자(408)		12,082	14,384
▪ 통합공공임대출자(411)		-	884
▪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412)		-	3,6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 공공자가주택 제도화 (15%)	-	-	-	법률 개정	그간의 주택공급 유형을 개편하여 부담가능한 새로운 공급 유형을 도입하는 핵심정책 제도화를 지표로 설정	국회통과	개정 법률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 (5%)	14.8 만호	13.8 만호	15.0 만호	14.0 만호	국정과제 목표 및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연 14만호)를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메모보고 또는 결과보고서
㉢ 통합임대 도입 및 임대주택 질적 개선 (15%)	-	-	2개소	5개소	통합임대 및 중형평형 공급 등 각종 질적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선도단지를 전년 대비 2.5배 확대	선도단지 지정실적	메모보고
㉣ 비주택거주자 공공 임대 이주지원(호) (15%)	1,638	3,905	5,502	6,000	비주택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입주 완료를 수시화하고 3년 평균 대비 40% 향상된 목표 설정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입주완료 실적	보도자료, 메모보고
㉤ 주거급여 지원확대 (가구) (15%)	94만	104만	118만	123만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해 전년대비 향상된 목표 설정	주거급여 수급자 정형 통계	통계자료
㉦ 코로나 위기 가구 긴급지원주택 지원 (10%)	-	-	74호	500호	코로나 19 등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으로 통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적으로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7배 향상	지원주택 공급 호수	지자체 및 LH 보고자료
㉧ 최저주거기준 개선 (15%)	-	-	-	제도 개선	'11년부터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안 마련을 지표로 설정	최저주거기준 개정안 마련	보고자료
㉨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10%)	-	-	-	제도 개선	지자체 주거복지 정책 역량강화 및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주거복지평가 지표 마련	평가지표 마련	보고자료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Ⅲ-1-②)

□ 추진배경

-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지방권 공공택지 28.5만호 등 전국적으로 113만호 규모를 既 확보하여 주택공급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17.11),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19), 5.6·8.4 공급대책('20) 등을 발표하고 지구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추진 중
- 주택수요 증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주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포함한 전국 83만호 공급을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 LH직원 투기의혹('21.3) 등으로 훼손된 주택공급대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흔들림 없는 주택공급 추진 필요

- ☞ 투기 방지·처벌강화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급불안 해소 등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
 - 대규모 택지와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을 병행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을 통한 청약 수요 흡수
 -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①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 23곳(24만호)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Fast-Track을 적용해 공급일정 단축 추진
 -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일반일정) 지구계획 수립 → 지구계획 수립 → 보상착수 → 착공 →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지구계획 수립 + 보상착수 → 지구계획 승인 → 착공 → 주택공급

- 2기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보상착수(10개월), 최초 주택공급(57개월), 교통대책 확정(16개월) 등 사업기간 대폭 단축

-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고 도시·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연내 24만호(지구지정 完) 지구계획 수립**

*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 (수립절차) 지구지정 → 도시 기본구상(입체적 마스터플랜 등) →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20) >



- 150여회 이상 주민* 면담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보상 절차 진행

* (주민대책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7곳의 46개 주민대책위에서 7천여명 활동 중

○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등에 시행하여 청약 대기수요 해소('21~'22년 6.2만호)

○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참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 6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철도·교량 등 주요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위계획 변경·기본설계 병행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주요 교통대책 >

지구	주요 교통대책
남양주왕숙	▪ 한강교량 신설, GTX역 신설, 지하철 연장 등
하남교산	▪ 송파-하남 도시철도 건설,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 등
인천계양	▪ S-BRT 신설, 국도39호선(벌말로) 신설 및 확장 등
고양창릉	▪ 고양선 신설, 백석~서울-문산간고속도로 연결 등
부천대장	▪ S-BRT 신설, 경명대로 신설 및 확장 등
과천과천	▪ GTX-C 환승역사, 위례~과천선 연장 등

○ 패닉바이нг 방지,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3기 신도시 홈페이지'('20.8월~)를 운영하여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사전청약 등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방송광고 등을 추진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이크로 홈페이지' 제작

2. 공공택지 사전청약

① 주요내용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하기 위해 지구 계획 승인後 본청약 1~2년前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 도입('21.7~)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 사전청약제 제도 개요 】

구분	사전청약제	현행 청약제도
적용대상	공공분양(지구 전체의 약 25%)	공공분양 + 민간분양
단지선정	지구계획 승인받은 택지내 단지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단지
분양정보	위치, 공급면적, 추정분양가, 개략설계도, 입주예정월(개략적 정보)	단지배치도, 조감도, 세대평면도, 분양가격, 입주예정월(확정적 정보)

- '21.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세 차례(7·10·12월)에 걸쳐 약 30개 지구에서 3만호를 공급('22년 3.2만호)
- 3기 신도시, 성남·과천內 사업지구 등 입지가 우수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곳으로 사전청약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급효과 극대화
- 또한, 舊보금자리사업이 본 청약까지 최장 7년까지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이슈 등 지연우려가 적은 입지 선정

< 하남감일(보금자리주택사업) 및 하남교산(3기 신도시) 추진일정 비교 >

구분	추진일정						
하남감일 (보금자리)	지구지정 ('10.5)	→	지구계획 승인 ('10.11)	→	<u>사전예약</u> ('10.11)	→	<u>보상공고</u> ('13.6)
하남교산 (3기 신도시)	지구지정 ('19.10)	→	<u>보상공고</u> ('20.8)	→	지구계획 승인 ('21.5~8)	→	<u>사전청약</u> ('21.11~12)

- ☞ 사전청약을 통한 주택 조기공급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청약 대기수요(서울 약 7백만명 등) 흡수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도모

② 향후계획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모집·선정방법 근거* 마련('21.4) 및 사전 청약 전산 시스템(당첨자 선정 등) 구축('21.5)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 및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21.4)

- 사전청약 대상 지구, 단지위치, 공급면적 등 확정('21.4)

3.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① 주요내용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 확충
 - 태릉CC는 연내 지구지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기부對양여·국방부-국토부 협약체결 등 부지확보 절차도 정상 추진
 - 과천청사부지는 지자체(시장소환 진행 중)·지역주민 협의를 완료하고 주택사업승인 절차 착수, 용산캠프킴은 오염정화 착수(국방부 협조)
 - 국립외교원, 서울조달청 등 他입지도 상반기 사업구상案 확정
- 「공공주도 3080+」(2.4대책) 컨셉을 적극 도입, 단순 주택공급이 아닌
 - ①역세권 고밀개발·②주거+생활SOC·③자연녹지 보존 등 추진

구분	역세권 고밀개발	주거+생활SOC/산업공간	녹지 보존
대상지(안)	용산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과천정부청사 등	LH 여의도학교부지, 상암 자동차검사소, 서부면허시험장 등	태릉CC 등

-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개발을 통해 공간 효율성 제고(역세권 고밀개발)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헬스·보육·물류 등 생활SOC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
- 필요시 입지여건에 따라 공유오피스, 창업지원·지역전략산업주택(공공임대) 등도 확충하여 일자리 기능 제고
- GB해제를 통해 개발하는 사업지구는 녹지 비율을 충분히 확보(30% 이상)하고 대상지 여건에 맞춰 특화공원 조성



LH 여의도 학교부지 개발구상(안)

② 향후계획

- 태릉CC·과천청사·국립외교원 등 입지별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교통대책 수립, 사업승인 등 사업절차 진행
- 입지별 특화방안 마련(3분기) 후 관계기관·주민의견 수립 등을 통해 확정

4.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한 취약주거지 재창조

① 주요내용

- 전국 쪽방촌 중 정비가 가장 시급한 서울역,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여 쪽방주민 등을 위한 새 주거지로 재창조
 - 쪽방촌은 단열,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하며, 주민들은 화재·범죄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고독사도 빈번하게 발생
 - * 문제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미했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악순환 발생
- ☞ 쪽방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先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임시거주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후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 추진



- 쪽방촌 거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공공주택 설계 등의 정비계획을 구체화하여 쪽방촌 정비 본격 추진
 - 전국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은 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거쳐 연내 지구지정
 - 지구지정이 완료된 영등포·대전역은 쪽방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참여 공공주택 설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지구 계획 수립
 - * 지구설계 단계부터 쪽방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위원회를 통해 쪽방주민 특성에 맞는 주택·단지 설계 추진

② 향후계획

-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21.上) 및 지구지정('21.下)
- 영등포·대전역 쪽방촌 지구계획 수립('21.下)

5. 신규 공공택지 추가 확보

① 주요내용

- (추진경위) 전국 대도시권에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 지속적인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및 지방권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 추가 확보 추진
- (입지·물량)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우수입지를 발굴하고 교통여건 권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정(질 좋은 평생주택 등 旣 발표 정책 적극 반영)
 - 지방권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중규모 택지 개발하여 주택공급 기반 구축
- (조성방향)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시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 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공급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 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② 향후계획

-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입지·물량은 상반기 중 순차 공개(21.上)

6.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① 주요내용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성 훼손
 - 공공주택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지속적인 예방·관리 필요
 - (제재대상) 실효성 있는 투기방지를 위해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자도 정보누설 및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대상 포함
 - * (現)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협의기관, 용역업체→ (改) 현행+정보를 제공받은 자
 - (예방·관리) 정보보안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해당 주택지구 내 부동산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처벌강화) 미공개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 * (現 처벌규정)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와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하여 벌칙 등 대폭 강화
 - * 내부정보로 주식 등 부정거래 시 ① 1년 이상 유기징역, ② 이익액의 3~5배 벌금, ③ 이익액에 따른 가중처벌, ④ 징역과 벌금 병과, ⑤ 이익액 몰수·추징
- ☞ 처벌대상 확대, 강력한 처벌규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는 엄정 처벌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② 향후계획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법 개정 완료 등 조속 추진

7. 공공주택 디자인 · 품질 개선

① 주요내용

- 지금까지 공공주택정책은 주택부족 문제해결에 우선되어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기 보다는 **물량공급 위주**로 추진
 - 특히 임대주택은 **성냥갑 같은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디자인으로 **‘누가 봐도 공공임대’**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
- 공공임대 **입주민을 비하**하는 차별어가 만들어지고, 일부 공공임대 건설예정지 주민 **반발** 등 공공임대에 대한 **선입견도 여전**
 - *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공공재건축 반대...“임대 많아 단지가치 떨어져”(한국경제, 8.5)>
<공공주택 늘리자는 민주당... ‘내 지역구 빼고’(머니투데이, 8.5)>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디자인 · 품질개선**을 통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매력적이고 살기좋은 평생주택**으로 개선



② 향후계획

- (**설계공모 확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특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등과의 협업 및 **설계공모 대상 확대***
 - * ('18) 1개 기관 7곳 → ('19) 2개 기관 11곳 → ('20) 6개 기관 16곳 → ('21) 7개 기관 18곳
 - ※ (**일정**) 추진방침(4월) → 설계공모(6월) → 접수 · 심사(10 · 11월) → 시상* · 전시(12월)
- (**공공임대 통합설계**) 특별설계 토지공급 방식과 공공임대건설을 패키지 공모하여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설계 · 시공**(2개 BL)
 - ※ (**일정**) 사업공모(8~9월) → 사업자 선정(12월)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민간분양용지 공급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 공급하여 민간부문 **소셜믹스 확산**
 -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 · 호수 랜덤 방식**으로 선정 · 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
 - ※ (**일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8월)

8. 공공임대주택 자살예방 지원

①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로 인한 대면접촉, 복지시설 운영감축 등으로 취약노인 및 1인 가구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사고와 고독사 증가 추세
* '20년 1~8월까지 109건으로 '19년(1~12월) 대비 20건 증가(LH 기준)
- 입주자간의 원활한 소통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유리한 공간 구조 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공동체 복원과 자살예방

② 향후계획

-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간구조 계획기준* 마련('21.末,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 예) 중저층 주동계획, 상시교류 가능한 옥외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 (특화설계) 고령자 및 주거 취약계층의 자살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특화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 도입을 위한 설계공모 시행('21.6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서울역 쪽방촌 정비계획 마련	2월	5%	보도자료
	신규 공공택지 1차 발표	2월	10%	보도자료
2/4분기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 업무처리지침 제정	4월	3%	고시문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4월	3%	법령정보센터
	투기방지를 위한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제도개선방안 마련	4월	3%	방침문서
	사전청약 시스템 구축	5월	5%	메모보고
	인천계양 지구계획 수립	5월	3%	고시문
	신규 공공택지 2차 발표	6월	10%	보도자료
	투기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6월	5%	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설계공모대전 공모	6월	3%	보도자료
3/4분기	하남교산 지구계획 수립	7월	3%	고시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착수(1차)	7월	5%	보도자료
	남양주왕숙 지구계획 수립	8월	3%	고시문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8월	3%	법령정보센터
	8.4대책 사업대상지별 특화방안 마련	9월	3%	메모보고
4/4분기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착수(2차)	10월	5%	보도자료
	고양창릉 지구계획 수립	11월	3%	고시문
	부천대장 지구계획 수립	11월	3%	고시문
	쪽방촌 주민 공공주택 입주기준(안) 수립	11월	3%	메모보고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착수(3차)	12월	5%	보도자료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12월	3%	고시문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1곳 지구계획 수립	12월	3%	고시문
	투기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12월	5%	법령정보센터
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12월	3%	법령정보센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수도권 30만호, 8.4 대책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좋은 입지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는 일반국민(무주택 실수요자 등)
 -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
 - 쪽방촌 정비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던 쪽방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기존 대비 15~30% 수준)의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 주거환경 개선 >



평균 22만원
(0.5~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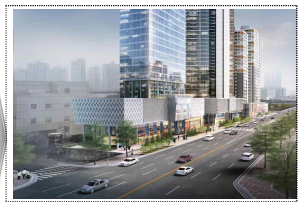


3.2만원(보증금 161만원)
(4.84평) 예상

< 도시환경 개선 >



현재



개선

-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신도시 개발 추진
- 대규모 택지 개발, 교통사업 공사 등으로 인한 직접 고용 및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 (이해관계자)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 집단행동 등은 사업추진 장애요인
 - (토지소유자) 수용방식에 대한 거부감, 낮은 보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반대 성향이 강해 대책위 중심으로 집단행동 빈번
 - (지자체) 교통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과도한 요구 등으로 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발생
 - (지역주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집단행동, 민원 제기 등을 통한 사업추진 반대

구분	지역동향
태릉CC	▶ 세대수 축소, 공원·녹지 50%, 획기적 교통대책 등을 요구하며 지속 반발 ▶ 국토부 1차관, 지역구의원, 노원구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갈등관리 중
정부가천청사	▶ 휴식공간 소실,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사업철회 강하게 요구 ▶ 주민들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 착수('21.1)

□ 기대효과

- (주거안정)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여 주거안정 도모
 - 쪽방촌 정비로 쪽방주민에게 기존 쪽방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낙후된 도심환경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화
 - * 기존보다 2~3배 넓은 주거공간, 기존 임대료 대비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주택시장 안정)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등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 도모
 - 또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패닉바잉 방지, 청약 대기수요 흡수 등 주택공급 불안 심리 해소
- (교통난 해소) 도시철도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통해 신도시·주변 지역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해 만성적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
- (투기방지) 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기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 처벌강화 등을 투기세력 엄정 처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수립(40%)		신규		5곳	·사전청약 시행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계획 조속 수립	지구계획 수립 건수	고시문
㉡ 사전청약 공급물량(30%)		신규		3만호	·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제를 공공분양주택에 본격 도입하고, 올해 3만호 공급 추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수) / 3만	보도자료
㉢ 신규 공공택지 확보(20%)		신규		25만호	· 수도권, 지방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확보	(수도권·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 물량) / 25만	보도자료
㉣ 쪽방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10%)		신규		2건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촌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지구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 지구지정 추진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건수의 합계	고시문

(1) 주요 내용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 (사업 후보지 발굴) 공공 참여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新개발 모델을 적용 가능한 후보지 발굴 및 공표(6월)
- (지구지정) 제도기반 마련 후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예정지구 및 본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 주택공급 추진(12월)

□ 서민 주거 안정

-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도입 방안 마련(12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주거종합계획 수립 (20%)	수립	수립	수립	수립	적정 수준의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마련	주거종합계획 수립	관련문서
㉡ 주택 분양물량 확대 (20%)	28.3 만호	31.4 만호	34.9 만호	35 만호	민간 분양지원, 사전청약 등을 통한 주택 분양물량 확대로 직전 3개년 평균(30.3만호)보다 15% 이상 많은 물량 설정	주택분양 물량	관련문서
㉢ 주택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개선 (20%)		신규		표본 재설계	국가통계위 심의결과,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통계개선방안	개선결과 발표	보도자료, 관련문서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20%)	87.1 만원	87.8 만원	166 만원	113.6 만원	대출수요 감소 가능성과 시중 평균 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해 '21년 목표치는 과거 3개년도 실적의 평균치(113.6만원)로 설정	총지원금액 × 2%* / 지원가구수 * 시중금리는 연중 지속 변동되므로 금리 차 2% 가정	기금 시스템 (HUF-net)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도심 주택공급) 도심 주택공급을 개발호재로 인식한 투기수요 쏠림 현상으로 주택 거래량 급증 및 주택시장 불안 우려
 - 2.4대책 발표 후 부동산 매입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사업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
- (서민 주거안정) 임대차 신고제 신규 도입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불편 우려
 - 제도 도입초기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담당 공무원 교육 및 소요 정원 확충(행안부 협의)에 노력하는 한편,
 - 신고 편의제고를 위한 방안을 하위법령 마련단계와 온라인 신고 등 전산시스템 개발단계에서 검토·반영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Ⅲ-2-①)

□ 추진배경(목적)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초저금리, 유동성 확대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자산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주택가격 상승폭도 확대
 - * 해외 주요국가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 '19→'20.1~3분기) :
(OECD) 2.6→3.9 (미국) 3.9→5.2 (영국) -0.9→1.4 (독일) 5.1→6.1 (캐나다) -0.4→4.4
 - 우리나라도 '20년 집값 상승폭이 예년 대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지속되며 불안심리 확산
 -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17) 1.48 ('18) 1.10 ('19) -0.36 ('20) 5.36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17) 3.64 ('18) 6.22 ('19) 1.25 ('20) 2.67
-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20년 5.6대책 및 8.4대책 등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 이에 따라 인구 만인당 신규 주택 공급 수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일정 부분 성과
 - * 만인당 신규주택 공급 수('15~'19년 평균, 호) : 한국 104, 미국 34, 영국 32, 일본 75
- 다만, 실수요자의 공급 부족 관련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혁신과 획기적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83만호의 획기적 물량공급 방안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책」도 추가 발표('21.2.4)하였으며,
 - 기 발표한 공급대책 및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체감 가능한 주택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 * VIP 지시사항('21.2.16) :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

- 한편, 민간에서도 주택가격·공급 관련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면서 신뢰성 있는 주택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 같은 집인데 ‘부동산원 따로 KB 따로’ 부동산 통계격차 더 커졌다(‘21.3, 헤럴드경제)

-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정확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획기적인 주택공급 혁신 】

① 3080+ 대책 후속조치 추진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6월)
 - 사업 홍보를 위해 정비협회, 시행사·시공사 등 주요 민간 주체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획기사 게재 등 추진(3월)
 - 사업 희망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지원(4월)
 -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후보지 선정 및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춘 구역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추진(12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신설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및 하위 법령 마련(6월)
 - 선제적으로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2월)하여 민간 컨설팅 및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주체별 사업설명회도 실시(3월~)
 -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는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추진(4월)
 - 주민 동의요건을 갖춘 후보지는 예정지구 지정 등 검토(12월)

② 기 발표한 공급대책(5.6대책, 8.4대책) 후속조치 추진

- (공공재개발) 1·2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4월)하고, 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사례 도출(12월)
- (공공재건축) 희망 단지에 대해 컨설팅,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선도사업지 확정 추진(12월)
- (정비사업 3진아웃제)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21.12)

【 주택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

① 외부검증위원회 신설

- 공공통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학회 등 전문가와 민간기관(KB·R114)이 통계작성·검증 과정에 참여
- 분기별(연 4회)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계 작성과정의 적정성을 검토, 실거래지수 및 민간통계와의 차이발생 원인과 시장상황 비교 등 검증

② 표본수 확대

- 표본수 과소논란* 해소, 읍면동 규제지역 지정·해제 지원 등을 위해 대폭 확대(예산: '20년 67억원→'21년 127.4억원)

* 언론 등이 KB대비 적은 주간통계 표본수를 신뢰성 부족 주요원인으로 지속 지적

구분		'20 표본수	'21 표본수(증감율)	KB 표본수
월간조사	(종합)	28,360	46,000(+62.2%)	36,300
	(아파트)	17,190	35,000(+103.6%)	31,800
주간조사	(아파트)	9,400	32,000(+240.4%)	31,800

③ 가격분포 반영

- 그간 건축년도·면적 기준으로만 표본을 선정했으나, 가격분포 기준으로도 선정하여 실제 시장상황 반영도 개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공재건축 컨설팅 결과 회신	'21.1	5%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21.1	5%	보도자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대책 수립·발표	'21.2	10%	대책본문 보도자료
	3080+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21.2	5%	개정안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재설계	'21.2	5%	관련 공문
	주택가격동향조사 외부자문위원회 구성	'21.2	5%	관련 공문
2/4분기	「공공주도 3080+」 선도 사업 후보지 공개 착수	'21.4	5%	보도자료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1.4	5%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21.4	5%	보도자료
	「공공주도 3080+」통합공모 개시	'21.5	5%	보도자료
	3080+ 대책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시행	'21.6	5%	관보 게재
	정비사업 3진아웃제 도정법 개정안 발의	'21.6	5%	개정안
3/4분기	「공공주도 3080+」통합공모 결과 발표	'21.8	5%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관련 도정법 시행령 개정	'21.8	5%	보도자료
4/4분기	3080+ 대책 관련 사업후보지 선정 및 예정지구 지정	'21.12	5%	보도자료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선정	'21.12	5%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변경 및 공공시행자 지정	'21.12	10%	보도자료
	정비사업 3진아웃제 도정법 개정	'21.12	5%	보도자료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수혜자) 모든 국민, 특히 무주택 세대 등 주택시장 내 실수요자
- (이해관계자) 주택·건설업계 및 국회, 언론 등

□ 기대효과

- 차질 없는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자가 거주 가구 증가로 주거안정성 제고 기대
- 공급부족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로 주택시장 매수세 완화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 예상
- 아울러, 입지요건에 비해 활용도가 낮았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주거공간과 함께 상업·산업기능을 복합 개발하여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및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주거종합계획 수립(20%)	수립	수립	수립	수립 (100%)	■ 주택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마련	주거종합계획 수립	관련문서
㉡ 공급대책 관련 제도 기반 마련(20%)		신규		개정 완료 (100%)	■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법률 개정	개정 완료	관련문서
㉢ 공급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발굴(30%)		신규		선도 사업 후보지 40곳 공개 (100%)	■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40곳 공개	후보지 발표	관련문서
㉣ 주택 분양물량 확대(10%)	28.3만호	31.4만호	34.9만호	35만호 (100%)	■ 민간 분양지원, 사전청약 등을 통한 주택 분양물량 확대로 직전 3개년 평균(30.3만호)보다 15% 이상 많은 물량 설정	주택분양 물량	관련문서
㉤ 주택 통계 신뢰도 개선을 위한 통계 개선(15%)		신규		표본제 설계 및 위원회 구성 (100%)	■ 국가통계위 심의결과,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통계개선방안	표본제설계, 외부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문서
㉦ 주택정책 관련 정례 브리핑 실시(5%)		신규		5회 시행 (100%)	■ 주택공급 이행 및 주택 정책 이슈 관련 홍보·소통 위해 정례 브리핑 추진	브리핑 횟수	관련문서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Ⅲ-2-②)

□ 추진배경(목적)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무주택·저소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 필요
 -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청약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필요
 -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불안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비하여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하는 보증금보증* 수요 계속 증가
 - *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차 3법* 도입(20.7~8월)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 재정립, 정확한 시세 정보 확보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갈등·마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21.6.1)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발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원활한 법령·제도(분쟁조정 및 신고제 등)를 운영할 조직·인력 필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본격 시행(21.8)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보증/전세반환보증 운영의 체계적 정비 필요
 - *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임의가입

【 거주자 중심의 주택 건설·관리 】

-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 활동 증가 등으로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 상승
 - * 공동주택 거주비율 : '16년 59.2% → '17년 60.0% → '18년 60.7% → '19년 61.7%
- 층간소음 저감 등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품질 주택 공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모듈러 등 미래형 주택 보급 기반 조성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및 주거지원

- (청약)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도입 방안 마련('21.12)
 - *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20.7.10)
- (금융)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 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특히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시행
 - 청년(일반)버팀목전세대출의 차주가 결혼할 경우, 신혼전용버팀목 대출로 대환 허용*하여 금리혜택과 더 높은 대출한도 이용 지원
 - * 현재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만기까지 기존 상품 이용, 신혼전용 상품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 후 재심사를 통해 대출 이용 가능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21.8)으로 장기·저금리 맞춤형 금융 지원
 - * 전용 60㎡이하 신혼희망타운(LH) 주택 대상, 디딤돌 대출 대비 금리·한도 유리

② 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

- (신고제) 주택의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토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
- 임대차 신고절차 등 하위법령 마련(5월) 및 사전 시범운영(4~5월) 추진, 일정기간 검증 후 임대차 신고정보 시범공개(11월)

- (보증금보호)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 납부된 보증료는 환불(21.7)
- (분쟁조정) 임대·임차인 간 분쟁의 합리적 조정 및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21년 6개소) 및 사례집 발간(21.12)
 - * 분조위 설치 : 6개소(~'19년) → 추가 6개소('20년) → 추가 6개소(누계 18개소)(21년)
 - * 설치예정 지역(21년)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부동산원)
- (지원체계)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20.7),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21.6) 등으로 법령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 부내·행안부·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6명 규모(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민간전문가 1명) “주택임대차지원팀” 신설(21.5) 추진

③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 및 미래주택 기반 조성

- (품질향상) 시공 후 층간소음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를 토대로 한 감리자 평가제 도입(21.12)
 - * 주택법 및 하위법령·고시 개정, 전국 바닥충격음 실태조사(공공·민간 600세대), 층간소음 성능센터 구축, '20년 국제표준(ISO) 제정에 따른 국가표준(KS) 제정 등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현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 확대(21.4)
- (관리강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제도 강화(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1.12)
 -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 하고,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1.10)
 - * 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
- (미래주택)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인정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주택법 개정, '21.12), 중고층 실증단지* 착공(21.11)
 - * 경기도 용인시 행복주택 / 지상 13층 / 106세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수요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수명 주택 의무건설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상용화 방안 마련(21.8)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임대차 신고제 추진방안 마련	3월	10%	방침결정
2/4분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관련 고시 개정	4월	5%	메모보고
	임대차 전담부서 신설	5월	5%	직제 시행규칙
	임대차 신고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	5월	10%	관보 게재
	층간소음 실태조사 착수	6월	5%	메모보고
3/4분기	전세보증·임대보증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7월	5%	보도자료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	8월	10%	메모보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9월	5%	관보 게재
	버팀목 전세대출 생애주기형 연계지원 제도 수립	9월	10%	보도자료
4/4분기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11월	5%	메모보고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 방안 마련	12월	10%	보도자료
	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12월	5%	보도자료
	감리자 평가제 도입 관련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12월	5%	관보 게재
	모듈러주택 활성화 및 층간소음 사후확인 관련 주택법 개정	12월	10%	의안정보시스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모든 국민, 무주택 세대 및 신혼부부 등 주택시장에서의 실수요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주택 거주자 및 입주하려는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주택·건설업계(사업주체·관리업계·감리업계), 국회, 언론, 공인중개사 등

□ 기대효과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

- 자산기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고액자산가의 청약 당첨을 방지하고, 특별공급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공급 가능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 기여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지역별·유형별 실거래 정보로 매물의 적정 임대료 수준 판단 가능, 확정일자 연계처리로 보증금 등 권리보호 강화
- 임대보증금보증·전세반환보증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
- 분쟁조정위 확대 설치로 임대인·임차인 등 임대차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

* 분쟁조정위 비용은 1~10만원이고, 기간은 심급당 6개월 내외인 소송 대비 신속

【 거주자 중심의 주택 건설·관리 】

- 공동주택 성능 향상을 통해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기대 부응
- 모듈러·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미래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공동주택 회계·선거·입찰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입주민간 분쟁예방 및 신뢰회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Ⅱ-2-일반재정①)				
①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1)	주택도시자금	99,151	99,000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401)		99,151	99,000
주택정책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주택정책지원(1034)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320)	일반회계	0	8.5
부동산행정정보화(Ⅱ-2-일반재정①)				
①	부동산행정정보화(4263)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502)	일반회계	11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㉑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15%)	87.1 만원	87.8 만원	166 만원	113.6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수요 감소 가능성과 시중 평균 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해 '21년 목표치는 과거 3개년도 실적의 평균치(113.6만원)로 설정 	$\text{총지원금액} \times 2\% \div \text{총지원가구수}$ * 시중금리는 연중 지속 변동되므로 금리 차 2% 가정	기금 시스템 (HUF-net)
㉒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생애주기 연계지원 제도 도입(15%)	신규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버팀목전세 상품을 이용하던 청년이 결혼 후 신혼버팀목전세 상품 금리 및 대출한도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주택도시시기금 관련 규정 개정	공문 또는 개정 세칙
㉓ 보증금보호 보증상품 가입실적(15%)	8.9 만건	15.6 만건	26.0 만건	36.4 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전세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19년도 대비 '20년도 보증금 보호 보증 상품의 가입건수 증가분(10.4만건) 이상을 초과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실적	HUG 실적자료
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출시(10%)	신규			상품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희망타운(LH)입주자가 기존 디딤돌대출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맞춤형 금리·한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 상품을 출시 	주택도시시기금 관련 규정 개정	공문 또는 개정 세칙
㉕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수(누계) (5%)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법령(주임법)상 연차별 설치 개소 수를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실적	보도자료 등
㉖ 임대차신고제 하위 법령 마련 실적 (20%)	신규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총 2건)	관보고시
㉗ 모듈러주택 공공 발주(설계·착공) 실적(5%)	14 호	222 호	790 호	2,254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러주택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년도의 2배 이상 물량을 설계·착공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공공기관 발주 물량 중 '21년도 설계 또는 착공 실적	공문
㉘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 관련 법률 개정(10%)	신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 개정 	주택법 개정	관보고시
㉙ 외부회계감사 강화 관련 법률 개정 (5%)	신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 개선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관보고시

(1) 주요 내용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 및 임대차 신고제 시행 등 법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보강(5월, 주택임대차지원팀 신설)
- (공시가격 개선) 시장 불공정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설립

□ 부동산 산업 혁신 토대 마련

- (공시가격 개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유형 간 불형평성 개선
 - 표준부동산 대표성 개선 등 표준-개별공시가격의 정합성을 높이고, 개별부동산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시스템도 개선
 -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에 따른 종료-개시시점간 지가차액 증가가 과도한 개발부담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경방안 마련·시행
- (산업 혁신)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감안, 부담경감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추진
 - 개별 업종별 제도개선을 넘어 기반조성과 각종 지원을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시장질서 확립 (40%)	-	-	신규	100%	VIP지시에 따라 부동산시장 공정성·신뢰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차원에서 제도·조직을 모두 정비하고 주요 교란행위 조사까지 실시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①LH내부통제방안 시행(20%)+ ②LH투기방지법령 개정 (40%)+ ③부동산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신설 (30%)+ ④의심거래 5천건 조사(5%)+ ⑤중개매물 기획 조사 3회 실시(5%)	보도자료, 메모보고, 의안정보시스템, 관련문서

⑥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방안 마련 (30%)	- - 신규	방안 마련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 제고 및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방안 마련	방안 마련 확인	보도자료
---------------------------	--------	-------	--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부동산 투기)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 공공의 잘못을 시장 전체에 덮어씌운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 적극적 이슈 관리 필요
 - 공시가격 현실화는 야당, 보수언론 등이 지속적 비판, 부동산 보유·거래에 따른 조세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가능성
 - 언론·국회 등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과장된 문제 제기, 연동되는 개발부담금 가중으로 사업성 저하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 중개보수의 개편은 공인중개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중개사 및 유관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
- (갈등관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고강도 쇄신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내 고질적 범죄, 불공정 관행을 척결
 - 시장질서 확립 논의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촉발된 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법률개정 등은 국회 적극설득
 -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마련
 - 과장보도, 사실관계 왜곡 등에는 홍보, 전문가 설명 등 대응 철저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Ⅲ-3-①)

□ 추진배경(목적)

- (시장질서 확립) 공공부문의 투기 사태, 고질적인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그간 강조해 온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
 - * LH직원의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투기성 토지매입 지적(참여연대 등, '21.3.5)에 따라 부동산정책 집행 최일선 공공기관 질타 → 부동산정책 신뢰 추락 가능성
 - ** '21.3.15 VIP “부동산 적폐 청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21.3.15)
 - 허위호가, 집값담합과 같은 고질적 부조리와 함께 新고가 신고-해제 등 신종교란 행위는 시장불신을 조장하고 산업발전을 저해
 - 공공부문 행태일탈로 촉발된 불신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까지 흔들지 않도록 조속히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3기 신도시정책에 대한 불신, 공공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적 반응 확대 우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촘촘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와 시장감시 체계의 대폭 보장 긴요
-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 공시가격 조사의 신뢰성 개선과 중장기적인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현실화 추진 필요
 - *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9.1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 부동산 시세변동을 반영하여 공시가격 변동폭도 커지면서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조사에 대한 투명성 개선 요구도 지속
 - * (서경·매경) 같은 단지인데 상승률 40%p 차 / 서울 3% 올랐다면, 공시가 19% 올려
 - ** 표준부동산 선정 관련 이견 (제주도), 산정기준 공개 등 요구
 -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기준 및 산정체계를 개선·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실화의 안정적 추진 도모

- **(보상제도 개선)** 개발이익 혜택이 있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택지·주택 등이 투기발생 요인으로 지적
 -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 입법*과 함께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 추가는 불가피하나, 무분별한 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
 -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주택공급(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등)
- **(택지제도 개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가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할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정 경쟁환경의 조성이 필요
 - * 택지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청약 과열 등에 대응하여 공급제도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부문 신뢰 회복) 불법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포괄적·실효적 제재 부과)** 내부자, 업무 상 얻은 정보 이용 등으로 한정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환수, 벌칙 등)
 -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이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한 외부인도 제재하고, 부당이득 이상을 환수* 조치
 - * (입법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3~5배 환수(자본시장법 제443조)
- **(내부통제 강화)** 미공개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LH의 개발·건설 관련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
 - LH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불가피한 경우 신고)하고, 부동산 정기조사, 보유·취득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부동산관련 비위 징계수위 격상, 직원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 도입, 총괄적인 감시체계(준법윤리감시단,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보강
- **(조직 혁신)** 구조적 문제 혁신을 위한 LH 역할·기능 재검토
 - 핵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직·인력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추진

② (시장질서 확립) 불법·교란행위 척결 및 감시체계 강화

- (일반적인 불공정행위 규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포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 위반시 엄격한 벌칙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규율 강화) 소유권 이전목적 없는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해제를 금지, 허위신고·미신고 등은 처벌 강화*
* 과태료 상향(미신고, 지연신고 등) 및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강화(허위 계약신고 등)
- (감시체계 강화)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등 모니터링, 시장교란행위 조사·분석을 총괄하는 정규 조직(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설치
* 과세·금융거래 등 핵심정보 조회를 통해 실거래 불법행위에 실효적 대응 도모
- 동향분석 및 지역·거래유형별 이상거래를 포착('21년 5,000건 이상)하고 실거래조사, 수사공조(경찰청, 지자체특사경 등과 공조) 등 추진
- (허위·과장 광고 적발) 중개대상물 기획조사(대학가, 학원가, SNS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지역·플랫폼)를 통해 허위·과장·무자격 매물 적발

③ 일관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과 개선방안 마련

-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부동산의 유형별·가격대별 점진적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 '20년 69.0% → '21년 70.2%)
- 공동주택 단지 내 역전현상 해소* 및 지역 간 현실화율 형평성 개선
* 실거래가격이 높음에도 현실화율 격차로 인한 공시가격은 오히려 낮은 현상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복지제도 등 영향을 분석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서민부담 등 완화방안 마련
- (객관성·투명성 강화) 거래는 감소하나 가격변동은 커지는 불확실한 시장구조 하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산정기준 보완*
* 적정 실거래가격 기준, 해제된 실거래가 처리, 거래사례 부족 시 산정기준 등
- 시세조사 기준과 참고자료 등을 구체화하여 공개하고,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 간 정합성 개선도 추진
* 주택가격동향지수, 지가변동률,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정보, 실거래가 지수 등
- (표준 - 개별공시가격 정합성) 표준부동산 대표성 개선*,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정합성 개선
* 표준부동산 선정·교체기준 보완,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편 추진 등

- (개발부담금 감경)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종료-개시시점간 지가차액 증가를 감안한 개발부담금 감경 방안 마련·시행

*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부담률

④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한 택지공급·보상 등 제도 개선

- (택지공급)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 및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변수의 영향을 반영한 택지 수급계획 마련
 - 직접 주택사업을 할 사업시행자에게 택지 공급(별폐입찰 등 방지)
 - 비주거용 건축물 분양 시 '공고'와 '광고'를 명확히 구별 안내 추진
- *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 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대상인 점에 대한 안내강화
- (보상) 투기 확인 시 대토, 이주자 택지·주택 보상 등을 제한하고, 토지보유 기간별 보상 차등화(대토 등)를 통해 단기성 투기 방지
 - 수용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익사업^[法별표에 규정된 사업]의 공익성, 수용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온라인 중개대상물 중점조사방안 수립	1월	2.5%	메모보고(차관)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대외 발표	2월	5%	공문 및 보도자료
	허위 거래신고·취소 의심거래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2월	2.5%	보도자료
	투기근절을 위한 「LH법」 개정안 발의	3월	2.5%	의안정보시스템
	투기근절을 위한 LH내부통제방안 보고(총리)	3월	2.5%	보도자료
2/4분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발표	3월	10%	보도자료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외 발표	4월	5%	공문 및 보도자료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4월	5%	메모보고(차관)
	중개대상물 기획조사(1차 : SNS) 시행	5월	2.5%	메모보고(차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감시 정규조직 출범	5월	7.5%	보도자료
	LH 혁신 방안 마련	6월	10%	보도자료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5월	5%	의안정보시스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완료	6월	2.5%	관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방침	6월	2.5%	방침결정(장관)	
3/4분기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6월	2.5%	의안정보시스템
	투기근절을 위한 「LH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8월	5%	보도자료
	실거래 조사·범죄수사 결과 발표	8월	5%	보도자료
	중개대상물 기획조사(2차 : 대학교·학원가) 시행	9월	2.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발의	9월	2.5%	의안정보시스템
	공시가격 시세조사 정확성 등 개선방안 마련	10월	5%	방침결정(장관)
	불공정행위 규율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10월	5%	의안정보시스템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개발부담금 감경 규정 개정	11월	5%	관보
중개대상물 기획조사(3차 : SNS) 시행	12월	2.5%	메모보고(차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① 수혜자

- **(부동산시장질서 확립)** 공공부문의 투명한 정책집행과 시장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 근절은 국민 전체가 수혜 대상
 - 집값담합 등의 근절을 통해 다수의 선의 거래자 보호 가능
-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는 과세 등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가 수혜대상
- **(택지제도 개선)** 직접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주거수요가 있는 국민이 수혜

② 이해관계자

- **(부동산시장질서 확립)** 일반적 불공정행위 규율에 대해 과잉입법, 감시체계 고도화에 빅브라더를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
 - * 예를 들어 집값담합 규율에 대해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의 반대의견
 - 토지취득 제한 등 엄격한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개발 관련 기관 종사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일부 권리제약
-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보유세·건강보험·복지제도 등 관련기관(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및 공시가격 적정성을 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경실련 등), 공시가격 조사기관(감정평가사, 부동산원)
 - 개발부담금 등 공시가격에 기반한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대다수의 사업시행자(특히, 부담금 감면이 제한적인 수도권 內 사업자)

□ 기대효과

- **(시장 투명성·안정성 제고)** 불법행위 대응 총괄 정규조직 출범 및 강도 높은 단속활동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강화, 포괄적·실효적인 제재 부과 등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 제고, 투기적 수요에 대한 실효적 대응
 - 비주거용 건축물 분양과 관련한 과장광고 예방 및 건축물 용도에 대한 안내 강화로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

- **(공정사회 확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부담과 자산가치 평가의 현실화**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 지역별·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유세 및 복지제도 등 적용의 공정성 개선**
 - * 재산세·종부세 과세, 건보료·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등 산정에 활용
 - 정확한 시세 조사와 공시가격 투명성 개선으로 국민 신뢰 확보
 - 합리적인 개발부담금 감경방안 시행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부담금 상승에 따른 개발위축을 방지하여 부동산 경기 안정
- **(택지 공급질서 확립)** 편법전매 차단을 통한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 및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택지 확보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주택가격조사지원(Ⅱ-1-재정①)				
①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734	723
	▪ 주택공시가격조사(302)		(633)	(557)
부동산공시(Ⅱ-8-재정②)				
①	부동산공시(5731)	일반회계	950	1,114
	▪ 지가조사(301)		(950)	(802)
	▪ 부동산거래조사(302)		-	(3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투기방지 및 재발 방지제도 개선 추진율(35%)		신규		100%	국민적 공분을 촉발한 공공기관의 투기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인식을 가지고 내부통제방안 시행,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까지 제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①LH내부통제방안 보고(20%) + ②LH내부통제 강화 관련 내규개정(15%) - 인사규칙, 취업규칙 및 토지보상관련 지침 개정안 LH이사회 통과 + ③LH 투기근절 관련 법제도 개정(45%) - LH법 개정15% - LH법 시행령 개정15% - 토지보상법령 개정15% + ④LH혁신방안 발표 (20%)	보도자료, 메모보고, 의안정보시스템, 관련문서
㉡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 추진율 (35%)		신규		100%	VIP지시에 따라 부동산시장 공정성·신뢰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차원에서 제도·조직을공 모두 정비하고 주요 교란행위 조사까지 실시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①불공정행위 근절 법제도 개선(40%)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 + ②부동산불법행위조사 정규조직 신설(30%) -기획단 설치 + ③의심거래 5,000건 이상 조사(15%) + ④중개대상물 기획 조사 3회 실시 (15%=5%×3회)	보도자료, 메모보고, 의안정보시스템, 관련문서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형평성 계수 COD 개선) (30%)	-	-	-1.35	-1.5 미만	COD는 15 미만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20년 공동주택 COD는 3.1, 표준주택 10.6, 표준지 7.5로 매우 양호한 수준 *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10 이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 현재도 양호한 수준이나, 균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보다 더 COD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 특히, 전년 실적(-1.35)보다 COD 하락폭을 금년에는 더 낮추는 도전적 목표(-1.5 미만) 설정	(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각 유형별 COD의 하락폭 합계)	메모보고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Ⅲ-3-②)

□ 추진배경(목적)

- **(중개산업 혁신)** 서비스 대비 중개보수가 과도하다는 논란 지속
 - 권익위 설문조사 발표*('20.1) 이후 '중개보수 개편' 관심이 증가
 - * 2,478명(관련업 종사자 1,233, 일반인 1,245)조사결과 53%가 중개보수 과하다고 응답
 -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경감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
- **(혁신성장기반 마련)** 프롭테크 등 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동력으로 신산업 육성 필요
 - * 미국 프롭테크 관련 벤처투자 총액(달러) : 44억('15) → 101억('19)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고, 서비스산업 내 비중도 증가(5.1%('16)→5.7%('19))하며 국가경제 영향력이 적지 않으나 영세한 산업구조*, 일부 부정적 인식(투기) 등은 산업발전 저해 요인
 - * 부가가치 유발계수 : 부동산업(0.96), 건설업(0.81), 금융업(0.93), 제조업(0.64) ('18, 한국은행)
 - ** 부동산업 업체당 종사자수 3.3명, 10인 미만 사업체수 비중 94.2%
 - 부동산 신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필요
- **(기존산업 활력 제고)** 일반국민의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츠 육성 및 정체된 전통적 부동산업의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필요
 -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중심 투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리츠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최근 부동산外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수요증대,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 등으로 감정평가사 중심의 가치평가체제에 대한 갈등 증가
 - * 회계사(기업자산평가) 등 다른 전문자격사, 빅밸류 등 시세정보제공 업체와 갈등
 - 부동산개발업은 투기 이미지, 일회성 개발업체의 난립* 등으로 해당산업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에 제약
 - * '18년 개발실적 보유 업체는 31%에 불과, 매년 2~300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종합개선 방안 마련

- **(중개보수 체계 개편)** 중개산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되도록 중개보수 체계 개편 검토
 - * 개선안 마련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권익위안을 면밀히 검토
 - 지역·가격·유형별 보수지급 실태 및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 추진
 -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중개 보수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 및 지자체 협의
- **(중개대상물 조사 강화)** 확인·설명서 항목 개선 등 중개물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설명을 강화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등 제고
 - **(소비자 권익 강화)** 허위거래 등 중개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전자계약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및 전자계약 활용 범위 다변화 추진
 - **(산업구조 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 중개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방안 마련
 -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

② 부동산 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종합계획 마련)** 프롭테크 및 융·복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업종 발굴·지원 등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데이터를 확대 제공하고, 내용도 고도화하여 신규산업 발굴과 부가가치 향상 지원
 - * 英('10)·美('12)의 대규모 공공DB 제공확대 후 부동산서비스 범위 확대 및 기업설립 급증
-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시범사업(DB생산)도 추진

- **(규제개선)** 신산업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부동산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개선사항을 부동산정책위에 상정, 규제개혁 추진
 - 중·소규모 부동산업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정책 강화
 - * (현행) 「중소기업인력법」, 「1인창조기업육성법」, 「중소기업진흥법」 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배제 규정을 삭제(중기부 협의)
- **(창업 활성화)** 부동산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15社 이상) 및 창업지원센터(308㎡) 제공

③ 리츠·감평·개발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부동산산업의 질 향상

- **(공모제도 개선)** 공모리츠 요건은 엄격히 적용(단순 요건만족이 아닌 실질적인 공모 여부를 확인)하되, 혜택을 확대하여 활성화
-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사업계획 수립부터 자산운용까지 실질적 리츠 운영을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제도개선 추진
 - 투자자의 신뢰향상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다른 리츠-AMC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영건전성 유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 *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자산 건전성 기준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AMC 인가요건 명확화 및 AMC의 예비인가 절차의 간소화 등 추진
 - * 인가요건 유지의무 신설에 따라(법§22의3⑨), 절차를 간소화하되 관리과정을 강화
- **(감정평가업)** 감정평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롭테크 등 新산업과 상생기반 구축
 - 평가대상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평가기준 연구 전문기관 설립 추진
 - * 민관합동의 중립적인 ‘감정평가기준원(가칭)’ 설립방안 마련
 - 특수감정평가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를 도입·운영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
 - * 부동산, 자동차·기계류, 산업재산권, 공장, 기업가치 등 주요한 평가대상별로 교육을 거쳐 등록하고, 업무실적 등 관리
 - 부동산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와 감정평가 업계 간 협력 및 상생기반 조성 지원*
 - * 업역, 협업방안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토론회 개최, MOU체결 등 추진

○ **(부동산개발업)** 업계 경쟁력 제고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 부동산 개발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경력관리체계 (이력·교육·자격증 등의 종합관리) 마련, 3년 마다 의무연수교육 실시****

* (현행) 자체사업+도시개발사업 → (확대) 도시정비,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추가

** 부동산개발업법('21.2 상임위 상정) 개정 및 시행령 개정('21下)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	자료출처
1/4분기	중개보수·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	2월	5%	보도자료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3월	5%	보도자료
	부동산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3월	5%	방침결정 (국장)
2/4분기	부동산 규제개혁 TF 구성	4월	5%	메모보고 (차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건전성강화 연구용역 추진	5월	5%	방침결정 (국장)
	중개보수·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6월	5%	메모보고(실장), 보도자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6월	5%	의안정보시스템
3/4분기	중개서비스산업 종합발전방안 마련	7월	15%	보도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9월	5%	의안정보시스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9월	5%	방침결정 (장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선 방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 (국장)
	감정평가 기준원·전문분야 등록 추진방안 마련	9월	10%	방침결정 (실장)
4/4분기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11월	5%	보도자료
	감정평가-프롭테크 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	11월	5%	협력각서 체결
	부동산 공공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생산	12월	5%	메모보고 (차관)
	규제개선 발굴 및 부동산 정책위원회 상정, 개선 추진	12월	5%	메모보고 (차관)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	12월	5%	방침결정 (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등 직접적 지원 대상자 및 리츠, 중개업, 개발업, 감정평가업 등 기존 업계
 - 신산업 육성 시, 창업 지원 및 성장기반 마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부동산 신산업 업계 수혜 예상
 - 중개산업 개선 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개업계 종사자의 수혜 예상
 - 궁극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투자자, 일반 국민이 정책에 따른 편익을 향유
- **(이해관계집단)** 중개업, 개발업, 감정평가업, 리츠 등 기존 부동산 업계의 협회·단체, 관련 산업 내 대·중소기업 등
 - 중개보수와 수익구조가 직결된 개업공인중개사, 관계 협회 및 중개법인 등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 등

□ 기대효과

- **(경제성장)**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창출, 신규 산업을 발굴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및 편익증대 기대
 - 규제개선,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기존부동산 산업의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
 - 또한 다양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오늘의 집('19년 출시, '20년 월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등 신규 서비스 이용 급증
- **(데이터 경제)**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공 통한 공공데이터 생산성 향상
 - 데이터 표준화 등 품질관리 방안,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한 공공이 보유한 다량의 부동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

- (소비자 편익 증진) 중개보수 부담 완화, 중개서비스 질 개선 및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 기대
 - 또한, 중개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체질 개선

- (투자건전성 확보) 공모리츠시장의 신뢰 향상 및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 대신 다양한 자산**으로 안정적인 흡수 기대
 - * M2(조원) : ('16) 2,407.5 ('17) 2,530.4 ('18) 2,700.4 ('19) 2,913.6, ('20) 3,199.8
 - ** 주택·오피스 외 물류·에너지·뉴딜 관련 인프라(데이터센터·제로에너지빌딩 등)로 확대
 - 요건명확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AMC 인가업무 효율화함과 동시에 민간에서는 건전하고 조속한 리츠사업 추진이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주택가격조사지원(Ⅱ-1-재정①)				
①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13	13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399)		(13)	(13)
도시개발(Ⅰ-2-일반재정③)				
①	도시개발(5632)	일반회계	15	18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15)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TF 구성·운영(10%)	신규			6회이상 운영 제도개선 5건이상 발굴	업계·소비자단체·학계·지자체 등 폭넓게 구성하여 5월까지 대책마련을 위해 6회이상 운영하고 제도개선 5건 이상 발굴로 목표설정	TF 운영 횟수 (6회 만점, 50%) + 제도개선 발굴건수 (5회 만점, 50%)	메모보고
㉡ 중개보수 개편 등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25%)	신규			대외 발표 및 메모 보고	중개업계의 생존권문제로 반발이 우려되나 7월까지 대책발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개선방안 과제 중 '21년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목표로 설정	대책방안 발표 (60%) + 후속조치이행률 (이행완료과제수/'21년 추진과제수) (40%)	보도자료 메모보고
㉢ 부동산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10%)	신규			대외 발표	해외 프롭테크 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여 국내의 프롭테크 산업 등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육성방안 발표	
㉣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10%)	신규			4회 이상 운영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 협의체 구성·협의회 분기별 1회 운영	협의체 운영 횟수 (4회×각 2.5%)	보도자료 메모보고 관련자료
㉤ 부동산 신산업 업체수 증가 (10%)	-	-	233개	256개	부동산 신산업 업체 수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	'21년 한국프롭테크포럼 가입 업체 수 (256개 만점, 부족시 1개당 -0.5%)	
㉥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5%)	신규			1건	'21년말 공공데이터 확대방안 연구종료와 동시에 공공데이터 개방 시범사업생산	공공데이터 시범사업 실행 (1건 만점)	
㉦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실시팀 수 (10%)	10	11	13	15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는 실제 창업·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창업전문과정인 창업캠프 확대 시행(6회→7회) 및 창업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써, '20년 13팀이 참가하였으며, '21년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창업둔화, 관심저하가 예상되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15팀 대상으로 창업캠프 실시	'21년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실시팀 수	창업경진대회 2차 심사 결과 공문
㉧ 공모리츠 총자산 규모(조원) (10%)	5.0	5.8	9.0	13.0	3년 평균 대비 200%인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1년 공모리츠의 총 누적자산규모	리츠정보시스템
㉨ 부동산투자회사 법령 개정(10%)	신규			시행령 개정	자산관리회사 인가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안 방침 수립	개정방침

기 본 방 향

□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광역교통 서비스)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수단의 다양화, 이용 패턴 맞춤형 환승·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광역교통의 “서비스 수준” 제고
- (철도 역 중심 환승·연계교통체계 확립) 대도시권 내 거점 지역간 핵심 이동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환승·연계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
- (광역철도) 균형발전 및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지역간 간선 외에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광역 등 지방권역 철도망 사업 발굴 검토
- (철도 운영·관리) 새로운 형식의 차량 도입, 철도 속도 향상, 첨단 기술 발전 등 최근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운영체계 효율·첨단화
- (이용자 편의 제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도권 내 통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교통 편의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BRT·트램)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 및 버스와 평면 환승이 가능한 트램 등 신규 교통수단 확대
- (수소차 충전인프라) '21년 14기 신규 사업 착수하고, 전담조직을 신설(도공)하여 충전소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 강화
- (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100~200kW) 295기 구축
 -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지역 및 휴게소를 중심으로 우선 확대 설치

기 본 방 향

- (통행료 감면) 버스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감면 추진
- (점용료·과태료) 소상공인·생계형 운전자 등 지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유예 추진

□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 견인

-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전국조사,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화
- (철도형 그린뉴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맞추어, 철도 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및 전기철도 차량 확대 추진
- (철도산업발전) 철도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설정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R&D 추진
- (해외시장진출) 부품 상용화, 국제인증 취득지원 확대,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정책 및 국제협력회의 등 수주외교 강화
- (자동차 시장 변화) 친환경차·이륜차 증가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 (첨단물류산업 육성) 도심 인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공급 및 물류혁신을 위한 2개 분야 12개 핵심기술 R&D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3	3	7	8	37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철도 및 도로 연장(km)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 GTX 주요 환승센터 본격 확대 ㉡ 철도망 개통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도시철도 운영 연장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 수립·고시 ㉢ BRT 확대를 위한 중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환승센터 구축지원 ㉤ 환승센터 확대 기반 구축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광역철도 거점 인프라 강화 ㉡ 운영관리방안 첨단화 ㉢ 서비스 개선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 국내 트램도입을 위한 첫 사업계획 승인 ㉡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광역버스 총 운행거리 증가분(km)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당 월별 마일리지 적립액(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변경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 고속도로 유희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 ㉤ 고속도로 휴게소·영업소 언택트 서비스 본격 도입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언택트 납부 서비스 확대 ㉦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점용료, 통행료 감면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 철도 R&D 투자 확대 ㉢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 허가·면허·등록 발급 ㉢ 택시 서비스 개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수 ㉣ 수소버스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그린 뉴딜 ㉡ 철도산업 발전 지원 ㉢ 해외 수주 지원 및 국제 협력 확대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건수) ㉡ 전기·수소차 검사 인프라 확충(범용진단 검사장비 보급 및 수소차 검사소 확대 구축) ㉢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 실적(건) ㉣ 리콜 이행력 강화(리콜관련 자동차 관리법 개정 및 리콜 정보 공유·안내 서비스 확산) ㉤ 자동차365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종) 및 이용 활성화(접속건)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수소연료 보조금 근거 마련 ㉡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 ㉢ 도심지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착공 ㉣ 생활물류법 하위법령 마련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지원

(1) 주요내용

□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광역교통 서비스) 대도시권내 교통 혼잡완화 및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S-BRT,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인프라 서비스 제공
 -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Super BRT) 및 버스와 평면 환승이 가능한 트램 등 신규 교통수단 확대
 - 이동식 중앙분리대 등을 이용한 무정차 버스전용차로(BTX) 조성 및 정시성 확보가 용이한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교통망 구축
- (광역철도) 총괄계획단 및 환승 협의체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량리역, 삼성역, 공모사업 등 주요 GTX 환승센터 사업 본격 착수
- (철도 운영·관리) 철도 고속화·표준화·연계성 강화 등 중장기 철도 운영 세부전략 마련, 차량기지 정비·유지관리 체계 개선

□ 교통 편의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편의성·공공성 강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광역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활성화) 광역버스 확대, 준공영제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 확대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교통불편 해소) 광역버스 확대 등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광역 교통대선대책 수립·변경을 통한 교통문제 최소화
- (환승체계)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교통수단간 환승(승용차 ↔지하철↔버스 등)이 가능토록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 견인

- (택시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택시 총량산정 방식과 친환경 택시 규정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와 친환경 택시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실시

-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 취득 지원*
- (자동차 시장 변화)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차량 안전성 제고, 화재 대응 및 결함조사 역량강화, 정비 및 검사 기반 강화 등 종합적 안전기반 확립
- (첨단물류산업 육성)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 소비 대응을 위한 e-커머스 대형 물류단지 조성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① 철도 및 도로연장 (km)	철도	50288	52161	52586	52555	53079	5,530.0	제3차철도망구축계획('16~'25) 및 개통 계획 등 * 현재 제4차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중으로 목표치 변경 가능	전국 철도연장 (고속, 광역, 일반, 도시철도 등 연장) 합산	코레일, 지하철공사 등 각 기관 통계 취합
	도로	18415	18700	18750	18797	19036	20,555	연도별 개통 계획	전년도 간선도로 연장 + 당해년도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연장	도로통계연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매년 5월말 발표
②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6.06	5.89	6.2 ('21년 발표)	6.4 ('22년 발표)	6.7 ('23년 발표)	7.3 ('28년 발표)	최근 3년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하향 추세에 있으나, 물류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물류활동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24년도 목표치는 도전적인 7.3으로 설정	물류활동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GDP)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한국교통연구원) * 매년 5월 발표	
③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7	1.6	1.4	1.2	1.1 (잠정)	0.8	교통안전종합대책('18.1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상 목표치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경찰청 통계 (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자동차·농기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혼잡) 트램, S-BRT 등은 기존 도로(차로 수 감축)를 활용함에 따라 승용차 이용자 및 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발 우려
 - 트램 등 친환경적이며 수송능력이 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동참(대중교통 사용 등)을 유도
- (부지 확보) 철도역사는 교통 거점으로 역사주변에 도로망, 주거·상업지역 등이 형성되어 환승센터, 신규노선 추진 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철도 부지 활용(차량기지 통·폐합, 이전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 개편(S/W) 등 가능한 여건 내에서 이용편의를 개선
- (재원 마련) 지속 가능한 지방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손실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요청되는 바, 운영비 지원에 부정적인 재정당국 설득 필요
 - 지방 광역철도는 관할 지자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손실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철도 서비스) 승차권 할인확대 등은 비용부담 주체인 철도운영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규 서비스 도입 차질 우려
 - 철도운영사 등 사업자에게 정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협의
- (철도 해외수주 지원)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수주 지원활동에 난항 예상
 - 다만, 코로나19 진정 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사업도 예상되는 만큼, 해외공관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전기·수소차 안전) 최근 전기차의 화재사고 및 리콜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안전 강화 요구 증대와 국내외 제작사 부담 증가,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 세밀한 정책 추진 필요
 -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장비, 검사·정비소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하나, 검사수익성이 낮아 민간참여 저조 예상되어, 공단 검사소(93곳)를 중심으로 검사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합리적 가격정책 등을 통해 민간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이륜차 관리) 자동차에 비해 관리체계가 간소한 이륜차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제도 개선으로 관련업계 및 이용자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등 세밀한 정책 접근 필요
 - 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대상차량 및 정비항목 선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어 이해관계자(이륜차 제조업체, 정비업체, 라이더단체 등)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안 도출 추진

- (애프터 마켓) 튜닝, 인증대체부품 등 新시장 창출 및 매매·정비·검사 등 관리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견 발생우려 등으로 의견수렴 및 조율 등을 통해 세밀한 정책 추진 필요
 - 중고차 성능점검 및 검사 분야는 주로 영세업체들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체계개선 및 친환경차량에 대한 검사·점검역량 강화 병행필요
 - 신속한 자동차 결함 분석 및 리콜 조치 등을 위한 리콜제도 강화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업계 등의 반발예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 등 충실한 준비 필요
 - 자동차 보험 및 공제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보험회사 및 각 분야별 공제단체와의 의견 수렴 중요
- (생활물류시설) 높은 지가, 지역민원, 시설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영세한 생활물류 사업자의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곤란
 -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설·설비 첨단화(물류 인프라 공급 및 R&D)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대국민 물류 서비스 향상 추진
- (수소경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19.1」에 의거 '21년 하반기부터 수소화물차 시범운행이 시작 예정이나 수소화물차 보급 미비
 - 기존 경유화물차를 수소 화물차로 대·폐차에는 비용이 수반되어 일부 업계 반발이 예상되나,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등 통한 이해관계자 긴밀한 협업 및 수소 연료보조금 신설 통해 갈등 해소

(1) 주요 내용

□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 서비스 제공

- (도로 혼잡 개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및 광역도로·혼잡도로 총 31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BRT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BRT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19년 20억원→'21년 141억원) 수도권 동부권(남양주-강변)에 GTX 본격 추진
- (환승센터 확대) GTX 개통에 대비, 주요 환승역인 청량리역 기본 구상 완료, 유관기관 간 중재를 위한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21.上)

□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 (광역철도)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동해선(부산~포항)·중부내륙선(이천~충주) 개통 등 주요 간선망 확충
- 260km/h급 차량 운행 확대, 400km/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 기준 수립 추진 등 단계적 고속화 추진으로 거점 간 이동 원활화
- (편의 제고) 취약계층 배려, 공공할인 확대, 이용혜택 확대 등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적극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GTX 주요 환승센터 본격 확대 (50%)		신규		12개	GTX 환승센터 공모사업 등 주요역사 12곳 모두 사업 착수	착공,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구상안 마련	메모보고 등
② 철도망 개통 (50%)	2	2 (개량 포함)	9	6	공사완료 후 철도운영자와 합동 사전점검, 교통안전공단 등 종합 시험운행 등 절차를 거쳐 6개 사업을 연내 개통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 최근 3년 평균 연간 약 4개 노선 개통	철도사업 개통 건수 ≥ 6개	메모보고, 보도자료, 개통 관련 서류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GTX) 수도권 의 약 77% 이상 주민들이 수혜대상인 동시에 이해관계자로 노선, 역 위치 등에 대해 님비(NIMBY) 등 다양한 갈등 빈번
 - 주민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부지 확보) 철도역사는 교통 거점으로 역사주변에 도로망, 주거·상업지역 등이 형성되어 환승센터, 신규노선 추진 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철도 부지 활용(차량기지 통·폐합, 이전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 개편(S/W) 등 가능한 여건 내에서 이용편의를 개선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IV-1-①)

□ 추진배경(목적)

- 대도시권 개발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철도·BRT 등 광역교통의 “서비스 수준(접근성, 속도, 편의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GTX 등 급행철도 개통 후 광역교통 이용 패턴의 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환승센터 등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철도 네트워크 확충) 트램 실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등 트램 확대기반을 조성
 - * 오륙도선(1.9km, '23년 개통) ** 타당성평가기준 개선 및 책임보험약관 개발('21.下)
- 광역·도시철도는 서울5호선 하남선 2단계('21.3) 및 7호선 석남 연장선('21.下) 사업을 연내 개통하고, 위례선 등은 설계를 적기에 추진
- (도로 혼잡 개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및 광역도로·혼잡도로 총 31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대도시내의 도로혼잡 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1~'25)' 수립('21.上)
 - 서울 동부간선('21.下) 등 광역도로·혼잡도로의 4건 개통, 4건 착수 등 도로망의 혼잡 완화를 추진
- (BRT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BRT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19년 20억원→'21년 141억원) 수도권 동부권(남양주-강변)에 BTX* 본격 추진
 - * BTX(Bus Transit eXpress) : 주요거점과 환승센터간의 연결 및 간선도로의 고속화를 통해 통근시간을 단축하는 급행 광역버스체계

- 특히, 교차로 구간을 정지 없이 이동하는 **S-BRT** 시범사업(5개소)의 계획수립, 설계추진* 및 **법정계획 반영**(’21.上)을 통해 **국비 지원****

* 인천·성남 개발계획 수립(’21.下), 창원 기본·실시설계(~’22.6.) 등

** BRT 종합계획(’21~’30),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건설비·운영비 등 지원

○ **(환승센터 본격 확대) GTX 개통에 대비, 주요 환승역인 청량리역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간 중재를 위한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21.上)

- GTX 환승센터 공모 선정 역사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고품격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총괄계획단 운영**(’21.上)

- 지방의 환승센터*도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

* 명지신도시 환승센터, 부산 사상역·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

○ **(환승센터 확대 기반 구축) 권역별 환승센터의 중장기 추진방향인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1~’25)’ 수립**(’21.8)

- 이원화된 법체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환승센터 추진절차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절차마련) 환승센터 관련 법 개정안 발의(’21.11), (대상확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21.5)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1월	10	보도자료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추진방안 마련	1월	10	방침결정(장관)
	서울5호선 하남선 2단계 개통	3월	10	보도자료
2/4분기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운영	4월	5	메모보고(위원장)
	환승센터 관련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	5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남 S-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5월	5	메모보고(위원장)
	서울7호선 석남연장 개통	5월	10	보도자료
3/4분기	BTX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착수	8월	5	방침결정(위원장)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고시	8월	10	고시
4/4분기	BTX사업 타당성평가결과 보고	12월	10	메모보고(위원장)
	환승센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11월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BTX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 유관기관 협의	11월	5	메모보고(위원장)
	트램 실증노선 책임보험약관 개발	12월	5	메모보고(위원장)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트램 특성 반영) 마련	12월	5	방침결정(위원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5개 대도시권의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약 4,000만명의 국민들

*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이해관계자) 지자체, 신도시 국민,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 대도시권 환승시설의 경우 행정구역-시설사용자의 이원화에 따라 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의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예시 : 수도권)
 - GTX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시 신규 교통수단 도입 및 노선 재편 등에 따른 기존 광역·지선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반발

□ 기대효과

- (교통 편의 증진)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구축*을 통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 및 도로혼잡완화, 환승시설 개선, 철도 거점역 중심의 환승·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이용 편의 적극 개선

* 철도 7km 개통 및 도로 15.3km 확장·신설 등으로 광역간 이동성 증진 및 편의 제공

- (수단 선택의 폭 확대) 보행·교통약자에게 친화적인 트램,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한 Super BRT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GTX, 역세권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역사별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지자체도로건설지원(V-4-일반재정①)				
① 광역도로(1938)			389	265
▪ 초정·화명 외 10건		균특회계	389	265

		회계구분	'20	'21
대중교통지원(V-6-일반재정①)				
①	혼잡도로개선(4539) ▪ 광주 북부순환도로 외 12건	균특회계	1,289	1,100
②	도시BRT(4541) ▪ 광역BRT 구축	균특회계	110	141
③	환승체계구축(4542) ▪ 환승체계구축지원	균특회계	257	183.8
광역철도건설(V-10-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 건설지원(2833) ▪ 별내선 복선전철 외 3건	균특회계	1,749	1,901
도시철도건설(V-11-일반재정①)				
①	지하철 건설지원(3031) ▪ 부산 사상-하단 외 5건	교특회계	2,356	3,683
②	경량전철 건설지원(3032) ▪ 신림선 외 1건	교특회계	540	3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a) 광역·도시철도 운영 연장(25%)	701.7	725.3	730.1	737.1	· 신규 광역·도시철도 개통(하남선 2 단계 등)에 따른 철도 수혜범위 확대	누적 개통연장(km)(20%)	내부자료
	신규			100	· 신규 광역·도시철도 개통되는 노선에 대한 수송용량 목표율(%)	(신규구입 차량편성수×편당 평균탑승인원) / (공급예정 차량편성수×편당 평균탑승인원) (5%)	내부자료
b)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 수립·고시 (15%)	신규			개선계획 수립	·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및 확정고시	5개년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내부자료·고시
c) BRT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20%)	신규			종합계획 수립	· 체계적인 BRT망 구축을 위한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BRT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여부	내부자료
d) 환승센터 구축지원 (20%)	신규			2건	· 유관기관 간 이견중재를 위한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여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지부진하던 GTX 환승센터(청량리역, 금정역)을 사업 본격 추진하는 적극적인 목표 설정	청량리역 기본구상안 마련 및 금정역 통합 환승체계 추진방안 마련(10%)	메모보고, 공문 등 관련 문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신규			9개	· 총괄계획단을 운영하여 GTX 환승센터 공모에 선정된 선도사업 10곳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90% 이상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역사 수(5%)	메모보고, 공문 등 관련 문서
	-	1	1	5개	· 환승시설(환승센터, 회차-환승시설)의 본격 확대를 위해, 과거 실적추세 대비 500% 수준의 과감한 목표 설정	환승센터, 회차-환승시설 착공 및 준공 수 (5%)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㉔ 환승센터 확대 기반 구축 (20%)	신규			3건	· 지자체간 참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고시(10%) +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10%)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IV-1-②)

□ 추진배경(목적)

-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중심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며, 기점 40km 이내, 표정속도 50km/h(도시철도 연장형은 40km/h) 이상 철도(대광위 지정·고시, 건설비 국가 70%, 지자체 30%)

** 광역철도는 ①대량수송, ②정시성, ③안전성을 갖춰 광역권 연계에 가장 적합

- 수도권의 경우 13개의 광역철도가 운영(추진) 중이나, 비수도권은 경제성 부족, 운영비 부담 등으로 광역철도 사업이 3개*에 불과

* 광역철도 현황: (수도권) 신분당선·중앙선·경의선·GTX·신안산선 등 13개
(비수도권) 충청권·대구권 광역, 대구1호선 안심~하양연장 등 3개

-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정책효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 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도 발굴 검토

- 주요 대도시 거점 간 연결을 위한 간선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고속화하여 지역 간 원활한 이동 도모

- 디젤차량 폐차, 동력분산식차량(EMU) 신규 도입, 400km/h급 속도 향상, 첨단기술 발전 등 철도 분야에 다양한 변화요소 발생

- 최근 사회·기술 변화에 맞춰 운영·정비·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

- 아울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향상 등에 따라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 지속 증가

- 수도권 통근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철도 이용객, 특히 사회 취약 계층 관점에서 신규 서비스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①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도 개선)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광역철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0~'21.9, 교통연구원

- 거리반경, 표정속도 등 물리적 요건으로 규정된 경직적인 현행 지정기준을 지역별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화

* (현행) 전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청) 40km 이내, 표정속도 50km/h 이상 (개선) 권역별 반경, 속도 기준 합리화, 권역별 기점 추가, 대도시권 범위 확대 등 검토

-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손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균형위, 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

* ① 운영비 손실 국비 지원, ② 선로사용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 (철도망 계획 수립) 여건·국정목표* 반영,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 향후 10년 투자 방향 정립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수립

*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포용사회, 지역 간·지역 내 이동편의 획기적 제고 등

- 지역간 간선 외에도 광역 등 지방권역 철도망을 확충하고, 전철화·복선화율 제고, 미싱링크 연결, 병목구간 용량확대 등 적극 추진

※ 상반기 계획(안) 마련 후, 공청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확정

②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

- (간선망 확충) 고속·일반 등 주요 간선망 확충을 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

-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계속 공사, 동해선(부산~포항)·중부내륙(이천~충주) 개통 등 주요사업 추진

- 평택~오송,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19.1)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 ('20년 착공) 동해선 전철화, ('21년 기본계획) 평택~오송, 남부내륙, 대구산업선, 충북선, 석문산단

< 2021년 개통 및 착공 예정 철도노선 >

구 분	노 선 명
개 통 (6개)	▶ 중부내륙선 이천~충주('21.12)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일광~태화강('21.12)
	▶ 동해남부선(울산~포항) 태화강~신경주('21.12)
착 공 (6개)	▶ 동해북부선 강릉~제진('21.12)
	▶ 춘천~속초('21.12)
	▶ 장항선 2단계 신성~주포('21.9)
	▶ 중앙선 영천~신경주('21.12)
	▶ 대구선 동대구~영천('21.12)
	▶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21.11)
	▶ 충청권 광역 계룡~신탄진('21.12)
	▶ 월곶~판교('21.9)
	▶ 인덕원~동탄('21.6)

- (고속 서비스 확대) 중앙선(원주~제천)에 이어 올해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이천~충주)에도 KTX-이음(EMU-260)*을 투입하여 일반철도 고속화 확대

* (일반철도) 최고속도: 150km/h, (KTX-이음) 최고속도: 260km/h

- EMU-260 단계적 도입을 위해 중부내륙선 부발역 승강장 개량공사, 경전선 순천·진주 차량검수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 등도 병행 추진

* KTX-이음(EMU-260) 투입노선 개통 추진 노선: 중부내륙선(1차,'21), 중앙선·서해선('22), 서해선('22), 중부내륙선(2차)·경전선('23), 장항선('24) 등

- (400km/h 도입 추진) 더 빠른 철도에 대한 국민 수요 부응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해 400km/h급 도입 본격 추진

- 지난 해 마련한 400km/h급 노반 설계 기준, 인프라 기술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차량기술 등 단계적 기술개발 추진

- 고속차량 기술기준 및 소음저감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400km/h급 설계속도를 반영한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기본계획 완료

2. 신규차량 도입 등에 따른 운영·관리 첨단화

- (철도운영 효율화) EMU차량 운행과 400km/h급 속도향상 등 철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철도운영 세부전략*' 마련

- * 표정속도·정시율·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운행 기준 및 고속(장거리)·일반(단거리 서틀) 운행체계개선안, 중·장기 차량 수급계획안, 연계교통 활성화 방안 등
- ** ‘중장기 철도운영전략(’18.11)’에 따라 실제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적용기준 등 마련
- 전국 철도망의 수요·운행 효율성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을 근거로 열차운행 조정·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차량기지 정비) 중장기 열차운행체계, 차량 도입, 노선 신설 등 환경변화를 대비한 차량기지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기지 신설·이전·개량 등 사업유형별 추진절차도 정립*
- *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연구용역, ‘20.4~’21.10, 철도기술연구원
- 또한, 차량 정비기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생정비 고도화·자동화 (통합 및 원격제어, 스마트(소형·경량화) 오물스테이션 개발) 기술개발도 추진
- * 현재는 정비 검사 대상이 아닌 차량도 순수 위생정비를 위해 정비기지로 입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모든 작업(호스연결, 조작, 분리 등)을 수동 처리 중

3. 출퇴근 편의 및 철도 서비스 향상

- (출퇴근 편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내 30분대 통근권을 마련하고,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40m 이하 대심도로 고속운행(최고 180km/h) 하는 GTX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 * (A노선) 파주-동탄 83.1km, (B노선) 송도-마석 80.1km, (C노선) 양주-수원 74.8km
- (A노선) ‘19.6월 공사에 착수,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관리 철저
- (B노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후 기본계획 고시
-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
- (기타 광역철도) 기착공(’19.3)한 대구권광역철도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는 설계완료 후 착공

- 신안산선, 신분당선(용산~강남) 등 공사 중 사업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신분당선(광고~호매실)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설계 착수
- (서울역 계획) '3차철도망계획'(16.6)에 반영된 5개 신규노선* 에 대비, 지하공간의 환승체계 개선과 상부공간 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 * ① GTX-A(시공 중, '18~'23), ② GTX-B(기본계획 중, '19~'27), ③ 수색-광명(에타 중, '19~'28), ④ 신안산선(사타 중, '19~'29), ⑤ 신분당선(에타 중, '19~'28), (추가) 유라시아 철도(장래)
- (서비스 향상) 교통약자 편의 제고, 이용혜택 확대 등 이용자가 편리하고 사회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배려)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 시설 설치(8개) 및 수화 영상 서비스* 확대 제공(2개 차량→전 차량)
 - * (코레일) 객실 모니터 수어영상 송출 / (SR) 수어영상 서비스 전체차량으로 확대
 - (공공할인 확대) 의무복무장병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운임할인 시행, 공공할인 대상자 정보연계 강화 및 다자녀 기준 완화(SR)
 - (이용혜택 확대) KTX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확대(5~10%→최대 15%) 하고, 유효기간 만료 前 사용 확대를 위해 이용자 홍보 강화
 - (주차 등 편의제고) 앱을 통한 주차 조회·결제, 자동관제 주차장 추가 구축(50개소), 공공형택시(45→50개 지역), 승차권 음성예매 서비스 제공
 - (방역 강화) 비접촉식 스마트게이트 시범설치로 역사내 방역을 강화하고, 철도분야 열차종류별 표준 방역매뉴얼 수립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업무협약 체결	1월	7%	보도자료
	최고속도 260km/h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 행사	1월	7%	카드뉴스
	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약체결	3월	7%	공문
2/4분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5월	6%	보도자료
	공공할인 대상자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	6월	7%	메모보고(국장)
	인덕원~동탄 건설공사 착공	6월	7%	공문
3/4분기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기본계획 수립	7월	7%	방침결정(장관)
	서울역 종합계획(환승센터 포함) 최종안 마련	9월	7%	방침결정(장관)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용역 준공	9월	7%	용역보고서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4/4분기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11월	6%	보도자료
	중부내륙선(이천-충주) 운행계획 기본안 마련(EMU-260 투입)	12월	7%	메모보고(장관)
	GTX-B 기본계획 고시	12월	6%	고시문
	GTX-C 실시협약 체결	12월	6%	방침결정(장관)
	월곡~판교, 강릉~제진, 춘천~속초 건설공사 착공	12월	6%	공문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급속충전 시설 설치	12월	7%	메모보고(국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1. 철도인프라 강화

- (수혜자) 일상적인 이동을 위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국민
- (이해관계집단) 재정당국, 지역구 의원, 지자체, 철도시설 인근 지역주민, 철도운영사, 국가철도공단 등
 - ① 지방 광역철도는 대부분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운영하는 형태(기존선 개량형)로 코레일-지자체간 운영주체 및 운영손실 분담 협의 필요
 - 지속 가능한 지방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운영손실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요청되는 바, 운영비 지원을 부정적인 재정당국 설득 필요
 - ☞ 지방 광역철도는 관할 지자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손실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 ② 지자체·지역구 의원 등이 지역균형발전(비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수도권) 등을 사유로 신규노선 철도망계획 반영을 지속 요구 중
 - 10년 간 계속사업에 투자되는 소요비를 고려하였을 때, 3차 계획(36개, 44.6조원) 대비 신규사업 규모가 감소될 우려
 -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신규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SOC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국민 이동편의 제고 등을 위해 철도 신규투자 확대 필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 ③ 철도건설 사업은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공사민원 등 갈등요인 상시 내재
 -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과 일 이용객 100만명의 이동권의 획기적 향상이 가능한 핵심 교통시설
 - 수도권의 약 77% 이상 주민들이 수혜대상인 동시에 이해관계자로 노선, 역 위치 등에 대해 님비(NIMBY) 등 다양한 갈등이 빈번
- ☞ 철도건설 노선, 역사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 주민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2. 철도 서비스 향상

- (수혜자) 일상적인 이동을 위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국민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철도시설 인근 지역주민, 철도운영사 등
 - 승차권 할인확대 등 서비스 향상은 비용부담 주체인 철도운영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규 서비스 도입에 차질 우려
- ☞ 철도운영사 등 사업자에게 정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협의

□ 기대효과

- (광역철도 활성화)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를 통하여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달성
- (간선 인프라 확대) 고속·일반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여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
- (철도운영 효율화) 철도의 고속화·표준화·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빠르고 편리한 양질의 철도서비스 제공
 - (차량기지 정비) 체계적인 정비체계의 효율화·침단화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신형 철도차량의 차질 없는 안전 운행 기대

- (출퇴근 편의) 수도권급행열차 확대를 통해 심각한 교통난 해소, 출·퇴근 시간의 대폭 단축 등 이동 편의성 제고
- (서울역 계획) 서울역을 국가 중앙역 국제관문 도시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동북아 철도·문화·업무 중심의 국가교통 HUB 구현
- (서비스 향상)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시설 설치, 수어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향상 및 공공성 제고
 - 공공할인 확대 및 효율화, KTX 마일리지 적립비율 상향 등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
 - 앱을 통한 주차 조화·결제 서비스, 자동 관제 주차장 구축, 공공형 택시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편하게 철도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비접촉식 스마트게이트 시범설치로 역사 방역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표준매뉴얼 제정을 통해 일률적·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고속철도건설(V-7-일반재정①)			
① 고속철도건설(2500-2531)	교특회계	1,086	3,469
일반철도건설(V-8-일반재정①, ②)			
① 일반철도건설(2600-2631)	교특회계	29,359	29,411
② 일반철도조사설계(2600-2632)	교특회계	715	3,285
광역철도건설지원(V-10-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건설지원(2800-2833)	균특회계	4,525	6,317
광역철도건설지원(V-11-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건설지원(2900-2933)	교특회계	-	9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광역철도 거점 인프라 강화 (40%)	신규			4개	· (지방 광역철도노선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지방 광역철도 4개 노선 신규 발굴, 지난 3차 계획 상 지방 광역철도 신규노선이 1개인 점을 감안시 매우 도전적인 목표	4차망계획 반영 지방 광역철도 신규사업 노선 수 \geq 4개 (15%)	고시문
	2	2	9	6	· (철도망 개통) 공사완료 후 철도 운영자와 합동 사전점검, 교통안전공단의 종합시험운행 등 절차를 거쳐 6개 사업을 연내 개통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 최근 3년 평균 연간 약 4개 노선 개통	철도사업 개통 건수 \geq 6개 (15%)	메모보고, 보도자료, 개통 관련 서류 등
	신규			40분	· (고속화) 신규 준고속열차 투입 운행지역(이천-충주) 이동시간 단축(110분→40분) * 기존 교통수단인 버스 대비 약 64% 단축	부발-충주 이동시간 \leq 40분 (10%)	운행시간표
㉡ 운영관리방안 첨단화 (30%)	신규			계획안 수립	· (중장기 운영전략)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철도 운영 세부전략안을 신규 마련하는 도전적 지표 설정	전략안 마련 여부 (15%)	메모보고
	신규			계획안 수립	· (차량기지 운영계획)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차량기지 중장기 운영계획안을 신규 마련하는 도전적 지표 설정	계획안 수립 여부 (15%)	메모보고
㉢ 서비스 개선 (30%)	-	-	새로운 개시 (2개)	전차량 (32개)	· (수화영상서비스 확대) SR 수화영상안내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2개)에 이어, 전차량에 수화영상서비스 제공 완료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수화영상서비스 제공차량(SR) \geq 32개 (10%)	메모보고
	3	3	3	2	· (이용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차권 할인 대상 기준을 '3자녀' 에서 '2자녀' 가구로 적극적 목표 설정	할인대상 가구 자녀수 \geq 2자녀 (10%)	메모보고
	신규			앱기능 개발	· (주차 등 편의제고) 새롭게 앱 기능을 개발하여 주차현황 조회·결제 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주차 현황 조회·결제 가능 앱 기능 개발 여부 (5%)	메모보고
	31	40	45	50	· (공공형 택시) 공공형 택시를 운영 중인 121개 지자체 중 열차 운행지역은 78개소로 운영역사를 약 65%이상(50/78개소)으로 확보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역사 공공형 택시 신규도입 \geq 5개 (5%)	메모보고

(1) 주요 내용

□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편의성·공공성 강화) 장거리 출·퇴근으로 교통 불편이 큰 신도시 등에 M버스 운행 확대로 이동시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해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을 유도하여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 도로 공공성 강화

- (지하고속도로 지침) 설계속도(100km/h)에 부합한 기하구조(폭·표준단면 등), 지하 출·입시설, 환기·방재시설(長연장 고려) 등 설계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100%(태양광 43%, 연료전지 57%)를 목표로, 녹지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국내 트램도입을 위한 첫 사업계획 승인 (50%)		신규		사업계획 승인	국내 최초 트램도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실증노선(부산 오륙도선) 사업계획 수립을 금년 중 완수	사업계획 승인 여부	고시문
㉡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50%)	-	-	64만	77만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공급 확대를 유도	이용자 수	보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혼잡) 트램, S-BRT 등은 기존 도로(차로 수 감축)를 활용함에 따라 승용차 이용자 및 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발 우려
 - 트램 등 친환경적이며 수송능력이 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동참(대중교통 사용 등)을 유도
- (대심도 지하도로) 지역주민의 소음·진동 기준강화 요구 및 기준강화로 인한 공사비·공사난이도 증가 등 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
 - 지자체·지역주민·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와 요구사항 적극 검토·협의를 통해 기준 마련 추진
-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경차·출퇴근·화물차 할인 및 주말할증 등 기존 수혜자 강한 반발 예상
 - 공청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개편안 마련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강
- (민자 통행료 인하) 민간 사업자의 실질수익률 하락으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건설사 등 투자자 반발 예상
 -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투자자 동의 필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IV-2-①)

□ 추진배경(목적)

- 대도시권 주민들은 장거리·장시간 출퇴근으로 길 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질 하락 초래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의 마련·시행이 필요
- 기존 신도시 등 광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할인 확대 추진
 - (편의성·공공성 강화) M버스 노선 신설로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12,862원의 절감효과(20년)를 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가 마일리지 지급
- 통합환승요금제와 관련하여 기관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분쟁 완화 및 예방을 위해 대광위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변경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 등 내실화 필요
 - 입주 초기 대중교통 불편 개선방안 마련. 既 대책의 신속한 변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장기간 개선대책 이행 지연지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행지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광역교통계획 수립)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권역별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미래 인구구조·통행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전략 제시
 -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해 20년 단위의 광역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1~40)” 수립

-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수립
- (광역버스 서비스 확대) 초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선 운행,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실시
 - *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에 대하여 서울시는 광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견지
- 빠르고 편리한 광역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노선 신설, 증차운행 지원* 등으로 광역버스 총 운행거리를 전년 대비 11,000km 증
 - *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활용한 운행확대를 통해 정기운행버스 대비 비용 효율적이며 이용자 체감도 높은 정책
-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으로 이용편의성 제고
 - * 기존 디젤 기반 2층버스는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급이 곤란하였으나, 친환경 운송수단인 2층 전기버스는 부처간 협업(국토부-환경부)하여 보급 지원
- 아울러, 고속버스 대비 정체된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도록 이용 편의성이 강화된 프리미엄 M버스 서비스의 도입 추진
 - * 프리미엄 M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보편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는 준공영제로 제공)
- (알뜰교통카드 사업 확대) 사업지역을 확대·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사업지역*을 135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하고, App 편의성 개선(위젯·알람 기능 등)·모바일페이 확대·PM 등 공유 모빌리티 연계 혜택 추진
 -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해 얼리버드 마일리지*를 시범 도입하고,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전 연령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1회 100~200원↑)
 - * AM 06:30 이전 최초 탑승 시 추가 50% 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요금 정산분쟁 완화) 현재 분쟁 중인 ‘15~’17년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을 결정하고, 향후 분쟁 완화를 위해 정산주기 등 기준을 마련
 - GTX 등 신규 교통수단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통합환승요금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

-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신규 사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기존 사업지구의 개선대책 변경을 위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운영
-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일산테크노, 울산KTX역세권, 안산장상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입주 초기 대중교통 불편 개선방안 마련. 既 대책의 신속한 변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장기간 개선대책 이행 지연지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행지침 마련 필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인천계양지구·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완료	1월	10%	방침결정(위원장)
	알뜰카드 21년 사업 추진계획 마련	2월	5%	방침결정(위원장)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제정안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전부개정안 마련	3월	10%	방침결정(장관)
2/4분기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공청회 개최	4월	10%	보도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심의	6월	10%	위원회 심의안건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	6월	5%	보도자료
3/4분기	분쟁 중인 '15~'17년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결정	7월	10%	위원회 심의안건
	알뜰카드 상반기 사업 성과분석	8월	5%	메모보고(장관)
	프리미엄 M버스 도입방안 마련	9월	5%	방침결정(위원장)
4/4분기	고양 일산테크노벨리, 울산 KTX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권역위원회 개최	10월	10%	공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 수립	12월	10%	공문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면허 발급	12월	10%	공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5개 대도시권*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출퇴근 등을 위해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약 4,000만 명의 국민
-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경기·인천지역 등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서울·부산·대전 등) 외곽에서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로 출·퇴근하는 국민

- (이해관계자) 대도시권 지자체, 대중교통 관련 운송사업자, 택지 개발사업시행자, 알뜰교통카드 관련 사업자(카드발급사, 정산사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지역 숙원사업 등을 요구하고, 도심내 교통혼잡 가중 등을 이유로 광역버스 확대에 관하여는 부정적(서울시 등)
 - 운송사업자의 경우 철도 등 대체 대중교통 개통,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이용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운행 감소 및 폐선을 요구
 - 알뜰카드 사업참여 지자체*(국비, 지방비 50:50 매칭), 교통카드 발행사(신한·우리·하나카드), 교통카드 정산사(티머니, 이비카드) 간 이해관계 상충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관련 전철·버스 운송기관(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및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등)간 이해관계 상충

□ 기대효과

- (편의성·공공성 강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광역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장거리 출·퇴근으로 교통 불편이 큰 신도시 등에 M버스 운행 확대로 국민들의 이동시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또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분쟁해결 및 제도개선 토대 마련
-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해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을 유도하여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 * '20년 사업 결과 월 평균 1인당 12,862원의 절감효과 확인
 - 특히, 앱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교통비 절감 체감 증대
- (대중교통 활성화) 광역버스 확대, 준공영제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 확대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소비라는 인식을 확산
- (요금 관련 분쟁 해소) 요금 관련 분쟁 및 정산지연으로 인한 관계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고, 요금 정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 (교통불편 해소) 광역버스 확대 등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광역교통대선대책 수립·변경을 통한 교통문제 최소화
- 광역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신도시 등 광역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특별대책의 신속한 수립·변경을 통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완공 전 입주 초기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특별대책지구 도입, 광역버스 서비스 확대, 교통요금 인하(IV-2-일반재정①)				
①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교특회계	14 (151)	104 (225)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교특회계	18	52
▪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4931-343)		교특회계	48	48
▪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4931-331)		교특회계	42	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광역버스 총 운행거리 증가분(km) (30%)	14,181	8,191	10,613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버스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버스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운전인력 부족, 지자체간 갈등, 유사노선 운송사업자의 반발 등으로 광역버스 노선 확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1,000km로 설정 * 국정과제 목표치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운행거리(일) = 운행횟수(일) × 운행거리(편도 km/회) 총 운행거리 증가분 = 운행거리 증가분 - 운행거리 감소분 (감차, 폐선) 	광역버스 인면허 내역 공문
②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당 월별 마일리지 적립액(원) (20%)	-	-	-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취지인 교통비 절감효과를 보다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보완, '21년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경 첫 해인만큼 7,000원으로 설정 	'21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대상자의 월별 평균적립액	공문 또는 메모보고(장관)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	-	-	-	광역교통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도로,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투자규모가 크고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역교통 시설사업의 추진 여부, 노선 등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견 조정 등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여부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관보고시
④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변경 (30%)	2	3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50% 수준인 6개 사업 지구 이상 수립 또는 변경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및 변경하는 사업지구 수	공문 또는 보도자료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IV-2-②)

□ 추진배경(목적)

- 광역권 중심의 국토공간 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 주요 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과 지역 생활권 기반의 교통 접근성 강화 요구 증대
 - 완공 위주의 투자 및 단절 등 네트워크 연속성 저해 구간 집중 개선 필요
 -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대기오염·소음 저감 등 도시 환경개선이 가능하여 간선도로 지하화 필요성 대두
- ☞ 제1·2순환망 연결 및 도심도 지하도로 기반 구축 등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등 네트워크 효율화 추진
 - 생활물류 수요 폭발적 증가에 따라,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물류시설을 구축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100%*(태양광 43%, 연료전지 57%)를 목표로,
 - 성토부·녹지대 등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
 -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체계 구축,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 필요
 - 사람이 우선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부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제공, 비대면 서비스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추진
- ☞ 시대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포용 도로 건설·운영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도로 공공성 강화

< 코로나19 지원 강화 >

- (통행료) 버스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감면 추진

* (매출액감소) 2월 일 평균 고속 9.5억, 시외 14.7억, 시내 6.8억 감소

- (점용료·과태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운전자 등 지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유예 추진

< 수도권 지하 고속도로 추진 >

- (제순환망 복층화) 확장이 불가능한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등 선도사업 추진

* 판교-퇴계원(31.5km): 타당성사전검토후 예타신청('21.상), 서창-김포(18.3km)오산-용인(17.2km): 실시협약('21.하)

- (지침 정비) 설계속도(100km/h)에 부합한 기하구조(폭·표준단면 등), 지하 출·입시설, 환기·방재시설(長연장 고려) 등 설계기준 마련*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설계속도 80km/h),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관리 지침 개정 추진

- 지반조건별·차종별(소형차/승차중) 세부사업비 산출기준 정립*, 지상구간 일반도로 전환시, 녹지공간 조성 등에 대한 신규 편익 산정기준 개발

* 현행 기준은 산악지 터널 기반으로 단순 차로수별 평균 단가만 제시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교통실, '17.6)」 및 「도로·철도 예타 표준지침(KDI, '17.4)」 개정 건의

<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

- 충청권-강원도를 유일하게 연결하는 동시에 강원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속 추진('21, 타당성 조사)

- 예타 통과한 김제-삼례(호남선, '20.8), 칠원-창원(중앙선, '19.8) 확장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통합 발주('20.1) 등 신속 추진

* 서평택-안산(서해안선), 김해공항-대동(중앙선) 확장사업은 예타통과 적극 추진('21)

< 고속도로 유희부지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 생활물류 수요 폭발적 증가*에 따라 유희부지(34곳**)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등 로드맵 수립('21.9)
 -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 25.0회('10) → 53.8회('19) → 63회 이상 전망('20)
 - ** IC·JCT 인근, 폐도,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으로 지속 발굴 예정
- 수도권 기흥IC 인근부지(약 1.6만㎡)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임차해 일정기간 운영(30년, BOT)하는 시범사업 추진('21.12 설계완료)

< 고속도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

- (수소차 충전소) '21년 14기 신규 사업 착수*, '21년 말까지 총 24기 준공
 - * ('22년까지 총 60기 구축목표) 기 착수 33기('18년 8, '19년 11, '20년 14), 착수 계획 27기('21년 14, '22년 13)
 - 전담조직을 신설(도공)하여 충전소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 강화
- (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100~200kW) 295기 구축
 - * (급속충전기 295기) 환경공단 협업 200기, 한전 협업 95기, (초고속 충전기 72기) 현대차 협업
 -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지역* 및 휴게소를 중심으로 우선 확대 설치
 - * 전기자동차 수 : (지역별) 서울 23,393대, 경기 20,477대, 대구 12,630대
 - ** 1기당 충전 대수 : (노선별) 영동선 5.4대, 경부선 4.8대, 중부내륙선 5.1대
 - 졸음쉼터(주차공간: 20면 이상)에도 신규 충전시설 설치 검토(총 229개소 중 31개소)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

- '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100%*(태양광 43%, 연료전지 57%)를 목표로, 성토부·녹지대 등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 가로등·터널·영업소 등 고속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전력 생산('25, 700GWh)
 - (태양광) 고속도로 신규사업(30MW) 착수('21.4), 방음벽·방음터널 등 신규사업 대상지 지속 발굴('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상향 추진)
 - * '12년부터 성토부·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총 160개소 84.5MW 운영 중, 現 125개소 63.1MW 건설 중
 - (연료전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위해 남양산IC(20MW)·서청주 IC(20MW)·울산(10MW)·서대구IC(20MW) 지역에 연료전지 사업 추진('21.下)

< 대중교통과 연계·환승 체계 구축 >

-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교통수단간 환승(승용차↔지하철 ↔버스 등)이 가능토록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착수
 - * 예시) (동남) 중부선 하남드림휴(3호선, 시내·시외버스), 경부선 용인(GTX A, 구성역, 시내버스), (서남) 1순환선 시흥TG(광역·시내버스), 1순환선 송내IC(1호선, 시내버스) (동북) 1순환선 구리TG(광역·시내버스) / (서북) 1순환선 대곡(GTX A, 3호선·경의중앙선)
- 3기 신도시(하남 교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하철, 시내·시외버스와 환승할 수 있도록 하남드림휴(중부선) 입체개발* 착수('21.12, 사업자 모집)
 - * 상공형으로 설계하여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될 신도시 남북을 연결하고, 동남권 지역의 교통허브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



<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2년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상주영천(1.31배), 광주원주(1.24배) 자금제조달 여건 검토 추진('21.6)
-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미납·부가 통행료 고지·징수 절차를 재정·민자 구분이 없도록 일원화 추진(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21.6)
 - * 미납통행료 고지 효율화(ex. 우편고지 →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방식 다양화(ex. 카카오페이 등)
- (지자체 민자도로 지원) 지자체와 정책지원TF 구성*, 지자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재정부담 감소 등 현안사항 해결방안 지원
 - * 국토부, KOTI 민자센터, 지자체(부산, 대전, 광주, 경남, 강원)

<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인하방안 마련 >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시설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점용료 인하 추진('21.11)
 - * 점용료 기준 조정('07)후 공시지가 약 73%상승,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점용요율 인하 검토

2. 사람중심도로 구현

< 도로 부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제공 >

- (스마트 복합쉼터) '21년 8개소 신규사업 추진(現 추진중인 5개 사업* 준공), 수려한 디자인 반영 등 지역 랜드마크로 차별화 추진('21.3~)
 - * '20년 사업 대상지 : 고흥군, 부안군, 옥천군, 하동군, 인제군('21.12 기반시설 준공)
- (주민 편의시설 조성) 고속도로 유희부지(582만㎡)에 공원·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귀농귀촌 학습장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제공('21년 24개소)
 - * (도공) 부지제공 및 사업제안, (지자체) 시설조성 및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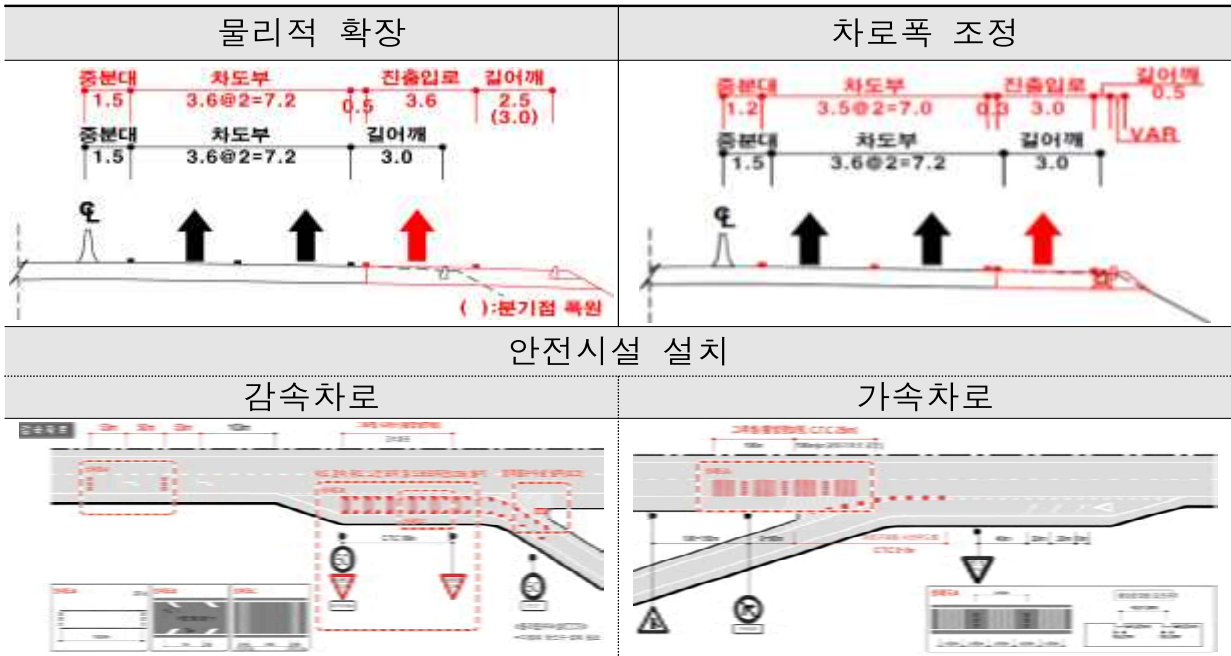
< 고속도로 휴게소·영업소 언택트 서비스 본격 도입 >

- (휴게소 음식 주문) 주문시간·매장대기 최소화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확대(現 27개소, '21년 150개소, '22년 199개소)
 - * 스마트폰으로 식당테이블·배너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주문·결제
 - ** 네이버 '스마트주문'의 경우, QR코드 없이도 검색을 통해 사전 주문 가능
- 패스트푸드·커피 등 간편 매장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형 도입 검토
 - * 총 199개 휴게소 중 드라이브 스루형 매장 1개소 운영 중(롯데리아, 죽암(부산)휴게소)
- (미납통행료 납부) QR코드, 내비게이션(Tmap 등), 셀프주유기 등을 활용한 미납통행료 납부 언택트 서비스 확대 추진('21.下)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

- (진출입로 개선) 현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소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부족구간에 대한 개량을 통해 이용자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 *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최강욱 의원실, 2020.10.12., 2020.10.23)

- 휴게소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물리적 확장, 차로폭 조정, 안전시설 설치 등 휴게소 대상별 개량방안 마련



-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감안한 연도별 중장기 계획 수립 ('21.12)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2022년도 개량공사 시행('22.1)

< 친환경 고속도로 구축 >

- (미세먼지 저감) 고속도로 건설현장·휴게소·영업소 및 고속도로 인근 미세먼지 취약 시설에 대하여 지점별 개선 대책 수립('21.6)
 - * 건설현장의 경우, 이동식 물분사장치 확대 도입(10개 사업단), 공사장 인근도로 물청소 등 관리 강화 중
-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 실내·외 휴게공간에 녹지 조성 및 안개분무시설 도입(서해안선 부안(서울)휴게소 등 6개소, '21.11)
- 고속도로에 인접한 학교·주거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수도권 제1순환선 등 6개소(26천㎡), '21.11)
-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온아스팔트 확대방안 검토
 - * (미세먼지 저감효과)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36.8%↓, 일산화탄소 47.6%↓(건기연, '13.9)
 - * 국도 구간 전국 19개소 약 65km 연장에 대해 시범 적용('20.4~)

< 실내 그린테리어(녹지) >

< 안개분무시설 >

< 고속도로 수림대 조성 >



-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포장재료, 친환경·다공성 소재 보도포장 및 버스정류장 인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중*

* 도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한경대, 180억원, '19.4~'23.12)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가중치 (%)	자료출처
1/4분기	기흥IC 인근 물류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자 선정	2월	5	보도자료
	제천-영월(신설), 호남선(김제-삼례)·남해선(칠원-창원) 확장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3월	10	입찰공고문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감면대상차량 확대 추진	3월	5	방침(국장)
2/4분기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고지절차 일원화 추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6월	5	메모보고(장관)
	스마트 복합쉼터 '21년 사업 추진(8개소 협약체결)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관교-퇴계원) 추진방안 및 지하도로 설계기준(안) 마련	9월	10	메모보고(장관)
	고속도로 유희부지 물류 인프라 확충 로드맵 수립	9월	10	메모보고(장관)
	상주-영천,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자금제조달 등 통행료 관리 방안 마련	9월	10	메모보고(장관)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인하방안 수립	9월	5	방침(국장)
4/4분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서남해안 관광도로 (압해화원, 화태백야), 경주 농소-외동 사업 착공	11월	10	관련문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감속차로 개선 계획 수립	12월	5	메모보고(장관)
	하남드림휴 환승체계 구축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	12월	5	공고문
	스마트 복합쉼터 '20년 사업대상지 5개소 준공	12월	5	관련문서
	고속도로 태양광(30MW) 및 연료전지(3개소)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도로 이용자
- (이해관계집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도로공사, 민간사업자 등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구축으로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보
- 고속도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 복합쉼터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
-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교통 혼잡해소 및 안전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미세먼지 감소 등을 통한 친환경 도로 운영·관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고속도로건설(V-1-재정②)				
①	고속도로건설(1532) ³⁾	교특	18,289 (18,289)	20,161 (20,161)
	▪ 고속도로건설출자금(460)		18,289	20,161
일반국도건설(V-2-재정①)				
②	일반국도건설(1632) ³⁾	교특	13,600 (13,600)	14,241 (14,241)
	▪ 일반국도건설(397~816)		13,600	14,2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친환경 고속도로 구축 (30%)							
①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10%)	-	-	27기	(전기차) 295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구축 및 착수 개소수, 이용자수 증가를 목표로 정함 	① × 10% ② × 10% ③ × 10% = 30%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족할 경우 달성 비율로 성과 인정)	보도자료
②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10%)	-	-	14기	(수소차) 14기 착수			
③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10%)	-	-	64만	(이용자) 77만			
② 도로이용자 편의 및 안전강화 (20%)							
④ 고속도로 유희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	-	-	-	2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유희부지(582만㎡)에 공원·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귀농귀촌 학습장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제공을 목표로 정함 	① × 20% = 20%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족할 경우 달성 비율로 성과 인정)	메모보고 (장관)
③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강화 (50%)							
⑤ 고속도로 휴게소·영업소 언택트 서비스 본격 도입	-	-	27개소	150개소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시간·매장대기 최소화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확대 적용(27→150개소)을 목표로 정함 	① × 15% ② × 15% ③ × 20% = 50% ①②③는 목표치 이상 달성 시 100% 인정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족할 경우 달성 비율로 성과 인정) ③=실제감면액/목표치)	보도자료
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언택트 납부 서비스 확대	-	-	4개소	80개소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코드, 내비게이션(Tmap 등), 셀프주유기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 확대 추진을 목표로 정함 실제 셀프주유기에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운용되는 실적을 인정 		보도자료
⑦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점용료, 통행료 감면	-	-	1,242억원	1,37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점용료와 버스 통행료 감면을 목표로 정함 		메모보고 (장관)

(1) 주요 내용

□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철도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운송플랫폼사업의 안정적 시장안착) 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
- (친환경 철도차량 확대) 디젤차량을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 철도 차량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량 운행을 위한 전철화 구간도 확대
- (미래 핵심기술 개발) 체계적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철도 R&D 기술로드맵 마련 및 미래를 선도를 할 수 있는 핵심 R&D 추진

□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K-물류 구현

- (자동차 시장 변화) 배달서비스 확대 등 이륜차 지속 증가에 대응, 안전에 다소 취약한 특성을 고려한 사용신고 이후 운행폐지까지의 단계에서 관리제도 종합 개선
 - 튜닝, 인증부품 등 新시장 창출과 매매, 정비·보험 등 자동차 관리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신속한 리콜 등) 등 애프터 마켓 육성 추진
- (물류 기술개발) 기술투자 부족으로 외산 의존률이 심각한 물류 분야 인프라·장비 개발 R&D를 통한 물류 소과정의 디지털화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40%)	1,699	약 2.8만대		4만대	플랫폼과 운송서비스가 결합한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를 목표로 설정(제도개선 등으로 '20년에 이미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도 전년대비 140% 이상 도전적 목표 설정)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업계 증빙 문서

㉞ 철도 R&D 투자 확대 (30%)	80,313 66,939 82,505	90,000	'21년 R&D 예산 규모가 직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23.5%)하여 R&D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2년 R&D 예산을 작년 대비 약 10% 상향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22년 철도 R&D 예산 ≥90,000백만원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㉟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 (30%)	- 신규 -	20	사업시행 첫해로 인증기관 선정, 관련 법령 제정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 작업이 상당기간 소요(~4월) 예상이나,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인증 목표를 20개소로 도전적으로 설정	인증기관을 통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수	인증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철도건설)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어,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공사민원 등 갈등요인 상시 내재
 - 철도건설 노선, 역사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 주민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수소충전소 구축) 낮은 구축비 지원금 수준, 시내 충전소에 비해 낮은 수익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
 - 지자체 사업비 분담 독려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설득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 적극 수렴
- (전기·수소차 안전) 최근 전기차의 화재사고 및 리콜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안전 강화 요구 증대와 국내외 제작사 부담 증가,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 세밀한 정책 추진 필요
 -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장비, 검사·정비소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하나, 검사수익성이 낮아 민간참여 저조 예상되어, 공단 검사소(93곳)를 중심으로 검사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합리적 가격정책 등을 통해 민간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이륜차 관리) 자동차에 비해 관리체계가 간소한 이륜차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제도 개선으로 관련업계 및 이용자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등 세밀한 정책 접근 필요
 - 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대상차량 및 정비항목 선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어 이해관계자(이륜차 제조업체, 정비업체, 라이더단체 등)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안 도출 추진
- (생활물류시설) 높은 지가, 지역민원, 시설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영세한 생활물류 사업자의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곤란
 -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설·설비 첨단화(물류 인프라 공급 및 R&D)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대국민 물류 서비스 향상 추진
- (수소경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19.1」에 의거 '21년 하반기부터 수소화물차 시범운행이 시작 예정이나 수소화물차 보급 미비
 - 기존 경유화물차를 수소 화물차로 대·폐차에는 비용이 수반되어 일부 업계 반발이 예상되나,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등 통한 이해관계자 긴밀한 협업 및 수소 연료보조금 신설 통해 갈등 해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IV-3-①)

□ 추진배경

- 그간, 교통정책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 확충 및 수송능력 확대, 운송사업 질서 유지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수립·추진
 - 그 결과, 간선 교통망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강화, 동북아 교통거점으로 도약** 등 많은 성과 달성
 - * 고속도로 2,131km('99)→4,767km('19), 30분내 IC 접근가능 시군구 45.6%('99)→82.0%('20)
고속철도 0('99)→657.4km('19), 30분내 고속철도 접근가능 시군구 0('99)→24.2%('20)
 - ** 세계공항 순위 3위('19), 항만서비스 효율성 세계 11위('19)
- 반면, 대중교통 사각지대, 각종 규제에 따른 교통서비스 제약,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 신산업 육성 미흡 등 교통문제는 여전
 -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 대비 더딘 속도, 가용공간 부족, 이해관계 충돌 등 한계
 - 또한, 코로나 이후 개인 이용자 중심의 이동성이 중요해지고, IC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등장 등 변화 가속화

☞ 국민 이동권 보장, 교통편의 증진, 교통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개인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이동성)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추진방향

- ① (모빌리티 활성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전반의 산업·서비스 육성·지원

* 현행 교통 제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할 기반 부재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초래

- ② (운송플랫폼) 새로 도입(‘21.4)하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혁신적이고 품질높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성화 유도
 - *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과 신·구 모빌리티 간 상생 등을 위하여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21.4 시행)
 - ** 플랫폼운송사업(업역 신설) 허가제 운영, 플랫폼가맹사업(기존 택시 가맹사업 보완·승계) 면허제 운영, 플랫폼중개사업(자유업→법제화) 등록제 운영
- ③ (택시·버스 서비스) 택시·버스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④ (그린모빌리티) 탄소중립 구현 등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모빌리티 조사) 모빌리티 정책의 합리적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전국 모빌리티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국토부)
 - * 모빌리티 정의 : ‘사람과 물건의 이동성 증진’과 관련된 쏠 분야를 포괄
-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소외지역(벽오지 등)·시간대(심야 등)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지자체)
- (실증 특례)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신설
 - * 타법령에 따라 과기부 등에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총 321건 승인) 中 모빌리티 분야(11.2%)가 금융 분야(36%)에 이어 두 번째(‘20년말 기준)
-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시험·검증 허용
 - * (예시) 모빌리티수단 개발형(개인형이동수단 공유, 물류 e바이크 등), 모빌리티기술형(모바일 앱미터기 등),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형(주차로봇 등), 모빌리티 융합형(드론택시 등)
- (시범사업) 안전성 등이 검증된 수단·서비스 이용·보급 촉진, 기존 교통체계 효율성·공공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② 운송플랫폼사업의 안정적 시장안착

- (제도화 완성) 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일부를 운송시장 안정(고령개인택시 감차, 고령 택시운전자의 청장년층 전환 인센티브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활용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세부기준 마련과 기여금 수납업무 집행 등을 위한 세부 규정(고시 등) 제정
-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요금제가 결합한 플랫폼 운송사업 출시 지원
 - * (부가서비스 예시) 여성안심, 펫 전용, 비즈니스 전용, 외국인 관광 특화 등 (요금제 예시) 월정액제, 할인요금제, 시간별 탄력요금제 등
- 업계 추천 등을 거쳐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구성, 심의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발급 실시
- 기존 운송사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발급하여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장 안착 유도
- (규제완화 지원) 기존 운송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영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사업화 유도(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 * 서비스 예시 : 이동약자(장애인 등)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 아파트 입주민 대상 차량대여 서비스 제공 등
- (플랫폼과 택시 결합 활성화 지원) 관련 법(여객법, 택시발전법 등)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 택시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
 -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자발적인 택시합승에 대해 승객의 안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용(택시발전법 개정)
 -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의 확대 유도(여객자동차법 개정)
 -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③ 택시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택시 수급관리) 택시 총량산정 방식과 친환경 택시 규정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와 친환경 택시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실시
 - 택시 총량산정 방식을 소비자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 * 인구급증 지역, 신도시 등 국민 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 추진
 - 친환경 택시 도입 활성화와 고급형 택시의 제도적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서비스 개선) 서비스 평가, 앱미터 제도화, 업종개편 등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강화
 -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를 통하여 기존의 택시 불만요인(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평가 정보 제공
 - * 현행법(여객자동차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만 서비스 평가 실시 중
 -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와 요금제(사전확정 요금, 월구독형 요금 등) 출시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앱미터* 제도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 *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를 이용하는 전기식 미터기와는 구분
 - 현재 배기량(cc), 차량크기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택시업종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개선
- (자격제도 개선) 음주운전에 대한 “One Strikeout” 도입, 임시운전 택시자격 허용 등을 통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경영부담은 완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취득 제한(여객자동차법 개정)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에 대하여 임시택시운전자격 운영을 허용(규제특례)하여 모빌리티 업계의 구인난 등 완화

④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추진

- 음성적인 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 권리침해, 불투명한 거래구조, 안전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미흡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사례 및 유사 업종 사례(화물)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제별 시행계획 마련을 통한 후속조치 추진

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확대

○ (사업용 수소차 보급 확산) 여객 분야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소차 가격경쟁력 확보

-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운영 중인 시내버스 대상으로 수소차 연료보조금 시범사업 실시*

* '21년말 수소버스 약 100대 이상 추정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교통거점*에 대용량수소충전소와 부대시설 (편의·주차 등)을 복합 개발한 수소충전기지 구축

* 환승센터, 철도역, 공항, 항만, 차고지 등 교통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

- '21년 시범사업(평택항 인근 산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2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택시 운송업에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기준 개정안 고시	2월	5%	홈페이지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 간담회(모빌리티 혁신)	3월	5%	메모보고(실장)
	수소연료보조금 도입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3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2/4분기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4월	5%	메모보고(차관)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4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와 기여금 수납을 위한 세부 규정(고시 등) 마련	6월	5%	법제처 법령정보
	수소교통복합기지 시범사업 추진실적 점검	6월	5%	메모보고(차관)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6월	5%	메모보고(장관)
3/4분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위원회 구성	7월	5%	방침(장관)
	택시 애플리케이션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8월	5%	법제처 법령정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실시	9월	5%	방침(장관)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방안 과제별 시행계획 마련·추진	8월	5%	메모보고(실장)
	수소연료보조금 도입관련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고시 개정	9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4/4분기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10월	5%	국회의사일정표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차관)
	시내버스 대상 수소차 연료보조금 시범사업 실시	10월	5%	보도자료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2월	5%	의안정보시스템
	택시운송사업 업종개편 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장관)
	택시 안전관리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 (여객자동차법, 택시발전법) 개정	12월	10%	법제처 법령정보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은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동권 확대 및 교통복지 증대
 -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 신규 플랫폼 업계 등 신·구 모빌리티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사업자, 종사자 모두 수익 증가, 이미지 개선
- (이해관계 집단) 기존 운송사업 업계의 사업자 단체와 종사자 단체, 플랫폼 업계 및 예비 창업자 등

□ 기대효과

- (국민 이동권 강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강화
 - 공급자 중심의 수송력 증강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수요에 맞춘 끊임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가능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혁신) 모빌리티 실증특례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사업화 등 촉진
 -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빌리티(접근·연계·상호) 향상을 위한 전국조사, 개선계획 수립 및 과감한 지원 가능
-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화) 기존 배회영업 중심의 획일적인 운송 서비스에서 벗어나, 차종·서비스·요금제 등 측면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시 가능
 -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되므로 차량조달방식, 차종,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 적용,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 택시는 플랫폼 가맹사업 제도를 통한 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어, 플랫폼 택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쾌적한 운송 서비스 제공 등 질적 성장 가능

- (모빌리티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운송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 완성(하위법령 개정 완료)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확대 기대
-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총량 산정방식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 기대
- (전세버스 시장 선진화) 사업자·종사자 권리침해 요소 제거, 거래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친환경교통)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대용량 충전소 확충을 통하여 수소버스 가격경쟁력 확보, 그린 모빌리티 확산,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30%)	1,699	2,800	약 28만대	4만대	플랫폼과 운송서비스가 결합한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를 목표로 설정(제도개선 등으로 '20년에 이미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도 전년대비 140% 이상 증가한 도전적 목표 설정)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업계 증빙 문서
㉡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허가·면허·등록 발급(20%)	신규	신규	신규	6개 사업자	개정 여객자동차법, 규제 샌드박스 등에 근거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운송서비스를 실시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면허·등록을 발급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개정법 시행의 첫째 년도임을 감안할 때 6개 사업자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인 과감한 목표치 설정)	허가·면허·등록을 받은 사업자 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허가 포함)	방침결정, 보도자료 등
㉢ 택시 서비스 개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수 (20%)	신규	신규	신규	2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택시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건수 2건 설정	법 개정 건수	의안정보시스템
㉣ 수소버스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20%)	-	-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버스에 대한 수소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수소연료보조금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및 시행령·고시 개정 여부 시범사업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자료
	-	-	-	100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수소연료보조금 시범사업 실시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대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추출자료
㉤ 전세버스 운송 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10%)	-	-	-	신규	불법 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해관계자(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과제로 방안 마련을 목표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안 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여부 	방침결정, 보도자료 등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IV-3-②)

□ 추진배경(목적)

-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이슈로 급부상, 철도부문에서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 필요

* 파리협정에서 각 국에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20.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대통령 연설) 이후 세부로드맵 구성 중

- 역사, 승강장 지붕 등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철도시설을 발굴하여 철도분야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철도를 친환경 교통의 중심으로 육성
- 또한, 기존의 디젤기관차를 전기차량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투입하고, 수소철도 차량개발·정책지원 등 친환경 차량 확대 정책 추진
- 지금까지 우리 철도산업은 국내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 선도 기술을 따라잡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협소한 국내시장과 영세한 기업규모, 코로나 영향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

* 최선진국·국내 기술격차 : 철도차량 4.7년 / 철도시설 3.5년 / 철도운영·환경 5.6년 ('18년, 철도연 용역)

- 친환경성, 경제파급력* 등 철도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미래선도 기술 개발, 해외진출역량 제고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철도 241, 도로 212, 공항 204, 항만 201, 쏘 산업 평균 1.86('17년 국토연)

- 특히, 하이퍼튜브*와 같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첨단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하이퍼튜브 : 낮은 기압의 밀폐된 튜브에서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띄워 운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1200km/h 속력을 내는 초고속 철도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명

** (미) 버진하이퍼루프원은 네바다 사막 시험선(500m)에서 유인주행 172km/h 달성('20.11) 등 각 국 (미·중·유럽 등)에서 하이퍼루프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기술 개발단계

- 또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해외 수주 지원,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산업 규모를 확대를 위한 성장동력 가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철도형 그린뉴딜

- (철도시설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철도시설을 발굴·활용하여 '21년까지 9.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8개소) 구축 추진
 - * (면적) 145,048㎡, (용량) 9.0MW, (사업비) 135억원, (연간 임대수익) 2.9억원
- 공사·공단·발전사와 협업*하여 정비단(5개소), 역사(3개소)에 구축
 - * (공사) 기술개발, 임대 등 (공단) 국유자산 사용승인 등 (발전사) 장비 설치·관리 등
- (친환경 철도차량 확대) 디젤차량을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 철도차량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량 운행을 위한 전철화 구간도 확대
 - 아울러, 수소열차 R&D 시험주행을 실시('21.下)하고 실증 진행('22~)
 - * 4400호대급(1.2MW이상)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수소열차 개발('18~'22)
 - 그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수소철도 차량의 개발·실증을 위해 범부처 수소 R&D* 예비타당성조사(수소철도 포함) 추가 신청 추진
 - * 국토부, 과기부(주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이 참여하여 추진 중

2. 철도산업 발전지원 및 미래 먹거리 창출

-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철도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구체적 지원 방법과 절차 등 정보를 제공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장관 주재 기업간담회를 연이어 개최('19.12, '20.12)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육성,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 코로나19,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1~'25) 수립 연구용역, '20.11~'21.11, 한국교통연구원
- (미래 핵심기술 개발) 체계적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철도 R&D 기술로드맵 마련 및 미래를 선도를 할 수 있는 핵심 R&D 추진
- 세계시장을 선도할 초고속철도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와 협업하여 R&D '혁신도전 프로젝트' 선정

3. 해외진출·수주지원 및 국제철도 협력 확대

① 해외진출·수주지원

- (부품 상용화) 철도 건설·운영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철도 R&D 사업 성과물(기술·제품 등)의 상용화 촉진 방안을 지속 논의
-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 취득 지원*
 - *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최근 해외 발주처 요구에 따른 국제인증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년 지원규모를 20억원까지 확대('20년 10억원 대비 100% 증액)
 - * (국내 국제인증 취득지원 신청건수) ('18) 9건 → ('19) 22건 → ('20) 19건
- 국제인증을 보유한 철도기술 정보는 DB로 관리하고, 국내·외 홍보행사를 통해 해외 수주시 국내 철도부품 동반진출 지원
- (인적 네트워크 구축) 주요 발주국 등을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확대 운영하여('20년 10개국 17명→'21년 12개국 20명) 해외 수주네트워크 강화
 - 연수과정이 해외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생과 국내기업 간담회를 개최(3회)하고, 영문 브로셔 제작 및 연수생 DB 구축

○ (수주외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단을 병행하여 주요 발주 예상국*과 철도 협력회의, 고위급 면담 등 수주외교 추진

* ('21년 주요사업) 페루 리마 메트로 3,4호선 PMO,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터키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발리 신공항 LRT, 인도 수도권급행철도 2호선 PM/설계 등

- 건설, · 운영 · 기술 · 자금 조달 등 분야별 해외진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철도 해외진출 관계기관 협의체 확대* 운영(격월)

* 우리부 · 공단 · 공사 · 철도연 · 철도협회 · KIND → 수은 · KOICA 추가 참여 추진

- 해외진출 현주소를 진단하고 수주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 부품, 토목 등 분야별 산재된 수주자료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

* '철도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주실적 관리방안 연구'('20.8~'21.5월, 철도연 등)

2 국제협력 강화

○ (국제 여건 조성) 국제열차 운행에 필요한 절차, 권리관계 등을 규정한 OSJD 국제철도화물·여객운송협정(SMGS·SMPS)* 가입 본격 추진**

* OSJD 회원국 정부간 국제철도 화물·여객 운송시 필요한 사항을 합의한 조약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동의(필요시) → 조약 발효

- 국제철도 관련 협정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관련법(철도사업법, 철도 안전법 등) 내 협정 우선 적용 조항 마련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철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철공' 구상을 「국제포럼」 개최로 본격화하며,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소속 회원국, 우리나라와 국제철도로 연결될 주변국가(러시아, 중국 등)와 협력회의 등으로 소통 증진

○ (남북철도 연결 대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연내 착공하고,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개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철도 중견·중소기업 지원 부처 합동설명회 개최	2월	6%	보도자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2월	6%	메모보고(차관)
	하이퍼튜브 공동연구개발 추진협의체 킷오프회의	2월	6%	메모보고(장관)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홍보영상(콘텐츠) 배포	3월	6%	보도자료
2/4분기	하이퍼튜브 기술연구 과기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 선정	4월	6%	메모보고(장관)
	'글로벌 철도연수' 국제행사용 영문 브로셔 제작	4월	6%	브로셔 사본
	글로벌 철도 연수생 DB 구축	6월	6%	철도협회 홈페이지
	상반기 철도 건설·운영기관 연구개발협의체 간담회 및 우수성과 발표회	6월	6%	메모보고(국장)
3/4분기	'21년 제4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선발	9월	6%	메모보고(차관)
	해외철도 수주자료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	9월	8%	방침결정(국장)
	중·장기 철도 R&D 기술로드맵 연구용역 발주	9월	6%	방침결정(국장)
4/4분기	한-중 및 한-러 철도협력회의 개최	11월	6%	메모보고(장관)
	하반기 철도 건설·운영기관 연구개발협의체 간담회 및 우수성과 발표회	12월	6%	메모보고(국장)
	'21년 국제인증 지원기업 선정 및 인증 취득성과 보고	12월	6%	메모보고(장관)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추가 투입	12월	6%	메모보고(차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 마련	12월	8%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생산제품 판로 확보 및 해외철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철도분야 중소·중견기업(제조사, 부품사 등) 등
- (이해관계자) 철도종사자 및 기업, 해외진출 경쟁국가 및 해당 국가의 철도 관련 기업 등

□ 기대효과

- (철도시설 태양광 발전)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5,206tco₂의 온실가스 저감(수목효과 79만그루)하여 '2050 Net-Zero 달성에 기여
 - 철도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연 2.9억) 등으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일조하며, 태양광 건설 분야의 지역일자리 창출(212명)
- (친환경 철도차량 확대) 디젤 철도차량 감축과 전기 철도차량 도입을 통해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Net-Zero 달성에 기여
 - 장기적으로, 국내 비전철노선(전체의 23.6%, 16년 기준)의 디젤동차·디젤 전기기관차 에너지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기대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상세히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역량 제고
- (미래 핵심기술 개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철도시장*을 개척하여 지정학적(좁은 면적, 남북관계 등) 한계가 있는 국내 문제해결 실마리 제공

* 세계철도시장규모는 '18년부터 연평균 2~3% 지속성장, '22년 약 1831억 달러 예상

- 하이퍼튜브 기술 상용화(최대 1,200km/h급)시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간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 (해외수주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철도 관련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 창출 및 유망사업 발주기관과 협력회의 등 수주의교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 향후, 페루 메트로 PMO,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등 대규모 해외 철도사업 수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철도산업 성장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철도정책지원(V-9-일반재정②)				
① 철도정책지원(2733)			303.24	241.35
▪철도기본계획수립(303)	일반회계		240.00	125.50
▪철도산업발전지원(304)	일반회계		42.63	49.96
▪철도핵심인력양성(316)	일반회계		11.01	12.04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322)	일반회계		9.60	46.85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추진(323)	일반회계		-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① 철도 그린 뉴딜 (30%)	-	-	2	8	·(태양광발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철도시설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발전소 등 공사·공단·발전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철도형 그린뉴딜 추진	'21년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개소 ≥ 8개소 (15%)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신규	시험 주행	· (수소열차) 최초로 수소철도차량 (1.2MW급) 시험주행 성과를 이루는 신규·도전적 목표 설정	수소열차 시험주행 시행 여부 (15%)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㉞ 철도산업 발전 지원 (15%)	89,716	134,430	232,237	279,248		· (사업화실적) '19년 대비 '20년 R&D 사업화 실적이 약 70% 증가하여 '21년 R&D 사업화 실적 상향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이나 사업화 촉진을 통한 철도 산업 발전 적극 추진을 위해 작년 구매실적 대비 20% 상향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1.12월말 국가철도 R&D 성과물 사업화(구매) 실적 ≥279,248백만원 (15%)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㉟ 해외 수주 지원 및 국제 협력 확대 (55%)				신규	포럼 개최 및 홍보 및 기고 3건	· (동철공 국제포럼 개최)코로나 19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나, 대통령이 직접 제안('18.8)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포럼 개최 · (동철공 관련 홍보)인지도가 낮은 동철공에 대해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정책홍보	국제포럼 개최 여부 (15%) + 동철공 홍보 및 기고 (8%)	보도자료 등 관련 문서
	52	124	124	180명		· (국제인증 수료생)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제조업체의 국제인증 취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수료생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	국제인증 교육을 받은 수료생 수 ≥ 180명 (8%) + 간담회 개최 ≥ 3회 (8%)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2	3	3회		· (연수생-국내기업 간 간담회 개최) 국내 우수 기술 제품을 홍보, 인적 네트워크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철도 교육 참여 해외 공무원, 국내기업 등과의 간담회 확대 추진		
	-	-	2	4회		· (해외진출 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별 보유역량 및 정보를 교환하고, 민관 협력 해외 유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 2회를 달성한바, 금년은 개최횟수 대폭 확대	협의회 운영 실적 ≥ 4회 (8%) + 협력회의, 고위급 면담, 금융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횟수 등 수주지원 횟수 ≥ 6회 (8%)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수주지원 횟수) 전세계적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해외 수주외교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산업 활력 부여를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한 수주지원 활동 6건의 도전적 목표 설정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IV-3-③)

□ 추진배경(목적)

○ (전기·수소차) 국내 전기·수소차 등록대수는 '17년 2.5만대에서 '20년 14.5만대로 지속 증가 중으로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

- 최근 전기차의 화재사고 및 제작결함 리콜 등 안전에 대한 우려 증대로 전기·수소차 안전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적 개선 필요

○ (이륜차) 배달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수요는 증가* 중이나,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교통사고·사망이 늘어나는 추세**

* 사용신고 대수 : 28만대('18년) → 31만대('19년) → 38만대('20년)

** 사고(건) : 20,898('19) → 21,235('20) / 사망(명) : 498('19) → 523('20)

-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는 안전기준·리콜 등을 통해 관리 중이나, 사용신고 이후 운행폐지까지의 단계에서는 관리제도가 미흡

○ (애프터 마켓) 최근 우리나라 완성차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대규모 완성차 제작·판매 중심의 전통적 시장구조 개선 필요

* '20년 기준 내수시장 규모(신차판매)는 190만대로 '15년 이후 180~190만대 수준 유지

- 튜닝, 인증부품 등 **신시장** 창출과 매매, 정비·보험 등 자동차 관리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등 **애프터 마켓*** 육성 추진 필요

* 자동차 등록, 검사, 정비, 보험, 해체재활용, 중고차 매매, 등 완성차 사후 관리 시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수소·전기차 안전기반 확립('21.3, 대책마련)

○ (차량 안전성) 전기차 고전압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전기차에 대한 실차 안전성 평가확대 실시, 수소버스 안전기준 강화 등 추진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진단기능 강화, 사고자동통보시스템 탑재 확대 등

- **(리콜 강화)** 판매 전 리콜 대상차량의 시정조치 후 판매 및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화('21.8, 법개정), **결함조사 인력*·인프라**** 확충 추진
 - * (결함조사 1건당 조사인력) 미국 6.37명 vs 한국 1.27명 (미국의 1/5 수준)
 - ** 광주센터('19~'22, 390억원), 울산센터('21 타당성용역 2억원) 등 지역인증센터도 활용
- 민간 업계에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시 리콜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리콜정보 제공 업체를 지속 확대('20년, 1개사 → '21년, 5개사)
- **(정비·검사)** 고전원전기장치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 전기차만 정비하는 경우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 전기·수소차 검사기준 강화, 전기차 범용진단기 민감 검사소 보급 확대 및 수소차 검사소(복합 22, 전용 1, ~'22) 확충 등
- ※ (관계부처 과제) 화재 상황·유형별 진압기술·장비개발(소방청), 급속·무선 충전설비 표준개발, 수소충전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보급, 급속충전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산업부)

②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제도 정비('21.6, 대책마련)

- **(신고제도 관리강화)** 제원·소유자 등 신고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제작자에게 사용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 자동차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약 25만건)의 지자체 일제조사를 통한 정보현행화도 함께 실시('21.下)
- **(안전 검사 도입)** 불법 튜닝·정비불량 점검 등을 위한 안전검사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공단검사소 등을 통한 안전검사*** 도입 추진
 - *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22년부터 대형 이륜차 적용 후 중·소형 이륜차까지 단계적 확대
- **(정비전문성 제고)** 정비수준의 전문화·표준화 미비*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자격증(국가기술자격) 및 정비업 도입 검토**
 - * 정비 관련 민간자격은 있으나 전체 정비인력(약 3,800명) 중 32%(약 1,200명)만 보유
- **(폐차제도 도입)** 폐차제도 부재*로 인한 무단방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장을 활용한 폐차** 등 관련 제도도입 추진
 - * 현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범위에 이륜차 제외

③ 新시장 창출 및 관리사업 경쟁력 강화 등 애프터 마켓 육성(21.9, 대책마련)

- **(튜닝 활성화)**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판로지원을 위한 튜닝 기술마켓 구축 및 튜닝인증품목 추가 발굴
 - 업체 지원·기술개발 등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23, 김천) 건립 추진
 - 튜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근절
 - * 원래 판스프링은 자동차 원충장치이나,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인증부품 활성화)** 인증부품 품목(現 120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선할인 혜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시장 확대
 - * 보험 가입 시 인증부품 사용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업계 협의)
 - 공동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장비 구축(~'21.12, 군산) 및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22, 홍성) 등 대체부품 시장의 체계적 육성 지원
- **(관리사업 경쟁력 강화)** 매매·정비·검사와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21~'25) 수립
 - 정비·해체재활용·성능점검 등록(신고)시, 시설·장비 임차허용 및 성능점검 자격기준 확대*를 통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
 - *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관리사업 분야 경력 요건 완화(3→1년)
 - 온라인 경매 확산 등에 따라 자동차 경매장의 주요시설·장비 기준(주차장, 경매실, 좌석수 등)을 완화*하여 경매장 활성화 도모
 - *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좌석수(100→70석)를 각각 30% 완화
 - 대기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 을지로툰에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 업계와 논의중
- **(정보 서비스)** 서비스 연계, 신규 콘텐츠 발굴 등 자동차 365* 활성화 추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23) 착수
 - * 자동차 생애주기별(구입·운행·폐차, 매매 등) 맞춤형 정보제공(웹 81종, 앱 44종) 플랫폼
 - ** 자동차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미래차 시대의 자동차관리체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장비구축' 타당성용역 발주 요청	2월	5%	발주요청 문서
	자동차 리콜정보 민간 업체 제공 확대계획 보고	2월	5%	메모보고(장관)
2/4분기	전기·수소차 안전기반 확립과제 마련(BIG3회의 상정)	4월	5%	안건상정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고시 개정)	4월	5%	관련문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6월	5%	방침문서(차관)
	이륜차 관리제도 정비방안 마련	6월	5%	메모보고(장관)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단속업무 관계자 교육 지원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이륜차 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8월	5%	메모보고(실장)
	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정비(시행규칙 개정)	8월	5%	법령정보센터
	애프터마켓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9월	5%	메모보고(장관)
	인증대체부품 공익광고 등 홍보	9월	5%	메모보고(차관)
	인증대체부품 대상품목 추가(인증기관 기준 승인)	9월	5%	관련문서
	리콜정보 민간 업체 제공 및 리콜알림 서비스 제공	9월	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차세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10월	5%	메모보고(실장)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실시설계 및 '튜닝 기술마켓' 구축 완료	11월	5%	메모보고(차관)
	수소버스 안전기준 마련(고시 개정)	11월	5%	관련문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륜차 폐차제도 도입) 국회제출	12월	5%	메모보고(차관)
	튜닝 승인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완료	12월	5%	관보게재
	전기차에 대한 신차안전도평가 결과 공개	12월	5%	관련문서
	수소전기차 검사장 추가 확보 및 범용진단기 보급 확대	12월	5%	메모보고(차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기·수소차 등 자동차 소유·이용자, 이륜차 이용자 및 일반 국민, 자동차 제작사 및 정비·검사 업계, 튜닝 및 부품 업계, 중고차 매매업자, 보험업계,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피 부양가족 등
- (이해관계자) 자동차 제작사 및 정비·검사 업계, 튜닝 및 부품 업계, 중고차 매매업자 등 정책별 관련 업계·단체·기관 등 다수

□ 기대효과

- (전기·수소차) 안전성이 강화된 전기·수소차 제작 견인 및 신기술 적용 차의 결함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자동차 안전성 제고, 첨단자동차 검사 수요 선제적 대응 등 자동차 운행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 안전도 향상
-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생애주기별(신고-검사·정비-폐차) 관리제도 정비를 통한 이륜차 운행안전 확보 및 지자체 관리역량 제고

○ 애프터마켓 육성

- (튜닝 활성화) 규제개선을 통한 절차개선, 튜닝인증부품 확대, 센터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
- (인증부품) 대체부품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친환경차 인증기반 확대 등 新시장 육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약 20%) 등 소비자 편익 증대
- (관리사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21~'25) 수립, 신규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등 자동차관리사업 활성화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자동차 및 교통정책(IV-1-일반재정②)				
① 자동차안전도강화(4634)	일반회계	334 (584)	363 (658)	
▪ 자동차안전도강화(302)		153	157	
▪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구축(322)		85	92	
▪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설립(323)		50	45	
▪ 자동차튜닝인증기술지원(324)		16	22	
▪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사업(325)		30	45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327)		-	2	
②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4633)	일반회계	- (-)	27 (27)	
▪ 수소전기차내압용기검사소구축(307)		-	25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운영(308)		-	2	
③ 자동차사고피해지원(4641)	기금	525 (525)	516 (516)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525	516	
국토교통연구개발(VI-1-R&D⑤)				
① 교통물류연구(4158)	일반회계	60 (657)	90 (826)	
▪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 및 장비개발(307)		60	90	
국토교통정보화(VII-1-정보화⑩)				
② 자동차전산망(4258)	일반회계	47 (47)	58 (58)	
▪ 자동차전산망운영(501)		47	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건수) (15%)	신규			2	이륜차 정비요금 격차 해소(완화)를 위해 ①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륜차 폐차관리를 위해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범위에 이륜차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2건을 목표로 설정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21.6) 후 제도개선 과제 2건 추진여부 ①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②이륜차 폐차관련 자관법 개정안 국회제출	메모보고 (실장)
㉢전기·수소차 검사 인프라 확충(범용진단 검사장비 보급 및 수소차 검사소 확대 구축) (5+10%)	-	-	133	300	범용진단 검사장비('19년 개발)를 '20년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시범보급(총 133개소) 했으며, 전기차 확대에 따라 '21년부터 1,900여개 민간 검사소 본격 보급* 추진 - '21년, 300개소 → '22년 600개소 → '23년 900개소 추가보급	범용진단 검사장비 보급 검사소 개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검사소 장비 등록현황)
	3	3	4	6	수소전기차 운전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주요거점별 수소전기차 검사소 확충 - 공단검사소 22개소 선정에 '18년부터 수요에 따라 순차적 확충 중	수소전기차 검사소 신규 구축 완료 개소 수	복합검사소 구축 현황 파악(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실적(건) (20%)	3738	4081	42,232	48,600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활성화 정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 실적과 같은 대표적인 측정 가능한 성과 통계를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정 * '21년 목표는 전년대비 15%이상 증가하는 적극적인 목표 설정. ('20년에 규제완화 효과로 전년대비 일시적 급등효과가 있었음)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 실적 합산 통계로 측정 ①튜닝인증부품 장착건수 + ②국산차용 인증대체부품 인증건수	튜닝부품인증기관(튜닝협회), 대체부품인증기관(부품협회) 실적자료
㉠리콜 이행력 강화(리콜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리콜 정보 공유·안내서비스 확산) (20+10%)	신규			자관법 개정	리콜대상 차량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하고, 구매자에게 그 시정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회 통과 후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재
	-	-	1	5	민간업체의 리콜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포털사이트 정상운영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실시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민간업체를 '20년대비 5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	리콜 차량정보 민간공유·안내서비스 신규 건수	보도자료 또는 메모보고(장관)
㉢자동차365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중) 및 이용 활성화(접속건) (10+10%)	68	82	87	9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제공 가능한 서비스 6종을 발굴·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자동차365 정보제공 서비스 건수 * 신차관련 정보 등 6종 추가제공	자동차365 시스템
	-	330만건	330만건	410만건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항인 자동차이력정보를 개선함에 따라 전년 대비 5% 상향한 목표 책정	자동차365 웹 및 앱 접속 건수	자동차365 시스템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IV-3-④)

□ 추진배경(목적)

- (생활물류 지원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커머스 시장 확대 등 온라인 소비 활성화에 따라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급증
 - 산업물류와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생활물류산업의 육성기반 필요
- (물류인프라 부족) 비대면의 일상화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증* 하고 있으나, 입지부족 등으로 도심 내 인프라 확충에 한계**
 - * (물동량) '16 20억 박스 → '20 34억 박스 / (매출액) '16년 4.7조원 → '20. 7.5조원
 - ** 수도권 물량처리를 위해 택배터미널 56.8만㎡ 추가 공급 필요('19, 통물협회)
 - 이에 따라, 수도권 유희부지를 확보하고 신도시 건설 시 계획적으로 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등 물류인프라의 체계적 확충 필요
- (디지털전환 지체) AI·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물류에 결합한 혁신기업(Amazon 등)이 급부상하는 등 물류산업 여건 급변
 -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투자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물류산업 첨단화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공공 R&D 확대 필요
 - * 국내 물류기술은 글로벌 TOP(미국) 대비 78% 수준
- (친환경물류 요청) 수송부문 온실가스의 96.3%는 도로운송에서 발생, 이 중 화물차 배출량이 31.6%(2,856만톤)를 차지
 - 2030 탄소중립 요청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구현을 위해 수소, 전기 등 친환경 물류분야의 활성화 필요
- (물류공급망 다변화 요청)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발생에 따라 물류다변화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 비대면의 일상화로 급증한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해 물류 인프라, 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로 육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생활물류 혁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체계 완비

-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생활물류업을 제도화 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 및 산업 지원근거 마련
- 우선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통해 생활물류법을 제정완료(1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 시행(7.27)

② 도심 인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공급 추진

- (e-커머스 물류단지) 수도권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대형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 약 240만㎡) 조성 추진(사업계획수립, '21.12월)
 - 외곽 물류창고 집적화 및 물류·유통·IT 기능 복합화를 통해 e-커머스를 지원하는 권역별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조성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시설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 지원 위해 도심 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LH 천안물류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3층 규모 복합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21.10월 착공, '22.12월 준공예정)
 -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중소 택배분류장 조성을 위한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
- (생활물류시설 확충) 수도권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중소 물류시설 부지 제공
 - * 철도역사(철도공사, 철도공단), 고속도로 고가하부(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③ 물류산업의 첨단화·자동화 지원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첨단 물류 장비·시설·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 후 지원

-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기준을 구체화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3월) 후 인증심사 본격 착수('21.4월~)
- 인증의 주요 혜택인 이차보전 지원('21년 예산 103억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정, 취급 금융기관 선정 및 지원 실시('215월~)
- (물류혁신 R&D) 7년간('21~'27) 총 1,461억원을 투입하여 배송·인프라 첨단화, 물류 정보화 등 13개 기술을 개발하는 R&D 착수
 - '21년 도심 내 공동물류 체계 구축, 도시철도 등 지하물류, 재사용 가능 포장용기, 친환경 말단배송 등 8개 과제 기술개발 착수('21.4월~)
-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군포IFT(복합화물터미널),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를 디지털 허브로 리모델링하는 기본계획 수립(~'21.12월)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위치정보수집·이상운행감지 등을 위한 단말장치 장착현황 모니터링 및 단속
 - *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독성 2톤이상), 지정폐기물(10톤이상) 등
 - ** 구미 불산가스 누출('12) 계기, 단말장치 장착 의무화 및 2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 위험물 차량 운행경로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사고 감지 모델을 구현하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 구축(~'21.12월)

④ K-물류 시범도시 조성 지원 및 서비스 실증 지원

- (물류시범도시) 신규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계획 수립을 지원('21.12)하고, 도시·교통 등 유관계획에 반영
 - * 최적 물류인프라 용지 및 배송망 계획, 로봇배송 등 도시별 특화사업 계획
- (서비스 실증) 기존 도시(특정구역 등)의 물류문제 개선을 위해 기업·대학 등과 협업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 실증 추진
 - * (예) 특화구역 로봇 등 자율배송(캠퍼스·전통시장, 건물내), 물류 클러스터 구축(창업단지, 테스트베드), 콜드체인(급식), 유휴공간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등

⑤ 수소 물류체계 등 친환경 물류체계 확산

- 화물차휴게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21년 2곳 사업 착수 → ‘25년까지 매년 2개소 설치)
- 수소화물차 출시(‘21.下)에 맞춰 수소화물차 시범운영(‘21~‘22)에 착수하고,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
- * 「화물자동차법(‘21)」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2) 개정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신규 참여기업을 확대(‘20. 310개사→‘21. 345개사) 하여 물류·화주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 확산
- 경유 화물차의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사업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경유화물차의 저공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
- * 수송부문 중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1.1%, 차량 중 경유차로 인한 배출량은 57.1%(‘15년 기준, 교통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⑥ 한중 복합운송 등 글로벌 물류 지원 및 물류기업 육성 지원

- 중국 생산 전자상거래 화물을 신속 운송하는 新물류루트 확보 위해 한중 복합 운송 MOU 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
- * 차량교체·하역 없이 화물을 트럭에 실은 채 배에 선적하여 신속운송 가능
- 글로벌 물류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해 물류기업 대상 해외 시장 정보 제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추진(7월 방안 마련)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1:1)간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전문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21.4~12, 24건)
- 다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N:1)간 공동물류 사업모델, 비용분석, 시행안 수립 등 공동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21.4~12, 2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국회 통과	1월	10	의안정보시스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사업지 공모·선정	2월	10	보도자료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 및 인증기관 지정	3월	10	방침 및 고시
2/4분기	물류혁신 R&D 사업 착수	5월	5	협약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 공모	6월	10	방침 및 공고문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6월	10	관보 고시
3/4분기	글로벌 물류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7월	5	메모보고(실장)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신규 협약체결	8월	10	메모보고(실장)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기본설계 완료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유희부지 활용 생활물류시설 부지 추가공급(안) 마련	10월	10	메모보고(차관)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계획 수립(구리)	11월	5	메모보고(실장)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 구축	12월	10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직접적인 수혜자는 물류산업 종사기업, 종사자 등이 될 것이나, 생활물류 체계 확립, 첨단 물류시설 확충, 친환경 물류 확산 등은 궁극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민에게 혜택 배분
- (스마트 물류) 높은 지가, 지역민원, 시설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물류 사업자
 - 아울러, 택배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첨단화·자동화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강화되어 택배기사 등 종사자도 혜택
- (물류공급망 다변화) 직접 수혜자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다변화의 목적을 갖는 물류기업 및 화주이며,
 - 간접 수혜자는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여 물류비 절감을 혜택을 받는 전 국민이 대상임
- (수소물류시스템) 직접 수혜자는 수소화물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화물차 실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시범사업자이며,
 - 간접 수혜자는 수소충전 인프라를 통해 향후 본 시설을 이용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임

< 이해관계집단 >

- 생활물류를 육성, 지원하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통 물류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가능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령 내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관계자 간 의견 대립 우려
- 화물차 소음, 사고 위험 등으로 아직까지 물류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닌만큼 물류시설 입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 예상
 - (스마트 물류) 물류시설의 특성상 야간작업 및 화물차량 운행 증가 등의 우려 설치 지역 내 기존 주민들 간 이해관계 상충
 - (수소물류시스템)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사업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가능성 존재

□ 기대효과

- (생활물류 제도 기반) 생활물류법 및 하위법령 마련 통해 체계적 생활물류 육성·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보호 가능
- (스마트 물류) 스마트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설·설비의 첨단화·효율화를 통해 물류 소과정을 효율화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대국민 물류 서비스 향상
 - 물류산업을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산업을 전환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 (수소물류시스템) 수소화물차 충전소 설치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물류공급망 다변화) 영세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여 물류기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화주의 성공적 해외진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IV-3-일반재정①				
① 물류산업지원(4034) ³⁾	일반회계	-*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314)	일반회계	52	58.7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315)	일반회계	-	107.76
	▪수소물류시스템(317)	일반회계	-	80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323)	일반회계	-	-	3
VI-1-R&D⑤				
② 교통물류연구(4158) ³⁾	일반회계	-	-	89.47
		(656.66)	(826.43)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	-	-	89.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 화물차 수소연료 보조금 근거 마련(20%)		신규	법령 개정	▪ 기존 유가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는 업체를 설득하여 수소화물차 대폐차 전환을 위한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은 도전적 과제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의안정보시스템
㉡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25%)		신규	20	▪ 사업시행 첫해로 인증기관 선정, 관련 법령 제정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작업이 상당기간 소요(~4월) 예상이나,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인증 목표를 20개소로 도전적으로 설정	인증기관을 통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수	인증서
㉢ 도심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착공 (15%)		신규	1	▪ 중소 택배업체를 위한 국가주도 공동물류센터 조성사태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민원해소, 지자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 착공하는 난이도 높은 목표치 설정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건수	착공 관련 공문
㉣ 생활물류법 하위 법령 마련(25%)	-	-	법 제정	▪ 생활물류법 하위법령에 대한 노동계,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쟁점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음 ▪ 업계 설득 등으로 쟁점을 최대한 좁혀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안을 마련하고 국조실·법제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령 제정을 목표로 설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보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지원 (15%)		신규	2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은 금년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 신규 아이템 발굴이 어렵고,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임	지원 건수	보도자료

기 본 방 향

□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달성

- (교통사고 사망자 적극 감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부처 합동 종합 대책 수립,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및 점검·단속 강화
-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교통약자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년~’26년)” 수립
-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 안전도 인증체계, 수시 자체 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제도 등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하이패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구축(’21년 34개소, 누적 66개소), 단차로 하이패스 3.5m 미만 차로 폭 확장 단계적 추진

□ 안전한 기간교통망 조성

- (철도안전법·제도 고도화) 안전대책, 제3차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추진 및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철도안전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안전감독관 점검·비상대응 훈련 등을 통해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 (철도 시설·차량 첨단화) 안전운행과 밀접한 설비에 대한 IoT 기술 기반 시설상태 센싱, 실시간 고장관리 등 원격관리체계 구축하여 시설관리 디지털화
- (철도안전산업) 패키지 구매계약, 종합시험선로 활성화,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의 산업화를 통하여 철도산업 육성기반 구축

기 본 방 향

- (정밀위치 제공) GPS 오차를 대폭 개선(17→3m이내)하는 정밀위치 정보시스템(KASS)을 구축하여 '22년 대국민·'23년 항공용서비스 제공
- (항공사고 예방) 정부 안전감독과 업계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등 환경변화에도 선제적 대응
- (항공안전문화 제고) 항공산업계에 항공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소형운송·훈련기관·사용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홍보 강화
- (안전보고제도 개선) 업계의 보고문화 성숙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고제도 운영책임을 명시(시행규칙 개정), 워크숍·교육 등 홍보도 강화

□ 건설 현장 위협요인 근절

- (건설현장 점검)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점검, 불시점검 확대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TV, UCC 동영상, 안전슬로건 스티커,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배포 등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벌점 운영 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 인프라총조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 추진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기반시설 우수 관리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유도·지원
- (건축 자재) 불량자재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풍 관련 건축 안전기준 강화
- (관리기반 내실화) 건축안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 센터 설치 확대, 건축물 점검서비스 기능 강화 및 매뉴얼 개선
- (안전사각지대 해소)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취약주택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활성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10	8	38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줄음선퍼터 개소 확대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범부처 합동 교통안전대책 수립·추진 ㉢ 공유PM 의무보험 표준안 마련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음선퍼터 개소 확대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추진 ㉣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인프라 확충 ㉤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 ㉥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추진 ㉦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고 사상자수 ㉡ 철도운행장애 건수 ㉢ 운송용 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 ㉣ 준사고발생률 ㉤ 공항이동지역 항공안전장애 발생빈도 ㉥ 전국 공항 및 항공로 상·하행안전 시설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시험선로 1일 사용료 인하율 ㉡ 노후차량 교체지원율 ㉢ 국유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율 ㉣ 철도표준 개정 고시(건수) ㉤ 연구개발사업 신기술 개발 실적 (스마트유지보수 R&D)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고 사상자수 ㉡ 운행장애 건수 ㉢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안전역할 강화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소음 저감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 항행안전시설 장애시간 ㉢ 항공분야 풍수해 대응 매뉴얼 재개정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항공사 주요 장애 감축 ㉡ 통합 항공안전데이터 분석관리체계 구축 ㉢ 비정상적 항공회랑 폐지 및 新 관제 체계 운영개시 ㉣ 코로나19 방역안전 체계 구축
3. 건설 현장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실적 ㉣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제정 ㉤ 중대재해법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협업 건수 ㉥ 광역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 점검·진단 부실 개선율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기준 합리화 ㉡ 알기 쉬운 건축법령 마련 ㉢ 공공건축 조성절차 내실화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 기획 ㉤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1) 주요내용

□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달성

- (교통사고 사망자 적극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부처 합동 종합 대책 수립,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및 점검·단속 강화
-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PM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 표준안 마련,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 (교통약자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년~’26년)” 수립
- (다차로 하이패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21년 34개소, 누적 66개소), 제한속도 등 사전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T맵, 카카오내비 등) 안내 실시
 - (단차로 하이패스) 3.5m 미만 차로 폭 확장(→4.35m) 단계적 추진
- (ITS 혁신기술) 기존 ITS에 AI·IoT·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민간의 혁신 기술 공모를 통한 사업화 추진(100억원, ‘21.4~12)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환경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고 품질개선·성능평가 컨설팅 등 기술개발 지원

□ 안전한 기간교통망 조성

- (철도안전법·제도) 안전대책, 제3차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추진 및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차량·시설관리 체계화, 철도안전거버넌스 구축 등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담은 개정안 입법추진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을 점검하는 등 제4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설정
- (철도안전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안전감독관 점검·비상대응 훈련 등을 통해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 철도안전감독관의 대·내외 활동을 확대하여 사고·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예방대책마련, 운영사 컨설팅 등 추진
- 불시에 재난상황을 가정한 메시지를 운영사에 전파해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하는 분기별 비상대응 훈련 실시
- (철도 시설·차량 첨단화) 안전운행과 밀접한 설비에 대한 IoT 기술 기반 시설상태 센싱, 실시간 고장관리 등 원격관리체계 구축하여 시설관리 디지털화
- 무선통신 기반의 입환시스템 도입으로 화물열차 입환작업 중 종사자 직무사상 사고 예방 및 물류 효율화 도모
- (철도안전산업) 패키지 구매계약, 종합시험선로 활성화,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의 산업화를 통하여 철도산업 육성기반 구축
- 출고-출고후 시장 간 연계 강화, 업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5~20년)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추진
- '21년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를 (서울) 개최, 각국의 철도안전 정책 논의 및 협력체계 강화
- (항공안전관리체계 개선)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방식을 정착·고도화하고, 새로운 위험에도 선제적 대응
- (시스템 기반 안전감독) 항공사 안전데이터, 감독결과 등 수집·분석을 통해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지속 모니터링
- '21년도 중점안전지표 동향을 분석하여 식별된 취약 항공사·분야에 대한 중점 안전감독, 항공사 M&A 등 안전이슈별 밀착안전관리 시행
- (통합항공안전데이터 수집) 정부·산업계 간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 DB센터를 구축('21.5)하고, 수집 데이터 종류도 확대
- (항공교통인프라 개편) 우리나라 공역 내에 설치되어 37년간 중국·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던 항공회랑을 폐지하여 관제권 일원화 추진
- (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시행 확대) 지난해 공항공사·FSC에 이어 '21년도 공시대상 기관을 LCC까지 확대하여 시범공시 실시

□ 건설 현장 위협요인 근절

- (건설현장 점검 강화)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점검, 불시점검 확대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TV, UCC 동영상, 안전슬로건 스티커,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배포 등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벌점 운영 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 인프라총조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 추진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기반시설 우수 관리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유도·지원
 - 합동점검, 안전점검 기준 개선을 통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건축 자재) 불량자재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풍 관련 건축 안전기준 강화
- (관리기반 내실화) 건축안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 센터 설치 확대, 건축물 점검서비스 기능 강화 및 매뉴얼 개선
- (안전사각지대 해소)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취약주택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활성화
- (건축행정 개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한국건축규정 등 알기 쉬운 법령 마련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499	506	485	428	458	250 ('22년)	앞으로 2년 동안 사고사망자 매년 100명씩 감축하여 국정목표('17 대비 '22년 사고 사망자 절반감축) 달성 및 역대 최저수준 유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 사망사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자가용 이동량 증가 관리, 사고 비중이 높은 보행자 사망사고 감축 필요
 -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요인 안전 강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전시설 설치 이외에 통행제한속도 감속이 핵심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발생(경찰도 민원 등으로 소극적)
 - 우수한 사업효과*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구간 선정 단계부터 주민·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로관리기관 중심)으로 적극 설득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사항으로 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철도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개회 및 합의 필요
 - 공청회를 통한 노조 의견 수렴으로 이견조정하고, 국회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법 개정안 통과 협조 노력
- (시설·차량 첨단화) 노후시설 개량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적어,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간 개량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 우려 가능성 상존
 -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결정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개량추진
- (항공안전)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 종사자에 대한 기량관리, 기자재 정비, 안전투자 축소 등 신규 리스크 출현, 항공사 M&A 등 새로운 안전이슈 대두
 - 정부의 안전정책 수립·감독활동은 물론 항공 산업계의 자체 안전 관리·안전문화정착 노력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및 운송회복 수준에 맞추어 항공사별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M&A 등 이슈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위험을 사전 관리
- (관제공역 환수) 코로나19로 한·중·일 간 관제권 정상화 잠정합의 이후 세부 관제절차 협의, 합의서 체결 등 운영방안 마련에 국가 간 이견으로 적시 추진에 애로
 - 항공안전 확보라는 3개국의 공동 목표달성을 강조, 기본협의를 토대로 서신교환·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 협상 추진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 사업주체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부여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계 반발 우려
 -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속 설득
- (별점제도 개정) 법인 책임을 강화한 개정 별점제도의 업계 갈등 예상
 - 불합리한 별점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배포
- (시설물 관리강화) 재정소요 확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재정당국·지자체의 우려,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반발 등 갈등요소에 대한 대응 필요
 - 데이터 기반 기반시설 관리를 추진하여 재정당국 설득, 예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갈등 해소
- (건축 안전)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크므로 건축안전 제도개선과 함께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업계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점검 관계자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건축물 관리제도 정착 추진
- (건축 관련 법령) 건축 관련 법령이 너무 어려워 연간 9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필요
 - 알기 쉬운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제도를 운영하고, '3080+ 주택공급대책'에 맞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건축기준 탄력 적용
-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나, 일부 지방은 전문가 부재,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 pool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컨설팅 추진

(1) 주요 내용

□ 국민 안전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사고 사망자 적극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부처 합동 종합 대책 수립,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및 점검·단속 강화
- (보행자 우선 체계)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60→50km/h) 전면 시행(21.4월)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여 보행 우선 문화 확산
-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확인시스템 구축 및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치제한구역 기준 정립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년~26년)” 수립
-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 안전도 인증체계, 수시 자체 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제도 등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9.)

□ 안전한 스마트 도로

- (사고취약구간 개선) 도로 기하구조 위험 개선(3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54개소) 등을 통해 사고 발생확률 높은 위험도로 집중 개선
- (보행자 안전)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보도 설치(37개소) 등 국민 체감형 안전사업 확대
- (겨울철 도로안전시설 강화) 결빙취약구간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191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속 확충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1.4	1.2	1.1	1.0	최근 5년('16~'20)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평균 감소율 9% 감축 목표율로 설정 * '16년 1.7명(8%), '17년 1.7명 (3%), '18년 1.4명(15%), '19년 1.2명(12%), '20년 1.1명(8%)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경찰청 통계
㉡ 졸음쉼터 개소 확대 (50%)	14	10	12	20	장거리 운전자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간격이 긴 고속일반국도에 졸음쉼터 적극 확충을 목표로 설정	구축 개소수	메모보고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 사망사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자가용 이동량 증가 관리, 사고 비중이 높은 보행자 사망사고 감축 필요
 -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및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요인 안전 강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전시설 설치 이외에 통행제한속도 감속이
핵심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발생(경찰도 민원 등으로 소극적)
 - 우수한 사업효과*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구간 선정 단계
부터 주민·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로관리기관 중심)으로 적극 설득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V-1-①)

□ 추진배경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사망자가 26.4%(△1,106명) 감소하는 성과

*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 교통 사망자는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 그러나, OECD 선진국 비교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으로, 아직도 OECD 평균 5.6명('18)에는 미흡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7.3명('18, OECD 29위) → 6.5명('19, 26위) → 5.9명('20, 23위)

- 특히, 보행자 비중은 전체의 40%('17~'19)로 OECD(20.5%) 대비 2배(27/28위)

- ☞ 관계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그간, 높은 감소세를 기록해온 교통 사망자를 추가 감축,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국가로 도약 추진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확산 중이나, 이용수요 급증과 함께 관련 사고*도 증가

* (사고/사망자) ('17)117건/4명 → ('18)225건/4명 → ('19)447건/8명 → ('20_{잠정})867건/9명

- ☞ 이에,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 필요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최우선 가치를 반영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 필요

* 1차 수립('07년~'11년), 2차 수립('12년~'16년), 3차 수립('17년~'21년)

- 코로나 이후 승용차 이용 증가로 주차 문제가 가중되고 있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IT 기술 접목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확산 추세

* 스타벅스 62개→266개, 맥도날드 221개→248개('16년 대비 '20년)

- ☞ 주차문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도심 교통혼잡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교통사고 사망자 적극 감축

- (교통안전 종합대책)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종합 대책 수립·추진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상정·발표(3.25)

- 국무조정실 합동 관계 부처 교통안전 대책 점검 및 감축 부진 지자체 현장점검, 사고통계 보도자료 배포 등 추진

- (보행자 우선 체계)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60→50km/h) 전면 시행('21.4월)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여 보행 우선 문화 확산

- 방송인 등 유명인을 활용하여 보행자 우선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공중파)하고, 안전속도 5030 관련 현장행사·토론회로 국민 관심 제고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비신호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우선 보호받도록 제도 개선(도로교통법 개정) 병행

- (지자체·협업)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로 지자체 중심 대책 추진 및 민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집중 홍보

* 지자체,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 교통안전 영상 제작 및 공동 활용, 안전속도 5030·보행자 안전 관련 협업·집중 홍보

- (점검·단속) '2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청 협력 법규 위반 단속 강화

-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 운영으로 민·관 합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렌터카 사업자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강화

○ (유공자 포상) 교통문화 발전대회*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단체)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 도모

* 국토부, 국토위 위원,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 단체장, 교통봉사단체 및 운수종사자 등 참석

②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마련 및 안전관리

○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추진, 공유PM 대여사업 신설 등 PM 제도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2건 국회 심사 중

○ (안전관리) 공유PM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 표준안 마련*, 표준대여약관 제정 등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 공유PM 업체 및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보장범위·보장내용·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등이 표준화된 보험상품 마련

- 운전면허확인시스템 구축 및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치제한 구역 기준 정립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③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계획수립)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년~’26년)” 수립(’21.12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보급 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월)

④ 도심 주차난, 교통혼잡 문제 해소 방안 마련

○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투} 제도화) 비대면 소비 급증으로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문제 해소 방안 마련

-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통체증·보행자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승차구매점 교통 관련 제도 도입방안** 마련 추진

* (예시) 진출입로 위치, 가감속 차선 설치, 매장 내 대기공간 확보, 안전시설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및 노면표시 설치 등

○ **(주차 문제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증체계, 수시검사 도입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주차장법령 개정 등, ~'21.9월)

- 무인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주차로봇 도입·확산**을 위해 **주차로봇 관련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21.12월)

* 주차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중('20.10~'22.9)

○ **(교통영향평가 내실화) 교통체계·안전 등 실효성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기술자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21.1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1.3., 공포 1년 후 시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개최	2월	5%	메모보고(차관)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부처 협의회 실시	3월	10%	메모보고(장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발주	3월	5%	계약문서
	교통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용역 방침 결정	3월	5%	방침(정책관)
2/4분기	안전속도 5030 현장행사 및 토론회 개최	4월	5%	보도자료
	이륜차 공익제보단 인원 확대 운영	6월	5%	보도자료
3/4분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7월	5%	공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공청회	8월	5%	국회의사일정표
	기계식주차장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9월	5%	법령정보시스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 사업자 포함)	9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4/4분기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부처 합동 현장점검	10월	5%	메모보고(차관)
	교통사고의 적극적 감축 유도를 위한 교통문화 발전대회 개최	11월	5%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도화 세부방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차관)
	교통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1월	5%	방침(장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국회 통과	12월	10%	의안정보시스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12월	10%	방침(차관)
	주차로봇 시장진입을 위한 안전도심사 기준 마련	12월	5%	방침(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이해관계자)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 교통운영기관 등
- (수혜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한 교통복지 제공 확대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을 교통체계 내로 편입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의 역할 기대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별 체계적인 공급계획 및 기준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망을 제공
- 승차구매점의 원활한 정착 및 이용 주민 불편 해소
- 개발사업 또는 건축사업 시행 이후 교통안전·교통소통
- 개발사업 또는 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과 차량·보행자 안전 등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생활 속 교통문제 최소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IV-2-일반재정②)			
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교특	648	7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5%)	7.3	6.5	5.9	4.8명	OECD 평균 이상의 획기적인 교통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0년 대비 20% 감축 목표치 설정	(‘21년 교통 사망자 수 / 전체 인구) × 10만	경찰청 통계
㉡ 범부처 합동 교통 안전대책 수립· 추진(35%)	-	-	-	대책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종합 대책 수립·추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상정·발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보도자료)
㉢ 공유PM 의무보험 표준안 마련 (30%)	-	-	신규	보험 표준안 마련	공유PM 제도화 및 이용자·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보험 도입 필요	의무보험 표준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도입(30%)	150	241	259	210대	최근 3년간 지원 물량의 평균치 (210대)를 목표로 설정, 전국 법정 기준 대수 조기 달성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물량	방침결정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V-1-②)

□ 추진배경(목적)

-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22년 2천명 수준)를 위해 총력 중으로, 최근('18~'19) 연간 약 10% 감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
 -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그러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하위권 수준*이고, 정부목표 달성(연간 16% 이상 감축 필요)을 위해서는 감축기조 더욱 확대 필요
 -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전체 35개국 중 32위
 - 그간의 처벌·홍보 강화* 이외에, 인프라 측면의 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 *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단속 강화, 5030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 등
- 또한, 상주-영천 다중추돌('19.12) 및 사매 2터널 차량화재('20.2) 등 대형사고 발생으로 도로관리기관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

☞ 위험구간, 자연재해 및 과속·과적차량 등 취약요소별 맞춤형 인프라 대응체계 확립으로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 환경 조성

- 자율차·MaaS 등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미래도로는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영화감상·회의 등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 이에, 정부는 '24년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도개선·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필요한 상황
 -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대통령 주재('19.11)
- 또한, 글로벌 ITS 시장은 연평균 13%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으로, 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 '18년 약 31조 → '27년 약 93.4조 (미국 Transparency Market Research社, 2019)

☞ 2030 스마트 도로 로드맵 수립, 인프라·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및 ITS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 구조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 (실시간 모니터링) 가속도계·GPS·음향센서 등을 IoT 센서와 결합하여 교량*·비탈면** 위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교량(1,966개) 대상 연간 약 393개소 실시('21~'25, 총 425억원)

** 고위험군 비탈면 500개소 실시('21~'25, 총 1,5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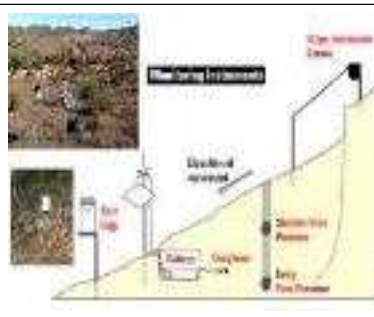
- (초동대처 강화) 터널 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CCTV·진입차단·환류 시설 작동 등이 가능한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2차사고 등 대형피해 예방

* 전국 국도터널(859개소, 22년 기준) 대상으로 5개 지방청(76개권역)별로(~'22, 1,182억원)

< 교량 모니터링 >



< 비탈면 모니터링 >



< 터널 원격관리시스템 >



<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도로관리 체계 구축 >

- (도로인프라 성능시험장) 재해·재난에 대비, 산사태·낙석·포장 등 설계 공법 체계적 검증을 위한 실규모 국가성능시험장 구축

* 국가성능시험장(약 70만m²) 실시설계 후 착공('21.12) → 준공('23.下)

< 산사태 방지대책공법 예시(도로 비탈면, 산지부 등) >



콘크리트 사방시설 설치



토석류 방지망 이용



돌망태 옹벽 설치

2.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도로환경 구축

<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 장비 및 쉼터 확충 >

- (안전띠 미착용 단속) 고속도로 본선에 단속장비를 2개소 시범 구축·운영('21.10), '22년까지 16개소(누적) 확충 추진
 - *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정보(차량번호, 영상 등)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공익 신고
- (과속 단속)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확충,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 카메라·속도표지 등 설치(現: 경찰청)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21)
 - * ('20년도) 16개소(고속국도 8, 국도 8) 설치, ('21년도) 20개소(고속국도 17, 국도 3) 신규 설치
- (졸음쉼터) 고속도로 17개소·국도 10개소 신규 설치, 여건에 따라 화장실·전기충전소·벤치·파고라·조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 졸음쉼터 운영개수('21년 기준) : (고속도로) 237개소, (국도) 53개소
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소, 50개소 신설 계획

< 도로 보수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 (작업장 여건 개선) 차량 충격흡수장치 등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근무복 시인성 개선, 안전관리자 확충**, 안전교육 강화 등 추진('21.3)
 - * 고성능 충격흡수시설(TMA) 16대 도입
 - ** 100억 이하 소규모 현장도 위험요소 고려 안전관리자 배치, 주기적 안전교육 강화
- (전용장비 도입) 유지보수시 작업자 안전을 위해 라바콘 자동설치·수거 장치* 및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시범운영('21.6)
 - * 도로 보수작업 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라바콘을 인력이 아닌 차량을 통해 설치
 - ** 사람이 차도에 나가지 않고 진공 흡입, 브러시 등으로 낙하물 자동수거(국토교통 R&D, '15~'19, 건기원)

< 고성능 충격흡수시설(TMA) >



< 라바콘 자동설치·수거장치 >



<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



< 도로파손·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행태 근절 >

- (단속권한 확보) 운행제한단속원 단속권한을 적재중량 제한(도로교통법)·적재불량(화물차운수법)·안전장치미장착(교통안전법)까지 확대 추진('21)
 - * 운행제한원은 전국적으로 장비·인력(545명)을 갖추고 있으나, 화물차운수법(적재불량), 교통안전법(DTG·차로이탈장치 등 미장착) 단속주체인 지자체는 전담인력 부족
- (단속 강화·확대) 적재중량 위반 정보제공(국토부→경찰청) 대상을 확대*하고,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화주 처벌 근거 마련(도로법 개정, '21.12)
 - * (기존) 적재량 약 10톤 이상(17만대) → (확대) 4.5톤 이상(30만대)
 - ** 도로법제117조 : 지사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또는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추가)
- (과태료 가중부과) 상습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간 위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 * 국토부-지자체간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 공유를 통한 과태료 가중부과
- (적재불량 단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계도할 수 있는 AI 장비 시범 도입
 - * 수도권 5개 영업소(20개 차로) 시범구축('21) → 수도권 44개 영업소(84개 차로) 확대('22) → 전국 확대(~'24)

< 생활밀착형 안전 사업 추진 >

- (가로등 확충)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노면상태·교통량 등에 따라 밝기를 자동 조정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 추진('21년 17km)
 - * 입체교차로·영업소·휴게시설·터널조명 등 의무 설치 대상에는 既설치 완료
 - ** 고속도로는 사고 비율이 높은 경부선 등 총 203km를 '27년까지 단계적 확충할 계획(~'22년 36km)
- (포트홀·차선 관리) 첨단장비* 보급·활용, DB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주행의 핵심요소인 포장·차선 관리 방식 효율화
 - * 차선 휘도 측정 장비 18대, 포트홀 자동탐지장비 36대 보급 ('21.3),
 - ** 지도·스마트폰앱 기반 포트홀 추적관리, 차선관리시스템(RMMS) 활용 시인성 미달구간 선정
- (사고취약구간 개선) 도로 기하구조 위험 개선(3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54개소) 등을 통해 사고 발생확률 높은 위험도로 집중 개선
- (보행자 안전)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보도 설치(37개소) 등 국민 체감형 안전사업 확대

- (겨울철 도로안전시설 강화) 결빙취약구간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191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지속 확충

3. 자율주행을 위한 ITS 및 C-ITS 구축 및 스마트도로 조성

< 전국 주요 도로 디지털 도로망 구축 추진 >

- (인프라)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대비, '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약 4.8만km) 디지털 도로망 구축
 - 전국 국도 및 지방도에 ITS(5,245km) 구축, C-ITS 본사업 착수
 - * 국도 감응신호시스템 효과 : 지체시간 41.8%, 통행시간 11.7%, 신호위반 36.1% 감소
 - ** 사고위험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지점을 선정하여 스마트 CCTV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 강화
 -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제공·활용하기 위한 C-ITS 센터 구축방안 마련('21.12)
- (서비스) 자율차 도입시기에 맞춰 일반차 및 자율차 수준(L3, L4)별 맞춤형 안전정보 지원을 위해 'ITS 서비스 로드맵' 수립('21.12)
 - 도로 유형, 도시 규모, C-ITS·자율차 보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 마련
 - * ITS : 소통정보 우회정보, 돌발정보 등 22개, C-ITS : 신호정보, 보행자정보 등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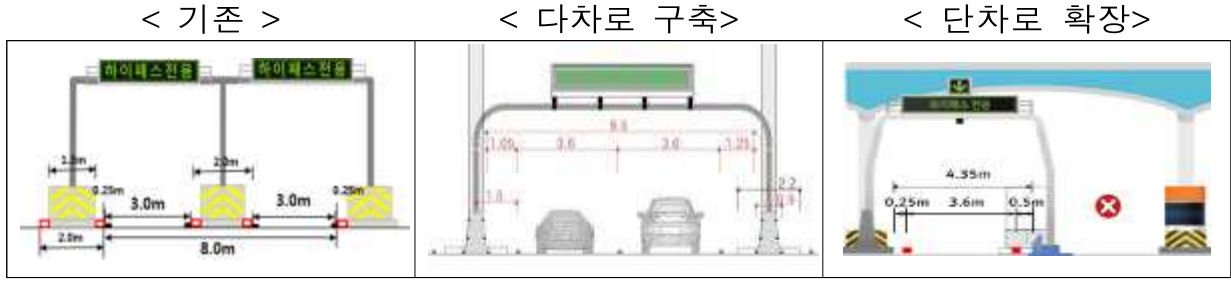
< 민간의 창의적인 ITS 기술 발전 지원 >

- (혁신기술 공모) 기존 ITS에 AI·IoT·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민간의 혁신 기술 공모를 통한 사업화 추진(100억원, '21.4~12)
 - * 교통소통,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ITS 사업 추진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환경*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고 품질개선·성능평가 컨설팅 등 기술개발 지원
 - * ITS 성능평가센터內 C-ITS 통신(V2X) 시험장비, 실도로 시험 영상·데이터 제공 등

< 안전하고 빠른 하이패스 확대·개선 >

- (다차로 하이패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21년 34개소, 누적 66개소), 제한속도 등 사전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T맵, 카카오내비 등) 안내 실시

- (단차로 하이패스) 3.5m 미만 차로 폭 확장(→4.35m) 단계적 추진
 - * (1단계) 47차로(∼'20년까지), (2단계) '21년 35차로, '22년 35차로 등 70차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가중치 (%)	자료출처
1/4분기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추진(적극행정)	2월	5%	보도자료
	과태료 가중부과 시스템 구축 추진	3월	5%	관련 공문
	고속도로 하이패스 정비계획 수립	3월	5%	방침(국장)
2/4분기	적재중량 위반정보 대상(10→4.5) 확대 추진	5월	5%	관련 공문
	제2차('21-'25) 도로관리계획 수립	6월	10%	관련 공문
3/4분기	'21년 고속도로·국도 ITS 본격 구축 착수	8월	10%	관련 공문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실시설계 완료	9월	10%	메모보고(장관)
	안전띠 미착용 단속장비 시범 운영 개시	9월	10%	메모보고(장관)
4/4분기	과적 근절 강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11월	10%	의안정보시스템
	영상기반 적재불량 단속시스템 시범 운영 착수	12월	10%	메모보고(장관)
	ITS 교통혁신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12월	10%	보도자료
	구간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개시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국의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 등 쏘 국민, 도로안전·ITS 부문 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업체
- (이해관계집단) 책임성이 강화된 도로관리기관(국토부·지자체·민자법인 등), 도로교통 안전 관련 관계부처(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취약요소별 선제적 대응으로 고속도로·국도 사망자는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
 -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으로 안전·성능 확보 및 적재적소 투자 등으로 효율적 예산편성 가능
- 도로교통 인프라 효율화를 통한 혼잡·사고·물류비용 등이 절감되어 연간 11.8조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스마트도로를 구축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등 적극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V-5-재정①)				
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	교특		7,944 (7,944)	8,605 (8,605)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461)			7,944	8,605
도로보수(V-5-재정②)				
② 도로보수(1733)	교특		6,262 (6,262)	6,644 (6,644)
▪ 도로유지보수(461)			6,262	6,6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1.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55%)							
㉠ 졸음쉼터 개소 확대 (10%)	14	10	12	20 (개소)	○장거리 운전자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간격이 긴 고속·일반 국도에 졸음쉼터 적극 확충 을 목표로 설정	㉠ × 10% ㉡ × 15% (3개 항목 각 5%) ㉢ × 15% (3개 항목 각 5%) ㉣ × 15% (3개 항목 각 5%) = 55%	메모보고(장관)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	신규			316 (개소)	○일반국도 노후교량 에(25년 이상)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하여 거동분석 및 보수·보강 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5년까지 1,966개소 구축 목표		메모보고(장관)
	-	-	10	60 (개소)	○GPS, 광섬유센서 등 첨단 센서와 CCTV를 활용 하여 비탈면 위험성을 자동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대폭 확대 * '25년까지 500개소 구축 목표		
	-	-	82	221 (개소)	○ 터널 사고시 신속대응 및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중소터널을 장대터널 중심으로 권역별 원격관리 체계 단계적 구축 추진 (총 터널859개소, 76개 권역) * '20년 터널 82개소, 6개 권역完 '21년 터널 221개소, 22개 권역 추진		
㉢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추진 (15%)	81	84	65	56 (개소)	○ 일반국도상 교통사고 잦은 곳의 '22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개소수(54개소) 협의가 완료됐으나, 사업개소 추가 발굴 및 초과(추가 2개소) 달성 하여 도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 매년 통계분석, 국조삼국토부-경찰청 협의를 통해 사업개소수 확정		메모보고(장관)
	-	12	25	30 (개소)	○ 도로 기하구조가 취약 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 을 대상으로 도로선형을 개량 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전년대비 20% 증가 한 과감한 목표설정		
	신규			17 (km)	○기상악화 시 자동으로 조명을 점등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7km로 목표 설정		
㉣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인프라 확충 (15%)	-	-	1,136	1,212 (개소) 누적	○교량, 터널 등 결빙취약구간에 선제적·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 확충(76개소) 을 목표로 설정 *20년1월 종합대책에 따라 '20년 집중 설치 후 취약구간 추가 설치		메모보고(장관)
	-	-	2,576	2,868 (개소) 누적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새벽에도 결빙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는 조명식 결빙주의표지 설치 구간 추가 발굴·설치 목표(292개소) 설정 *20년1월 종합대책에 따라 '20년 집중 설치 후 취약구간 추가 설치		메모보고(장관)
	-	-	600	791 (개소) 누적	○국도 상 모니터링 대상 CCTV 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인력을 통한 돌발상황 인지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 차량 정지·역주행 등 돌발상황 조기 감지 필요 하여 CCTV 추가 설치(191개소) 를 목표로 설정		관련 공문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 국민체감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45%)							
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 (15%)	1	11	17	34 (개소)	○ 기존 하이패스의 좁은 차로폭, 제한속도 운영 한계 등 교통안전상 문제 개선을 위하여 다차로하이패스로 점진적 개선 증으로 도로이용자에게 통행시간 단축, 통행쾌적성 등을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20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목표를 설정	㉓ × 15% ㉔ × 15% ㉕ × 15% = 45%	메모보고(장관)
㉕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추진 (15%)	신규			3 (공모사업 건수, 100억원 규모)	○ 공공주도 ITS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기술 기반 서비스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건이상, 총 100억원 규모 민간제안 공모선정하여 민간 혁신 기업 지원 목표 설정		메모보고(장관)
㉖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15%)	70	93	102	98 (개소)	○ 보행자, 부도로 이용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도로 차량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를 하지 않아 교통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효과가 있는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0% 높은 목표 설정		관련 공문

(1) 주요 내용

□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및 철도안전 구현

- (철도안전법·제도) 안전대책, 제3차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추진 및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차량·시설관리 체계화, 철도안전거버넌스 구축 등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담은 개정안 입법추진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을 점검하는 등 제4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설정
- (철도안전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안전감독관 점검·비상대응 훈련 등을 통해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 철도안전감독관의 대·내외 활동을 확대하여 사고·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예방대책마련, 운영사 컨설팅 등 추진
 - 불시에 재난상황을 가정한 메시지를 운영사에 전파해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하는 분기별 비상대응 훈련 실시
- (철도 시설·차량 첨단화) 안전운행과 밀접한 설비에 대한 IoT 기술 기반 시설상태 센싱, 실시간 고장관리 등 원격관리체계 구축하여 시설관리 디지털화
 - 무선통신 기반의 입환시스템 도입으로 화물열차 입환작업 중 종사자 직무사상 사고 예방 및 물류 효율화 도모
- (철도안전산업) 패키지 구매계약, 종합시험선로 활성화,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의 산업화를 통하여 철도산업 육성기반 구축
 - 출고-출고후 시장 간 연계 강화, 업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5~20년)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추진
 - '21년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를 (서울) 개최, 각국의 철도안전 정책 논의 및 협력체계 강화

□ 안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 (항공안전관리체계 개선)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방식을 정착·고도화하고, 새로운 위험에도 선제적 대응
 - (시스템 기반 안전감독) 항공사 안전데이터, 감독결과 등 수집·분석을 통해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지속 모니터링
 - '21년도 중점안전지표 동향을 분석하여 식별된 취약 항공사·분야에 대한 중점 안전감독, 항공사 M&A 등 안전이슈별 밀착안전관리 시행
- (통합항공안전데이터 수집) 정부·산업계 간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 하기 위해 통합 DB센터를 구축('21.5)하고, 수집 데이터 종류도 확대
- (항공교통인프라 개편) 우리나라 공역 내에 설치되어 37년간 중국·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던 항공회랑을 폐지하여 관제권 일원화 추진
- (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시행 확대) 지난해 공항공사·FSC에 이어 '21년도 공시대상 기관을 LCC까지 확대하여 시범공시 실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철도사고 사상자수 * 운행거리 1억km당 (20%)	36.6	22.6	18.9	23.4	최근 3년간 철도사고 사상자수 평균은 26.0명임 - '21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26.0명보다 10.0% 감축한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임 <참고> 철도사고 사상자추이 '18년 36.6(256,724,000km, 94명) '19년 22.6(256,515,000km, 58명) '20년 18.9(254,095,000km, 48명)	'21년 철도사고 사망자수 / '21년 1억km당 운행거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철도운행장애 건수 * 운행거리 1억km당 (20%)	90.7	135.8	88.2	94.4	최근 3년간 운행장애 건수는 평균 104.9건임 - '21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104.9건보다 10% 감축한 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참고> 운행장애 건수 추이 '18년 90.7(256,724,000km, 233건) '19년 135.8(256,515,000km, 349건) '20년 88.2(254,095,000km, 224건)	'21년 운행장애 건수 / '21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운송용 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건) (15%)	1.74	1.63	1.3	1.2	'20년 대비 5%를 감축한 1.2건을 목표로 설정 (국정 과제 목표* 대비 상향 설정) * '22년까지 5년 누적사고 발생률 1.54건 이하 감축을 목표로 '21년 목표치는 1.54건임	{(최근 5년간 사고건수* 합)×1백만} / (최근 5년간 비행횟수의 합) * 악기상, 천재지변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제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기 사고 통계자료, 항공협회 항공통계자료

④	준사고발생률 (백만 비행횟수 당 준사고 발생건수) (15%)	2.1	7.38	3.6	2.1	준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방식 적용을 통해 과거('18년) 수준으로 준사고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과감하게 목표치 설정	{준사고 발생 건수 / 비행횟수}×1백만 * 소수점 2째 자리 반올림 ** 악기상, 천재지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 건수는 제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 사고 통계자료, 항공협회 항공통계자료
⑤	공항이동지역 항공안전장애 발생빈도 (건/1만운항회) (15%)	0.068	0.065	0.019	0.050	공항 내 사고는 항공기 지연, 인명·재산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 최근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운항 1만회당 장애 발생빈도의 3년 평균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사고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건수의 1만운항회당 발생빈도 집계	피해상황 보고서 등(지방항공청)
⑥	전국 공항 및 항공로 상 항행 안전시설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15%)	0	0	0	0	'20년 항행안전시설 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0'건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항행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따라 '21년에도 항행안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으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전국 공항 및 항공로 상 항행안전시설 장애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 건수 * 대상 항공기는 우리나라 공역내 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용 항공기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SMS)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사항으로 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철도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개회 및 합의 필요
 - 공청회를 통한 노조 의견 수렴으로 이견조정하고, 국회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법 개정안 통과 협조 노력
- (시설·차량 첨단화) 노후시설 개량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적어,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간 개량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 우려 가능성 상존
 -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결정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개량추진
- (항공안전)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 종사자에 대한 기량관리, 기자재 정비, 안전투자 축소 등 신규 리스크 출현, 항공사 M&A 등 새로운 안전이슈 대두
 - 정부의 안전정책 수립·감독활동은 물론 항공 산업계의 자체 안전 관리·안전문화정착 노력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및 운송회복 수준에 맞추어 항공사별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M&A 등 이슈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위험을 사전 관리
- (관계공역 환수) 코로나19로 한·중·일 간 관계권 정상화 잠정합의 이후 세부 관계절차 협의, 합의서 체결 등 운영방안 마련에 국가 간 이견으로 적시 추진에 애로
 - 항공안전 확보라는 3개국의 공동 목표달성을 강조, 기본협의를안을 토대로 서신교환·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 협상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V-2-①)

□ 추진배경(목적)

- (철도시설 첨단화) 철도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집중 개량과 동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
 - 한국형뉴딜 기초를 반영하여, IoT 센서를 활용하여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기 보수토록 SOC 디지털화
- (안전산업 육성) 철도차량부품 산업은 전세계에서 연간 232조원에 달하는 시장임에도 국내 점유율은 2%에 불과하므로,
 - 철도 차량·부품·신호 등 철도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 해외진출을 위해 집약적 지원을 통한 투자·R&D 확대, 성능인증 고도화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철도시설·차량의 첨단화·현대화

- ① (시설관리 디지털화) 안전운행과 밀접한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IoT 기술 기반 시설상태 센싱, 실시간 고장관리 등 원격관리체계 구축
 - * 전기설비 : 경부고속2단계 및 경부일반선 구축 완료, 호남고속선 일부구축
 - ** 구조물 : 선로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시범설치(강릉선) 착수
 - 영업차량에 검측모듈을 설치하여, IoT 센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사각지대 해소
 - * ('21년) 영업열차 1대 시운전시험 착수 및 3대 추가 구매
- ② (신호 국산화) 국내에서 개발한 신호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조기 상용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22)
 - * (도시철도) 일산선6.6km, 전동차 2편성 (고속·일반철도) 전라선180km, KTX 2편성
 - ** 시범사업 후 기술보완을 거쳐 규격을 정비, 국가 철도망에 본격 도입
- ③ (무선제어 입환) 무선통신 기반의 입환*시스템 도입으로 화물열차 입환작업 중 종사자 직무사상 사고 예방** 및 물류 효율화 도모

* 차량의 선로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열차를 조성하는 작업

** 입환작업자(수송원)가 원격시스템(조이스틱형)으로 기관차를 조종 입환작업

- (제도정비) 무선제어 입환에 필요한 운전면허제도를 개편하고(‘21.5), 운전환경 변화를 반영한 철도차량운전규칙 개정 등 추진(‘21.6)
-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따른 무선제어입환 인력양성을 위해 장비 운전면허과정을 마련하여 연내 교육훈련 실시(50명 이상)
- (시범사업) 무선제어입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수습 교관 양성, 운영 매뉴얼, 운용내규 마련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1.2~)

- ④ (미래 핵심기술 연구)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기술기반의 진단·예측시스템을 철도안전 각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1. (스마트 유지보수 R&D) 철도차량의 이상상태를 자동검측하고, 자가 상태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구축(59,8억, ~’23)
 2. (데이터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철도안전관리에 적용하여, 위험요인 선제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사업 생태계 조성(2,357억, 예타 중)
 3. (AI기반 대형 복합역사 화재대응) 대형복합역사의 대심도화/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방재시스템 구현

2. 철도시설·차량관리 고도화

- ① (노후차량·시설 개량 및 보완) 철도안전 위협요소인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해 국비지원 및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개량 추진
- (노후차량 교체) 철도공사·부산 도시철도 노후차량 417량의 적기 교체를 위해 국비 626억원 지원(부산시 200억, 철도공사 426억) (7월)
 - (노후시설 개량) 안전등급이 낮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기설비, 신호 등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 (개량예산) ’18년 10,605억원 → ’19년 101,438억원 → ’20년 119,793억원 → ’21년 122,906억원
- ② (생애주기 관리) 차량·시설의 이력·상태 등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지보수·개량 등 의사결정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차량·시설관리 강화를 위해 ①차량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②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12월)

- ③ (차량 내 공기질 관리) 쾌적한 철도 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기준(안) 마련(10월)
- ④ (사고보고체계 등 개선) 차량고장 시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보고를 신설하며, 복수기관간 사고처리 근거를 마련(3월)

3. 철도안전의 산업화를 통한 철도산업 육성기반 구축

- ① (패키지 구매계약) 출고-출고후시장 간 연계 강화, 업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5~20년)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추진
 - 철도공사 등 공공운영사 우선으로 노후차량 대체 전동차 등에 대해 패키지 시범계약 발주 추진('21.10.)
- ② (차량·용품 표준화) 주요 부품을 표준화(KS, KRS)하고, 차량·시설 용품 기술 기준(RAMS 등)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21.12)
 - 관계자 의견수렴* 등 통해 철도표준규격 개정고시(12월), 차량제어 장치의 안전성 강화 위한 국제안전기준(RAMS) 적용방안 마련(10월)
- *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설명회 (6월)
- ③ (종합시험선로 활성화) 사용료를 추가로 인하하여 성능시험을 지원하고, 부품시험부터 완성차 주행시험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고도화
- ④ (공인검사 체계확립) 형식승인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검사결과의 국제통용을 위해 복수 검사기관 지정, 공인검사자격 취득 방안 마련*
 - 복수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2월)
- ⑤ (기술개발 인력양성) AI, 자율주행 등의 철도분야 접목을 위해 젊고, 유능한 기술개발 인력이 철도로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
- ⑥ (철도클러스터 추진방안 마련)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시장조사, 입주업종 및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단지 계획, 상세 타당성검토 등 추진방안 마련
- ⑦ (국제협력체계 구축) '21년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를 (서울) 개최, 각국의 철도안전 정책 논의 및 협력체계 강화 (10월)

* IRSC(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 : 철도안전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30여개국 민·관·산·학·연 관계자 300여명 참석예정

- (주제)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①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②안전문화, ③종사자 안전, ④국제협력 등 4개 분야

* 오송시험선, 고양차량기지, 구로관제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참관

- (홍보) 홈페이지, SNS(유튜브),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IRSC 핵심그룹의 인적네트워크도 활용 예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중앙선 개통 및 KTX-이음 운행관련 안전관리 활동	1월	5%	메모보고(차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3월	5%	고시문
2/4분기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방안 시행	4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계획 수립	4월	5%	메모보고(장관)
	철도클러스터 추진방안 마련	5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차량운전규칙 개정	6월	5%	개정훈령
	철도운영기관 대상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실시	6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 실시	6월	5%	메모보고(국장)
3/4분기	철도유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6월	5%	고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예산 배정	7월 8월	5%	예산배정공문
4/4분기	IRSC(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 개최 홍보	9월	5%	보도자료, 홍보배너, SNS
	IRSC(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 개최	10월	5%	메모보고(장관)
	철도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술기준(안) 방침	10월	5%	방침
	장기패키지 구매계약 발주	10월	5%	메모보고(장관)
	철도표준규격 개정고시	12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차량이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완료	12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시설관리시스템구축 완료	12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안전법 개정(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기관 지정)	12월	5%	법 개정
	한국형 신호시스템 시범사업(전라선) 구축 추진	12월	5%	메모보고(국장)
	IoT 기반 철도시설 원격관리체계 구축 보고	12월	5%	메모보고(국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철도관련 기업 및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국민
- (이해관계집단) 해외진출 경쟁국가 및 해당국가 관련기업 등

□ 기대효과

- 철도시설·차량의 첨단화·현대화로 철도이용객에게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철도산업 육성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철도안전(일반)(V-9-재정①)				
① 철도안전(일반)(2731)	일반		15,152	17,927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301)			3,318	4,461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302)			10,097	11,695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303)			1,398	1,462
▪ 철도시설위탁및관리(309)			322	292
▪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312)			17	17
지하철건설지원(V-11-교통시설특별회계①)				
① 지하철건설지원(3031)	교특		929	1,501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332)			929	369
▪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351)			-	1,132
데이터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 증진(VII-1-정보화(1))				
① 철도정보화(4232) ³⁾	일반		7.5	4.5
▪ 철도차량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50)				
R&D 성과활용을 통해 국토교통 사업부가 가치 창출(VI-1 R&D(6))				
① 철도기술연구(4159) ³⁾	교특		55	67
▪ 철도차량스마트유지보수기술 개발사업(3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종합시험선로 1일 사용료 인하율 (20%)	-	0%	35%	75%	'21년 오송시험선로 1일 사용료 / '19년 오송시험선로 1일 사용료	철도기술연구원 운영실적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노후차량 교체지원율 (20%)	신규		30%	○ 철도운행안전의 위협요인인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최초 국비지원사업으로 과감히 목표 설정 * 노후차량(25년 이상) 1,313량	신규교체수량 / 노후차량전체수량	예산배정 공문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국유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율 (20%)	6.5%	6.3%	8.3%	9.2%	○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위험성 높은 노후시설(전차선로, 배선 설비 등) 개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를 목표치 설정 * 노후시설 총개량대상 33,650개소	노후시설 개량개소 /총개량대상개소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철도표준 개정 고시(건수) (20%)	20	56	70	85	○ 철도차량의 설계 및 시험 요구 기준인 철도표준 개정을 전년대비 20% 상향으로 과감한 목표설정	철도표준 개정건수	고시문
㉤ 연구개발사업 신기술 개발 실적 (스마트유지보수 R&D) (20%)	2		4	○ 인적오류 최소화, 철도차량 정비 품질 향상을 위해 AR/VR 활용한 정비지원 콘텐츠 4종 개발	콘텐츠 4종 개발 실적	관련공문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V-2-②)

□ 추진배경(목적)

- '20년 말 철도사고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54%가 감소했으며, 사상자 수 또한 같은기간 대비 63%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 (사고) '16.12 124건 → '20.12 57건 54%↓ / (사상) '16.12 122명 → '20.12 45명, 63%↓

- 경부선 오송인근 단선장애('20.5), 천안 소정리역 작업원 사망사고('20.12)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고·장애 지속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계획기간(~'22년) 도래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법·제도 고도화

- ①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화된 철도환경을 반영하여, 철도안전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을 점검하는 등 제4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설정

- ②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안전대책, 제3차 종합계획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선 용역 등을 반영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추진

-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여객의 안전을 위한 철도보안 강화 등 연구용역 및 검토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입법추진('21.6월)

- ③ (철도시설 관리기준 마련) 「기반시설법」의 하위입법으로 철도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성능개선(개량) 우선순위 설정

- 「시설물안전법」, 「철도건설법」상 평가를 바탕으로 최소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성능평가 우선순위를 설정

- ④ (관제 고도화) 단일체제로 되어있는 관제자격에 도시철도관제만 가능한 2종면허를 신설해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하고,
 - 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열차운행 자동관리 등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2관제센터 기본계획 고시(12월)
- ⑤ (종합시험운행 고도화) 최근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그간 제도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
 - * 종합시험운행 생략·단축 범위 명확화,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구체화 등
- ⑥ (궤도안전 강화) 궤도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궤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운송법·제도 개선안 마련

2. 철도안전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① (운영기관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21.4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준평가 결과가 고려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경영평가 지침개정 추진(‘21.12월)
- ② (철도안전 점검강화) 철도안전감독관의 대·내외 활동을 확대하여 사고·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예방대책마련, 운영사 컨설팅 등 추진
 - 전국 전차선 일제점검 등 사고·장애 빈발요소의 사전예방적인 점검,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권역별 방문 컨설팅 실시
- ③ (노후차량 점검강화) 차량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민간전문기관의 부실진단 예방을 위한 진단결과의 평가기관 지정근거 마련 추진(12월)
 - * 서울교통공사 차량에서 정밀안전진단 시 정상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차균열이 발견되는 등 부실진단 사례 발생
- ④ (비상대응 훈련) 불시에 재난상황을 가정한 메시지를 운영사에 전파해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도모(분기별 1회)
 - 도시철도의 역사 내 화재대처, 무인운전경전철의 비정상모드에 따른 초기대응 및 신속한 수습·복구 능력 중점 점검

⑤ (철도안전 문화 확산) 운영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철도안전 혁신 챌린지 2021” 개최

* (공모기간) 10월 ~ 11월 / (발표 및 시상) 12월

- 기존 운영기관 참여에 더해 대국민 참여부분을 신설, 철도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정책아이디어로 활용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관리 추진

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스크린도어(12개), 선로변 방호울타리(211km) 및 승강장 등 고화질 CCTV(213개역, 1천대), 등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방안>

유형	추진방안
스크린도어	광역급행철도 중 운행계획 변경으로 추가 승하차구간에 설치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에 설치(2,927km 중 2,700km 완료 추진)
CCTV 등	경부선 등 19개 광역철도구간 우선 개량 추진

② (여객안전 강화) 철도범죄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코레일특에 범죄신고 마련, 철도보안검색 증장기 전략 수립

- 또한,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47조)를 안내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객안전을 강화

③ (재난대응 역량강화) 중앙부처, 운영사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열차사고·장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위기대응 역량강화) 열차 탈선·충돌·화재 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토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21.3)
- (사면관리 고도화) 낙석·수해발생 우려개소에 지능형 CCTV(~6월) 설치, 관리체계 일원화*·산림청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기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 (개선) 한국철도공사로 관리 일원화

4.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① (로드맵 마련) 중대재해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사업주의 안전 보건관리책임 강화 및 의무 확대 등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선로작업 시 주간작업시간 확보(1h), 외주작업 시 운행안전관리자의 감리 선임, 열차접근경보앱 보급, 법령 위반업체 패널티 부여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철도안전감독관 활동계획수립	1월	5%	방침(정책관)
	철도재난 불시 비상대응훈련 계획수립	2월	5%	메모보고(국장)
	무인운전경전철 비상대응체계 개선	2월	5%	보도자료
	도시·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 통보	3월	5%	공문
	철도안전감독 백서발간	3월	5%	메모보고(국장)
2/4분기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 수준평가	4월	5%	메모보고(장관)
	도시철도분야 관계면허 신설을 위한 개정안 마련	4월	5%	방침(정책관)
	열차 내 금지행위 홍보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월	5%	공문
3/4분기	철도보안검색 중장기 전략 수립	7월	5%	메모보고(국장)
	코레일 특 범죄신고 체계 마련	8월	5%	메모보고(국장)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9월	5%	메모보고(국장)
	전차선로 관리취약구간 일제점검 결과보고	9월	5%	메모보고(국장)
4/4분기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키오프 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 공고	10월	5%	메모보고(장관) 보도자료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10월	5%	고시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결과보고	12월	5%	메모보고(국장)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12월	5%	방침(정책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본격추진 홍보 및 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	12월	5%	보도자료 및 고시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 마련	12월	5%	보도자료 및 메모보고(국장)
	철도재난 불시 비상대응훈련 결과보고	12월	5%	메모보고(국장)
	철도안전 혁신 챌린지 2021 결과보고	12월	5%	보도자료 및 메모보고(국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철도안전 체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철도사고의 예방이므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철도교통 이용객이 최종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철도종사자·운영기관의 안전관리 강화가 대부분으로 철도종사자(노조 포함) 및 운영기관이 최대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 철도종사자의 인적요인으로 발생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감소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통한 철도안전고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철도안전(일반)(V-9-재정①)				
① 철도안전(일반)(2731)	일반		15,169	17,954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301)			3,318	4,461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302)			10,097	11,695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303)			1,398	1,462
▪ 철도시설위탁및관리(309)			322	292
▪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312)			17	17
▪ 철도치안관리(341)			17	27
지하철건설지원(V-11-교통시설특별회계①)				
① 지하철건설지원(3031)	교특		929	1,858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332)			929	369
▪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351)			-	1,1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철도사고 사상자 수(40%) * 운행거리 1억km당	36.6	22.6	18.9	23.4	○ 최근 3년간 철도사고 사상자 수 평균은 26.0명임 - '21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26.0명보다 10.0% 감축한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임	'21년 철도사고 사망자수 / '21년 1억km당 운행거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운행장애 건수 * 운행거리 1억km당 (40%)	90.7	135.8	88.2	94.4	○ 최근 3년간 운행장애 건수는 평균 104.9건임 -'21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104.9건보다 10% 감축한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21년 운행장애 건수 / '21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안전역할 강화 (20%)	신규			1	○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철도안전관리 추진하는 목표로 도전적인과제	철도안전법 개정안 마련	방침(장관)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V-2-③)

□ 추진배경(목적)

- (근로자 안전) 국감, 언론 등에서, 항공기 사고 등에 비해 그간 소외되었던 공항의 지상조업 작업장의 열악한 근로자 안전 문제가 제기
 - 지상안전 강화 추진계획('20.1)으로 근로자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차량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
- (소음피해) '제3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21~'25)'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은 직접적 지원의 강화와 소음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 요구
 -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의 체계 개편 및 소음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 및 소음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항행시설 개선) 항공교통량 증가 및 첨단기술 발달 등 미래 항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필요
 - 또한, 항공전용통신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등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공항 안전성 제고 》

지상조업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공항의 안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공항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마련

- (근로자 안전) 근로자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신규 개선과제 발굴, 고용주(법인)까지 책임성을 확대*(과태료 등)하는 법안(공항시설법 개정) 발의*
 - * 법인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 교육의무 신설,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업무정지→과태료)

- (항공장애표시등) 현재 정부가 위탁 검사하는 항공장애표시등·표지를 소유·관리자의 자체관리* 유도,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11월)
 - * 자체 점검결과 제출 및 관리자 교육 의무화, 검사주기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 (재난대응) 태풍·폭우·대설 등 풍수해 대응 매뉴얼(실무 및 행동) 정비(5월, 10월)를 통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공항소음 정책 추진 》

정책 수혜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음대책사업의 사업내용, 추진 체계 개편 및 정확한 소음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 (소음대책사업 개편) 냉방시설 등의 일률적 설치 지원방식에서 주민 선택을 통한 직접 지원(현금성 지원)으로 전환 등 개편 추진*
 - 아울러, 소음영향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들이 더 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
 - * 현재는 소음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지원 중(소음도가 높은 순서대로 설치, 일부 소음이 극심한 지역에는 토지매수·손실보상 청구권 부여)
- (주민지원사업 개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및 사업유형 다양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 현재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도로정비 등) 위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
- (소음정보 제공) 환경부·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 정보의 통합방안 마련(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음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
 - * 현재는 양 부처에서 각각 측정망 설치 및 측정정보 발표(환경부 : 14개 공항, 90개 지점, 국토부 : 4개 공항 55개 지점)
 - 실시간 운항정보와 연계된 측정값 산정, 기관 간 자료의 표준화 및 정보 공유·검증 등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 장기적으로는 소음정보의 통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음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차세대 항행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과 효율성 증대 》

운항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첨단 항행시스템 도입 및 관리 강화

- (정밀위치 제공) GPS 오차를 대폭 개선(17→3m이내)하는 정밀위치 정보시스템(KASS*)를 구축하여 '22년 대국민·'23년 항공용 서비스 제공
 -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現 17~37m에서 3m 이내로 보정 가능, 세계 7번째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록
 - '21년까지 구축 완료한 지상기준국 및 위성통신국 등 지상시스템의 성능·품질시험을 실시하고, 2호 위성 확보 추진(~'21.9.)
 - * 연구개발('14~'22), 정지궤도위성 발사('22上) 및 정밀위치서비스·항공용서비스 개시('23)
 - KASS 구축 완료 후 국가의 책임 하에 신뢰도 있는 위성항법 서비스 제공·확장 등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 신설 운영('21.10~)
 - * (조직구성안) 항공교통본부 소속 총20명(센터장 4급 1명, 팀장 5급 2명, 6급이하 17명)
 - 또한, KASS는 항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서비스 및 자율차·드론 등 타 정밀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진흥 추진
- (항공기 감시능력 강화) 공중 및 공항인근 항공기 탐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첨단 탐지시설의 구축* 및 장애 발생 시 위기대응 체계 개선
 - *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구축(~'22), 청주공항 지상감시레이더 신설(~'23), 비행검사용 항공기 교체도입(~'23), 김포공항 공항감시레이더(~'21), 청주공항 계기착륙시설(ILS) 신설(~'22)
 - 제주 남부지역 혼잡 공역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항로레이더 구축 추진('21~'22)
 - 무안공항 및 울진비행장에 탐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탐지 시설(MLAT)을 설치하여 지상과 저고도 감시범위 확대
 - 항행시설 및 근무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 낙뢰예측시스템 구축('21.12.) 및 전파보호구역 감시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21.12.)
 - 항행시설 장애 및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 시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체계 검토·정비, 정기적인 위기대응훈련 실시

- (항공통신인프라 개선) 최신 통신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항공통신 인프라 전환 계획수립 제도화 및 중장기 계획 수립('21.12)
 - 국내 공항간 최신의 광 패킷 전송망을 구축하고 장애대비 및 항공정보 공유 백본망 구성 기반 마련, 기존 점대점 통신회선 통합 및 철거
 - * 대용량·초고속 백본망 통합 이후, 기존 회선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추가되는 회선은 저비용으로 수용할 수 있어 30%이상 비용 절감(연 약 20억원 ↑) 효과 기대
 - 韓·中·日 간 오래된 기술의 고정통신망(위성, 유선)을 ICAO “아태 지역 표준망”(CRV*)으로 통합 구축 추진('21.12.)
 - * (Common Regional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의 전용망 기술을 적용한 국제표준망
- (항행시설사용료 제도개선)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 시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항행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항공사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및 납부연기 근거 마련을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1.9)
 - 제주남단 新교통체제 운영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협의를 거쳐 해당 구간 항행시설사용료 신규부과 추진(~'21.10.)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규징수 추진계획 보고	2월	5	방침(실장)
	사용료 감면 확대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월	5	방침(장관)
	항공위성항법센터 조직 신설에 따른 단기운영방안 마련	3월	5	메모보고(정책관)
	공항 지상안전 강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 개최	3월	5	메모보고(실장)
2/4분기	항행안전시설 발전방향 마련	4월	5	메모보고(장관)
	풍수해(태풍·폭우) 대응 매뉴얼 정비	5월	5	방침(실장)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개편방안 마련 연구 착수	5월	5	메모보고(차관)
	소음정보 제공 관련 유관기관 TF 구성	6월	5	방침(정책관)
3/4분기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도화(규정개정 추진)	6월	5	방침(정책관)
	공항소음 저감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7월	5	경제장관회의 안건
	사용료 감면 확대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9월	5	시행문서
4/4분기	지상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8월	5	메모보고(실장)
	풍수해(대설) 대응 매뉴얼 정비	10월	5	방침(실장)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11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항 지상안전 강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 개최	12월	5	메모보고(실장)
	통합 소음정보 제공 중장기 전략 등 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장관)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개편 방안 추진방향 보고	12월	5	메모보고(장관)
	KASS 지상시스템 간 통신망 품질 및 성능시험	12월	5	관련문서
	KASS 제1호 위성 발사계획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한·중·일 간 고정통신망 구축 추진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항공사, 공항운영자,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약 2.4만명),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책지역 21만명, 인근지역 45만명), 공항 이용객 등
- (이해관계집단) 항공업계, 공항운영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 (공항인근 주민) 공항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뿐 아니라 신규 항공노선 개설 반대 등 공항 경쟁력에도 영향
 - (공항 지상조업자) 전국 15개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는 약 2.4만명(공사 자회사 포함)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속 요구
 - (공항 이용객) 태풍·대설 등 풍수해에 대한 재난대응체계 강화로 공항 이용객의 안전한 공항이용 가능

□ 기대효과

-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의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
- 태풍·대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이용객의 터미널 체류 방지 등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
- 소유·관리자의 표시등·표지 상시 관리에 따른 책임성 강화, 시설 관리의 안전성 향상 및 예산 절감
- 소음 피해를 입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항소음 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신뢰도 제고
- 현재보다 정확도가 10배 높은 위성정밀위치정보를 항공뿐만 아니라 드론, 도로·교통, 측량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에 활용 가능
- 무중단 항행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공중·지상 충돌사고 예방 및 한정된 공역내 원활한 항공교통량 처리를 통한 운항비용 절감
- 중요 항행시설 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초고속·대용량 실시간 교환, 항공통신망의 무중단 운용,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②)				
① 소음대책(3632)		교특회계	93 (93)	201 (201)
▪ 공항소음대책(301)			93	201
항행안전시설(V-13-일반재정①)				
① 항행안전시설(3631)		교특회계	249 (249)	427 (427)
▪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일반재정)(302)			(249)	(427)
일반공항관리(V-14-일반재정①)				
① 일반공항관리(3532)		교특회계	16 (108)	16 (108)
▪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321)			16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공항소음 저감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40%)			신규	방안 마련	운영기관 주도의 일률적 시행 및 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은 소음대책사업을 선제적 예방기능 강화 및 수요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사업의 틀을 탈피한 새로운 소음대책사업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적극적 목표 설정	방안마련(100%)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안건 (회의록 등), 메모보고
㉡ 항행안전시설 장애시간(100만 시간당) (40%)	-	-	22.88	13.91	항행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필수시설로써, 장애발생 시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21년 목표치는 '20년 목표치보다 40% 강화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	(총 장애시간/ ∑항행시설별 가동시간)×100만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SMS)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항공분야 풍수해 대응 매뉴얼 제·개정 (20%)			신규	매뉴얼 정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폭우, 폭설 등이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 안전 및 공항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조치의 확립, 관계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매뉴얼의 신규 제정, 개정을 통해 공항부문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풍수해 관련 실무 및 행동매뉴얼(국토부 및 관련기관) 제·개정건수	방침문서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V-2-④)

□ 추진배경

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약화우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산업 위기로 경영 불안정·안전투자 위축, 항공기 결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감 상존

* 지난해 백만운항당 항공기 사고율은 7.3건, 준사고율은 3.6건 수준으로 최근 5년 누적 사고율(3.47대)과 준사고율(3.5대) 대비 증가

- 경영진 교체, 종사자 휴직에 따른 기량저하, 안전 경각심 저하, 고용 불안 등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인한 항공전반 안전우려 고조
- 기존의 안전감독체계 가동 외에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제거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우리나라 12개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400여 대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중

② 지속가능한 항공수송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 필요

- 항공편을 이용하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기내감염 우려 증가로 항공전반의 방역체계 구축·운영 및 감독강화 요구

- 항공기 방역·소독, 승무원 방역 행동수칙, 승객 탑승 전·후 방역안내, 객실 운영 세부절차 등 세부 분야·주체별 감염병 차단관리 필요

③ 제주남부 한·중·일 3개국 관제 중인 항공회랑 위험 해소 필요

-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공역 내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던 비정상적인 공역체계를 정상화하여 항공 주권을 회복하고,

- 제주 남부지역의 교통량 증가, 관제권 이원화에 따른 국제사회(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항공안전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 필요

☞ **코로나-19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항공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가적 자원과 정책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별 맞춤형 안전관리

- 정부·항공사간 TF('20.11~'21.2, 5회)를 통해 최근 3년 간 운항부문 안전장애·감독결과 등 950여건의 데이터를 유형별, 위험도별 합동 분석하여, 핵심리스크 등 '21년 중점관리분야* 선정·지표화
 - * (19종) 활주로이탈·침범, 비정상 활주로 접촉, 비행중 엔진정지, 고속·저속 이륙중단 등
- '21년도 중점관리지표와 안전감독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현황을 연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별·분야별 취약요인 분석·집중감독 실시
 - * 항공사별 항공기 증감, 가동률, 재무현황 등 안전경향 모니터링에 필요한 항공 안전정보(65종)를 수집·분석하여 감독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활용 중

② 항공안전데이터의 통합 수집·분석 및 정보활용체계 구축

- 국가 항공안전도의 상시 모니터링 및 핵심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항공안전데이터의 공유협력이 필수적
 - * 정부·업계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20.2)」 체결완료
- 통합DB센터('21.5, 김포공항)를 구축하여 민·관 안전데이터를 총괄 수집·처리·분석하고, 수집 데이터 종류도 확대*('21년 중 3종 추가)
 - * (현재) 항공안전의무보고, 고장·결함보고 → (추가 3종) 사고·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감독 결과, 항공정보통계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안전 경향성을 분석하여 항공 업계 등과 함께 공유하고, 안전관리 과정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

③ 안전문화 제고로 운항현장의 숨은 데이터 수집확대

- 안전보고제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보고에 대한 비처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보고·자율보고를 한 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명문화, 수집되는 항공안전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법제화 완료

- '항공안전문화 워크숍(반기)'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현장 종사자 대상 보고제도 방문교육(분기)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 * 소형운송, 교육훈련기관, 사용사업체 및 지자체 등 사각지대 종사자들의 참여 유도
-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본격 시행('23) 대비 공항공사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시범공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자율적 투자유도

②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항공교통 운영

① 항공사 M&A, 신생항공사 운항 등 신규 리스크 관리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 항공사 M&A 등 산업구조 재편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 M&A 대상 항공사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 전반을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신종 리스크** 및 안전투자 현황 등 집중 관리
 - * (합병 전) 불시 현장점검 확대, 안전장애 및 휴직자 수 등 안전동향지표 모니터링 (합병 후)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신규 운항증명에 준하는 종합검사 실시
 - ** 장기운휴로 종사자 고용불안, 항공종사자 기량유지, 항공기 정비·관리, 예비부품 부족 등
- 운송회복단계에서 신규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별 안전컨설팅을 지원하고, 화물운송 확대에 따른 행정절차*는 간소화
 - * 객실 내 화물운송 시 매 건별 출발 3일전 사전승인→출발 1일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
- 신생항공사에 대상 밀착점검(감독인력 상주·모니터링) 및 운영 항공기재 결함·특성 정보공유 등을 통해 취항초기 안전성도 확보

②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방역체계 운영

- 항공교통수단 코로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항공기 탑승 전, 기내 방역 절차를 담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지속 보완
- 감염위험이 높은 국제선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위한 부처간 협의 추진 등 업계요구에 적극 지원
 - * (항공업계 종사자) 9.7만명 3분기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국제선 항공승무원) 항공업계 종사자 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2만명에 대해 2분기 우선접종 대상으로 우선순위 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조종사·관제사의 업무영향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기준을 마련(접종 후 3일 간 항공업무제한)하여 시행

③ 코로나-19 백신 항공수송 완벽 지원

- 코로나-19 백신의 항공수송 총괄부처로써, 백신운송 쏘 단계(항공기 도착-하기-공항반출)에서 수송계획 수립·지원
 - * 신속지원 TF 운영,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조정(現 3.3톤 →11톤)으로 수송량 증대, 국내외 항공수송계획 수립, 준비상황 점검회의 및 모의훈련 등 실시
-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협의회」 참여를 통해 항공기를 이용한 백신수송 계획(해외 도입, 국내 지역 간 이동)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④ 제주남부 항공관제권 회복과 국제사회의 공중사고 안전우려 해소

① 항공주권 회복 및 인접국 간 안전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장기 지연된 한·중·일 항공회랑 정상화 합의('19.11, '20.12)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3.25일부터 일본관제권 환수·운영개시(항공회랑 폐지)
 - * (1단계 / 3.25.) 관제권 환수(일본→한국), 한-일구간 항공로 복선화,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및 합의서 체결, (2단계 / 연내) 한-중-일 항공로 3선화 운영 협의
- 한·일, 한·중간 관제이양 지점·방식 등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고, 관제합의서 체결 및 직통선 설치 등 안전인프라 구축

② 제주남부 항공교통체계 정비로 항공안전 획기적 개선

- 제주남부 지역 항공주권 회복과 함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안전하게 분산·수용할 있도록 항공로 체계(복선화, 3선화)도 개편**
 - * ('19년 기준 연간 교통량) 한국-동남아 14만편, 중국-일본 14만편, 한국-중국 7만편
 - ** (종전) 1개 항공로 상 양방향 비행 →(개편) 3개 항공로로 분리하고 항공로별 비행방향을 단일화함으로써 혼잡구간 안전도 대폭 개선
- 변화하는 항공교통체계에 맞추어 안전한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제 시스템 개선, 관제사 훈련 및 운영절차 보완 등 완벽 대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제주남단 항공회랑 新교통체계 운영 계획 보고	1월	10%	방침결정(차관)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추진	2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사 안전목표지표 운영방안 수립	3월	10%	방침결정(실장)
	항공사 위험기반 연간 안전감독계획 수립	3월	10%	방침결정(정책관)
	여객기 객실 내 화물승인 간소화 추진	3월	5%	메모보고(차관)
	한-일, 한-중 관제합의서 체결	3월	5%	합의서 사본
	조종사 관제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업무수행기준 수립	3월	5%	메모보고(장관)
2/4분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	5월	5%	메모보고(실장)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고시) 개정	5월	5%	고시 공고문
3/4분기	상반기 항공사 안전성과 모니터링 실시	7월	5%	메모보고(실장)
	상반기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및 안전경향 전파	8월	5%	메모보고(차관)
	조종사 훈련·심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8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운항회복 항공사 안전컨설팅 실시	10월	10%	메모보고(실장)
	항공사 SMS 이행성숙도 점검	11월	5%	메모보고(실장)
	신생항공사 취항 6개월 종합안전점검	11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안전데이터 5종 시스템 연계 및 운영성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산업종사자 등 직접적 관계자 및 모든 국내·국제 항공교통 이용자
- (이해관계집단) 정부의 안전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국내외 항공사 및 공항공사, 국내 공역을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방부
 -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 협의 당사국(중국, 일본 항공당국) 및 관련 국제기구(ICAO, IATA 등), 항공교통 이용자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 신종 리스크 대응, 수요 회복에 대비 우수한 안전체계 구축으로 우리 항공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국적항공사의 해외노선 경쟁력 제고
- 우리관할 공역임에도 비정상적으로 타국에 위임했던 관제권을 37년만에 회수함으로써 항공주권을 회복하고, 공역안전 여건도 대폭 개선

- 아울러 제주 남부지역 **항로 확충**(중국남부, 동남아노선 간선허로 역할) 등
신 공역체제 운영을 통해 우리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 제주남부공역은 한-중-일 3개국의 관제권이 혼재되어 있어 IATA(국제항공
운송협회)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15~)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우려 제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항공안전체제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다.(V-13-일반재정(3))			
① 항공안전운영(3636)	교특	17	13.44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338)	교특	17	7.43
▪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340)	교특	-	6.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① 국적항공사 주요 장애 감축(25%)	-	-	5.3 (16종)	4.8 (1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장애 관리대상을 16종('20) → 19종('21)으로 확대하고, 발생률도 5.3건('20)→4.8건('21)으로 10% 감축되도록 목표 설정 * 항공기 운항감소, 코로나19 신종 리스크 증가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건수를 전년대비 10% 감축하는 것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21년 국적항공사 주요장애 발생건수 합계) ÷ (국적항공사 비행편수 합계 × 1만)	방침문서, 메모보고, 연말 통계
② 통합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관리 체제 구축(25%)	-	-	2종	5종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에 관리 중인 2종의 항공안전 데이터에 '21년 중 3종(사고조사, 안전감독, 항공정보통계)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연말까지 5종에 대한 안전정보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행·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종(기존 데이터 수) + 3종의 추가 데이터* 확보 수	메모보고, 안전정보 분석보고서
③ 비정상적 항공 회랑 폐지 및 新 관제체제 운영 개시(40%)	신규			정상화 진행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간 단계적 이행 합의안에 따라 제주남단 항공 회랑의 관제권을 환수하고, 新체제에 따른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정상화 진행율	합의서, 방침문서, 메모보고
④ 코로나19 방역 안전 체제 구축 (10%)	신규			지침 개정·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위험에 多빈도로 노출되는 항공사·승무원 및 승객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보완하여 국내항공사 배포 	코로나-19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개정 및 항공사 배포	메모보고, 항공사 협조공문

(1) 주요 내용

□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 (건설현장 점검 강화)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점검, 불시점검 확대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TV, UCC 동영상, 안전슬로건 스티커,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배포 등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별점 운영 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하고 품격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 (시설물 안전) 인프라총조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 추진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기반시설 우수 관리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유도·지원
 - 합동점검, 안전점검 기준 개선을 통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건축 자재) 불량자재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풍 관련 건축 안전기준 강화
- (관리기반 내실화) 건축안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 센터 설치 확대, 건축물 점검서비스 기능 강화 및 매뉴얼 개선
- (안전사각지대 해소)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취약주택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활성화

- (건축품격 향상) 민간전문가 위촉 등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과 함께 지역경관·건축자산 관리를 내실화하고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추진
- (건축산업 활성화) 4차산업 대응을 위해 스마트건축, BIM을 활성화하고,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행정 도입,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최적화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50%)	485	428	458	360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0년 대비 21.4% 감축 목표치 설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50%)	-	신규	-	법령 개정	건축자재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마련,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자격기준 조정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고시문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 사업주체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부여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계 반발 우려
 -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속 설득
- (벌점제도 개정) 법인 책임을 강화한 개정 벌점제도의 업계 갈등 예상
 - 불합리한 벌점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배포
- (시설물 관리강화) 재정소요 확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재정당국·지자체의 우려,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반발 등 갈등요소에 대한 대응 필요

- 데이터 기반 기반시설 관리를 추진하여 재정당국 설득, 예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갈등 해소
- (건축 안전)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크므로 건축안전 제도개선과 함께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업계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점검 관계자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건축물 관리제도 정착 추진
- (건축 관련 법령) 건축 관련 법령이 너무 어려워 연간 9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필요
 - 알기 쉬운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제도를 운영하고, '3080+ 주택공급대책'에 맞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건축기준 탄력 적용
-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나, 일부 지방은 전문가 부재,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 pool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컨설팅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V-3-①)

□ 추진배경(목적)

○ (건설현장) 건설사고 사망자는 '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하였으나 '20년에는 오히려 증가, 올해 20% 감축 목표(360명)로 추진중

* (건설사고 사망자) '17. 506명 → '18. 485 → '19. 428 → '20. 458 → '21. 360명(목표)

⇒ 그간의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까지 조기 안착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사고 감축 필요

* 산재사망 감축대책('18.1), 건설안전 혁신방안('20.4) 등 종합대책 5회 수립, 타워크레인('17.11,'19.7), 추락('19.4), 화재('20.6) 등 고위험 맞춤형대책 5회 수립

○ (중대재해) 「중대재해법」 제정 등 안전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 통신구·열수송관 등 노후 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사상 유래 없는 폭우로 하천 교량·제방이 붕괴**되는 등 피해 증가

* (노후시설 안전사고) KT 통신구 화재('18.11),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 인천 붉은 수돗물('19.5) 등

** (집중호우 피해) '20년 집중호우로 A-C등급 시설물이 14개소나 붕괴되어 언론보도(KBS 등, '20.9)

⇒ 최근 변화된 여건·환경에 적기 대응하여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비 안전점검 체계 재정비 추진

※ (국정과제 55-3)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 '건설안전혁신방안' 이행 TF 등 관계부처 협업강화
- '20년 중점추진과제 8-5 '노후 SOC 안전관리 본격화' 추진(국조실)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및 협의체 등 기반시설 종합관리 이행체계 마련
- 기본계획(국토부)-관리계획(6개부처, 17개 지자체) 수립 등 유기적 계획체계 구축
- 스마트 유지관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총조사,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토관리원의 전문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대폭 확대, 사고다발현장 밀착관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소규모·노후시설 점검기준 재정비, 기후 변화에 취약한 시설물 심화점검 실시, 지자체별 기반시설 관리강화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설안전특별법 조속 제정 >

① 건설주체별 안전책무 확립

- (발주자) 현장에서 건설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의무 부여
- (설계자) 안전시설물의 누락이 없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시공 위험요인을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 (감리자)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 사고위험 상황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공공 → 민간공사까지 확대
- (시공자) 원수급인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하수급인들이 공동 사용 하는 안전시설물의 직접 설치의무 부여

② 의무위반 제재조치 강화로 의무 이행력 제고

- (제재조치 강화) 주체별 부여된 의무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7년이하·1억원이하), 영업정지·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
- * (영업정지) 12개월 이내, (과징금) 업종·분야별 매출액 대비 상한 3% 이내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①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 점검

- (소규모 현장 집중점검) 확대된 인력·점검조직을 바탕으로 취약 현장인 민간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약 3배이상 확대*
- * '17년 1,017개 → '18년 2,247개 → '19년 2,547개 → '20년 2,597개 → '21년 8,000개
- 인·허가기관 중심의 민간 건설현장 점검을 관리원+인·허가기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점검인력·전문성 제고

- (불시점검 확대) 불시점검의 비중을 확대(現 30%→40%)하고, 사고 다발 건설업체의 경우 고강도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처분(계속)

② 근로자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

- (안전인식 전환) 현장·건설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 TV 광고(주요 방송사), UCC 영상(유튜브) 등 매체 홍보도 병행('21.3~)

* '21년 하반기 월별 1~2회 이상 현장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 시행

<안전난간대 부착>	<탑차 광고 활용>
	

- (안전교육 강화) 기능인 등급제('21.5 시행)와 연계한 직종별 의무교육을 신설하여, 조적, 미장, 비계 등 직종별 사고유형 및 예방교육 실시
- 사고사례,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 건설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할 조치 등 필요 사항을 교육 과정에 포함

③ 선제적인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

- (범부처 관리체계 구축)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대책을 매분기 점검하고, 실무 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 현황 수시 점검
- (아차사고 신고) 위험 현장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아차사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감시하는 체계 구축
- (별점) 법인 책임을 강화한 개정 별점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 중대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대응 강화 >

①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 (총괄 TF 구성·운영) 건설현장, 도로·철도·건축 시설물 등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우리부 각 실·국을 총괄하는 TF* 구성·운영
* 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철도·항공·건축·주택 등 11개 담당 정책관 참여(월1회 회의)
 - (조직·인력확충)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본부에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고, 현장중심 관리를 위해 5개 지방청에 팀 신설 및 인력 확충
- ⇒ 충분한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BH·행안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고용부·산업부·환경부 등 타 부처와 공동대응 추진

② 중대재해 하위법령 제정

- (적용대상)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교량, 건축물 등) 中 공중(公衆)의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산업재해와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시설·교통수단 특성을 반영토록 규정
- ⇒ 법 적용대상·의무를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최소화하려는 산업계(사업주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갈등관리

③ 중대재해 종합예방대책 수립·시행

- (종합예방대책 수립) 도로·철도·항공 등 우리부 소관 시설물, 교통수단 및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 (대책 이행·관리) 각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이행 상황 및 사업주 지원현황 등을 국회 보고(반기별)
- ⇒ 대책을 규제와 업무량 증가로 인식하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재정당국 등과 협의

< 기반시설 관리체계 강화 >

①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인프라총조사)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관련 정보(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를 총조사하고 표준DB 구축('20~'23)

* (SOC 7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지하시설물 8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총조사 결과 DB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20~'23), '21년에는 정보검색·계획관리 등 일부기능 우선 구축

* 기반시설 정보검색, 및 관리계획 제출·실적관리, 우수기반시설 신청·선정 등

②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유도

- (지자체 챌린지) 기반시설 관리 정책 참여 및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해 '21년부터 신규로 우수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제공(국비 20억 지원)

* '21년 20억 예산 반영(신규) → 11개 지자체 매칭 지원

- (관리계획 수립) 중앙부처('20)에 이어 광역지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21)을 완료하여 전국 기반시설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완성

③ 기반시설 관리 정책 실행력 확보

- (실행계획 수립 제도화) 기본계획(국토부)-관리계획(감독기관)과 더불어 관리주체가 매년 점검·보강 등의 실행계획* 수립을 제도화(법 개정)

* (계획체계) 기본계획(국토부)-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실행계획(관리주체, 신설)

- (실태조사 지침 마련)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지침(고시)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대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

- (홍보·교육) 기반시설 관리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인지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교육 추진

< 기후변화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재정비 >

① 예방적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

- (합동점검)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교량·제방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 4.9만개소에 대해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제도개선)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보수·보강 등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기준 전면 재정비
- * (예) 4~5년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초의 파임 등에 대한 심화점검 실시 등

② 시설물 부실점검 근절

- (부실업체 집중점검) 과도하게 저가(70% 미만)로 계약한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서를 집중 평가, 시정조치를 통해 부실점검 근절
- (등록·관리기준 강화) 「시특법」·「건설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점검 업체 등록·관리를 「시특법」으로 일원화하고, 등록기준*도 강화
- * 안전점검 기술자 보유 기준 상향(기존 초급4 → 고급1, 초급3)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중대재해 대응 TF 구성·운영	1월	5%	메모보고(장관)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1월	5%	메모보고(장관)
	기반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대상 선정	3월	5%	보도자료
	건설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3월	10%	보도자료
2/4분기	시설물 점검업체 실태점검	5월	5%	메모보고(국장)
	건설안전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추진	5월	5%	방침(정책관)
	인프라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차년도) 착수	6월	5%	메모보고(국장)
3/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및 특별점검 실적 공개	7월	10%	보도자료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월	5%	공고문
	건설사고 방지 홍보 영상 송출	9월	10%	메모보고(국장)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건진법 시행령 개정	9월	5%	고시
4/4분기	건설현장 현장점검(우기, 동절기 대비)	7월, 12월	10%	메모보고(차관)
	기후변화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개선안 마련	11월	5%	방침(정책관)
	광역지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12월	5%	보도자료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12월	10%	방침(장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건설 노동자, 안전점검업체(진단기관·유지관리업자)
 - ‘건설안전 최우선 원칙’이 건설현장에 정착되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 시키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이행,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부실업체 퇴출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분야 대국민 불안 해소
 - 특히,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명 연장을 유도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이해관계자) 건설업계, 지자체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 시설물 안전점검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해 정책추진 난이도가 매우 높음
 - 건설안전특별법, 불시점검 확대 등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규제로 인식하여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극심해 정책추진 애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안전의무를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최소화하려는 사업주 등의 의견대립이 심해 정책 추진 난이도가 높음
 - 중대재해 대응을 인력 및 재정소요 확대를 우려하는 재정당국과 안전규제와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사업주 등과 의견도 조율 난항
 - 아울러, 부실업체 적발·조치에 따른 안전점검 업계 및 점검제도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관리주체의 반발이 심해 추진 난항

□ 기대효과

- 건설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통해 국민 생명과 현장 안전을 확보 하고,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따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중대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종사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고
-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뢰도 확보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토안전관리원출연(일반재정)				
①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				
■ 국토안전관리원출연(301)	일반회계	391	464	
건설시설안전관리(일반재정)				
① 건설시설안전관리(4323)				
■ 노후기반시설관리(303)	일반회계	26	26	
■ 건설및지하안전관리(304)	일반회계	-	2.5	
■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306)	일반회계	-	20	
건설사업정보화(정보화)				
① 건설사업정보화(4241)				
■ SOC안전정보시스템 구축(511)	일반회계	45	34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515)	일반회계	17	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10%)	485	428	458	360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0년 대비 21.4% 감축 목표치 설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20%)	-	-	-	법률 제정 여부	건설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법률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현황 자료)
㉢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실적(20%)	2,247	2,547	2,597	8,000	민간·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실적대비 3배 이상 상향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사망사고가 민간·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표로 적극 관리 필요)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건수	메모보고
㉣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제정(25%)	-	-	-	법령 제정	「중대재해법」 제정('21.1.26)에 따라 적용대상 및 안전보건업무 등 하위 법령 제정 필요	법령 제정	보도자료
㉤ 중대재해법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협업 건수(10%)	-	-	-	20	「중대재해법」 제정('21.1.26)에 따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협업유도 등을 위해 회의·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필요	TF회의, 토론회, 포럼, 설명회, 전문가회의 등 개최·참여 건수의 합	메모보고, 언론보도
㉦ 광역지자체 관리계획 수립(10%)	-	-	2	12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목표치 설정 (제2차기반시설관리위원회('20.12) 심의결과에 따라 12개 광역지자체 관리계획 조기수립 필요(~'21))	지자체별 관리계획 수립	관련문서 (기반시설위원회 심의 자료)
㉧ 시설물 점검·진단 부실 개선율(5%)	36.9	50.6	69.1	80.0	그간 추세 대비 20% 상향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부실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기에 이행하여 위협요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표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점검 및 진단 시정조치 적기 완료 건수) / (점검 및 진단 시정조치 대상 건수 × 100)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 산출자료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V-3-②)

□ 추진배경(목적)

- (건축행정 개선)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 관련 법령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규제가 과도하게 운영되어 국민 불편 초래
 - * 178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세부기준으로 운영되어 연간 약 90,000건 민원 발생
- 알기 쉬운 건축 기준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건축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미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
 -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20.10, 국정현안점검회의)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이 확대(2.4 주택공급대책)됨에 따라 운영절차 고도화 필요
-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일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교통혼잡, 학교 과밀 등 기반시설 부족이 발생하므로 사전 차단 필요
- (건축품격 향상)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은 도시미관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자원이므로 조성절차 개선 필요
 - * 전국에 약 22만동 입지(기초지자체당 900동), 매년 약 6천동씩 증가('19.6)
-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질 향상과 건축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육성 및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추진 시급
 - * (해외사례)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독일 건축박물관, 네덜란드 건축박물관 등
- (건축산업 활성화) 건축산업은 GDP의 11.2%(178조원)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그 결과물인 건축물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기술의 상용화가 가속됨에 따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축 육성 필요
- 스마트건축물 조성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굴하고, 생산과정 스마트기술 적용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 개선

- (허가절차 간소화) 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부담*이 크므로 기술적인 사항은 착공 시 검토하도록 절차 개선
 - * 착공 시 일부 설계변경에도 모든 허가도서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전 사업비 조달 곤란
- 건축물 관련 인증이 다수 존재*하여 인증취득에 상당한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사 인증 통합방안 마련(‘21.12)
 - *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등
- 어려운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 규모 산정기준에 대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중심으로 개편(‘21.12)
 - * 건축법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TOP10 중 1위가 ‘건축물 높이제한’, 2위가 ‘바닥면적 산정’으로 확인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점검해야할 법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78여개의 건축 관련 법령을 집대성한 ‘한국건축규정’ 공고
- (건축규제 해소) 채광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공동주택 채광기준 개선방안 마련
 - * (예시) 현재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하고 있으나, 높은 건물의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기준으로 이격
- 지자체 임의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시간 소모가 발생하므로 규제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21.8, 건축법 발의)
- (창의 건축 활성화)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민간 제안 허용(‘21.1)
 - * 공동주택: 300세대→100세대, 단독주택: 50동→30동, 한옥: X→10동(신설)
-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건축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및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1.9)
 - * 용적률, 건폐율, 조경, 공지,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 적용 배제 가능

- (불법전용 방지)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를 명시하고,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21.6)
 - * (예시) 안내데스크, 로비, 린넨실, 숙박객을 위한 레스토랑 등 설치
- 기 사용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발코니 등 일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6)

② 건축 품격 향상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

- (공공건축 절차 개선) 공공건축 담당자가 내실 있고 원활한 건축 기획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마련(21.9)
 - * 건축기획 업무의 구체적 지침 부재로 담당자 혼선이 발생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등 문제 발생
- 공공건축 사업의 특성·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21.6)
- 지역의 공공건축·공간에 대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도입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21.2)
- (지역 경관기반 강화)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 도시-비도시간 차별화된 관리체계 마련 등 지역 경관관리 제도개선 추진(21.12)
 -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에 따라 지역 주도 경관관리 추진
- 지자체·주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 등 우수사례 보급 및 자원조사 기준마련
 - * 지역만의 경관자원을 발굴·조사를 통해 특화된 지역 경관계획 수립
 - ** 민간전문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우수사례를 토대로 지역 경관관리 가이드로 활용
- (건축자산 진흥) 체계적·전문적 교육환경을 갖춘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21.12) 등을 통해 한옥 건축의 확산 뒷받침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건축자산 연계형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비율 조정, 신청·가점기준 완화 등 다각화된 방안 마련
- (도시건축박물관) '20년부터 건축설계가 착수됨에 따라 박물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감독 위촉(21.3) 및 전시 기획방안* 마련(21.12)
 - * 전시소장품 조사 및 확보 방안, 인력 채용 및 박물관 운영방안 등

③ 사회 변화에 대응한 건축 산업 활성화

- (스마트건축 기반 마련) IoT, AI, AR·VR 등 4차 산업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한 스마트건축 인증 평가지표 마련('21.12)
 - 스마트시티와 연계를 통하여 스마트건축 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을 위한 스마트건축 시범사업* 추진
 - * (사업지) 성남 금토지구 내 LH 신혼희망타운, (일정) 실시설계('21.12) → 준공('24년 예정)
 - 건축물 디지털 트윈 기술 확산을 위해 건축 인허가 시 활용가능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BIM* 적용지침 마련('21.6)
 -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재, 공정, 공사비, 가격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으로서 전 생애주기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 (포스트코로나 대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건축행정 수행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건축행정시스템* 도입
 - * 온라인으로 허가신청·관계부서협의·필증교부·건축심의까지 수행 가능
 -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및 공기오염 우려가 크므로 공기조화·환기설비에 대한 설계 및 운영지침 마련('21.12)
 -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사후 건축허가·신고 허용 및 가설건축물 허가조건 완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특별건축구역 대상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1월	10%	보도자료
	'21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진	2월	5%	방침결정(정책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감독 위촉	3월	5%	메모보고(장관)
2/4분기	세움터 BIM 적용지침 마련	6월	5%	메모보고(실장)
	생활형숙박시설, 채광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방침	6월	10%	방침결정(장관)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방침	6월	10%	방침결정(실장)
3/4분기	규제모니터링센터 등 건축법 개정안 발의	8월	10%	의안정보
	건축기획 업무수행 지침 제정 방침	9월	10%	방침결정(장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9월	10%	메모보고(장관)
4/4분기	스마트건축 인증 평가지표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등 건축물설비기준규칙 개정	12월	10%	방침결정(실장)
	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개정안 발의	12월	10%	의안정보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알기 쉬운 건축기준 도입과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 등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우수한 공공건축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이해관계자) ① 건축물 설계·시공자(건축사, 기술사 등), ② 건축물 인증기관, ③ 한옥·경관 등 디자인 전문가, ④ 중앙부처·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요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 (사례 : 연면적 약 7만㎡ 업무시설) 허가기간 약 6개월 단축 및 금융비용 32억원 절감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전용을 차단하여 건축법에 대한 신뢰성 및 질서를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유지
-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를 통해 2.4 주택공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 공급(약 83.6만호)
- 연간 2천건 이상 추진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운영지침 개선 및 포털 운영 확대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랜드마크로서 도시 가치 향상
-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도시·건축 분야 진흥을 통한 국가 건축 경쟁력 강화
- 스마트건축 확산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 공간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품격향상(I-1-일반재정③)				
①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품격향상(5633)		일반회계	67.39	73.40
▪ 건축문화진흥(303)		일반회계	67.39	72.20
▪ 도시건축박물관운영(312)		일반회계	-	1.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기준 합리화 (30%)			신규		법령 개정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생활형숙박시설 개선,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공동주택 채광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완료	고시문 등
㉒ 알기 쉬운 건축법령 마련 (20%)			신규		법령 제정 (10%)	건축물 면적·높이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하는 산정기준 마련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고시 제정	보도자료 또는 고시문 등
			신규		공고 (10%)	건축 인허가 시 확인해야할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여 공고	한국건축규정 공고	고시문 등
㉓ 공공건축 조성절차 내실화 (20%)			신규		법령 개정 (10%)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등 공공건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	지침 제·개정 방침	방침결정 등
			-	8	11	15 (10%)	지역 민간전문가 위촉 촉진을 위해 '20년 실적 대비 약 50% 많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수
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 기획 (20%)			신규		전시 기획 마련 (10%)	도시건축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 기획방안 마련	전시기획 방안 마련	메모보고 또는 방침결정 등
			신규		10,000 (10%)	사업 본격화에 따라 연차별 구매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21년 전시소장품 전수조사를 통해 리스트 확보(1만점) 목표 설정	전시소장품 조사결과	메모보고 또는 방침결정 등
㉕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10%)			신규		기능 개선	BIM 설계 적용, 비대면 건축 인허가 행정기능 도입 등 건축행정시스템 개선 추진	건축행정시스템 기능 도입	공문 또는 메모보고 등



IV. 환류 등 관련 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79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81
3. 변화관리 계획 384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38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장관 주재 주요 정책 점검회의 및 간부회의 실시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장관 주재로 세부 추진방안, 대내외 의견 수렴, 언론동향 및 대응방안 등 점검(월 2~3회)
- 장관 주재 실·국장 및 확대간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성과관리 과제 등 주요정책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매주)

□ 자체평가위원 추진상황 점검 (수시)

- 자체평가위원이 과제별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원팀을 통해 정책자료 제공, 대면 설명회 실시 등 추진
 - * 자평위원 정책현장 방문, 정책 관련 자료 제공, 과제 설명 등 평가 지원업무 수행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실시
 - * 현장점검 일정은 코로나19, 정책현장 여건,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연말 평가 (반기)

- (상반기 점검) 관리과제별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점검을 통해 부진사유 철저 파악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강구('21.7)
 - * 하반기 자체점검은 자체평가로 같음
- 부진 및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원인과 유형을 검토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중 관리
 - * 장관 주재 간부 회의(월 2~3회), 자평위 지원반(매월 수시) 등을 통해 점검
- (연말 평가) 과제별 실적보고서를 자평위에 사전 제공*하고, 하고, 이행 노력도 및 목표 달성도에 대한 대면** 평가 실시('21.12~'22.1)
 - * 연말 평가('22.1월초 예정) 1개월 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
 -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영상회의 실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자체평가 결과 환류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계(성과 관리시스템, Balanced Score Card) 구축·운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는 모두 BSC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정량평가 이외에 정성평가도 반영
- 정책관급 이상에 대해 소관 관리과제 모두를 BSC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부서장들의 관심도 및 책임의식을 제고
 - BSC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고공단 포함 과장급 이상과 4급 직원은 개인성과 평가 시 BSC 부서평가 점수를 100% 반영, 4.5·5급 이하는 50% 반영토록 규정

< 개인 성과급 및 성과연봉 결정시 BSC 부서평가 반영비율 >

고위 공무원	부서 평가(100%)		개인 가감점 (3점 이내)
과장급	부서 평가(100%)		개인 가감점 (3점 이내)
4.5 및 5급 이하	부서 평가 (50%)	개인실적평가 (50%)	개인 가감점 (3점 이내)

- 또한, BSC 평가결과를 보수지급 기준 이외에도 인사 분야에 활용하여 일반직원 들의 성과관리 관심도 제고
 - 전년도 개인별 BSC 점수를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BSC 개인평가 점수를 인사 인센티브로 활용

*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제바목

- 또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국외 훈련자 선발시에 BSC 평가를 정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작년 대비 반영 비율을 확대 시행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 자체선발기준에 전년도 개인별 BSC 점수를 정식 평가항목으로 반영 (100점 중 15점 반영)

- (주요정책) '20년 부진과제 및 '21년 상반기 실적 미흡 과제에 대해 평가지원팀, 자평위원과 함께 심층 분석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재정사업) 미흡사업 등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및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을 담은 성과관리 개선대책 수립하여 분기별 점검 계획

□ 성과지표 POOL 활용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중 자평위원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표성, 명확성, 연속성 등이 우수하여 활용도가 높은 성과지표 선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POOL을 내부 공유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토교통 정책 추진의 연속성 제고 도모
- 지표POOL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그간의 실적과 당해년도 목표치, 지표 종류(정량화, 성격 등), 연도별 활용 여부 등 기록

□ 행정관리 역량 제고

-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전년도 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지표 및 측정방식 등을 보완하고,
- 타기관의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3. 변화관리 계획

< '21년도 추진 방향 >

-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20년 추진 프로그램은 지속 시행하고, '코로나19, 21년 정부혁신·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새프로그램 개발·운영

① 개인·조직 역량강화

-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연 및 학습, 디지털역량강화,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조성

○ 테마아카데미 개최

- 그린뉴딜·4차산업 시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시행
 - * ①온라인 개최, ②소속기관 순회 기존, ③“지중혜(멀티미디어 지식 콘텐츠 서비스, <http://www.storypark.or.kr>)” 프로그램 활용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

- 비대면 근무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재택·출장·회의·교육 등 업무관리에 활용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적극행정 우수사례·BP 경진대회 등 성과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인센티브 제공
 - *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적극행정 우수사례(분기별), BP 경진대회(11월))
 - **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격려금 지급, 표창 수여 등

② 소통 및 협업 강화

- 직급·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조직 내 소통 및 협업 추진하고, 정책방향, 업무 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시행

- 2개 부서가 함께 정책방향 토론, 업무 노하우 공유하는 팀웍빌딩*, 부서내 소통·단합을 위한 소통애데이** 시행으로 내부 결속력 강화

* 2개과를 1개 조로 편성하여 1박2일로 진행, 직원 70%이상 참여(부서장 포함)

** 2시간 이내 캘라그래피, 칵테일만들기, 와인소믈리에 등 관심분야 체험 활동

③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제공

- 코로나19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일·가정이 양립과 업무피로 회복

○ 홀로 떠나는 여행, 가족친화 활동 제공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홀로 배낭여행 및 자연에서 함께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글램핑, 캠핑카 등) 제공

④ 사무공간 혁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

-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고 업무와 휴게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혁신 사무공간 조성

○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및 사무공간 혁신

- 헬스케어 식물을 사무실에 집중 배치하여 쾌적한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및 업무와 휴게가 구분되는 효율적인 사무공간 구성

○ 혁신 마일리지 부여

- 테마아카데미, 정부혁신 모임 등 역량강화 및 혁신활동 참여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 유도

○ 우수직원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 직원 사기진작, 적극행정 확산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우수직원을 선정(소속기관 포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포상금(100만원), 포상휴가(3일), 축하 꽃바구니+케익 등

** '20년 우수직원 (34명) → '20년 우수직원 (36명) 선정 예정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 모든 관리과제에 대해서 일반국민(약 800명) 및 전문가(약 200명)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수렴
 -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지역·성별·연령대별 비례 할당)
 - ** 국토교통 분야 전공교수 및 연구단체 종사자(실국에서 추천 pool에서 선정)
- 정책만족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설문조사 민간기관을 통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10점)에 반영

대 상	점 수
만족도 점수 1등 과제	10
만족도 점수 2등 이하 과제	$10 \times \frac{\text{2등이하과제별 원점수}}{\text{1등과제 원점수}}$

□ 주요 정책 현장방문 강화

- 주요과제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장·차관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 수렴
 - * 실·국장 및 정책관 등 간부들도 소관 주요 정책현장에 대해 현장 방문 실시
- 장관 현장방문 이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성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점검하는 리마인드 서비스 실시
 - *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연기·취소 등 조정하여 현장방문 실시

□ 자체평가지 현장의견 수렴여부 반영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20점) 평가 시 정책현장의 의견 수렴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토록 세부지표를 설정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과제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	10	20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1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5	8	0 (0%)	0 (0%)	0 (0%)	8 (100%)	8 (100%)
성과목표	14	45	0 (0%)	0 (0%)	11 (24%)	34 (76%)	36 (80%)
관리과제	39	207	0 (0%)	6 (3%)	44 (21%)	157 (76%)	145 (70%)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	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50.5	정량	결과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4,075	정량	결과	
III.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10년 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 총주택수	10	정량	결과	
	㉡ 1인당 주거면적(m ²)	전국단위가구방문 대면면접 조사(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연구) <1인당 주거면적 산정방식> 개별가구의 주택사용 면적(S _i)를 개별 가구원수(n _i)로 나눈 값의 평균 $1인당주거면적 = \frac{S_1 + S_2 + \dots + S_N}{n_1 + n_2 + \dots + n_N}$ (19년 기준 표본은 61,000여개 가구)	33.7	정량	결과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철도 및 도로 연장 (km)	철도	전국 철도연장 (고속, 광역, 일반, 도시철도 등 연장) 합산	5,530.0	정량	결과	
		도로	전년도 간선도로 연장 + 당해년도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연장	20,555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물류활동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GDP)	7.3 ('28년 발표)	정량	결과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0.8	정량	결과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250 ('22년)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 新 균형발전정책 사업 추진율	①주거플랫폼사업 부처간 협업MOU체결(20%) 및 시범사업선정(20%) + ②교차보전사업 공모(30%) + ③국토도시 탄소중립로드맵마련(30%)	100%	정성	결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지원 확대	재정 집행률(%)	99%	정량	산출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상 추진	설계착수 3건 공사착수 3건	6건	정량	산출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인천·김포 등 6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교통의 편리성, 시설청결성, 주차시설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항공교통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 산정	만족	정성	결과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율	①신설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균특법 개정(30%) + ②기상청 등 대전이전 계획 수립(40%) + ③부설기관 지방이전 전략 수립(30%)	100%	정성	산출	
	㉡ 혁신도시 성장 기반 혁신	①거버넌스 정비 방안 마련(20%) + ②지역균형 뉴딜사업 범정부 TF 운영(20%) + ③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을 위한 도첨산단 지정(20%) + ④오픈캠퍼스 운영 확대 및 지역인재 광역화 계획 수립(20%) + ⑤복합혁신센터 착공(20%)	100%	정성	산출	
	㉢ 일자리거점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①도심융합특구 지원법 마련(25%) + ②캠퍼스혁신파크 (2곳) (25%) + ③산단대개조(2곳) 추가 선정(25%) + ④행복도시 특화 방안 마련(25%)	100%	정성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2050 탄소중립 대응 건물부문 추진전략 마련	이행전략 마련	이행 전략 마련	정성	산출	
	㉡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훼손지 복구면적 / 120만㎡	120만㎡	정량	결과	
	㉢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① 22개 이상 지자체 챌린지 사업 선정 + ② 22개 이상 지자체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	44곳	정량	결과	
	㉣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골격 구축	2개 이상 지자체 대상 디지털 트윈 신규지원(50%) + 국가 추진원칙 수립(50%)	100%	정량	산출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3개 분야를 분석하여 현재 최고기술국 대비 한국의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의 평균 측정	73.68%	정량	결과	
	㉡ 국가별 자율차 경쟁력(자율차 도입 준비수준)	“국가별 자율차 도입 준비지수”(국제 리서치기관 KPMG 에서 매년 발표) * 정책·입법, 기술·혁신, 인프라, 소비자 수용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국가별 평가	6위	정량	결과	
	㉢ 항공여객수요 회복(항공여객 운송실적)	'21년 항공여객 실적	74백만명	정량	결과	
	㉣ 공공분야 드론활용 제고(드론기체 보유 규모)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드론기체 보유현황 전수조사	4,200대	정량	결과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사건수 중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수	50%	정량	결과	
	㉡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역량 강화 (건수)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건수	15건 이상	정량	결과	
	㉢ 물류기업 취업자수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학교 졸업생의 물류기업 취업자수 및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자수	480	정량	결과	
	㉣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21년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190명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I.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지정	선도단지 지정 실적	5개소	정량	결과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지구계획 수립건수(5곳) +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수(3만호)	5곳 지구계획 수립, 사전청약 3만호	정량	결과	
	㉢ 신규 공공택지 확보	수도권·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 물량	25만호	정량	결과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종합계획 수립	수립	정량	산출	
	㉡ 주택 분양물량 확대	주택분양 물량	35 만호	정량	결과	
	㉢ 주택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개선	개선결과 발표	표본 재설계	정성	결과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총지원금액 ×2%* / 지원가구수 * 시중금리는 연중 지속 변동되므로 금리 차 2% 가정	113.6 만원	정량	결과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시장질서 확립	①LH내부통제방안 시행(20%) + ②LH투기방지법령 개정 (40%) + ③부동산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신설 (30%) + ④의심거래 5천건 조사(5%) + ⑤중개매물 기획조사 3회 실시(5%)	100%	정량	결과	
	㉡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방안 마련	방안 마련 확인	방안 마련	정성	산출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 GTX 주요 환승센터 본격 확대	착공,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구상안 마련	12개	정량	산출	
	㉡ 철도망 개통	철도사업 개통 건수 ≥ 6개	6	정량	결과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 국내 트램도입을 위한 첫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여부	사업 계획 승인	정성	산출	
	㉡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이용자 수	77만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4만대	정량	결과	
	㉡ 철도 R&D 투자 확대	'22년 철도 R&D 예산 ≥90,000백만원	90,000	정량	결과	
	㉢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	인증기관을 통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수	20	정량	결과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1.0	정량	결과	
	㉡ 줄음속터 개소 확대	구축 개소수	20	정량	결과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 철도사고 사상자수 * 운행거리 1억km당	'21년 철도사고 사망자수 / '21년 1억km당 운행거리	23.4	정량	결과	
	㉡ 철도운행장애 건수 * 운행거리 1억km당	'21년 운행장애 건수 / '21년 운행거리(1억km)	94.4	정량	결과	
	㉢ 운송용 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건)	{(최근 5년간 사고건수* 합) ×1백만} / (최근 5년간 비행횟수의 합) * 악기상, 천재지변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제외	1.2	정량	결과	
	㉣ 준사고발생률 (백만 비행횟수 당 준사고 발생건수)	{준사고 발생 건수 / 비행횟수}×1백만 * 소수점 2째 자리 반올림 ** 악기상, 천재지변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제외	2.1	정량	결과	
	㉤ 공항이동지역 항공안전장애 발생빈도 (건/1만운항회)	사고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건수의 1만운항횟수 당 발생빈도 집계	0.050	정량	결과	
	㉦ 전국 공항 및 항공로 상 항행 안전시설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전국 공항 및 항공로 상 항행안전시설 장애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 건수 * 대상 항공기는 우리나라 공역내 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항공기	0	정량	결과	
3. 건설 현장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360	정량	결과	
	㉡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	정량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주거플랫폼 협업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 (1개이상)	100%	정성	결과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①국토부 공모사업(지역수요맞춤 지원,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10개 선정(1개 사업당 5%) + ②타부처 사업(농촌협약 등)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협업사업 5개 선정(1개 사업당 10%)	100%	정량	산출	
		㉢ 투자선도지구 신규지정	투자선도지구 신규 2개 선정(1개 사업당 50%)	100%	정량	산출	
		㉣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지침개정	지역개발사업집행평가 세부개선안 마련 및 지침개정	100%	정성	산출	
		㉤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범사업 2개 이상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1개 50%, 2개이상 100%)	100%	정량	산출	
		㉦ 국토도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로드맵 수립 시 목표 달성	100%	정성	산출	
		㉧ 하천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2021년 예산 집행율 (공사비 240억 기준) * 집행액(억원) ÷ 240 x 100	100%	정량	산출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	㉠ 생활 SOC 등 세부사업 공급	'21년 내 준공되는 생활 SOC 등 세부사업 개수	200	정량	산출	
㉡ 어울림센터 준공		'21년 내 준공되는 어울림센터 개수	1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도시재생법 및 소규모정비법 개정	㉔ 도시재생법 및 소규모정비법 개정	법 개정여부	개정	정성	결과		
		㉕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개수	8	정량	산출		
		㉖ 민관협력 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	선정	정성	산출		
		㉗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제3호 펀드 결성 승인 금액(억원)	125 (억원)	정량	결과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6조원 달성	㉘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6조원 달성	'22년 예산 반영 금액	6조원	정량	정량	산출	
		㉙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정상 추진	설계착수 3건 공사착수 3건	6건	정량	정량	산출	
		㉚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로드맵 도출	정성	정성	산출	
		㉛ 혁신조달 패스트 트랙 I 대상 '혁신제품 인증서발급 실적 20건 달성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내용(기재부 소관 공공수요발굴위 등)에 근거하여 설정	20건	정량	정량	결과	
		㉜ 주요 국제회의 참석(ASEAN· UNESCAP·ASEM 등)	외국정부·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국제회의 참석건수	1건	정량	정량	결과	
		㉝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21년 개방건수	575 건	정량	정량	결과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	㉞ 신공항 건설 사업추진	· (가덕도신공항, 30%) 사타용역착수(60%),정 규추진단 구성관련 훈령제정(40%) · (제주2공항, 30%)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울릉공항, 20%) 육상공정 핵심인 터널공사 착수 · (새만금공항, 20%) 기본계획(안) 마련	완료	정성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건×0.2 + 수주지원 활동건수×0.3 + 수주성공건×0.5	1.5 이상	정량	결과	
		③ 공항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가덕 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60%) +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40%)	완료	정성	결과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④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누적 개사)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연구소 포함) 수	1977	정량	결과	
		⑤ 혁신도시 특구지정 확대(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특구지정 건수	1	정량	결과	
		⑥ 지역인재 채용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	31.5	정량	결과	
		⑦ 정주인프라 개선율(%)	(당해연도 누적 공급실적) / (핵심정주시설 공급계획) * 100	94	정량	결과	
		⑧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연간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연간 이전기관 총구매액)×100	15	정량	결과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④ 도심융합특구 조성기반 마련	①신규 사업지구 1곳이상 선정(20%) + ②특별법 발의(40%) + ③관계부처 지원방안(인센티브) 20개 이상 발굴(40%)	100%	정량	산출	
		⑤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율	①기본계획 변경(20%) + ②재생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착공(20%) + ③새만금 창업클러스터 추진 사업협약 체결(20%) + ④수변도시 에너지 자립 기본구상안 마련(20%) + ⑤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20%)	100%	정성	산출	
		⑥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추진율	①행복도시 분야별 특화 방안 마련(30%) + ②특별관리구역제 도입(법 개정) 및 구역 지정(50%) + ③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승인(20%)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산업기반 강화 프로젝트 추진율	①캠퍼스 혁신파크 추가선정(2곳, 1곳당 10%) 및 지원방안 마련(20%) + ②산단대개조 추가 선정(5곳, 1곳당 8%) (40%) + ③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지침 개정(20%)	100%	정성	산출	
		㉕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관리 내실화	①소관별 추진계획 마련(50%) + ②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50%)	100%	정성	산출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① 기후변화 및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	㉑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이행전략 마련	이행 전략 마련		정량	결과	
		제로에너지건축 단독주택(시범단지) 착공호수	400				
		제로에너지 건축을 인증받은 건수	520				
	㉒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준공개소수	1,000	정량	결과		
		이자지원사업 추진 건수	13,000				
	㉓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	정성	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개수	70				
	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치건축물 정비법 개정	법 개정	정성	결과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㉑ 용산공원 대국민 성과채감 및 국민 소통	① 용산공원 종합기본 계획 변경고시	종합 기본계획 변경, 조성계획 확정	정성	결과		
		② 용산공원조성계획안 위원회 의결					
		③ 조성계획 수립, 용산공원 부업을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 대국민 참여 행사 5차례 개최	대국민 참여 행사 개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리모델링 13개동	리모델링 13개동				
			⑤ 일시사용승인 취득	부분반환 부지 사용권 획득, 펜스공사				
			⑥ 반(反)테러 보안펜스 공사 준공					
			⑦ 용산공원 관리센터 설립방안 수립	방안 마련				
		⑥ 도심 내 탄소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개정	법령 개정	10	정성	결과	
			②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착수 또는 수립중인 지자체수 / 10					
			③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참여 지자체 / 80	80				
			④ 도시공원법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⑦ 도심 주변 GB 녹지공간 확대	①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 3,050km ²	3,050km ²	120만m ²	정량	결과	
			② 훼손지 복구면적 / 120만m ²					
			③ 불법행위 관리대장 표준 시스템 개발	DB 구축				
			④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⑧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① 공원부지 매입면적 / 7.2km ²	7.2km ²	법령 개정	정성	결과	
			②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법령 개정				
			③ 도시공원법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	① 국가시범도시 체감성과 창출	① 세종 스마트교통 사업협약 체결 x 30%	우선 사업 협약 체결 (2건)	정량	결과			
		② 세종 퍼스트타운 착공 x 35%	세종, 부산 선도사업 구축					
		③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식 개최 x 35%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㉞ 전국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및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① 22개 이상 지자체·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44곳	정량	결과	
			② 22개 이상 지자체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			
		③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조성방안 마련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				
		④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2곳 이상 선정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			
		㉟ 스마트도시운영 체계 구축	① 통합플랫폼 서비스 발굴(2건 이상)		2건	정량	
②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49곳)	49곳						
㊱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 및 산업기반 강화	①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착수(3건)	3건	정량	결과			
	② 스마트도시인증(2건)	2건					
		㉡ 수소도시 본격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① 컨설팅횟수 10회, 시범도시 전시회 및 세미나 1회 x 30%	사업 추진	정량	결과	
			② 수소도시법 제정 x 40%				
			③ 추가 구축을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개수(5기) x 30%	사업 추진	정량	결과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 지하정보 통합DB 오류율(%) (전체 공간정보 수 / 오류 정보 수)	5%	정량	결과	
			㉣ 디지털 트윈국토 교육 프로그램 시행	교육 진행횟수	5회	정량	산출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확산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수	2	정량	결과
			㉥ 공간정보 아카데미 취업자과정 취업률	취업생 / 교육수료생 * 100	80%	정량	결과
			㉦ 표준 사전검토	표준 적용 검토 건수	100	정량	결과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자체 수	33개	정량	결과
			㉨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 실적	특성화 고교, 전문대, 대학원 등 지정 실적	6개교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 Eng.과 스마트 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	㉠ 기술형입찰 발주 금액	기술형입찰 발주금액 / 전체공공건설발주금액 * 예산 기준	10%	정량	결과		
	㉡ 스마트턴키 선정 건수	스마트턴키 발주건수 * (스마트턴키)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시 300억 이하 일반공사도 턴키발주 허용	8건	정량	결과		
	㉢ 스마트건설 기술 시장 규모	'21년 기술형입찰 사업중 토공자동화,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 내역 금액 (BIM 기반 설계금액)	250억원 (BIM 72억원)	정량	결과		
	㉣ 스마트건설 입주기업 역량강화	(① + ②) ÷ 30% * 100 ① = [(A÷B)-1]×100(%) ② = [(A'÷B')-1]×100(%) A: '20-'21년 매출 평균 B: '19-'20년 매출 평균 'A : '20-'21년 고용 평균 'B : '19-'20년 고용 평균 * 2개년도 평균값을 기준지표로 적용	100 (지수)	정량	결과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수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수 (21.12월 기준 입주한 기업 수)	40	정량	결과		
	㉦ PM 시범사업	PM 시범사업 발주건수	2건	정량	결과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 서비스 실증 건수	6	정량	결과	
㉡ 자율주행차 관련 특례 허가 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 특례 허가건수	5	정량	결과		
㉢ 자율주행차 신규 임시운행 허가대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수	62	정량	결과		
㉣ 정밀도로지도 국도 확대		일반국도 등 정밀 도로지도 구축 물량(km)	11,0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㉑ 항공산업 지원방안 지원방안 발표	경장,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대외회의 안전보고·발표 대책	2건 이상	정량	산출	
		㉒ 통합항공사 고용유지	(‘21년말 현원-‘20년말 현원) / ‘20년말 현원 * 100	95% 이상	정량	결과	
		㉓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항공사업법·공항공사법 개정	법안 통과	정성	결과	
		㉔ 무착륙관광비행 실시	항공사 운항 건수 (7개 항공사 X 월 1회 X 12개월) = 84회 * 100회 이상 초과목표 설정	100회 이상	정량	결과	
		㉕ 국제항공 네트워크 정상화를 위한 국제항공운항 복원 실적(개수)	‘20년 국제선 주당 평균 운항 실적(‘20.4월1주차 ~ 12월5주차) 대비 21년 국제선 주당 평균 운항 복원 실적	25% 이상	정량	결과	
		㉖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One-ID 적용공항 수 / 전국공항 수) * 100	27 %	정량	결과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		㉑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운영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발표	최초 지정	정성	산출	
		㉒ UAM 기술 로드맵 발표	로드맵 발표 (대국민 공개)	로드맵 발표	정성	산출	
		㉓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업체 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용업체 수 (예약시스템 내 시험장 이용 현황 추정)	50개 업체	정량	결과	
		㉔ 실증 참여 드론업체 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실증에 참여하는 드론업체 수	60개 업체	정량	결과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㉑ 상호시장 진출 허용 비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사건수 중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수	50%	정량	결과	
		㉒ 발주 세부기준정비	발주 세부기준 개정	개정	정성	산출	
		㉓ 유지보수 고도화 기반 마련	시범사업 추진	시스템 마련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직접시공 확대	70억 이상 종합공사 중 직접시공 시행 비율	56%	정량	결과	
		㉕ 공제조합 혁신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행(50%) 및 신규 운영위원 선임(50%)	운영위 재편	정성	결과	
		㉖ 임금직불제 노무비 지급률 개선	소속·산하기관의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지급률	15%	정량	결과	
		㉗ 적정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법률 개정	법률 개정	정성	결과	
		㉘ 적정임금제 적용공사 확대	적정임금제를 적용한 건설공사 수	30개	정량	결과	
		㉙ 기능인 등급제 적용 규모	기능인 등급 부여 직종 수	25개 직종	정량	결과	
		㉚ 골재 생산량 확대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정성	결과	
		㉛ 건설기계 검사제도 내실화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개정	정성	결과	
		㉜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 퇴출	부실 타워크레인 시정조치·등록말소 건수	600대	정량	결과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법 개정안 발의	법령 개정	정성	과정	
		㉡ 화물안전확보 제도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령 개정	정성	결과	
		㉢ 택배 가격· 거대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사회적 합의기구 상정	사회적 합의기구 상정	정성	과정	
		㉣ 택배 표준 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서 마련	정성	결과	
		㉤ 소화물배송 대행인증제 시행	홈페이지 공고	시행 공고	정성	산출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KAA) 설립	사무국 개소	사무국 개소	정량	결과	
		㉡ 헬기부품 국산화촉진을 위한 인증 건수	안전성 인증서 발급 건수	5건	정량	결과	
		㉢ 전문교육기관 수료 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21년도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수	190명	정량	결과	
		㉣ 국제 항공안전정책 수립 기여도	국제회의 정책발표 횟수	5건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공공자가주택 제도화	국회통과	법률 개정	정성	결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14.0만호	정량	결과		
		㉢ 통합임대 도입 및 임대주택 질적 개선	선도단지 지정실적	5개소	정량	결과		
		㉣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이주지원(호)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이주완료 실적	6,000	정량	결과		
		㉤ 주거급여 지원확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정형 통계	123만	정량	결과		
		㉥ 코로나 위기 가구 긴급지원주택 지원	지원주택 공급 호수	500호	정량	결과		
		㉦ 최저주거기준 개선	최저주거기준 개정안 마련	제도 개선	정성	결과		
		㉧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평가지표 마련	제도 개선	정성	산출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지구계획 수립 건수	5곳	정량	산출		
		㉢ 사전청약 공급물량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수	3만호	정량	결과		
		㉣ 신규 공공택지 확보)	수도권·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 물량	25만호	정량	결과		
		㉤ 쪽방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건수	2건	정량	산출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종합계획 수립	수립	정성	산출	
㉡ 공급대책 관련 제도 기반 마련			개정 완료	개정 완료	정성	산출		
㉢ 공급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발굴			후보지 발표	선도 사업 후보지 40곳 공개	정량	산출		
㉣ 주택 분양물량 확대			주택분양 물량	35 만호	정량	결과		
㉤ 주택 통계 신뢰도 개선을 위한 통계 개선			표본재설계, 외부 자문위원회 구성	표본재설계 및 위원회 구성	정성	과정		
㉥ 주택정책 관련 정례 브리핑 실시			브리핑 횟수	5회 시행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총지원금액 × 2%* ÷ 총지원가구수 * 시중금리는 연중 지속 변동되므로 금리 차 2% 가정	113.6 만원	정량	결과	
		㉡ 버팀목전세 대출상품 생애주기 연계지원 제도 도입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 개정	제도 시행	정성	산출	
		㉢ 보증금보호 보증상품 가입실적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실적	36.4 만건	정량	결과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출시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 개정	상품 출시	정량	결과	
		㉤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수(누계)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실적	12	정량	결과	
		㉥ 임대차신고제 하위법령 마련 실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총 2건)	법령 개정	정성	결과	
		㉦ 모듈러주택 공공발주(설계· 착공) 실적	공공기관 발주 물량 중 '21년도 설계 또는 착공 실적	2,254호	정량	결과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관련 법률 개정	주택법 개정	법률 개정	정성	결과	
		㉨ 외부회계감사 강화 관련 법률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률 개정	정성	결과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투기방지 및 재발방지제도 개선 추진율	①LH내부통제방안 보고(20%) + ②LH내부통제 강화 관련 내규개정(15%) - 인사규칙, 취업규칙 및 토지보상관련 지침 개정안 LH이사회 통과 + ③LH 투기근절 관련 법제도 개정(45%) - LH법 개정15% LH법 시행령 개정15% 토지보상법령 개정15% + ④LH혁신방안 발표 (20%)	100%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 추진율	①불공정행위 근절 법제도 개선(40%)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 + ②부동산불법행위조사 정규조직 신설(30%) -기획단 설치 + ③의심거래 5,000건 이상 조사(15%) + ④중개대상물 기획 조사 3회 실시 (15%=5%×3회)	100%	정성	결과	
		⑦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형평성 계수 COD 개선)	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각 유형별 COD의 하락폭 합계	-1.5 미만	정량	결과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①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TF 구성·운영	TF 운영 횟수 (6회 만점, 50%) + 제도개선 발굴건수 (5회 만점, 50%)	6회이상 운영 제도개선 5건이상 발굴	정량	산출	
		② 중개보수 개편 등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대책방안 발표(60%) + 후속조치이행률 (이행완료과제수/ '21년 추진과제수)(40%)	대외 발표 및 메모보고	정성	결과	
		③ 부동산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육성방안 발표	대외 발표	정성	산출	
		④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운영 횟수 (4회×각 2.5%)	4회 이상 운영	정량	과정	
		⑤ 부동산 신산업 업체수 증가	'21년 한국프롭테크 포럼 가입 업체 수 (256개 만점, 부족시 1개당 -0.5%)	256개	정량	결과	
		⑥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시범사업 실행(1건 만점)	1건	정량	결과	
		⑦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경진 대회 창업캠프 실시팀 수	'21년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실시팀 수	15	정량	결과	
		⑧ 공모리츠 총자산규모(조원)	'21년 공모리츠의 총 누적자산규모	13.0	정량	결과	
		⑨ 부동산투자 회사법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 방침 수립	시행령 개정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V.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도시철도 운영 연장	누적 개통연장(km)	737.1	정량	결과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고시	(신규구입 차량편성수×편당 평균탑승인원) / (공급예정 차량편성수×편당 평균탑승인원)	100	정량	결과		
			5개년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 BRT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BRT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여부	종합계획 수립	정성	산출		
		㉣ 환승센터 구축지원	청량리역 기본구상안 마련 및 금정역 통합 환승체계 추진방안 마련	2건	정량	결과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역사 수	9개				
			환승센터, 회차· 환승시설 착공 및 준공 수	5개				
		㉤ 환승센터 확대 기반 구축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고시 +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3건	정량	결과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광역철도 거점 인프라 강화 (40%)	4차망계획 반영 지방 광역철도 신규사업 노선 수	4개 이상	정량	결과	
				철도사업 개통 건수	6 이상			
부발-충주 이동시간	40분 이하							
㉡ 운영관리방안 침단화 (30%)	전략안 마련 여부		계획안 수립	정성	산출			
	계획안 수립 여부		계획안 수립					
㉢ 서비스 개선 (30%)	수화영상서비스 제공차량(SR)		전차량(32개) 이상	정량	결과			
			할인대상 가구 자녀수				2 이상	
	주차 현황 조회·결제 가능 앱 기능 개발 여부	앱기능 개발	정량	결과				
		역사 공공형 택시 신규도입				5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광역버스 총 운행거리 증가분(km)	총운행거리(일)= 운행횟수(일) × 운행거리(편도 km/회) 총운행거리 증가분= 운행거리 증가분 - 운행거리 감소분(감차, 폐선)	11,000	정량	결과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당 월별 마일리지 적립액(원)	'21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대상자의 월별 평균적립액	7,000	정량	결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여부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정성	산출	
		㉣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변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및 변경하는 사업지구 수	6	정량	결과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개소수	(전기차) 295기 구축	정량	결과	
		㉡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개소수	(수소차) 14기 착수	정량	결과	
		㉢ 친환경 충전소 이용자 수	이용자수 수	77만 명	정량	결과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	개소수	24 개소	정량	결과	
		㉤ 고속도로 휴게소·영업소 엔택트 서비스 본격 도입	개소수	150 개소 (누적)	정량	결과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엔택트 납부 서비스 확대	개소수	80 개소 (누적)	정량	결과	
		㉦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점용료, 통행료 감면	점용료, 통행료 감면 액	1,379 억원 혜택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		㉠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4만대	정량	결과		
		㉡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 허가·면허·등록 발급	허가·면허·등록을 받은 사업자 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허가 포함)	6개 사업자	정량	결과		
		㉢ 택시 서비스 개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수	법 개정 건수	2건	정량	결과		
		㉣ 수소버스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법률 및 시행령·고시 개정 여부	개정	시범 사업 실시	정량	결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대수	100대				
		㉤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여부	마련	정성	산출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	㉠ 철도 그린 뉴딜	'21년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개소	8	정량	결과			
		수소열차 시험주행 시행 여부	시험 주행					
	㉡ 철도산업 발전 지원	'21.12월말 국가철도 R&D 성과물 사업화(구매) 실적 ≥279,248백만원	279,248	정량	결과			
	㉢ 해외 수주 지원 및 국제 협력 확대	국제포럼 개최 여부 + 동철공 홍보 및 기고	포럼 개최 홍보 및 기고 3건	정량	결과			
		국제인증 교육을 받은 수료생 수 ≥ 180명	180명					
		간담회 개최 ≥ 3회	3회					
협의회 운영 실적 ≥ 4회		4회						
	협력회의, 고위급 면담, 금융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횟수 등 수주지원 횟수 ≥ 6회	6회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①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건수)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21.6) 후 제도개선 과제 2건 추진여부 ①표준정비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②이륜차 폐차관련 자관법 개정안 국회제출	2	정성	과정																			
								② 전기·수소차 검사 인프라 확충(범용진단 검사장비 보급 및 수소차 검사소 확대 구축)	범용진단 검사장비 보급 검사소 개수	300	정량	결과													
	수소전기차 검사소 신규 구축 완료 개소 수	6																							
						③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실적(건)	튜닝인증부품 및 인증대체부품 활용 실적 합산 통계로 측정 ①튜닝인증부품 장착건수 + ②국산차용 인증대체부품 인증건수	48,600	정량	결과															
	④ 리콜 이행력 강화(리콜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리콜 정보 공유·안내 서비스 확산)	자동차관리법 개정 (국회 통과 후 공포)	자관법 개정	정량	결과																				
						리콜 차량정보 민간공유·안내서비스 신규 건수	5																		
	⑤ 자동차365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중) 및 이용 활성화(접속건)	자동차365 정보제공 서비스 건수 * 신차관련 정보 등 6종 추가제공	93	정량	결과																				
						자동차365 웹 및 앱 접속 건수	410 만건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	① 화물차 수소연료 보조금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법령 개정						정성	결과													
						②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 수	인증기관을 통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건수	20	정량	결과															
③ 도심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착공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건수	1	정량	결과							
																				④ 생활물류법 하위법령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법령 제정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V. 국토교통산업의 상생·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1년 교통 사망자 수 / 전체 인구) × 10만	4.8명	정량	결과	
		㉡ 범부처 합동 교통안전대책 수립·추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상정·발표	대책 발표	정성	산출	
		㉢ 공유PM 의무보험 표준안 마련	의무보험 표준안 마련 여부	보험 표준안 마련	정성	산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물량	210대	정량	결과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 졸음쉼터 개소 확대	장거리 운전자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간격이 긴 고속·일반국도에 졸음쉼터 설치 개소수	20 개소	정량	결과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일반국도 노후교량에(25년 이상)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개소수	316 개소	정량	결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서스	60 개소			
		㉢ 터널 사고시 신속대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터널을 장대터널 중심으로 권역별 원격관리체계 단계적 구축 (총 터널 859개소, 76개 권역)	터널 사고시 신속대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터널을 장대터널 중심으로 권역별 원격관리체계 단계적 구축 (총 터널 859개소, 76개 권역)	221 개소			
		* '20년 터널 82개소, 6개 권역 完 '21년 터널 221개소, 22개 권역 추진					
		㉣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추진	일반국도상 교통사고 잦은 곳의 '22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개소수	56 개소	정량	결과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도로선형 개량 개소	30 개소			
기상악화 시 자동으로 조명을 점등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17 km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인프라 확충	교량, 터널 등 결빙취약구간에 선제적·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 확충 개소수	1,212 개소 누적	정량	결과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새벽에도 결빙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는 조명식 결빙주의표지 설치 구간 추가 발굴·설치	2,868 개소 누적			
			국도 상 CCTV 추가 설치 개소수	791 개소 누적			
		㉕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	개소수	34	정량	결과	
		㉖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추진	공모사업 건수, 100억원 규모	3	정량	결과	
		㉗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개소수	98	정량	결과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	㉘ 종합시험선로 1일 사용료 인하율	'21년 오송시험선로 1일 사용료 / '19년 오송시험선로 1일 사용료	75%	정량	결과		
	㉙ 노후차량 교체지원율	신규교체수량 / 노후차량전체수량	30%	정량	결과		
	㉚ 국유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율	노후시설 개량개소 / 총개량대상개소	9.2%	정량	결과		
	㉛ 철도표준 개정 고시(건수)	철도표준 개정건수	85	정량	결과		
	㉜ 연구개발사업 신기술 개발 실적(스마트유 지보수 R&D)	컨텐츠 4종 개발 실적	4	정량	결과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	㉝ 철도사고 사상자수(40%) * 운행거리 1억km당	'21년 철도사고 사망자수 / '21년 1억km당 운행거리	23.4	정량	결과		
	㉞ 운행장애 건수 * 운행거리 1억km당	'21년 운행장애 건수 / '21년 운행거리(1억km)	94.4	정량	결과		
	㉟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안전역할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마련	1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		㉠ 공항소음 저감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방안마련	방안 마련	정성	산출	
		㉡ 항행안전시설 장애시간(100만 시간당)	(총 장애시간 / Σ항행시설별 가동시간) × 100만	13.91	정량	결과	
		㉢ 항공분야 풍수해 대응 매뉴얼 제·개정	풍수해 관련 실무 및 행동매뉴얼(국토부 및 관련기관) 제·개정건수	매뉴얼 정비	정성	결과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 국적항공사 주요 장애 감축	(‘21년 국적항공사 주요장애 발생건수 합계) ÷ (국적항공사 비행편수 합계 × 1만) * 악기상, 관제지시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건수는 제외	4.8 (19종)	정량	결과	
		㉡ 통합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관리 체계 구축	2종(기존 데이터 수) + 3종의 추가 데이터* 확보 수 * 데이터 수집 + 분석·공유 완료 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측정	5종 (누적)	정량	결과	
		㉢ 비정상적 항공회랑 폐지 및 新 관제체계 운영개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정상화 진행율 * ▲ 한·중, 한·일 간 관제 합의서 체결(50%), ▲ 新 관제체계 운영개시(50%)	정상화 진행율 100%	정량	결과	
		㉣ 코로나19 방역 안전 체계 구축	코로나-19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개정 및 항공사 배포	지침 개정·배포	정성	산출	
3. 건설 현장 위험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		㉠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360	정량	결과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법률 제정	법률 제정 여부	정성	결과	
		㉢ 소규모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건수	8,000	정량	결과	
		㉣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제정	법령 제정	법령 제정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㉔ 중대재해법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협업 건수	TF회의, 토론회, 포럼, 설명회, 전문가회의 등 개최·참여 건수의 합	20	정량	과정	
		㉕ 광역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별 관리계획 수립	12	정량	산출	
		㉖ 시설물 점검· 진단 부실 개선율	(점검 및 진단 시정조치 적기 완료 건수) / (점검 및 진단 시정 조치 대상 건수 × 100	80.0	정량	결과	
		㉗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기준 합리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완료	법령 개정	정성	결과	
		㉘ 알기 쉬운 건축법령 마련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고시 제정	법령 제정	정성	결과	
			한국건축규정 공고	공고			
		㉙ 공공건축 조성절차 내실화	지침 제·개정 방침	법령 개정	정성	결과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수	15			
	㉚ 국립도시건축 박물관 전시 기획	전시기획 방안 마련	전시기획마련	정량	산출		
		전시소장품 조사결과	10,000				
	㉛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건축행정시스템 기능 도입	기능개선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업무 2-1, 2-3, 2-4, 3-1 / 탄소(건물) 3-1 / 뉴딜 4-10, 5-13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	국정 79-1, 79-2, 79-4 / 업무 1-1, 2-3 / 탄소(건물) 2-1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정 32-7 / 업무 2-1, 3-1, 3-2 / 탄소(총괄) / 뉴딜 1-3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	업무 2-2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국정 78-3 / 업무 2-1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국정 78-2, 78-4 / 업무 2-1, 3-1 / 탄소(건물) 2-1 / 뉴딜 7-19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①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	국정 37-6, 79-3 / 업무 3-1, 5-1 / 탄소(건물) 1-2, 2-1 / 뉴딜 1-3, 5-13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국정 37-6 / 업무 3-1 / 탄소(건물) 2-2, 3-1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	국정 33-5, 37-7 / 업무 3-1, 3-2, 4-2 / 탄소(수송) 1-2, (건물) 1-1, 2-1 / 뉴딜 4-11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국정 34-8 / 업무 3-2 / 뉴딜 1-3, 4-10, 6-1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 Eng.과 스마트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	국정 32-2, 32-12 / 업무 4-1 / 뉴딜 1-2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	국정 32-5, 34-4 / 업무 3-2 / 탄소(수송) 3-1 / 뉴딜 1-2, 4-10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업무 3-2, 4-1, 5-1 / 뉴딜 1-4, 4-10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	국정 34-5 / 업무 4-1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국정 32-1 / 업무 4-2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국정 32-3 / 업무 4-2 / 탄소(수송) 1-1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	업무 4-1 / 탄소(수송) 5-1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국정 46-1, 46-2, 46-3, 47-1, 47-3 / 업무 1-2 / 탄소(수송) 1-2 / 뉴딜 5-13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국정 46-4 / 업무 1-1, 5-1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국정 46-4, 47-2 / 업무 1-1, 1-2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국정 46-1 / 업무 1-1, 1-2, 1-4 / 탄소(수송) 1-2, (건물) 1-1 / 뉴딜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업무 1-3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업무 1-3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국정 31-3 / 업무 2-2, 5-2 / 탄소(수송) 2-1, 3-1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 31-4, 32-6 / 업무 2-2, 5-1, 5-2 / 탄소(수송) 2-1 / 뉴딜 4-10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국정 31-1, 31-3 / 업무 4-2, 5-2 / 탄소(수송) 3-1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	국정 32-5 / 업무 2-2, 3-1, 5-1, 5-2 / 탄소(수송) 1-2 / 뉴딜 4-10, 6-18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	국정 32-8, 32-9, 32-10, 34-1 / 업무 3-1, 4-1, 4-2 / 탄소(수송) 1-1, 3-1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	국정 32-6 / 업무 3-1, 4-1 / 탄소(수송) 2-1 / 뉴딜 4-10, 6-18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국정 32-8 / 업무 4-1, 5-1 / 뉴딜 1-3, 6-18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	국정 32-4, 32-11 / 업무 3-1, 4-1 / 탄소(수송) 1-1, 1-2, 4-1 / 뉴딜 4-12, 6-1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국정 55-2 / 업무 5-1 / 탄소(수송) 3-1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국정 32-5, 32-7, 55-2 / 업무 3-2, 5-1 / 탄소(수송) 3-1 / 뉴딜 4-10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	국정 32-6 / 업무 3-2, 5-1 / 뉴딜 4-10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	국정 55-2 / 업무 5-1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	업무 4-1 / 뉴딜 4-10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업무 5-1
3. 건설 현장 위험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	국정 55-3 / 업무 5-2 / 뉴딜 1-3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국정 32-12 / 업무 5-1 / 뉴딜 1-3